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책임운영기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What we measure shapes what we achieve.”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이제 마지막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간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성과와 과제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 정보화, 공중보건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대응 역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가 준비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처는 부처 작업반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과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향후 VNR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이행 성과와 정책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허브 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범정부 데이터 활용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데이터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김진

김진



발간사	003
주요 결과	006
인포그래픽	010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노인 빈곤율은 66~75세 중심으로 2024년에 개선 (☞ 관련 지표 1.2.1)	017
취약계층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지급률은 점차 증가하며, 특히 빈곤가구의 지급률이 크게 증가 (☞ 관련 지표 1.3.1)	021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전체 가구 평균 저축액의 24% 수준 (☞ 관련 지표 1.4.1)	022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380만 원에서 2024년 679만 원으로 78.7% 증가 (☞ 관련 지표 1.b.1)	023
한국의 빈곤감소 목적 ODA 지출은 GNI 대비 0.017% (☞ 관련 지표 1.a.1)	024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격차는 다소 완화 (☞ 관련 지표 2.1.1)	027
여성 빈혈 유병률은 12.7%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2.2.3)	029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 성격에 따른 경영역량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2.3.1)	030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94%에 달함 (☞ 관련 지표 2.5.2)	031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여성 음주율은 증가 (☞ 관련 지표 3.5.2)	035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 관련 지표 3.a.1)	037
보건 의료 인력 부족 개선과 지역 격차 완화 필요 (☞ 관련 지표 3.c.1)	039
보편적 건강보장 수준은 높은 편이나 비감염성 질환 등에 다각적 노력 필요 (☞ 관련 지표 3.8.1)	040
취약 집단에 집중된 소외열대질환(NTD) 퇴치에 지구적 협력 필요 (☞ 관련 지표 3.3.5)	041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감소세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 (☞ 관련 지표 4.1.1)	045
평생학습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 더딘 회복 중 (☞ 관련 지표 4.3.1)	047
개인 ICT 역량은 전반적 상승세 속 온라인 안전에 취약성 드러나 (☞ 관련 지표 4.4.1)	048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로 측정한 한국 성인 문해력의 하락 (☞ 관련 지표 4.6.1)	050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 관련 지표 5.1.1)	053
직장 내 성희롱은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5.2.2)	055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성별 불균형은 완화 추세 (☞ 관련 지표 5.4.1)	056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 (☞ 관련 지표 5.5.2)	058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상수도 보급률의 도농 간 격차 완화 (☞ 관련 지표 6.1.1)	063
하수도 보급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재이용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6.3.1)	064
‘좋은 수질’ 달성 비율은 높은 편 (☞ 관련 지표 6.3.2)	066
물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업 부문에서는 하락 (☞ 관련 지표 6.4.1)	067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관련 지표 7.2.1)	071
에너지원단위 개선세 정체 (☞ 관련 지표 7.3.1)	074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제한적 회복 (☞ 관련 지표 8.1.1)	077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완화되고 고령층의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 (☞ 관련 지표 8.5.1)	079
2025년 실업률은 2.8%로 낮게 유지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상승 지속 (☞ 관련 지표 8.5.2)	082
산업재해 사고성 사망률은 감소하나 취약부문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8.8.1)	085
관광산업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아직 회복 중 (☞ 관련 지표 8.9.2)	088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제조업 고용 비율 감소세 지속,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고용 정책 필요 (☞ 관련 지표 9.2.2)	091
제조업에서 소규모 산업 비중 감소세 (☞ 관련 지표 9.3.1)	093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 세계적 수준, 여성 연구원 비중 증가하나 성별 격차 여전히 (☞ 관련 지표 9.5.1 / 9.5.2)	094
승객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도로에 집중된 운송 환경에 지속 가능성 모색 필요 (☞ 관련 지표 9.1.2)	096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2016~2024년 소득 하위 40%의 가구소득 성장률이 평균보다 높으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 뚜렷 (☞ 관련 지표 10.1.1)	099
2021~2024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58~59%대 유지 (☞ 관련 지표 10.4.1)	102
금융건전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나 국제 기준 충족하며 양호한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10.5.1)	104
2024년 난민 신청자는 1만 8천여 명에 달하며 난민 보호율은 3.6% (☞ 관련 지표 10.7.4)	106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자가점유율이 낮고 주택임대료 부담이 높으며 주거기준 미달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거복지 증진 필요 (☞ 관련 지표 11.1.1)	109
2024년 초미세먼지 오염도 16 $\mu\text{g}/\text{m}^3$ 로 역대 최저치 기록 (☞ 관련 지표 11.6.2)	112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나 지역 간 격차 존재 (☞ 관련 지표 11.7.1)	114
저상버스 도입률 44.4%에 이르지만 지역 간 차이가 큰 편 (☞ 관련 지표 11.2.1)	116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GDP 대비 국가자원소비량(DMC)은 2022년까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과 탈동조화 양상 (☞ 관련 지표 12.2.2)	119
식품 폐기량 감소하나 지역 간 차이가 큰 편 (☞ 관련 지표 12.3.1)	122
국제 기준에 맞춰 물질재활용률 산정 시작, 재활용률 상위 수준 (☞ 관련 지표 12.5.1)	124
유해폐기물 재활용률은 최근 감소하고, 물질재활용률은 OECD 평균 수준 (☞ 관련 지표 12.4.2)	126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최고치 경신 (☞ 관련 지표 13.1.1)	131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증가하며, 호우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관련 지표 11.5.2)	134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수립 (☞ 관련 지표 13.2.1)	135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년 대비 2.1% 감축 (☞ 관련 지표 13.2.2)	136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 보호지역 비율 점진적 증가 (☞ 관련 지표 14.5.1)	141
------------------------------------	-----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발효 (☞ 관련 지표 14.c.1)	144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관련 지표 14.4.1)	144
불법어업 적발 건수 감소세 (☞ 관련 지표 14.6.1)	148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15.1.2 / 15.4.1)	151
생물다양성 주류화 및 관련 계정 체계 구축	
순조롭게 진행 중 (☞ 관련 지표 15.9.1)	153
실효성 높은 생물 다양성 관련 ODA 사업 발굴과 예산 활용 필요 (☞ 관련 지표 15.a.1)	154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민들의 공무원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 관련 지표 16.5.1 / 16.5.2)	157
국가기관의 국민 소통이 개선되는 한편 정치 효능감은 하락 (☞ 관련 지표 16.7.2)	159
차별 경험률은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의한 차별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관련 지표 16.b.1)	161
살인 발생의 감소세 정체 (☞ 관련 지표 16.1.1)	163
인신매매 방지 법제 도입의 성과와 한계 (☞ 관련 지표 16.2.2)	164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GNI 대비 ODA 비율 0.21%로 증가 (☞ 관련 지표 17.2.1)	167
최저개발국에 대한 2023년 양자원조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 (☞ 관련 지표 17.2.1)	169
정부 총수입 규모는 상승 기조하에 소폭 하락 (☞ 관련 지표 17.1.1)	171
정부 예산 중 55.2%를 국내 세금으로 충당 (☞ 관련 지표 17.1.2)	172
총 GDP 중 송금유입액 비중은 0.5% 미만 (☞ 관련 지표 17.3.2)	173

부록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174
SDG 통계 데이터 현황	176
SDG 지표 총괄표	177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89
용어 약어	196



주요 결과

글로벌 수준의 SDG 이행 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5년 앞둔 시점에서, 글로벌 SDG의 이행은 목표 달성을 향한 궤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severely off track”)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UN 2025a). 유엔이 그간의 SDG 이행현황 분석을 토대로 각 세부목표별 2030년 글로벌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단 18%만이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17%의 세부목표에서는 완만한 수준의 진전, 48%에서는 미흡한 진전 또는 정체가 나타나고, 나머지 18%의 세부목표는 2015년의 기준선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UN 2025b).

세계는 여전히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 만성적 빈곤, 기아와 영양실조, 실업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야기되는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디지털 격차 등도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지정학적 갈등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의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25년에도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9.9%가 극심한 빈곤을, 8.2%가 기아를 겪고 있으며, 여성은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짊어진 채 공적 의사결정과 리더십에서 소외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2024년은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한계치인 1.5°C를 초과하며 다시 한 번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 해양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을 산성화시키고, 산호류, 양서류, 소철류를 비롯한 주요 생물종의 멸종위협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무력 분쟁에 따른 민간인의 사망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아동과 여성의 피해가 크게 늘었고, 개도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최근 감소를 나타냈다.

세계가 직면한 이같은 다중적 도전과 복합위기 앞에서 각국은 포용적이고 조율된 국제 대응의 필요성에 다시 한 번 합의하였으며, 남은 5년 동안 대담하고 야심찬 행동을 통해 SDG 이행을 가속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대응과 함께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및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SDG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투자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6 주요 결과

한국은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지속가능성 평가 등 세부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2026년에는 새롭게 수립되는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 기본전략이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SDG 지표에 기반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S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에서는 총 71개의 SDG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지표별 국내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추세 분석, 세분화 데이터를 활용한 취약집단 현황 분석, 그리고 OECD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6년 한국의 SDG 이행현황은 SDG의 5가지 지향점인 5P, 즉 사람(People)과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람(People): 정부와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줄어드는 한편,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 집중되어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여성, 빈곤가구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이 증가하고 저소득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저축액도 증가하였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수치가 악화되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024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대기환경의 개선을 나타낸 한편 수도권에서는 주거의 질과 비용 부

담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보편적 건강 보장(UHC)의 수준이 높게 평가되며, 음주와 흡연도 줄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과 여성 음주의 증가, 여성 빈혈 유병률의 증가, 농업 노동생산성의 하락, 국제조사에 나타난 성인 문해력의 하락 등은 분석과 대응을 요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등에는 지역간 격차가 드러난다.

지구(Planet):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3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꾸준히 늘어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를 넘어섰으며, 전국 상·하수도의 보급률과 물 이용 효율성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한편 육상과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는 여전히 더디고, 에너지원단위에 나타나는 국가 에너지효율도 최근 개선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인구는 최근 더욱 늘어났다.

번영(Prosperity):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9%로 전년대비 개선되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과 고령층 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과 지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소득계층 간 격차가 뚜렷이 드러난다. 총고용 대비 제조업 비율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전환 시대의 고용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 매출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도 최근 줄어들고 있다. 국가자원소비량이 줄어드는 한편 재활용률은 개선을 멈추고 정체 중이며, 물질재활용률의 분리통계가 생산되는 등 데이터 모니터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평화와 협력(Peace and Partnership): 차별 경험률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경험률이 현저히 줄고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도 개선되는 한편, 그간 줄어들던 살인범

죄 발생비는 최근 정체 중이며,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정치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개도국을 위한 원조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GNI 대비 ODA 비율은 2024년 0.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저개발국과 취약국 지원에 각각 양자원조 중 30% 이상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6 주요 결과

1 빈곤퇴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였고, 은퇴연령, 장애인 등의 빈곤 격차도 개선 필요. 한편 장애인, 여성, 빈곤가구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지급률은 2016년 대비 뚜렷이 증가하였고, 저소득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저축액도 증가

2 기아종식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과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여성 빈혈 유병률도 전년 대비 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농업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도 높은 편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3 건강과 웰빙 증진



음주와 흡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과 여성 음주는 증가하며,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비감염성 질환 영역의 개선 필요. 보건의료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격차 해소 필요

4 양질의 교육 보장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률의 감소세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국제조사에서는 성인 문해력이 10년 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 요구. 평생학습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ICT 역량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안전 영역의 개선 필요

5 성평등달성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완화 추세이나 여전히 가사 부담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감소하나 온라인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에 대응 요구

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좋은 수질’을 달성한 수계의 비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전국 상·하수도의 보급률과 물 이용 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되는 가운데 물 인프라의 지역 격차와 물 이용 효율의 개선이 더딘 취약부문에 노력 요구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공급 비중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2024년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각각 9%와 10%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최근 개선세가 정체

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편이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 시간당 임금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여성과 고령층 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개선세인 한편,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광산업의 고용 회복 등에도 관심 요구

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



총고용 대비 제조업 비율에 감소세가 지속되며, 제조업 매출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도 최근 감소세.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는 2023년까지 세계적 수준을 유지 중이나 여성 연구원은 23.7%에 불과하며, 승객과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도로 운송에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10 불평등 감소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과 지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 구조에 소득계층 간 격차가 드러남.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OECD 중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금융건전성은 OECD 중 낮은 편이나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양호한 수준 유지,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포용성 논의 요구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6 주요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과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주거의 질과 비용 부담의 개선이 요구되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24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



국가자원소비량(DMC)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감소하나 생활·사업장·지정폐기물의 전체 재활용률은 증가를 멈추고 정체 중이며 유해폐기물의 1인당 발생량은 늘어난 가운데, 물질재활용률의 분리통계와 국가자원소비량 등 개선된 통계가 생산되며 모니터링 기반 강화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3년에도 감소세를 이었고, 2035년까지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두 번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마련.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근 더욱 증가하며,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와 호우에 의한 재산피해가 높은 비중 차지



해양 보호구역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복서태평양해역의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공해 생물다양성협정 이행 등 해양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중



육상, 담수, 산악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비율은 OECD 및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증가속도도 낮아 정책적 노력 요구. 한편 국제요구에 따른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와 회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ODA 규모는 2023년까지 크게 확대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차별 경험률이 줄고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이 개선되는 한편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정치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 정치 소외 집단에 관심 요구. 살인범죄는 최근 감소세가 정체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 범죄에 대응하는 제도 구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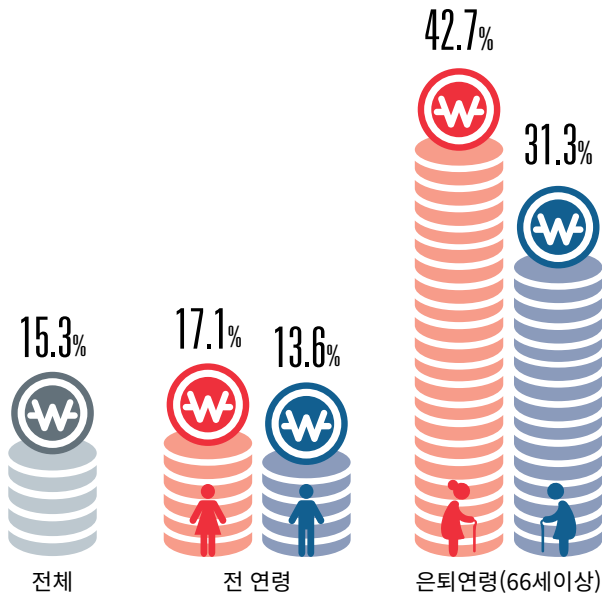


GNI 대비 ODA 비율은 2024년 0.21%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자원조 중 최저개발국과 취약국 지원에 각각 30% 이상의 비중을 할애.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의 흐름에도 제도적 관심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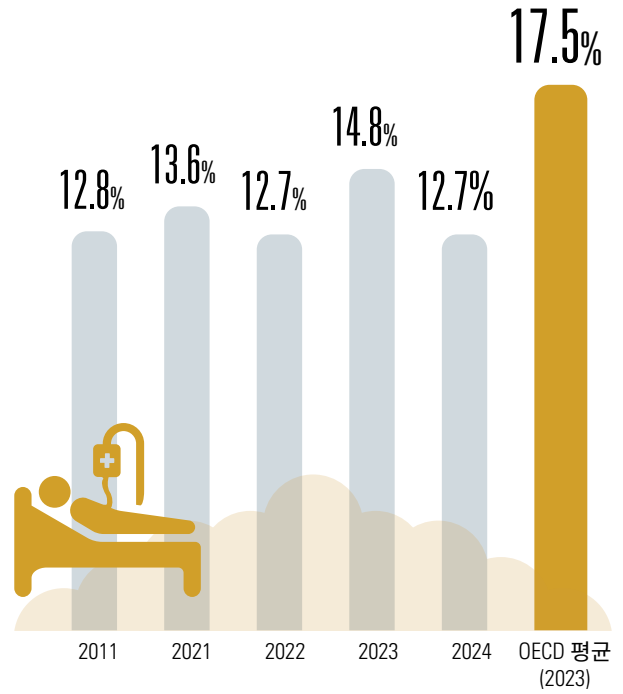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에서 더 높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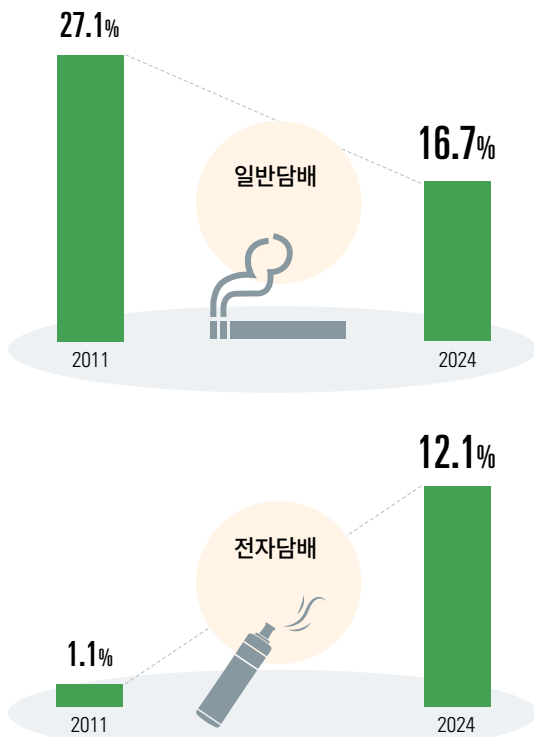


여성 빈혈 유병률 OECD 중위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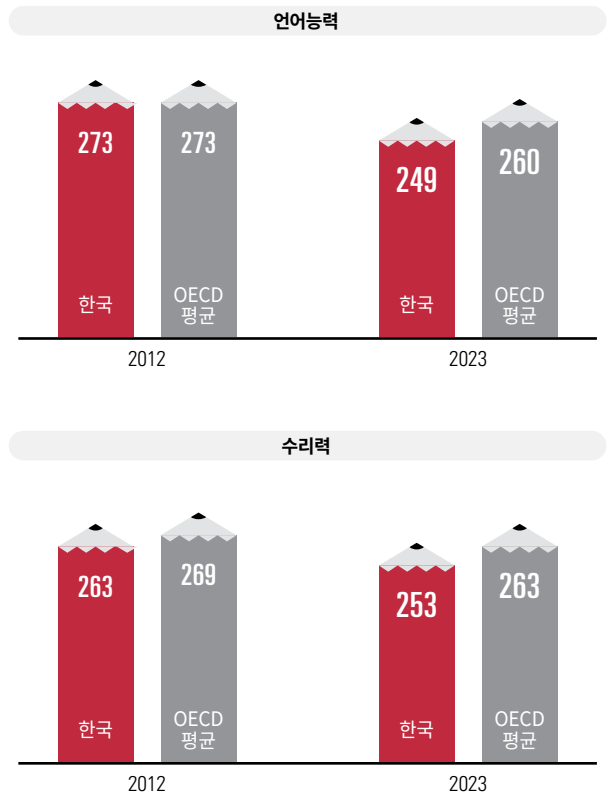


10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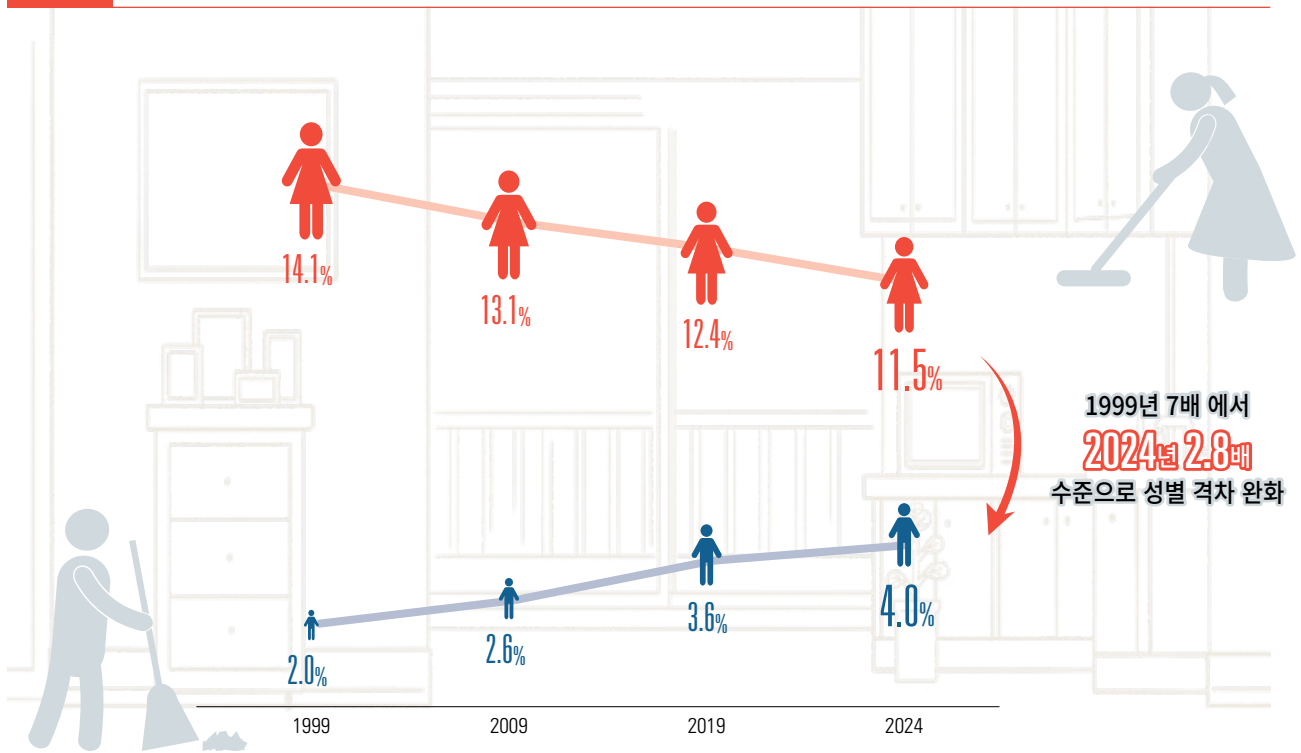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한국 성인 문해력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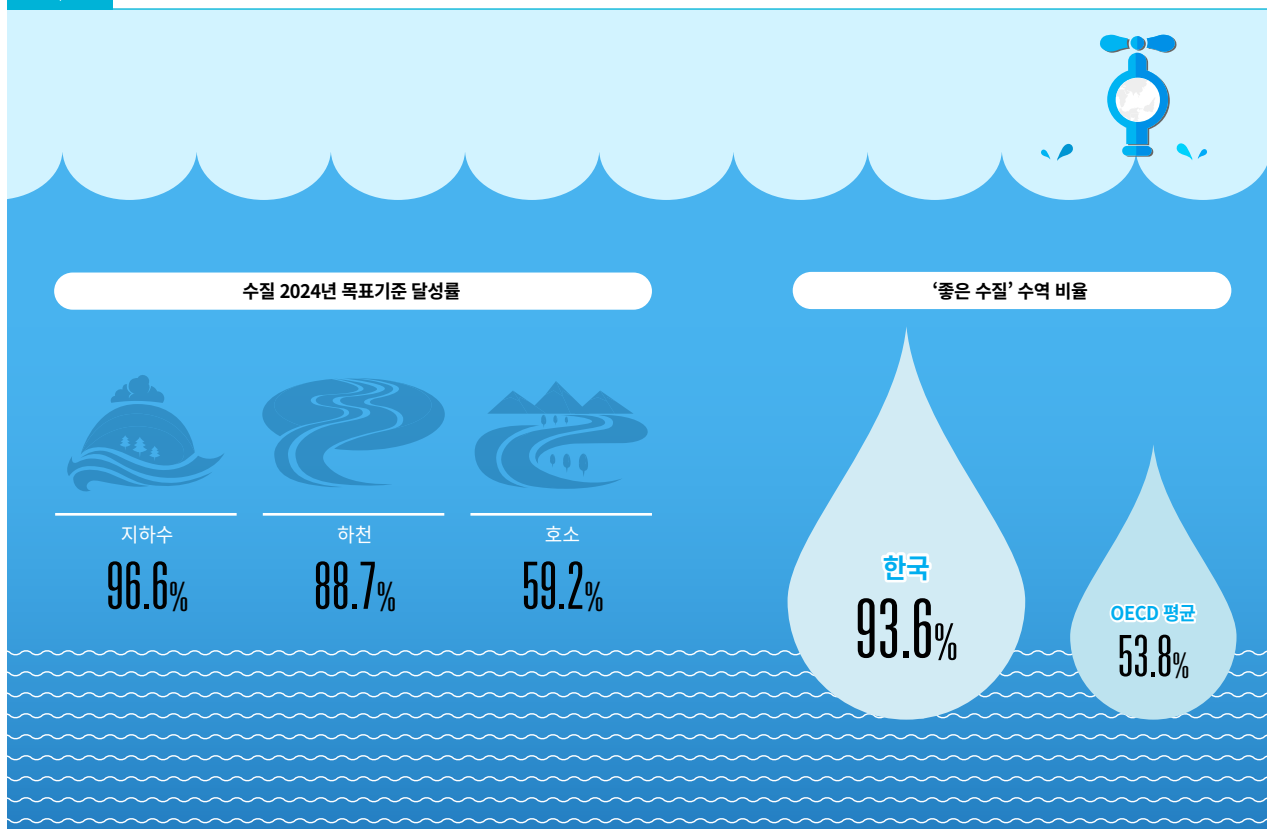




가사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완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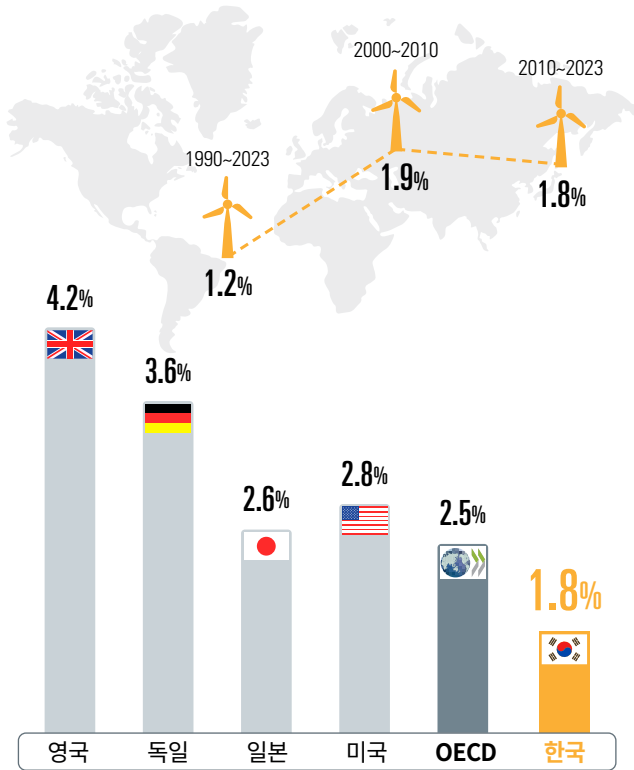


‘좋은 수질’ 수역 비율, OECD 2위 수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증가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편, 2010~2023



'24년 여성 임금 남성의 70.9%, 2024

70.9%

여성
20,36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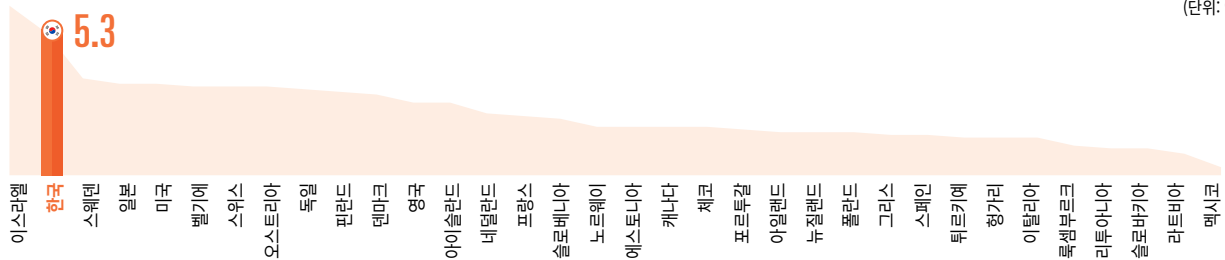
남성
28,734원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 세계적 수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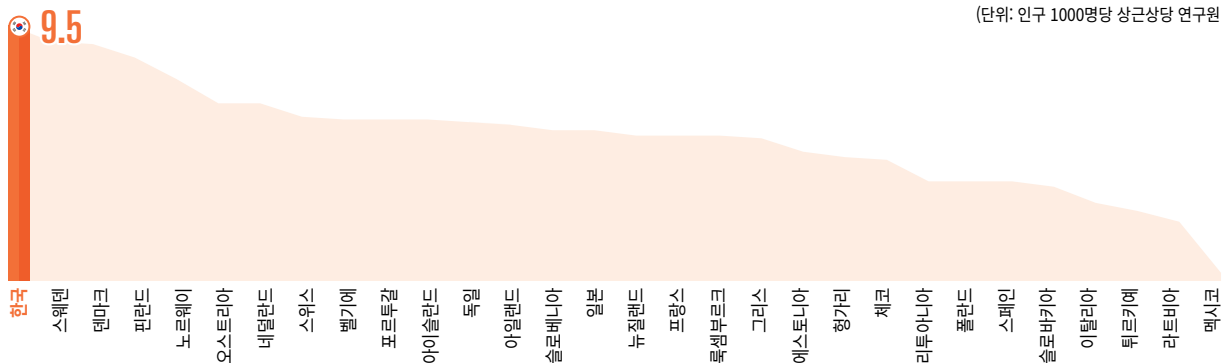
GDP대비 연구개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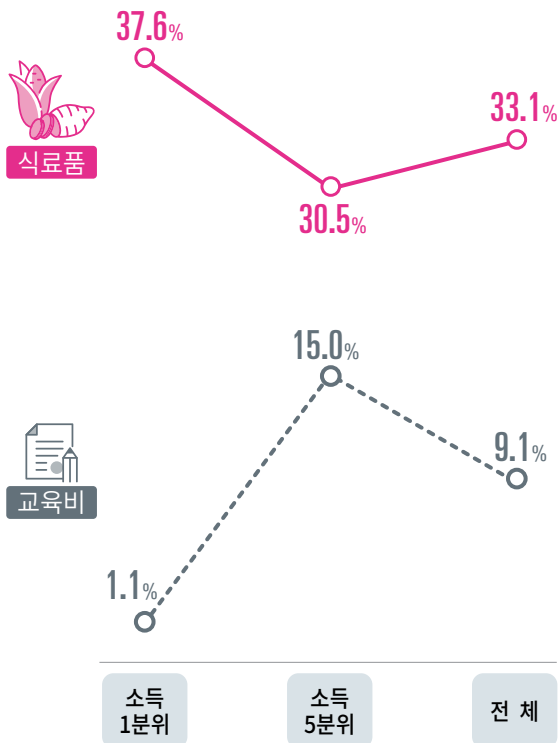
연구개발 인력 밀도

(단위: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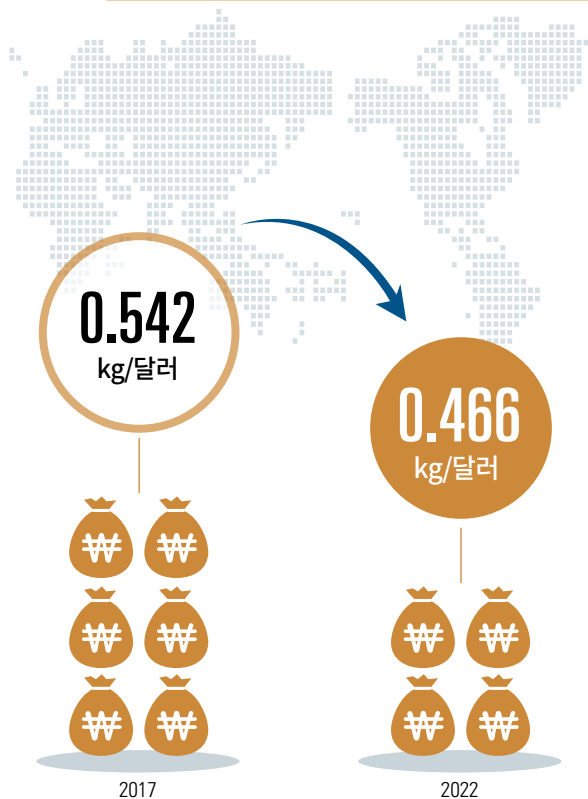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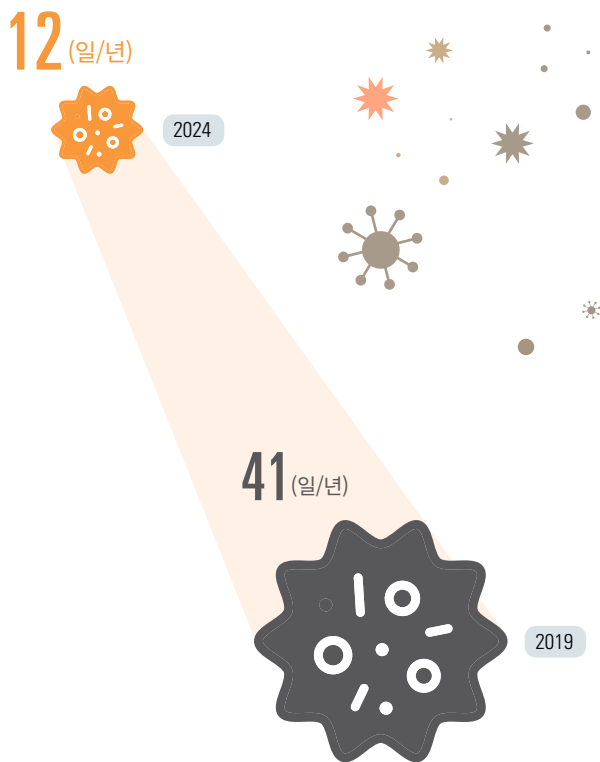
소비지출 구조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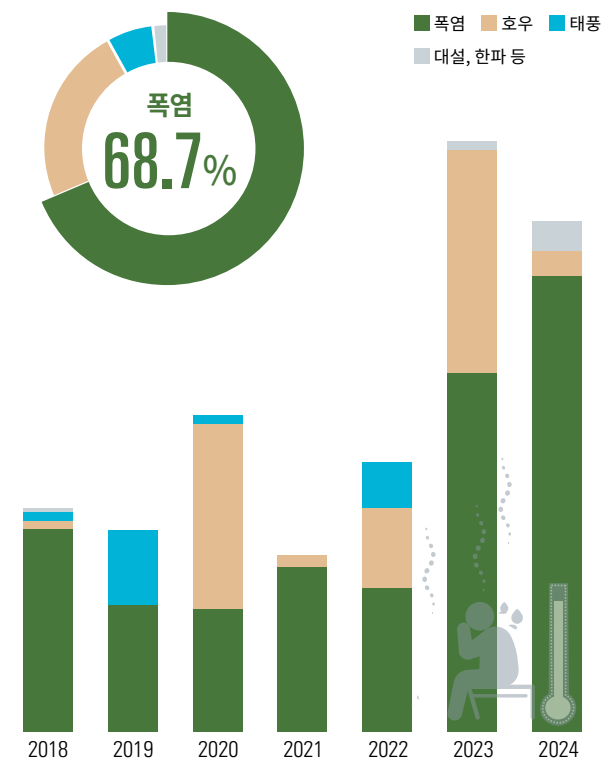
GDP 당 국가자원소비량 감소



초미세먼지 '나뭇' 발령 최소 일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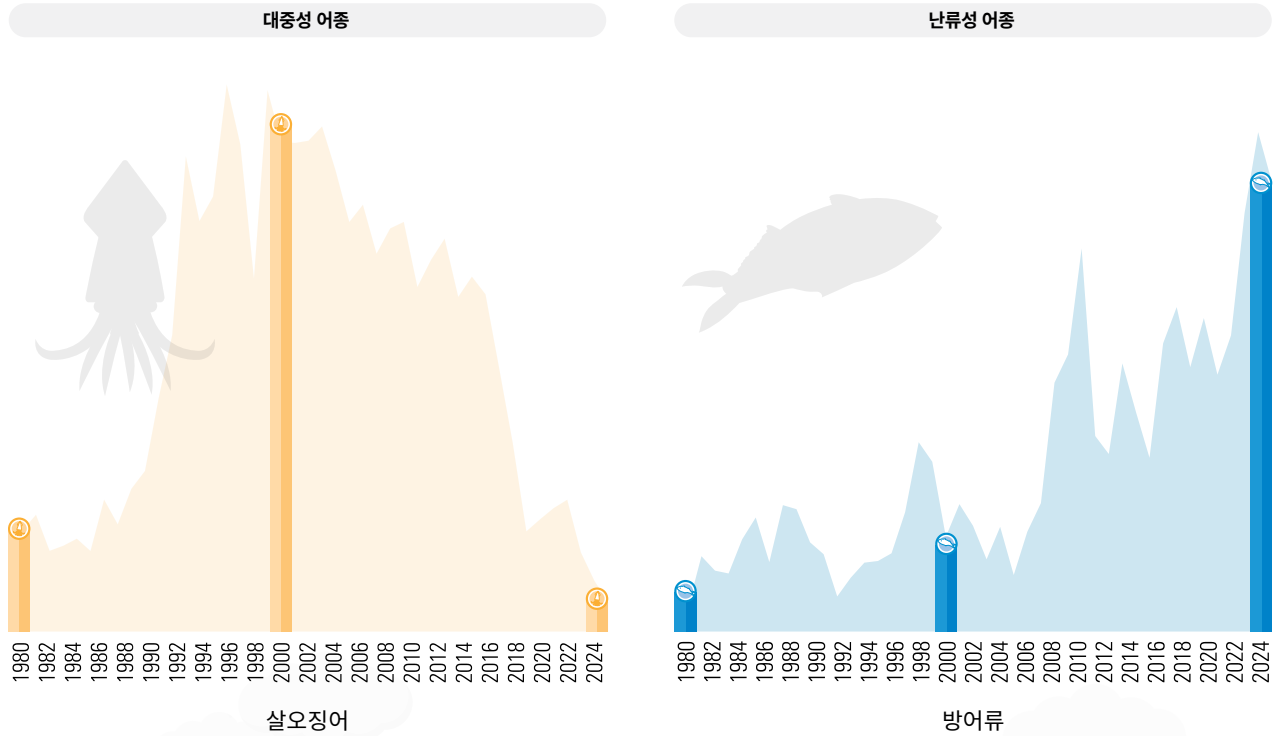


자연재난 사망실종의 68.7% 폭염피해자, 2018~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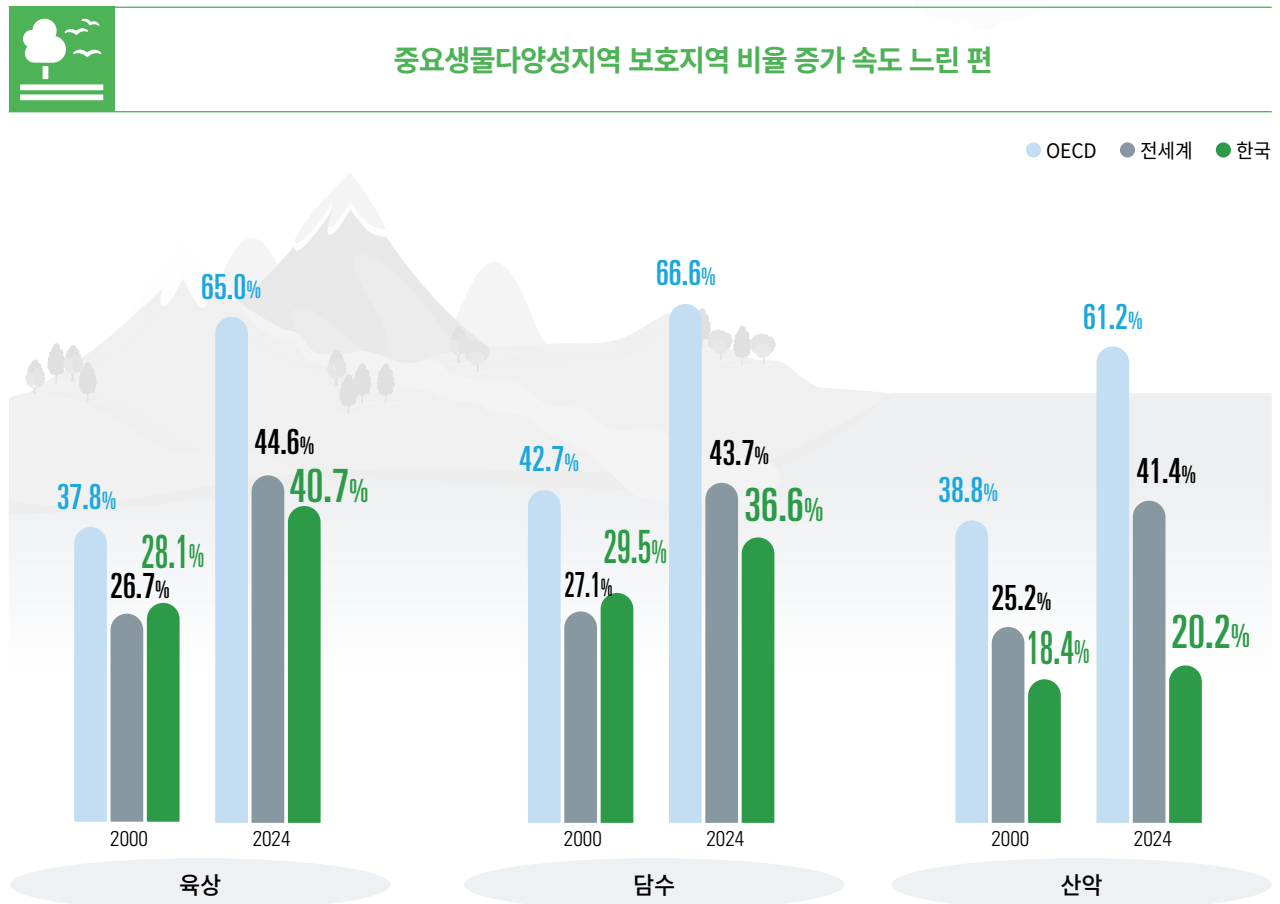




대중성 어종 줄고 난류성 어종 생산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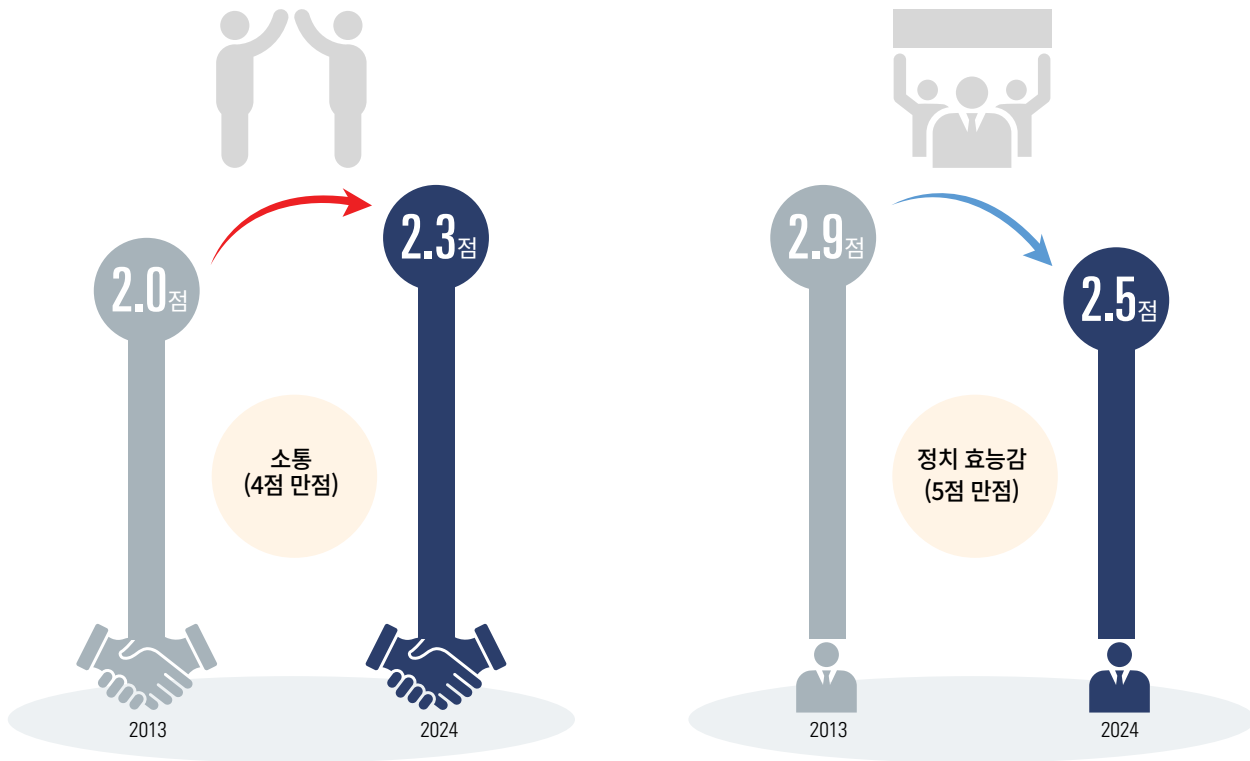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비율 증가 속도 느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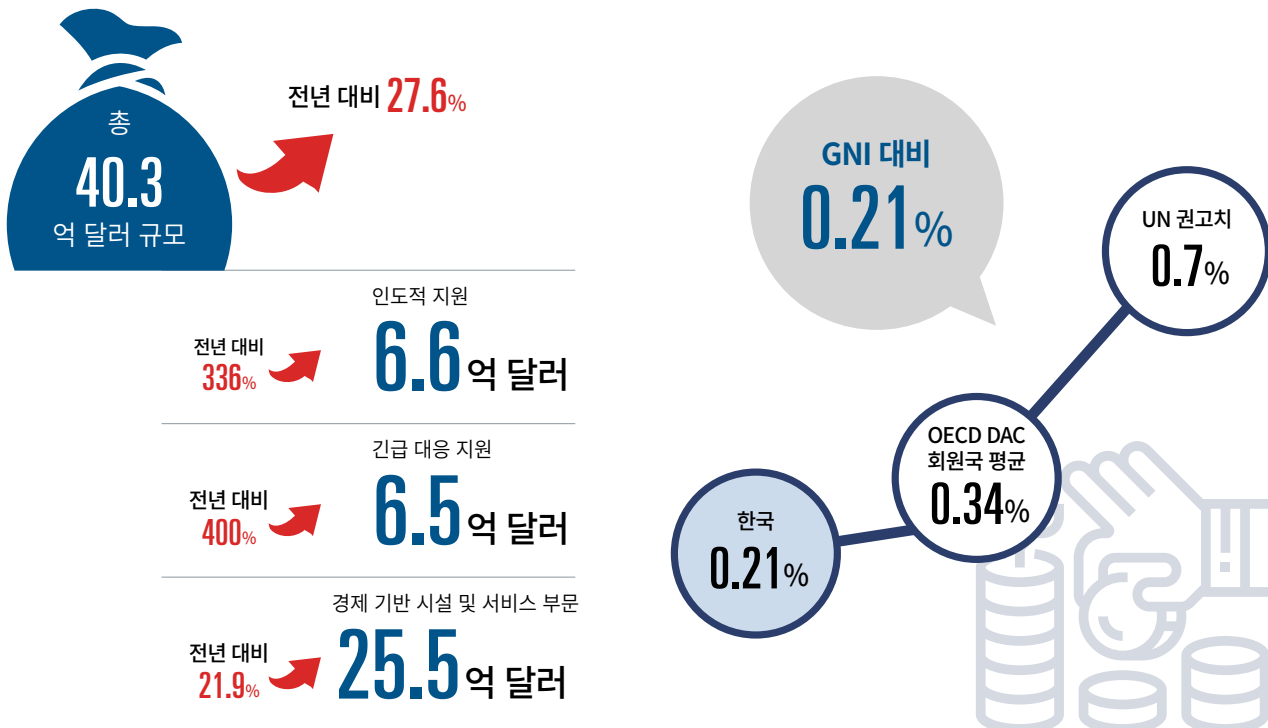




국민 소통은 개선, 정치 효능감은 하락



ODA 규모 꾸준히 확대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SDG 1번 목표에서는 다차원적인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사회보호 시스템 구축, 재난 회복력 강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 빈곤 퇴치 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을 통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극복하고자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경제의 불안, 기후위기 등으로 빈곤을 개선이 지연되어 2030년에도 전 세계 인구의 8.9%가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 범위가 늘어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보호 급여를 받지만 저소득국에서는 9.7%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한국에서도 공적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빈곤율 증가, 노인 빈곤율 등 과제가 남아 있다.

»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4년 15.3%로 감소

- 66~75세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43.6%에서 2024년 26.6%로 크게 개선된 반면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55.5%에서 53.8%로 소폭의 개선에 그침
- 2022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14.9%)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고, 은퇴연령(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도 39.7%로 매우 높은 편
- 2024년 남성 빈곤율(13.6%)과 여성 빈곤율(17.1%)의 격차(3.5%p)는 2011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데, 근로연령(18~65세) 인구에서의 성별 격차는 2024년 0.1%p로 크게 줄어든 반면 은퇴연령(66세 이상) 인구에서는 2011년 7.8%p에서 2024년 11.4%p로 늘어남
-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2024년 35.4%로 2016년 37.5% 대비 감소하였고, 2024년 비장애 인구의 빈곤율(14.2%)보다 2.5배 높은 수준

» 빈곤 위험에 취약하거나 노출된 집단인 장애인, 여성, 빈곤가구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2016~2024년 기간에 각각 10%p 이상 증가

- 빈곤가구 가구원의 수급률은 2016~2024년 기간에 18.0%p 증가하여 2024년 65.8%에 도달하였고, 장애인 및 여성 가구원의 수급률도 같은 기간 각각 10.1%p와 10.7%p 증가하여 2024년 각각 78.0%와 31.5%에 도달

»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2017년 1,713만 원에서 2025년 2,39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2025년 전체 가구 평균 저축액의 24.0% 수준

»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380만 원에서 2024년 679만 원으로 78.7%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7.4%에서 43.8%로 증가

» 빈곤감소 목적의 ODA 지출은 2023년 3.1억 달러 규모로 양자원조의 11.7%를 차지

- 빈곤감소 ODA의 GNI 대비 비중은 2023년 0.017%이며, 이는 OECD 34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는 중위권 수준

노인 빈곤율은 66~75세 중심으로 2024년에 개선

(📌 관련 지표 1.2.1)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2024년 기준 빈곤선은 약 1,966만 원으로 산정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로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으나,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으로 14.9%에 머물며 정체하였고 이후 2024년에는 0.4%p 증가하며 15.3%로 악화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의 연령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변화 추이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18~25세, 51~65세,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 추이와 비슷하게 2021년을 최저점으로 한 뒤 대체로 악화되었다. 18~25세와 51~65세 인구의 빈곤율은 2021년 각각 8.4%와 12.3%에서 2024년 9.3%와 13.1%까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76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21년 51.9%에서 2022년 54.0%로 크게 악화된 후 2023년 54.6%로 더 악화되었다가 2024년에 53.8%로 다소 개선



되었다. 0~17세와 26~40세 인구의 경우 2021년 이후에도 개선세가 조금 더 이어져, 2021년 각각 9.6%와 8.5%에서 2023년 8.5%와 7.0%까지 개선된 후 2024년에 다시 9.5%와 8.0%로 악화되었다. 한편 41~50세와 66~75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까지 개선세를 계속 이어 가, 2021년 각각 9.6%와 30.1%에서 2024년 9.3%와 26.6%까지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전년 대비 악화 내지 거의 정체된 반면 66세 이상 인구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개선되었다. 0~17세와 26~40세 인구의 빈곤율은 전년 대비 각각 1.0%p씩 증가하였고, 51~65세 인구의 빈곤율도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다. 18~25세 인구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정체하였고, 41~50세 인구에서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하며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반면 66~75세와 76세 이상 인구에서는 전년 대비 각각 2.8%p와 0.8%p 감소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21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66~75세 인구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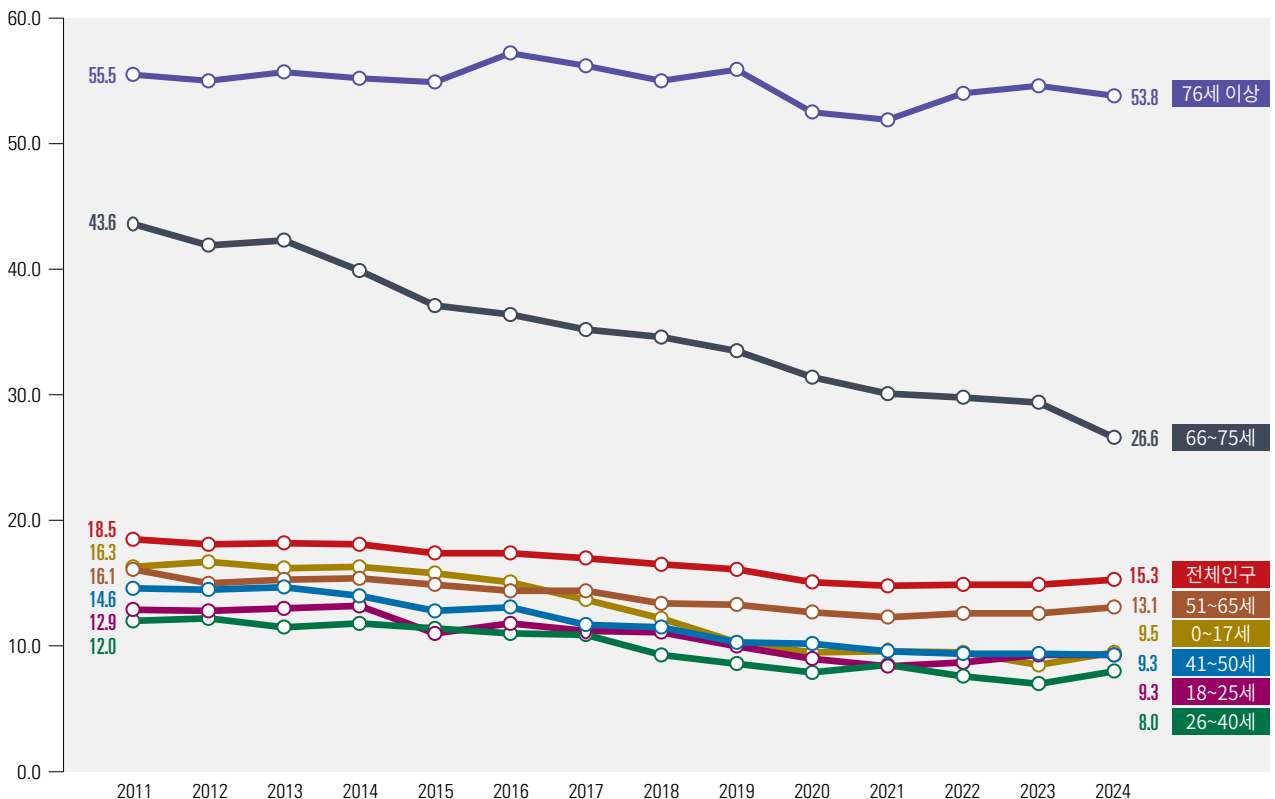
장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는데, 이 연령대에서 나타난 빈곤율 개선은 공적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성숙하면서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고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66~75세 인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21년 2,811만 원(전년 대비 7.3% 증가), 2022년 3,000만 원(전년 대비 6.7% 증가), 2023년 3,323만 원(전년 대비 10.8% 증가), 2024년 3,596만 원(전년 대비 8.2% 증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6세 이상의 은퇴연령 인구는 상대적 빈곤율이 여전히 가장 높은 집단이지만, 66~75세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43.6%에서 2024년 26.6%로 크게 개선되어 온 반면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55.5%에서 53.8%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친다. 또한 2011년과 2024년 사이, 0~50세까지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12.0~16.3%에서 8.0~9.5%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51~65세 인구에서는 16.1%에서 13.1%로 크게 줄어지지 못하고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14.9%로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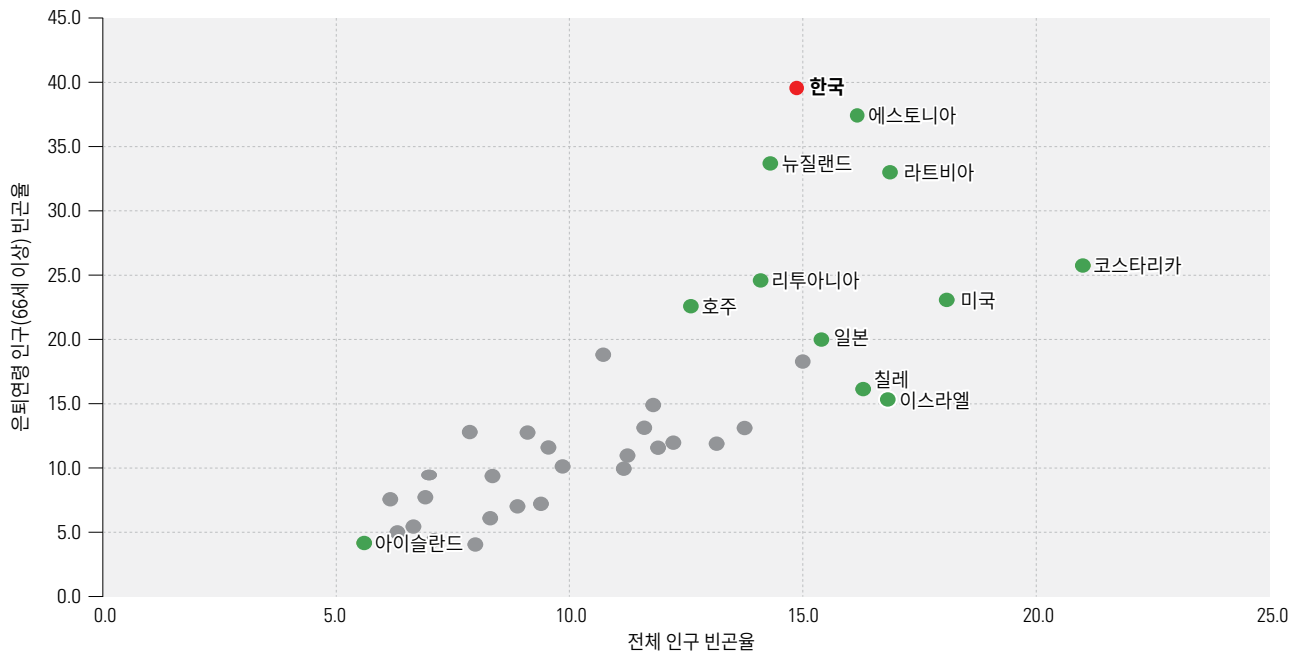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센터-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주 : 처분가능소득 기준

OECD 국가별 상대적 빈곤율, 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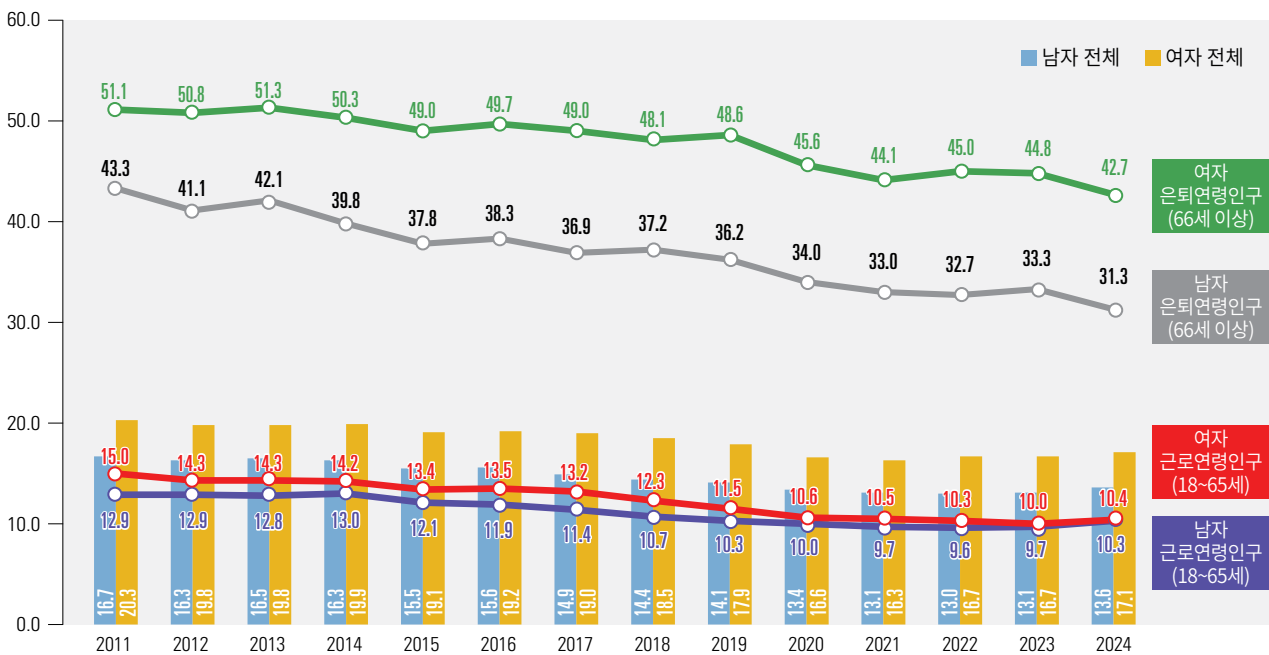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2.22. 인출)

주 : 아이슬란드는 2019년, 호주는 2020년, 일본은 2021년 자료이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콜롬비아는 제외함

성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주 : 처분가능소득 기준

OECD 자료가 제공되는 37개국 중 9번째로 높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39.7%)도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로는 에스토니아(각각 16.2%,

37.4%), 라트비아(각각 16.9%, 33.0%), 뉴질랜드(각각 14.3%, 33.7%)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아이슬란드(각각 5.6%, 4.2%, 2019년 기준), 체코(각각 6.2%, 7.6%), 덴마크(각각 6.3%, 5.0%), 핀란드(각각 6.7%, 5.5%) 등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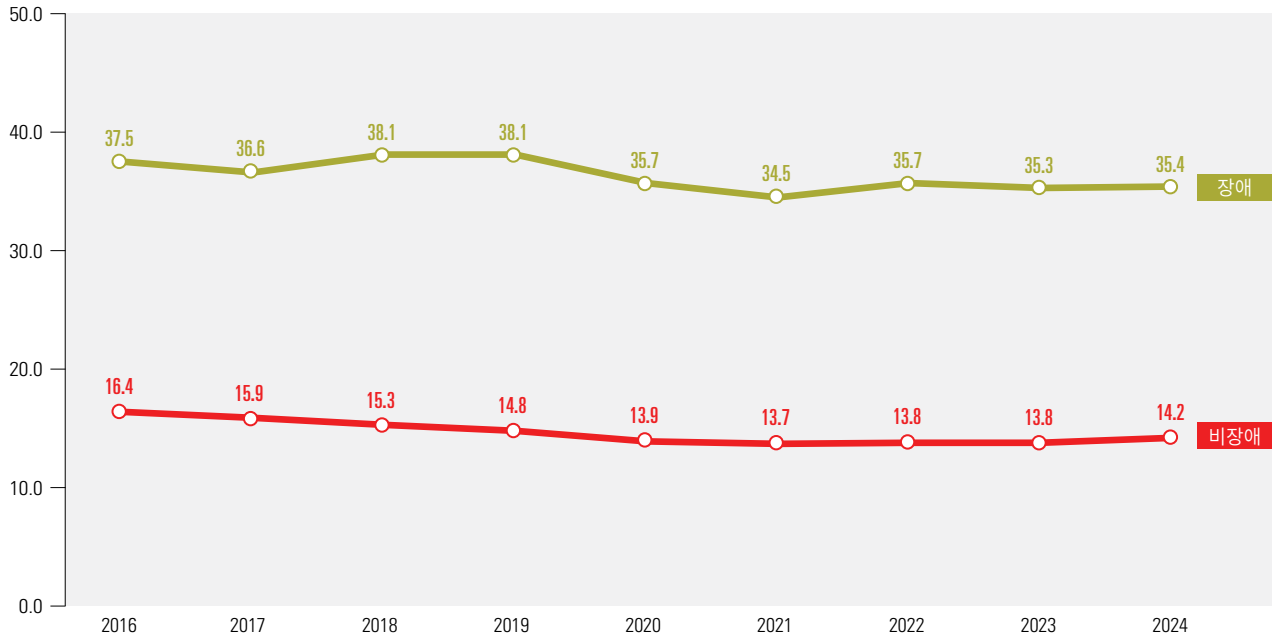
체 인구의 빈곤율이 낮고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빈곤율도 낮은 국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에서 더 높다. 남성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16.7%에서 2022년 13.0%까지 추세적으로 개선되다가 이후 악화하여 2024

년에는 13.6%에 이른다. 여성 인구의 빈곤율도 2011년 20.3%에서 2021년 16.3%까지 추세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악화하여 2024년에는 17.1%로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2011년 3.6%p에서 2024년 3.5%p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장애 인가와 비장애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2016~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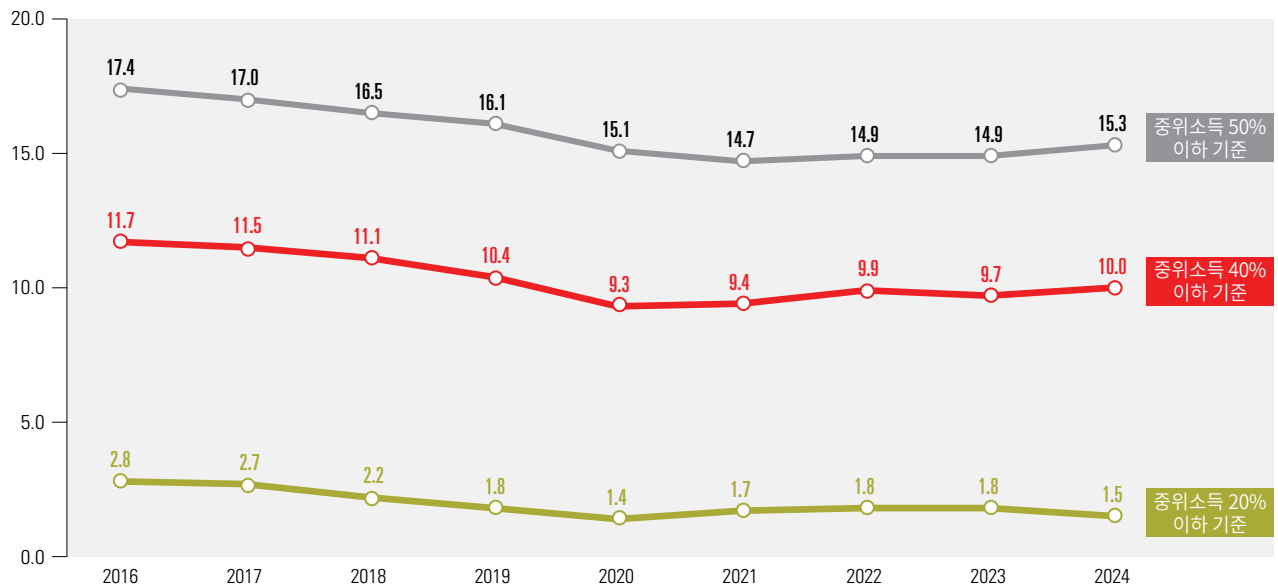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주1: 처분가능소득 기준

주2: 원자료 분석 결과임

중위소득 기준별 상대적 빈곤율, 2016~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주1: 처분가능소득 기준

주2: 원자료 분석 결과임

상대적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근로연령(18~65세)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남성 12.9%, 여성 15.0%에서 2024년 남성 10.3%, 여성 10.4%로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2011년 2.1%p였던 성별 격차도 2024년 0.1%p로 크게 줄었다. 은퇴연령(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도 2011년 남성 43.3%, 여성 51.1%에서 2024년 남성 31.3%, 여성 42.7%로 남녀 모두에서 크게 감소하였지만 성별 격차는 2011년 7.8%p에서 2024년 11.4%p로 오히려 커졌다. 성별 빈곤율 격차가 2024년에도 여전히 3.5%p에 달하는 데는 은퇴연령 인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장애 인구나 비장애 인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2016년 37.5%에서 2018년과 2019년 38.1%로 오른 뒤 2021년 34.5%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으나 2022~2024년에는 35%대에서 소폭으로 등락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 인구의 빈곤율(35.4%)은 비장애 인구의 빈곤율(14.2%)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통상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수치만으로는 기준선 이하 빈곤층의 소득 실태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 빈곤한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중윗값의 40% 이하 및 20% 이하 기준을 적용한 빈곤율을 함께 살펴본다. 202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윗값의 40% 이하(연간 1,574만 원 이하)인 빈곤인구의 비율은 10.0%, 중윗값의 20% 이하(연간 786만 원 이하)인 빈곤인구의 비율은 1.5%로 나타난다. 이는 2016년의 11.7%와 2.8%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중윗값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인구의 비율과 비슷하게 2020년 이후 대체로 악화 내지 정체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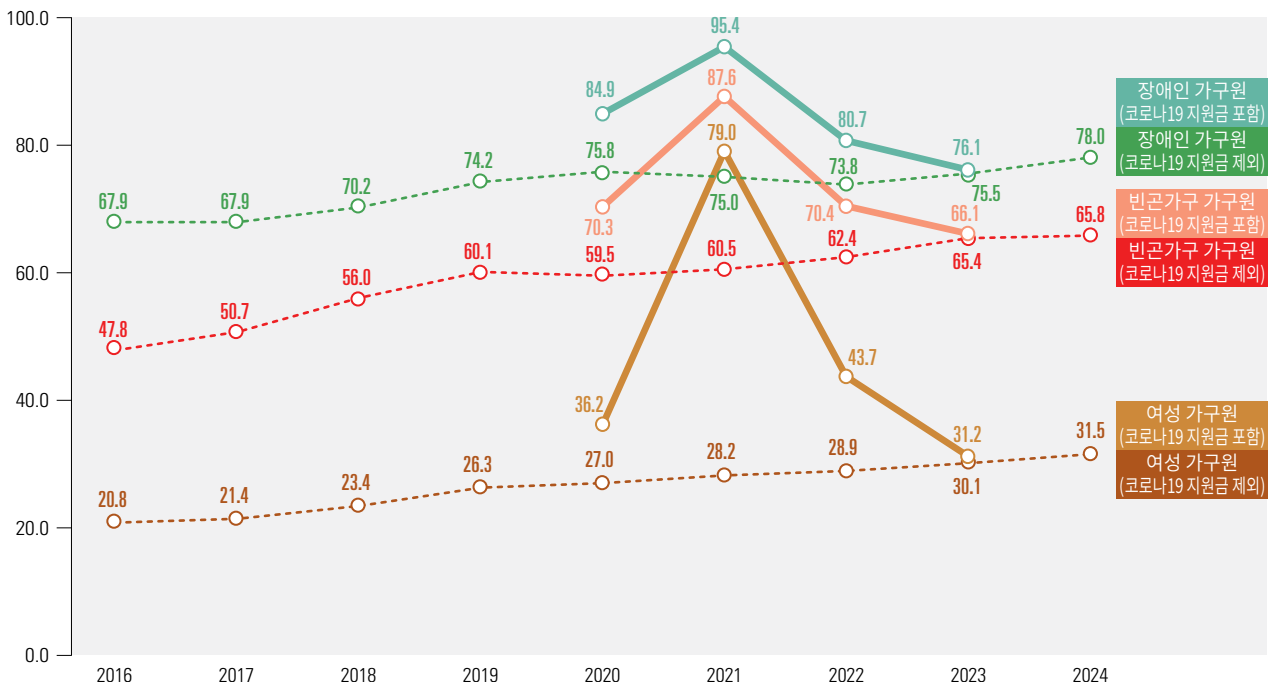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점차 증가하며, 특히 빈곤가구의 수급률이 크게 증가

(☞ 관련 지표 1.3.1)

공적소득이전급여는 아동수당과 같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당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 여성, 빈곤가구 가구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 2016~2024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주1 : 해당연도에 공적소득이전급여(연금, 사회보험급여, 수당, 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금)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일부 급여는 수급률 측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2 : 빈곤 가구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주3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포함



같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공공 부조형 급여, 산재보험 급여와 같이 사회적 위험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형 급여까지 다양하다. 이들 제도는 소득 상실이나 저소득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빈곤을 줄이는 데 주로 목적을 둔다.

장애인, 여성, 빈곤가구 등 빈곤 위험에 취약하거나 노출된 인구집단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2016년과 2024년 사이 각각 10%p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2016년 67.9%에서 2024년 78.0%로 10.1%p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20.8%에서 31.5%로 10.7%p 증가하였다. 특히 빈곤가구 가구원의 수급률은 같은 기간 47.8%에서 65.8%로 증가 폭이 18.0%p에 달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포함한 2021년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장애인 95.4%, 여성 79.0%, 빈곤가구 가구원 87.6%로 매우 높

았다. 이후 재난 상황이 개선되며 재난지원금 수급률이 점차 낮아졌고, 2024년에는 지급 대상자가 없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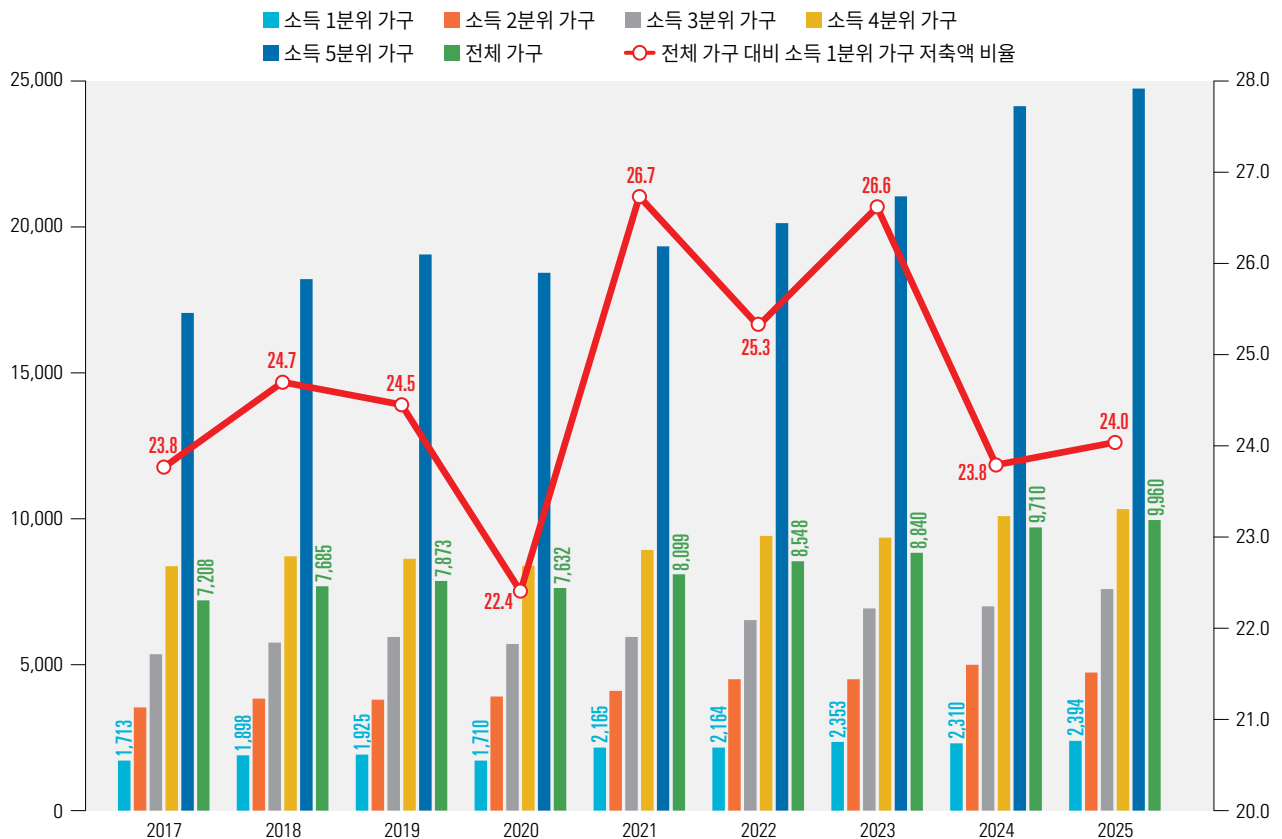
전체 가구 평균 저축액의 24% 수준

(🔗 관련 지표 1.4.1)

SDG 세부목표 1.4에서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저축액은 SDG 지표 1.4.1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안정적 소득과 더불어 자산은 긴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구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중요한 자원이다. 가구 자산은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 자산으로 적립·예치식 저축을 포함한 저축액과 현 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을 집계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소득분위별 가구 저축액과 전체 가구 대비 소득 1분위 가구 저축액 비율, 2017~2025

(단위: 만 원, %)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주 : 저축에는 수시·적립·예치식 저축, 저축성·보장성 보험, 주식·채권·펀드 및 기타 저축을 포함함

와 전체 가구의 저축액 변화를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2017년 1,713만 원에서 2025년 2,394만 원으로 39.8%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도 7,208만 원에서 9,960만 원으로 38.2% 증가하였다. 저축액 증가율에서는 소득 1분위 가구와 전체 가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저축액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전년 대비 11.2%나 감소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일부 자산이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전체 가구의 저축액이 전년 대비 6.1% 반등하는 동안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전년 대비 26.6%로 가장 크게 반등하기도 하였다.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2023년 2,3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뒤 2024년 2,310만 원으로 1.8%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394만 원으로 다시 3.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전년 대비 각각 3.4%, 9.8%, 2.6% 늘어나며 증가세

를 이어 간 것과 대조된다.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 대비 소득 1분위 가구의 저축액 비율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저축 규모를 보여 준다. 2017년 1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전체 평균 저축액의 23.8%에 그쳤다가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26.7%와 26.6%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2025년에는 24.0%로 다시 낮아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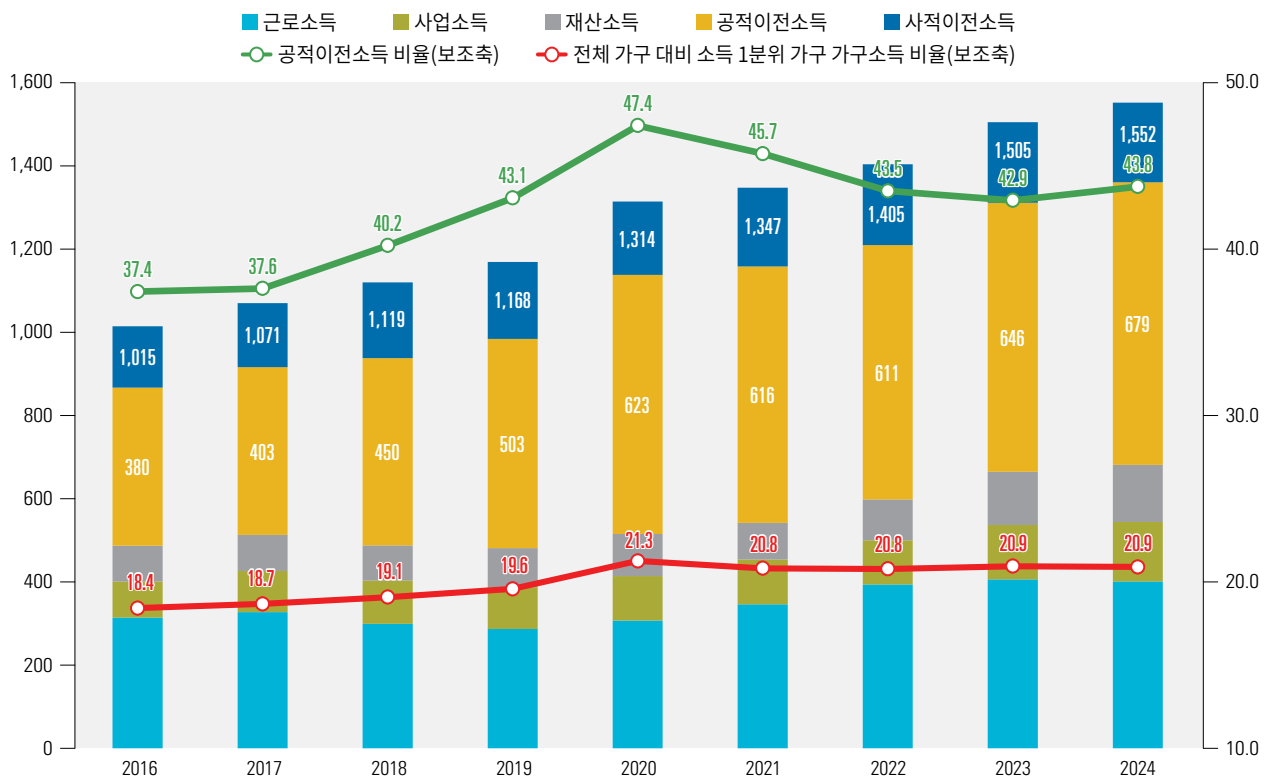
2016년 380만 원에서 2024년 679만 원으로

78.7% 증가 (☞ 관련 지표 1.b.1)

소득 하위인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6년 1,015만 원에서 2024년 1,552만 원으로 52.9% 증가하였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2020년에 전년 대비 12.5%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때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3.9%로 특히 더 많이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6년 5,510만 원에서 2024년 7,427만 원으로 34.8% 증가하였고, 202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3.6%로 평년 수준이었다. 전체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율, 2016~2024

(단위: 만 원, %)



출처: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5.12.22. 인출)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와 비교하여도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증가하였다.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18.4%에 그쳤으나 2024년에 20.9%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1.3%에 달하기도 하였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380만 원에서 2024년 679만 원으로 78.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사업소득(64.4%), 재산소득(59.3%), 사적이전소득(30.6%), 근로소득(27.7%)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20년 전년 대비 23.9%로 크게 늘어난 뒤 2년 연속 소폭 줄어들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각각 5.7%와 5.1% 증가하였다. 주로 은퇴인구나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소득이전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경상소득의 37.4%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47.4%까지 늘어났다. 이후 다소 줄어들긴 하였지만 2024년에도 43.8%로 2016년에 비해 여전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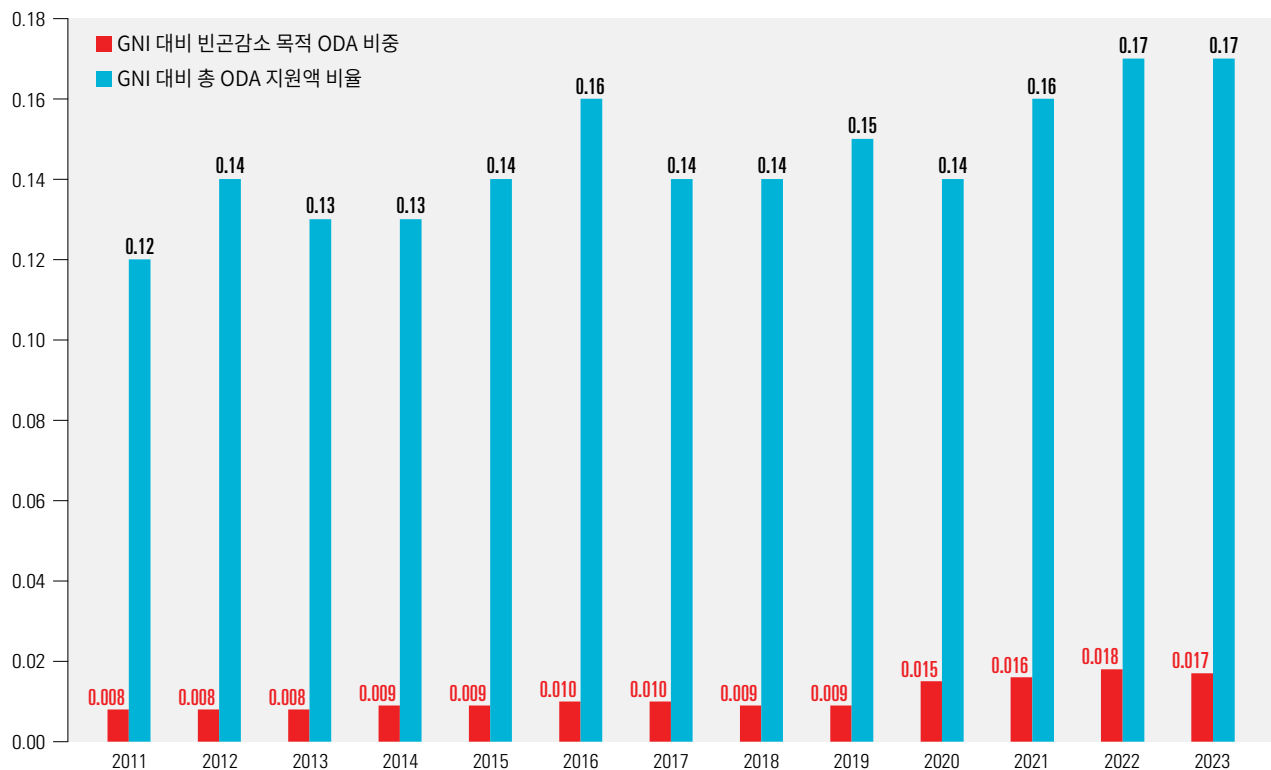
한국의 빈곤감소 목적 ODA 지출은

GNI 대비 0.017% (📍 관련 지표 1.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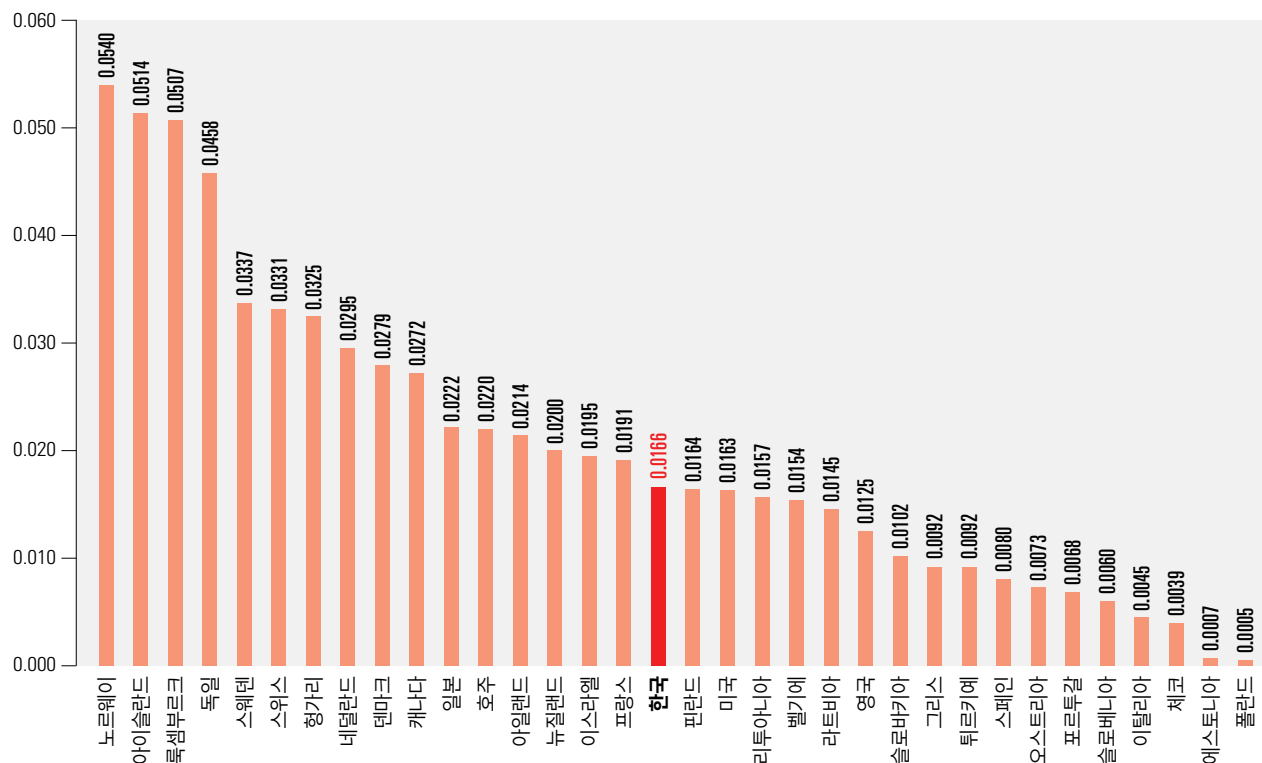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의미한다. SDG 지표1.a.1 수원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빈곤 퇴치 집중 총 ODA 증여액 비중은 ODA 중에서도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 꼭 필요한 빈곤감소 사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ODA 사업은 크게 5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교육, 감염병 예방과 기초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보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 시설을 설치하여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급수 및 위생, 기아 해소를 위해 영양가 높은 식량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개발 식량 원조, 주거, 고용 등 빈곤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분야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

GNI 대비 빈곤감소 목적 ODA 비중, 2011~2023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2025.9.15. 인출); OECD, Topic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ttps://www.oecd.org/en/topic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 2025.11.4. 인출)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15. 인출)

주1 : 그리스는 2022년 자료임

주2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제외함

는 기초 사회 서비스에 대한 다분야 지원이 그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지원한 ODA는 3억 1,130만 달러 규모로, 이는 양자원조의 11.7%에 해당한다. 빈곤감소 목적 ODA의 GNI 대비 비중은 2011~2019년 기간에 0.008~0.01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20년 0.015%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조금 더 증가하여 2023년에는 0.017%에 이른다.

한국의 2023년 GNI 대비 빈곤감소 목적 ODA 비중(0.017%)은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4개 국가 중 17위에 해당하는 중위권 수준이다. 노르웨이가 0.054%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0.05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 ZERO HUNGER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 2번 목표에서는 세계 인구의 기아 종식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식량과 양질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체계를 지향한다. 2024년에도 세계 인구의 약 8.2%가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은 수억 명에 이른다. 한국의 2024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과 여성 빈혈 유병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국내 농업 생산성과 가축 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24년 16.7%로 전년 대비 1.2%p 감소

-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5%p 줄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도 다소 줄어들
- 20대 청년층(22.3%)과 10대 청소년(21.0%), 70세 이상 고령층(19.4%) 등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인 파악과 개선 노력이 필요

» 여성 빈혈 유병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2024년 12.7%에 이르는데, 이는 OECD 중위권 수준

-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9.7%)과 40대(19.3%)에서 특히 높은 편

»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던 농업 노동생산성은 고령화 등에 따라 2017년 이후 감소하여 2024년 시간당 1만 5,496원으로 나타남

- 규모가 큰 전문농은 시간당 약 2만 5천원에 이르지만 일반농(7천원), 부업농(5천원), 자급농(1천원)은 훨씬 낮은 수준
- 전문농의 경영 역량을 더욱 높여 식량 생산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가 유형에 따른 지원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2024년 94%에 달하며 OECD 34개국 중 8번째로 높아 가축 자원 다양성 확보에 관심 필요

- 초국경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29%로 OECD 중간 수준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격차는

다소 완화 (○ 관련 지표 2.1.1)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식품교역 및 식품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의 영양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소득 격차나 식생활 방식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 문제는 아직 존재한다.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의 75% 미만 이면서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경우를 영양섭취 부족자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세 이상, 표준화)은 16.7%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 8.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9년 이후로는 1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 17.9%로 2010년대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2%p 감소하며 16.7%로 떨어졌다. 특히 2024년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5%로 전년 대비 1.5%p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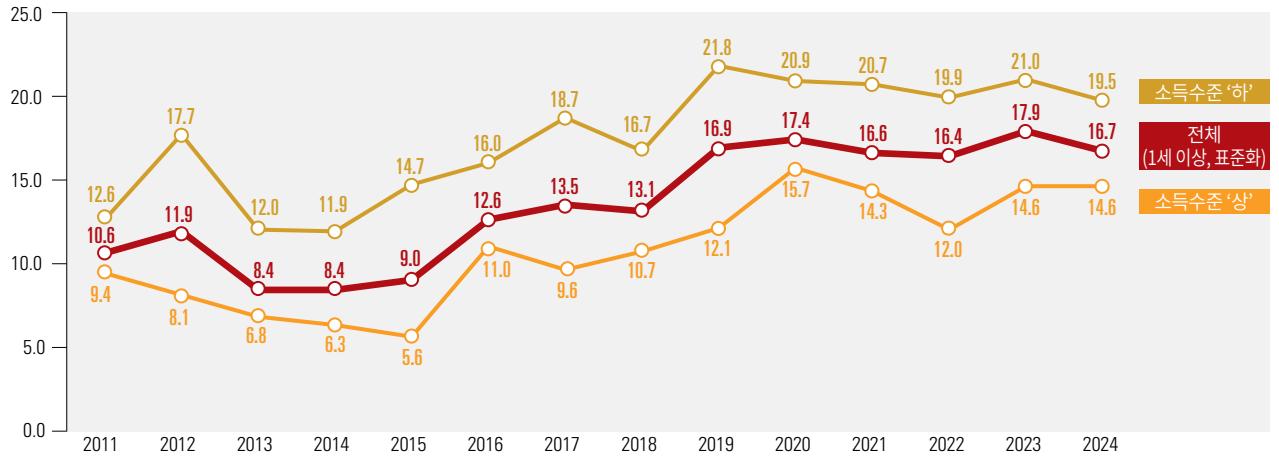
14.6%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차이는 4.9%p로 2011년 3.2%p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20대(22.3%)와 10대(21.0%)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19.4%에 달하며, 30대와 40대에서는 17%대로 나타난다. 10대와 20대는 아직 신체 발달이 진행 중이거나 생애주기상 자기 계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여서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양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0대와 50대, 그리고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2%p 이상씩 감소하여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영양은 다소 개선되었다. 한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낮았던 2015년과 비교하면, 2024년에는 1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p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더 높다. 남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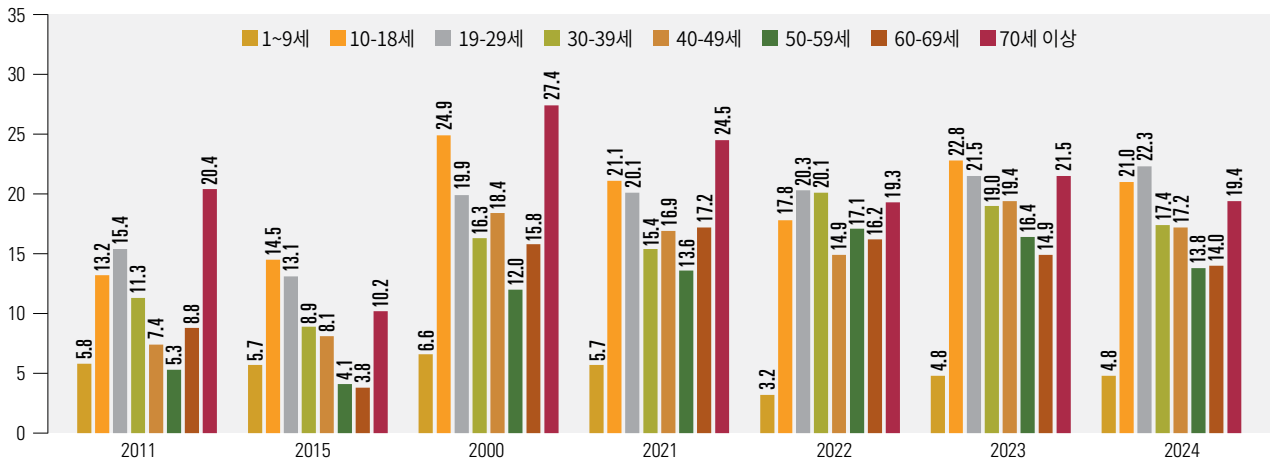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3.5 인출)

주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주2: 소득수준은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 ÷ √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5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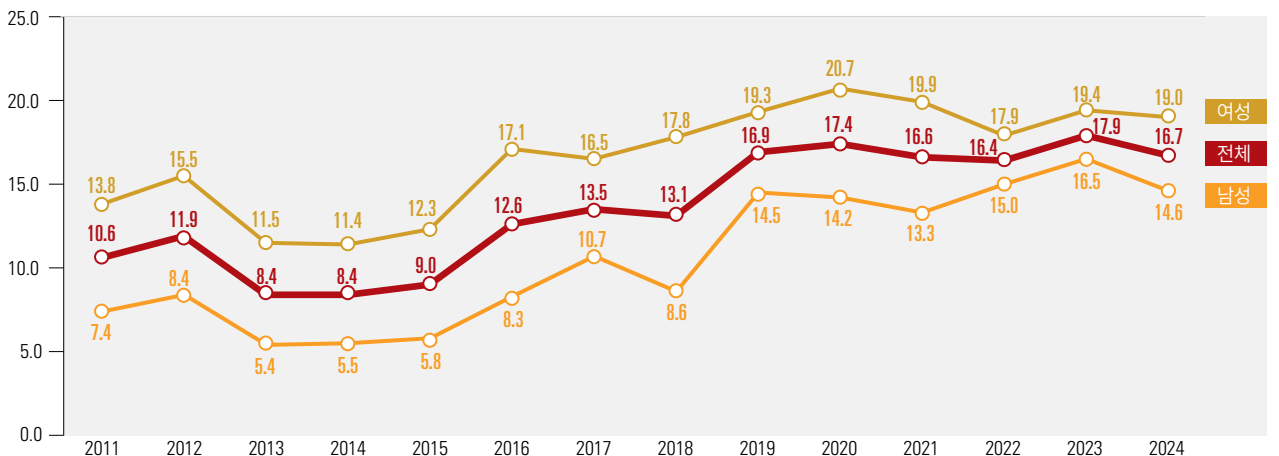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3.5 인출)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성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2011~2024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3.5 인출)

주: 1세 이상(표준화) 기준이며,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녀 간 차이는 2022년과 2023년 2.9%p까지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 남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여성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다시 4.4%p로 늘어났다.

2015년 이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 70대 이상 노년층의 식생활과 영양에 관심이 필요하다. 영양섭취 부족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다이어트, 부실한 식사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생애주기와 가구 특성에 따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 빈혈 유병률은 12.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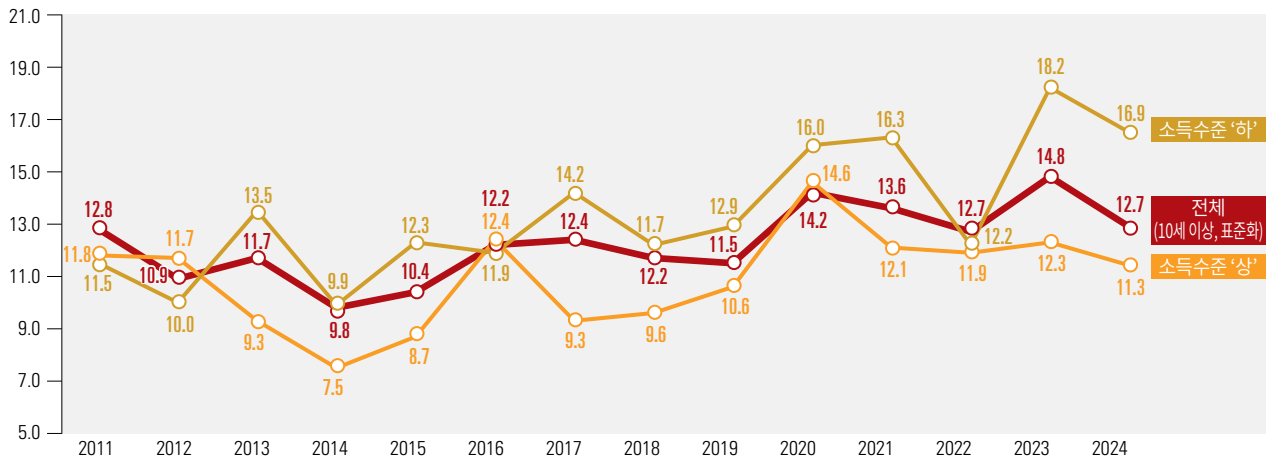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관련 지표 2.2.3)

빈혈(貧血, anaemia)은 신체 조직에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 전신 쇠약, 피로, 집중력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월경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빈혈에 걸리기 쉽다.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 빈혈은 임신 관련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심한 경우 심부전과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24년 기준 10세 이상(표준화)의 한국 여성 중 12.7%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저소득층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소득수준별 여성 빈혈 유병률,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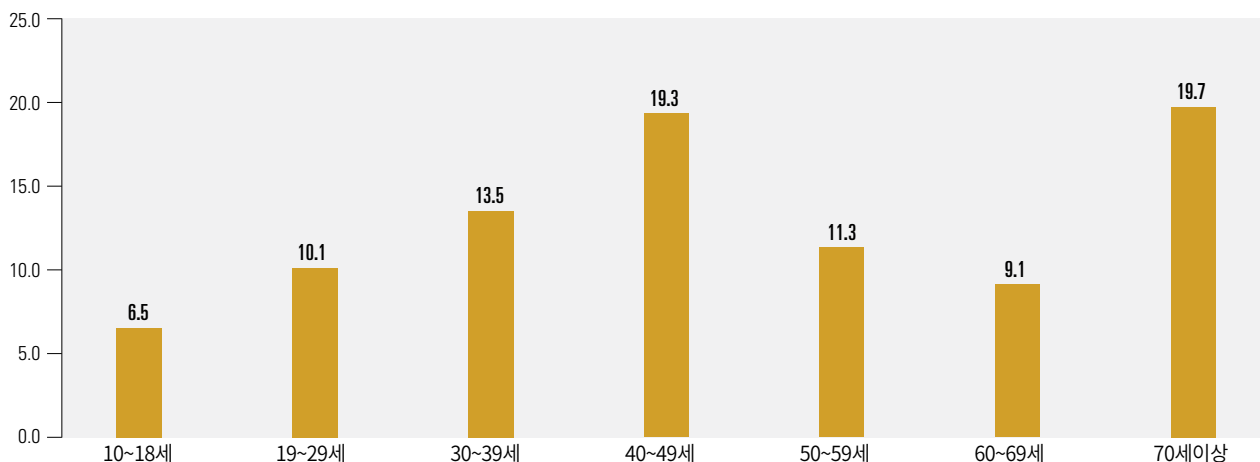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5.8.26. 인출)

주1 : 10세 이상(표준화) 여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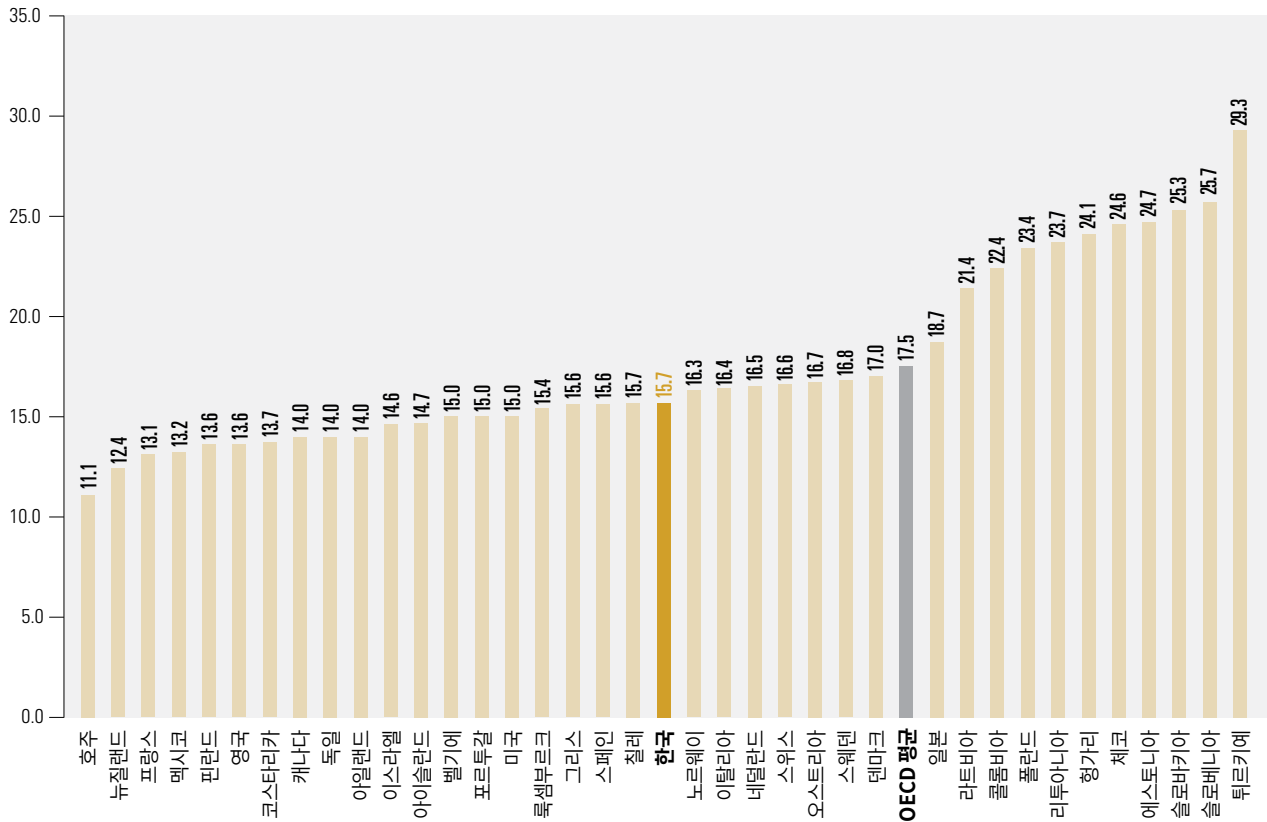
주2 : 소득수준은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 ÷ √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5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

연령대별 여성 빈혈 유병률, 2024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5.8.26. 인출)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12. 인출)
주: 15~49세 여성 기준

16.9%에 달하면서 소득집단 간 5.6%p 차이가 난다. 연령 대별로는 70세 이상(19.7%) 노인층과 40대(19.3%) 중년 층, 그리고 30대(13.5%) 청년층에서 여성 빈혈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OECD 국가들의 2023년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15.7%로 OECD 평균(17.5%)보다 다소 낮지만 대체로 중위권에 있다. 유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11.1%)와 뉴질랜드(12.4%)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로 29.3%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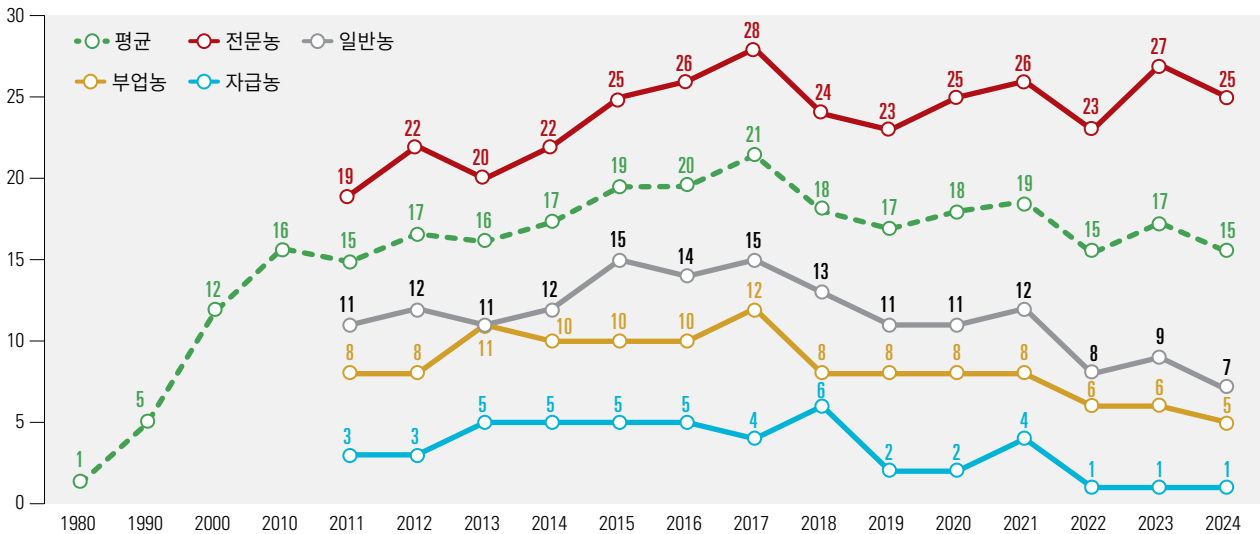
빈혈은 만성 피로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임신 한 경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에서는 과다한 월경 출혈을 유발하는 부인과 질환이 빈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불임이나 주산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성 빈혈의 연령대별 요인을 파악하고 영양 교육 등 빈혈 예방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 성격에 따른 경영역량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2.3.1)

농업 노동생산성은 농가의 경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투입된 노동력 대비 그 결과로 얻은 생산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출을 통해 노동자 1인당 투입되는 실물자본의 양을 늘리거나, 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적자본의 양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농업 부문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2024년 시간당 1만 5,496원으로 조사된다. 1980년 시간당 1,220원에서 2000년 1만 1,778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후 2017년 2만 1,444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은 감소 추세에 있다. 과거 농업 관련 실물자산과 인적자본이 늘어나고 농업기술도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농업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인적자본



출처: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5.8.26. 인출)

- 주 : 1. 주업농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은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 일반농은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미만인 농가 중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2. 부업농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3. 자급농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 200만 원 미만인 농가

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노력도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생산 역량을 보다 현실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업농, 부업농, 전문농, 자급농 등 농가 성격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지 규모가 크고 전업화된 전문농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2만 5천원 수준으로 전체 농가 평균보다 1만 원가량 더 높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농은 농가 평균의 절반 이하인 시간당 약 7천원, 부업농은 5천원, 자급농은 1천원 수준에 그친다. 2011년 평균 농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1만 5천원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농가별로 보면 전문농 약 1만 9천원, 일반농 1만 1천원, 부업농 8천원, 자급농 3천원으로 농가 간 격차가 지금보다 작았다.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가의 경영 역량 증진과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농업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농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의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전문농의 경영 역량을 키우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하며 규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

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농가 유형에 따른 경영 역량 증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94%에 달함

(☞ 관련 지표 2.5.2)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동식물 자원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인류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각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을 통해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가축품종의 비율을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 DAD-IS에 등록된 8,800개 이상의 품종 중 약 7,700개 품종은 하나의 국가에서만 보고되는 지역 품종(local breed)이고, 나머지 약 1,100개 품종은 초국경 품종(transboundary breed)으로 분류된다. 각 가축품종은 ‘멸종위험(at risk)’, ‘멸종위험 없음(not at risk)’, 그리고 ‘정보 없음(unknown)’으로 분류되는데, 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멸종 상태가 알려진 품종 중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멸종위험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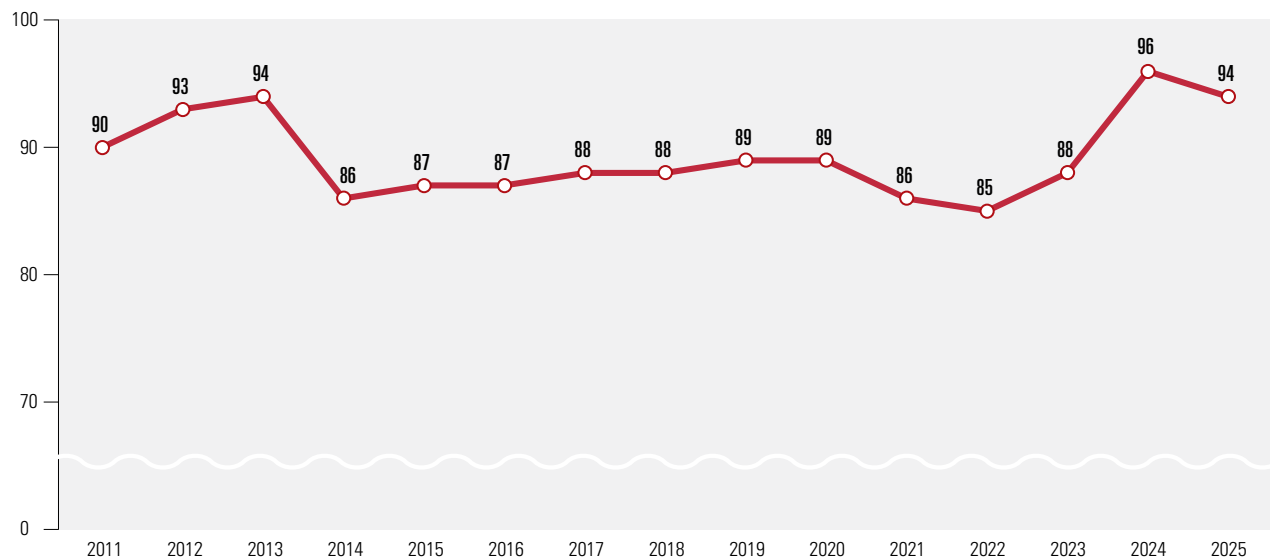
2025년 한국의 지역 가축 품종의 멸종 위험 비율은 94%에 달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재래 가축 사육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과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정교해 실제 위험도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상태가 바뀌거나, 혹은 기존에 멸종 정보가 없던 품종에 대해 멸종 상태가 알려지는 경우에도 멸종위험 비율은 변하게 된다. 20종 이상의 품종에 대해 멸종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역 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80%대 수준을 유지해 왔고,

2023년부터 멸종 정보가 알려진 품종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멸종위험 비율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역 품종의 가축 자원 다양성 확보에 관심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25년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4개국 중 칠레(13%), 튀르키예(28%), 콜롬비아(29%)에서 멸종위험이 특히 낮다. 그 외 아이슬란드와 멕시코(각각 50%)를 비롯한 9개국에서 50~70%대, 폴란드(83%)를 비롯한 11개국에서 80%대의 멸종위험을 나타낸다. 한국(94%) 수준

한국의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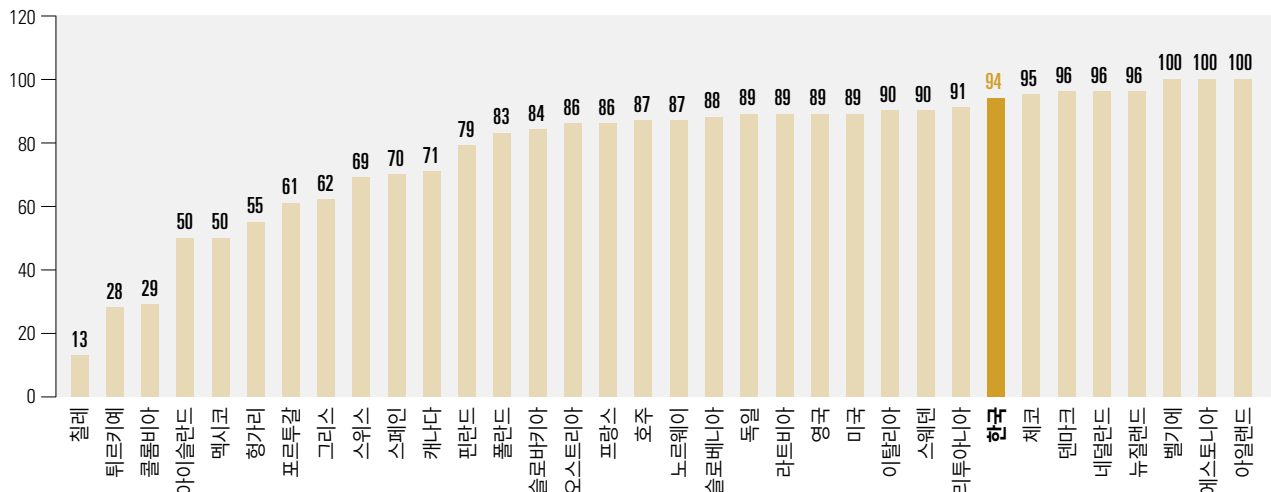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6 인출)

주 : 멸종 상태가 알려진 품종 중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나타냄

OECD 국가별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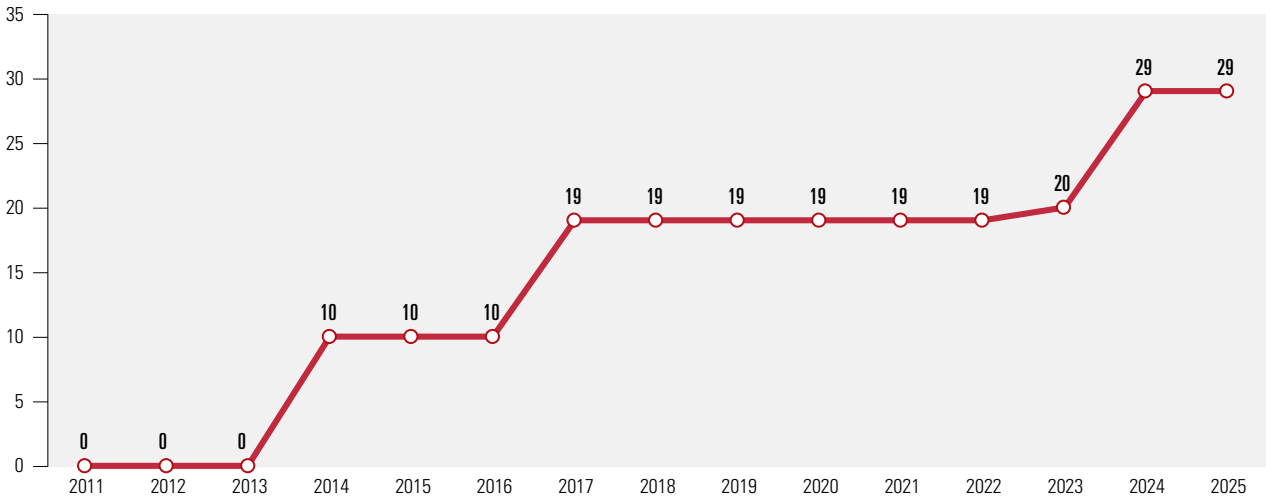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6. 인출)

주1 : 멸종 상태가 알려진 품종 중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나타냄

주2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은 제외함

한국의 초국경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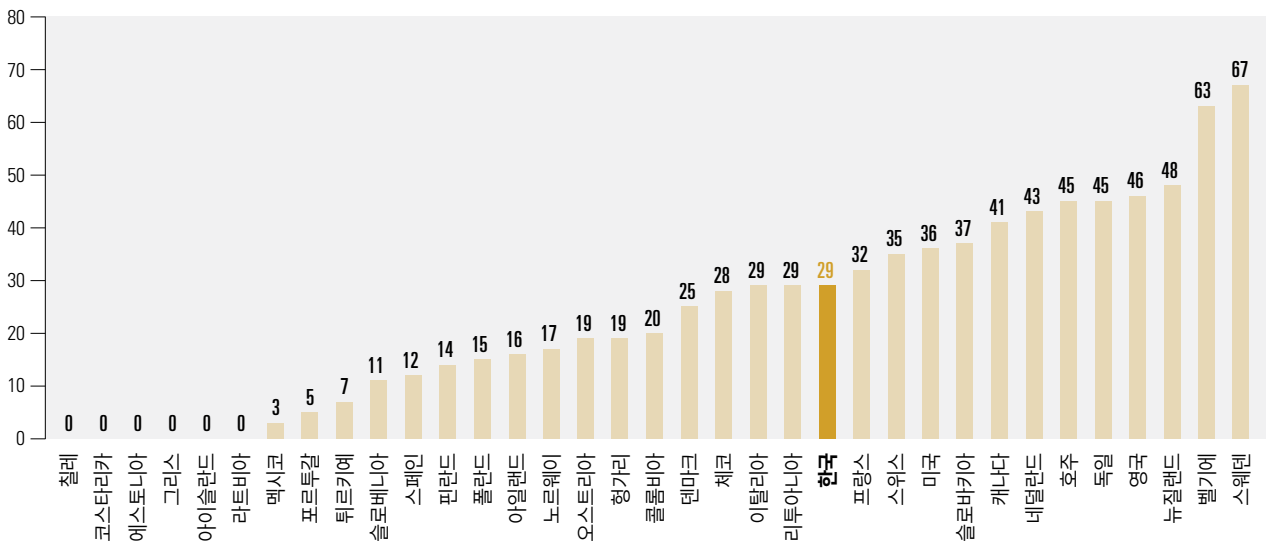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6. 인출)

주 : 멸종 상태가 알려진 품종 중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나타냄

OECD 국가별 초국경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 2025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6. 인출)

주1 : 멸종 상태가 알려진 품종 중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나타냄

주2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은 제외함

이거나 그 이상인 국가는 체코(95%), 덴마크·네덜란드·뉴질랜드(각각 96%), 벨기에·에스토니아·아일랜드(각각 100%) 등 7개국뿐이다.

초국경 품종의 경우에는 SDG 지표의 2025년 정기 개편 때부터 SDG에 새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2025년 기준 FAO에 등록된 한국의 49개 초국경 품종 중 34종에 대해 멸종 상태가 알려져 있고, 이 중 10종이 멸종위험으로 분류되어 초국경 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29%로 나타난다. 한국의 초국경 가축 품종의 멸종 위험 비율은 2013년

까지는 0%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25년 29%를 기록하였다.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초국경 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지역 품종보다 낮다. 멸종위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67%)과 벨기에(63%)이며, 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그리스·아이슬란드·라트비아 등 6개국에는 멸종위험으로 분류된 초국경 품종이 없다. 한국은 자료가 제공되는 OECD 35개국 중 이탈리아·리투아니아(29%)와 함께 13번째로 초국경 품종의 멸종위험이 높은 국가이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과 웰빙을 다루는 SDG 3번 목표에서는 전 세계 모두에게 보편적인 건강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 21세기 들어 모성 및 아동 사망과 HIV 발생이 뚜렷이 줄어들고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등 여러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라리아, 결핵 등의 감염병,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 흡연, 대기오염, 잘못된 식생활 등의 위험 요인은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성 음주, 전자담배 사용, 비감염성 질환 관리, 의료인력 밀도와 지역 격차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다.

»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다양한 집단과 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

-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1년 8.9리터에서 2023년 7.8리터로 감소하며 OECD 평균(8.5리터)보다 낮아졌으나, 여성 음주율은 2011년 대비 증가
- 만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현재)은 2024년 16.7%로 2011년(27.1%)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12.1%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의사(한의사 포함),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하는 주요 보건의료 인력의 밀도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 대비 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

- 특·광역시 지역의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 도 지역의 경우에는 2.1명으로 지역 간 격차 존재

»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HC SCI)는 2021년 89점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운데, 흡연과 고혈압 등 비감염성 질환 영역(76점)에서는 개선이 필요

- 모자 및 아동 건강 증진,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접근성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여 모든 국민이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할 필요

» 소외열대질환(NTD)에 속하는 한센병, 땀기열, 치쿤구니야열, 공수병은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땀기열의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국내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소외열대질환이 열대 지역의 빈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통한 포괄적 대응 필요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여성 음주율은 증가 (● 관련 지표 3.5.2)

알코올 소비는 200가지 이상의 질병을 유발하고 인체 손상을 일으키는 등 건강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 질환, 심장 질환, 암은 물론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이나 행동장애의 위험을 높인다(WHO, 2024b).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에 따르면 2016년 알코올 소비로 약 280만 명이 사망하였고(전체 사망의 5.3%), 약 1억 3,000만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가 손실되었다.

한편 알코올 소비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다분야에 걸친 유해 요인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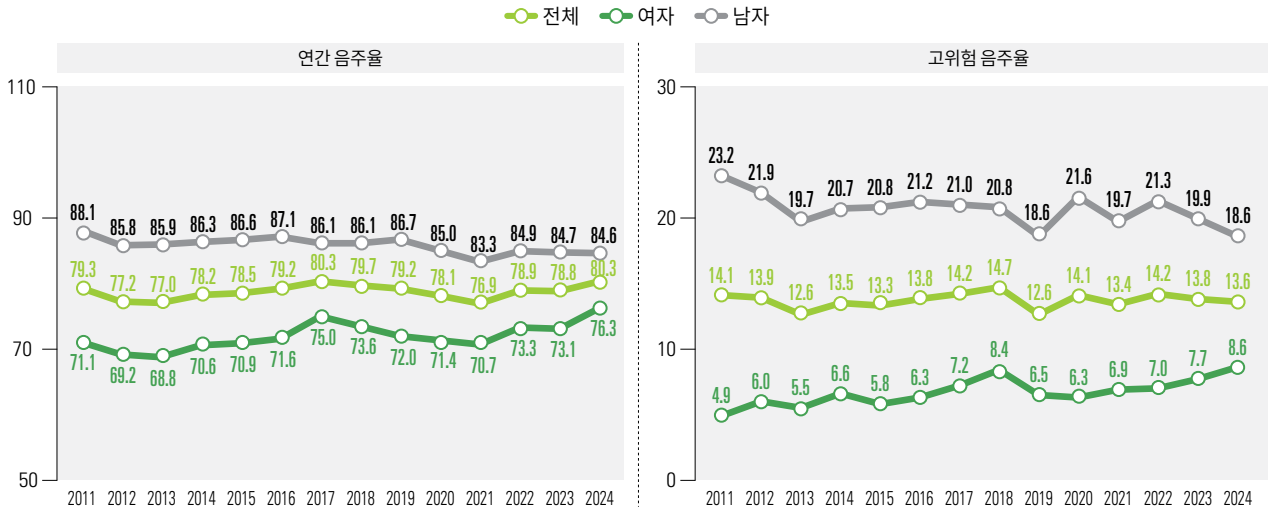
가장 직접적으로는 마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SDG 세부목표 3.5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목표 16), 취약계층의 불리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거나(목표 10), 지속가능한 소비(목표 12)와 경제성장(목표 8)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Sperkova et al., 2022). 세계보건기구(WHO, 2025b)에서는 음주가 건강 위험과 부상 위험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행동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는 연간 음주율은 2024년 80.3%로, 2011년 79.3%에서 1.0%p 증가하였다. 남자의 연간 음주율은 2011년 88.1%



연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2011~2024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1.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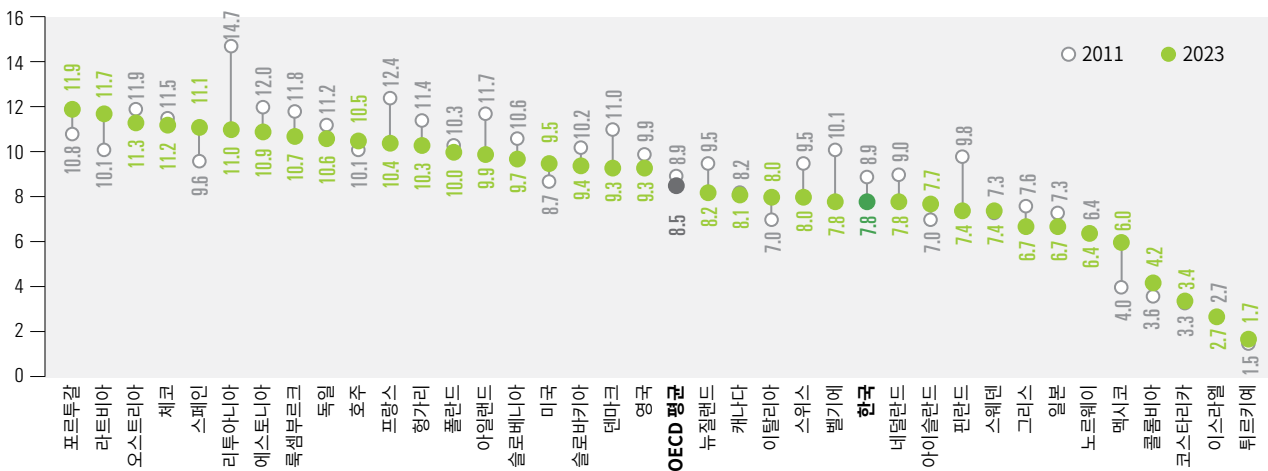
주1: 연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주2: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주3: 만 19세 이상 기준이며,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OECD 국가별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 2011, 2023

(단위: 리터)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22. 인출)

주: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콜롬비아, 이스라엘은 2022년 자료임, OECD 평균에 2011년은 칠레를 포함하였으나, 2023년은 제외된 수치임

에서 2024년 84.6%로 3.5%p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여자의 경우에는 71.1%에서 76.3%로 5.2%p 증가하였다. 남녀 간 연간 음주율 차이는 2011년 17.0%p에 달하였으나 2024년에는 8.3%p로 줄어들었다.

한편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은 고위험 음주율은 2024년 13.6%로 2011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연간 음주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는 다른 추이가 나타난다. 남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 23.2%에서 2024년 18.6%로 4.6%p 줄었지만, 같은 기간 여자의 경우에는 4.9%에서 8.6%로

3.7%p 늘었다. 이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역할 변화, 그리고 대중매체에 의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며, 음주가 일과 자녀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손쉬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김광기 외, 2018). 실제로 한국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4.9%에서 2025년 64.7%로 향상하였다.

알코올 소비에 관한 SDG 3.5.2 지표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으로 측정된다. 한국의 1인당 연

간 알코올 소비량은 2023년 7.8리터로 OECD 평균(8.5리터)에 비해 적은 편이다.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11.9리터), 라트비아(11.7리터), 오스트리아(11.3리터), 체코(11.2리터), 스페인(11.1리터) 등 유럽 국가이다. 반면 알코올 소비량이 적은 나라로는 튀르키예(1.7리터)와 이스라엘(2.7리터) 외에 코스타리카(3.4리터), 콜롬비아(4.2리터), 멕시코(6.0리터) 등 중남미 국가가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OECD 37개국 중 23개국에서 2023년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한 가운데, OECD 평균은 2011년

8.9리터에서 2023년 8.5리터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2011년 8.9리터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7.8리터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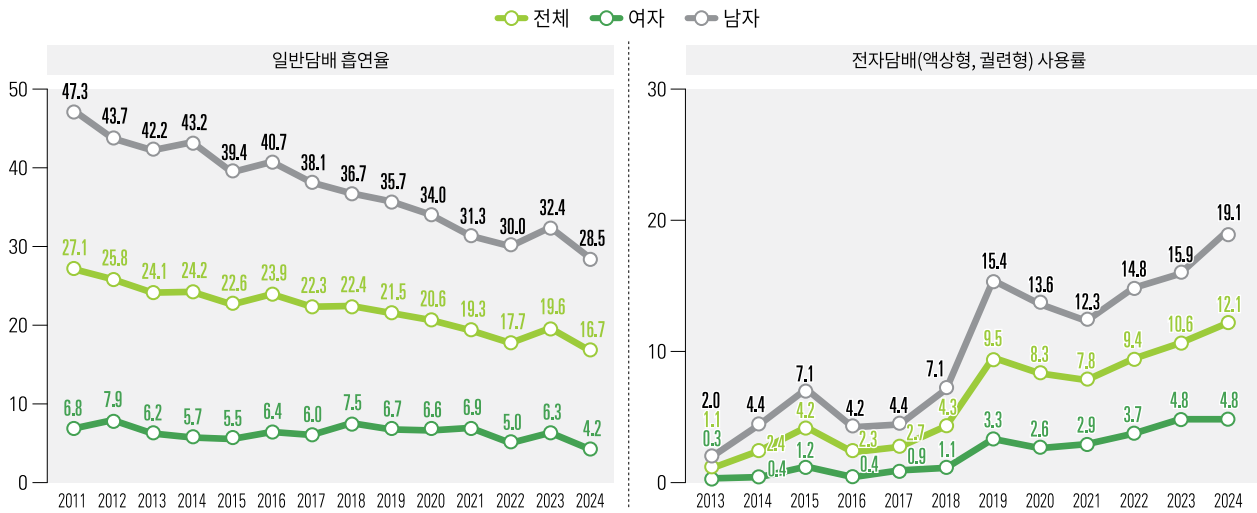
흡연율은 줄어 들고 있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 관련 지표 3.a.1)

흡연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이다. 연간 7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이 중에서 100만 명은 흡연에 노출된 간접 흡연자이다(PAHO,

흡연율(현재)과 전자담배 사용률, 2011~2024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1.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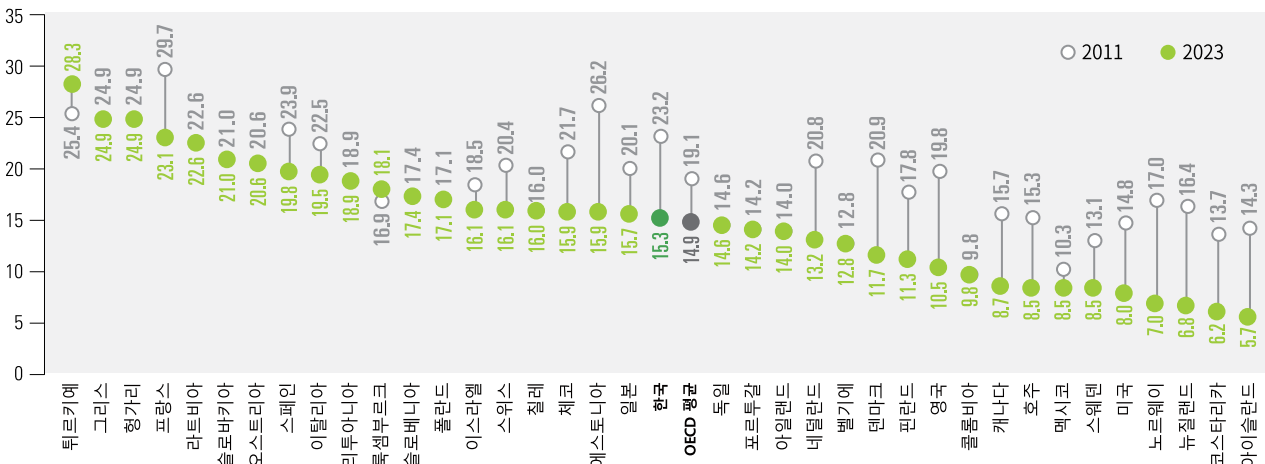
주1: 흡연율(일반담배, 현재)은 평생 일반담배(궤련)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궤련)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

주2: 전자담배 사용률은 액상형(2019년부터 기준 '전자담배'로 용어 변경)과 궤련형(2019년부터 집계)을 합산함

주3: 만 19세 이상 기준이며,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OECD 국가별 흡연율(매일), 2011, 2023

(단위: %)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6.1.15. 인출)

주1: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주2: 2011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2010, 2012년, 2023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2019~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2025). 흡연으로 인해 질병 장애와 장기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흡연에 따른 질병과 사망은 흡연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인적 자본의 손실을 유발한다(WHO, 2025c). 전자담배를 비롯한 가열식 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가열식 담배의 에어로졸에서 발생하는 일부 독성 물질은 발암 물질로 판별되기도 하였다. 전자담배도 니코틴과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하므로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에어로졸에 노출된 사람에게도 해롭다(WHO, 2025c).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으로 이어졌고, 이는 담배 소비와 흡연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는 글로벌 대응 전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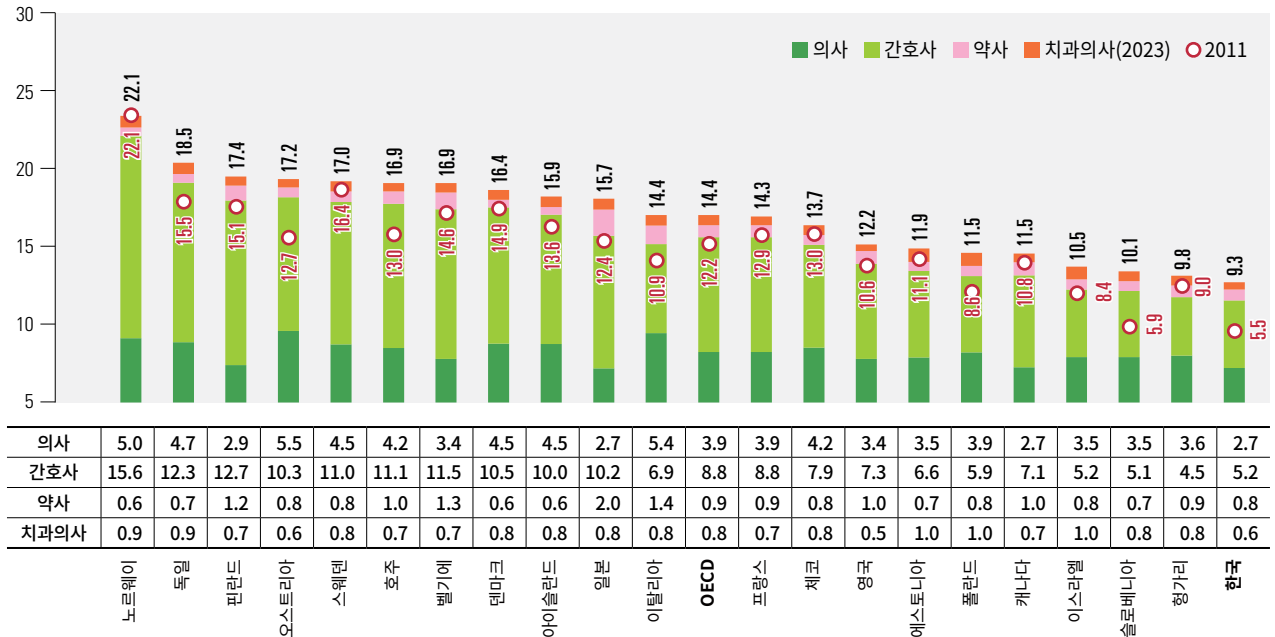
만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24년 16.7%로, 2011년 27.1%와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남자의 흡연율은 2011년 47.3%에 달하였으나 2024년 28.5%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흡연율은 대체로 5~8% 사이에서 등락해 왔지만 2024년에는 4.2%에 그

치며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액상형과 껌연형을 합한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12.1%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국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평생 담배 100개 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 15.3%로 OECD 평균(14.9%)보다 조금 더 높다. 매일 흡연율이 높은 나라는 튀르키예(28.3%), 그리스(24.9%), 헝가리(24.9%), 프랑스(23.1%) 등 유럽 국가이다. 반면 매일 흡연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5.7%), 코스타리카(6.2%), 뉴질랜드(6.8%), 노르웨이(7.0%), 미국(8.0%) 등이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1만 5,000원 이상으로 높은 나라인 아일랜드(14.0%), 영국(10.5%), 호주(8.5%), 노르웨이(7.0%), 뉴질랜드(6.8%) 등에서 매일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튀르키예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2011년 대비 2023년에 매일 흡연율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도 같은 기간 23.2%에서 15.3%로 7.9%p 감소하였다.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인력 밀도, 2011, 2023

(단위: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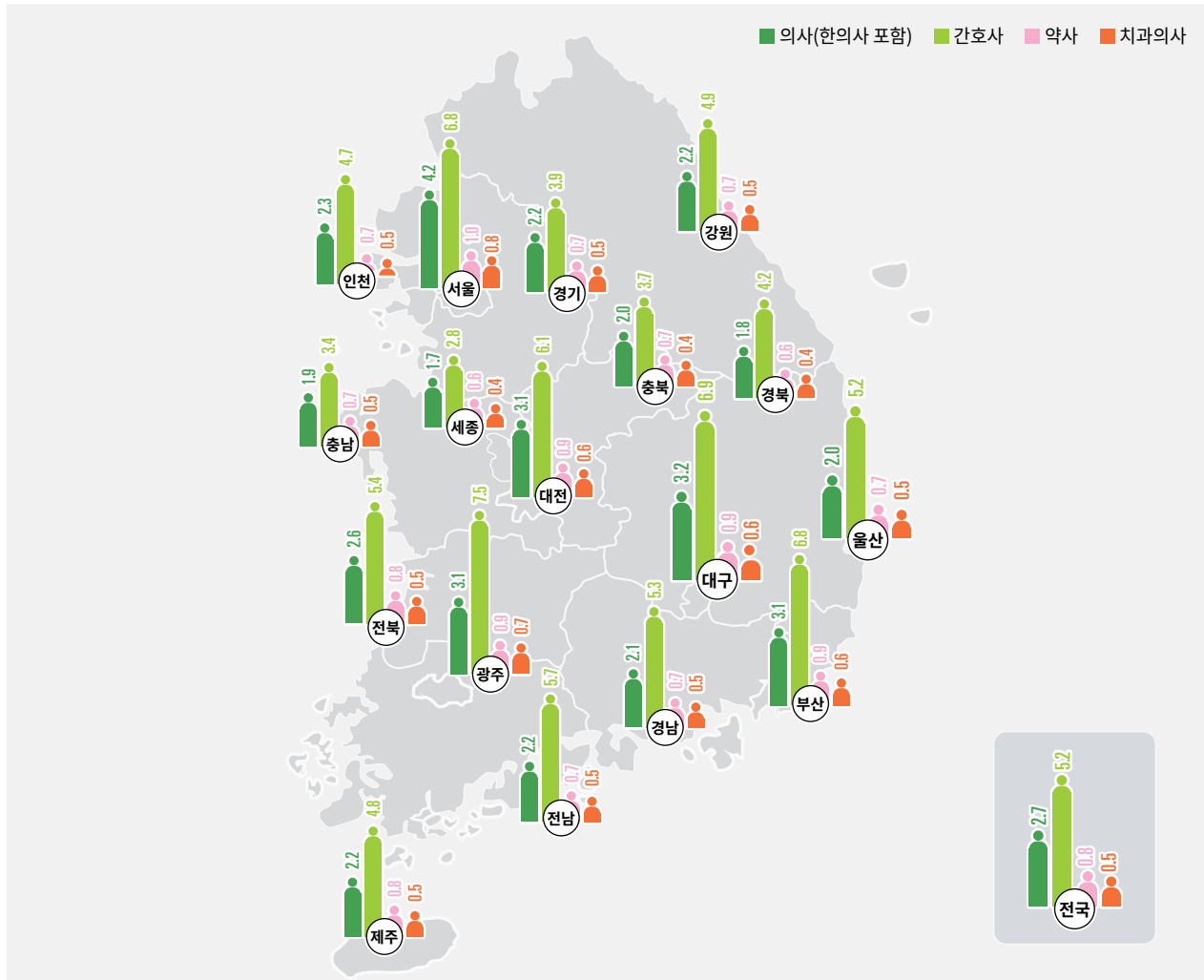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23. 인출)

주1 : 국제비교의 기준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한 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를 제시함

주2 : 임상 활동 중인 인력이며, 국제 기준에 따라 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됨

주3 :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중 한 직종이라도 제시되지 않은 17개국(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은 제외함

주4 : 일본, 스웨덴, 벨기에(간호사), 덴마크(약사)는 2022년, 프랑스(간호사)는 2021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일본, 스웨덴, 캐나다(약사)는 2012년, 프랑스(간호사)와 이탈리아(치과의사, 약사)는 2013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https://kosis.kr>, 2026.1.2. 인출)

주1 :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한 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를 나타냄

주2 :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 수이며, 추계인구를 사용함

보건의료 인력 부족 개선과 지역 격차 완화 필요

(☞ 관련 지표 3.c.1)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25d)에서는 보건의료 제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SDG가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로 부상하였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보건의료 인력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만성

적인 인력 부족을 예고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배치의 균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25e)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농촌이나 외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 인력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OECD(2016) 역시 의사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를 지적하며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OECD 국가가 우선해서 다루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한국도 보건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의사(한 의사 포함),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로 집계한 인구 대비 주요 보건의료 인력의 밀도는 2023년 인구 1,000명당 9.3명으로 나타난다. 2011년



5.5명에서 늘어났지만 OECD 평균 14.4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 3.9명보다 1.2명 적고, 간호사는 5.2명으로 OECD 평균 8.8명보다 3.6명 적다. 국가 간 제도 차이로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와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인구 1,000명당 4.3명으로 한국 간호 인력의 45.3%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지역 간 격차도 분명하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의 특·광역시 지역과 그 외 도 지역 사이에 의사와 간호사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특·광역시 지역에서 3.4명, 도 지역에서 2.1명이다. 같은 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특·광역시 지역에서 6.4명, 도 지역에서 4.3명이다.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의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3.2명, 간호사 6.9명이 임상 활동 중인데 경북에서는 의사 1.8명, 간호사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수준은 높은 편이나 비감염성 질환 등에 다각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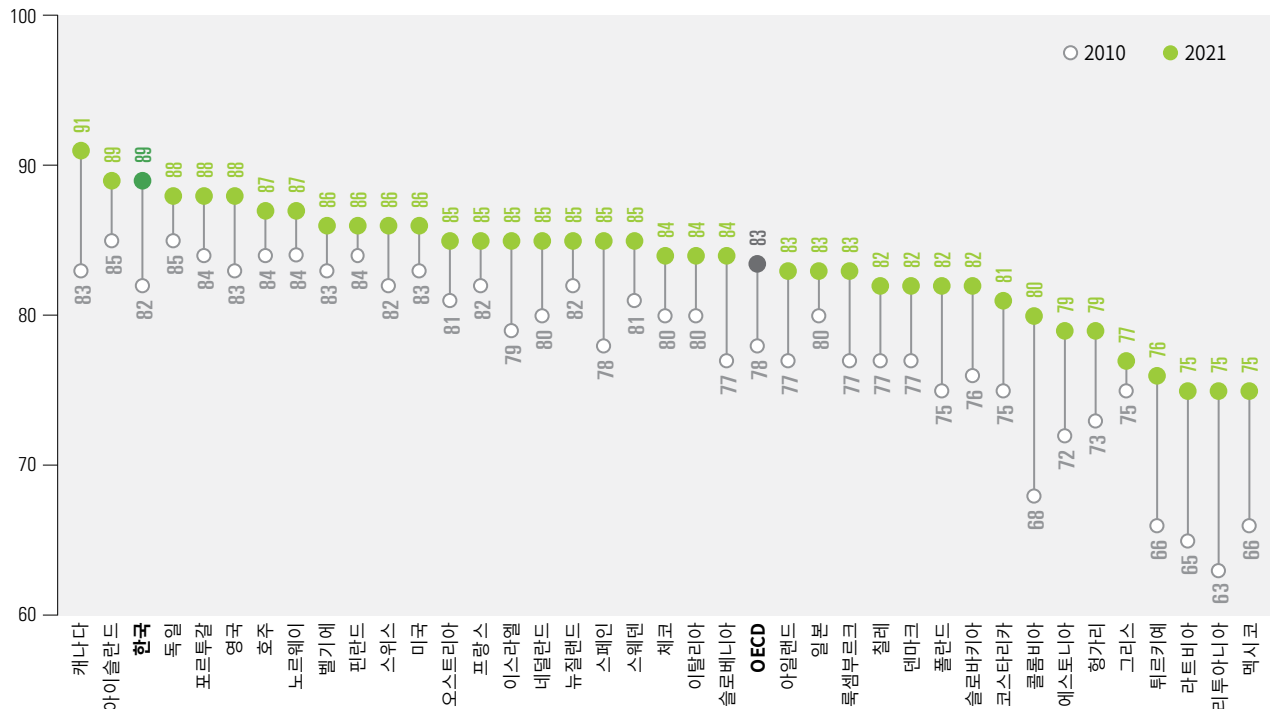
(☞ 관련 지표 3.8.1)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질의 포괄적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WHO, 2025b). 이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의료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필수 의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건강은 SDG를 둘러싼 사회, 경제, 환경 측면의 전제 조건으로서 여러 다른 목표와도 연관된다. WHO와 IBRD(2023)의 글로벌 모니터링에 의하면 2021년 전 세계 45억 명 이상이 필수 보건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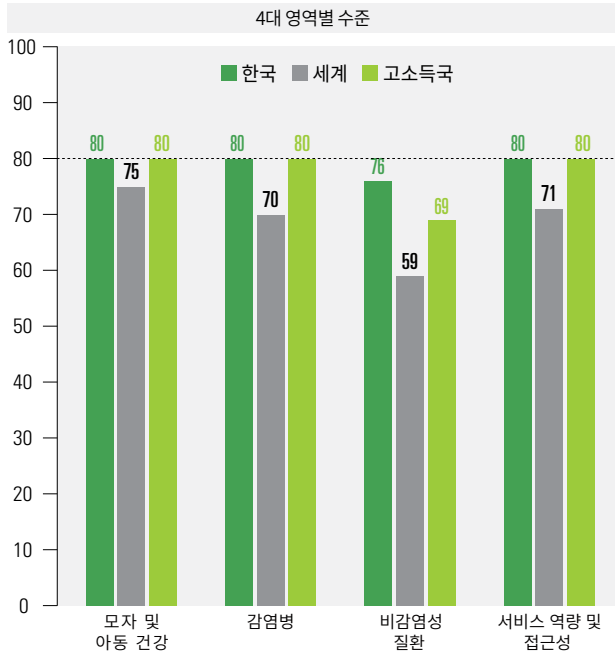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niversal Health Coverage Service Coverage Index, UHC SCI)는 4대 영역에 걸친 14개 추적 지표의 표준화 값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모자 및 아동 건강’ 영역에는 ① 가족계획 ② 임신 관리 ③ 아동 예방접종 ④ 아동 치료 지표가 포함된다. ‘감염병’ 영역에는 ① 결핵 치료 ② HIV/AIDS 치료 ③ 말라리아 예방 ④ 식수 위생 지표가, ‘비감염성 질환’ 영역에는 ① 고혈압 ②

OECD 국가별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HC SCI), 2010, 2021

(단위: 점)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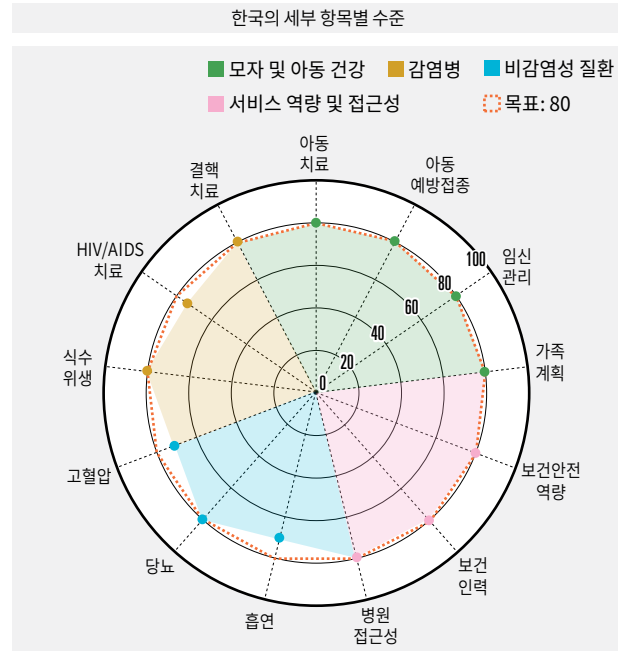


출처: WHO-IBRD(2023)

주1 : 80점 이상인 경우 ≥80으로 나타냄

주2 : 고소득 국가의 구분은 World Bank(2022) 기준에 따름

주3 : 14개 지표 중 '감염병' 영역에 ③말라리아 예방 통계는 사하라 이남 말라리아 풍토병 지역에만 해당되는 통계로 한국 자료 없음



당뇨 ③ 흡연 지표가 각각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 영역에는 ① 병원 접근성 ② 보건 인력 ③ 보건안전 역량 지표가 포함된다.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는 2021년에 89점으로 집계되며 OECD 국가 중 캐나다(91점)에 이어 아이슬란드(89점)와 함께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국처럼 사회 보험 체계를 운용하는 국가인 독일(88점), 벨기에(86점), 프랑스(85점), 일본(83점) 등과 비교하여도 우수한 평가이다. 한국의 점수는 직전 평가가 시행된 2019년의 87점보다 2점 더 높아졌고, 2010년의 82점에 비해서는 7점이 나 올랐다.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2010년에는 최하 63점(리투아니아)에서 최고 85점(독일, 아이슬란드)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2021년에는 최하 75점(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에서 최고 91점(캐나다)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OECD 38개국 평균도 78.0점에서 83.5점으로 올랐다. 2021년에 한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기준치인 80점을 넘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흡연과 고혈압 항목에서 각각 70점과 71점을 받는 데 그치며 비감염성 질환 영역(76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취약 집단에 집중된 소외열대질환(NTD) 퇴치에 지구적 협력 필요 (📍 관련 지표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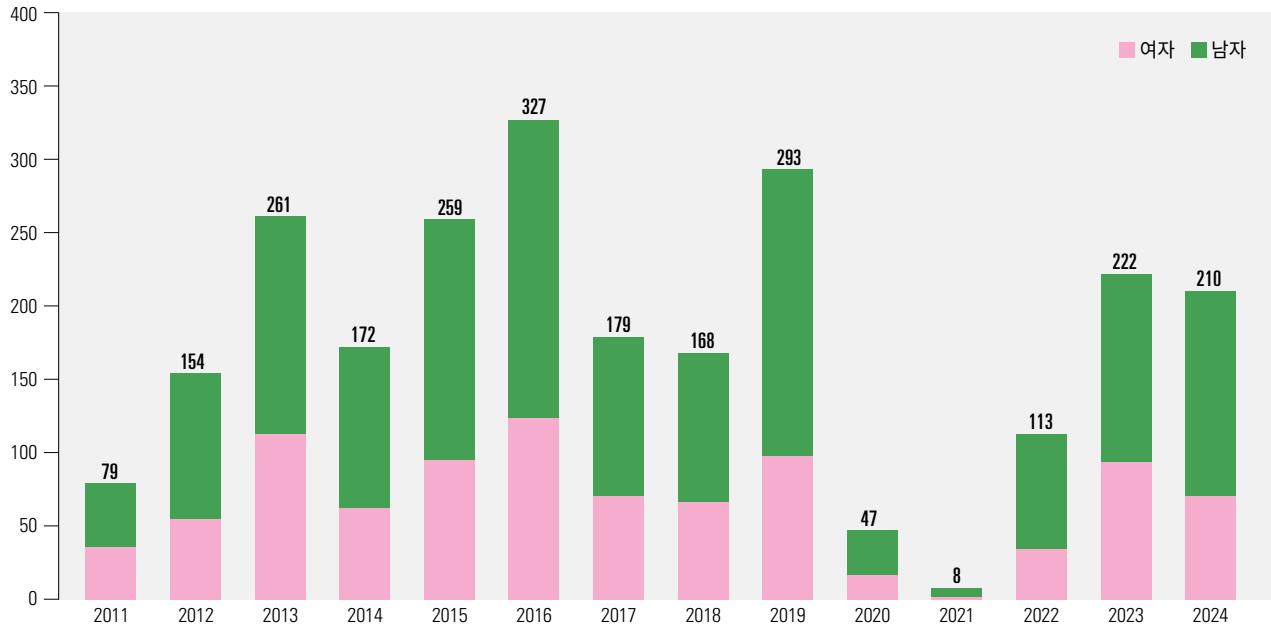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은 열대 지역의 빈곤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 종의 질환군(부루리 궤양, 차가스병, 뎅기열 및 치쿤구니아열, 드라쿤키아증, 에키노코커스증, 식품매개 흡충증, 아프리카 트리파노소마증, 리슈마니아증, 한센병, 림프계 필라리아증, 마이세토마, 크로모블라스토마이크시스 및 기타 심부 진균증, 노마, 온코세르키아증, 광견병, 옴 및 기타 외부 기생충증, 주혈흡충증, 토양매개 기생충증, 뱀물림 중독, 촌충증/낭충증, 트라코마, 야우)을 일컫는다. 빈곤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영향이 집중되어 전통적인 글로벌 보건 의제에서 소외된 탓에, SDG에서 지향하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위생, 경제성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과도 연계되어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

한국에서는 이 중 한센병,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공수병의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한센병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뎅기열과 치쿤구니아열과 공수병은 3급



소외열대질환(NTD) 발생 건수,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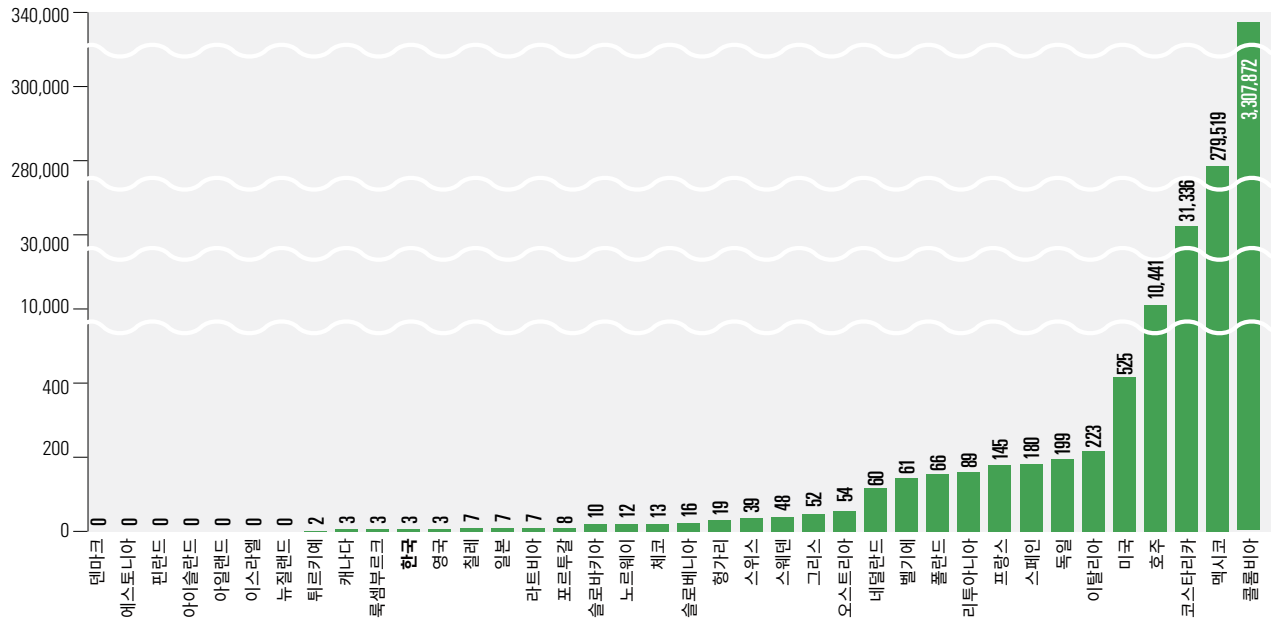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발생보고(<https://kosis.kr>, 2026.1.18. 인출)
주 : 한센병, Dengue, 치쿤구니아열, 공수병 발생 건수를 합산함

OECD 국가별 소외열대질환(NTD)으로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 2023

(단위: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20. 인출)
주 : 2016년 이후 WHO는 국제 비교를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으로 추정치를 산출, 국내 수치와 차이 있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4종 질환의 국내 발생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급감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100명대에서 300명대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감염은 거의 발

생하지 않고 있다. 이 중 Dengue 발생이 대부분인데, 2020년 이후로는 주사기 자상으로 발생한 1건의 국내 감염 외에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채 입국한 경우이다. 한센병과 치쿤구니아열 발생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건

을 넘은 적이 없으며, 공수병은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외열대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인구를 국가별로 집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에는 열대 지역이 포함되는 콜롬비아(331만 명), 멕시코(28만 명), 코스타리카(3만 명), 호주(1만 명)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미국(525명), 이탈리아(223명), 독일(199명), 스페인(180명), 프랑스(145명)를 더한 총 9개국 외에는 모두 연간 100명 이하로 집계된다.

소외열대질환의 역학은 복잡하며, 종종 환경 조건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며, 동물 숙주를 가지고 있어서 공중 보건적 통제가 어렵다

(WHO, 2025a). 이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의료비 증가, 생산성 손실, 사회경제적 및 교육적 성취도 저하 등의 각종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장애, 낙인, 사회적 배제 및 차별과 같은 다른 결과로 이어져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한다. 세계보건기구(WHO, 2024a)에서는 소외열대질환으로 고통받는 인구를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방 및 치료 서비스 등 보건의료 개입이 필요한 인구는 2023년 기준 14억 9,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외열대질환에 관한 로드맵(2021~2030)을 채택하여 예방·관리·퇴치 목표를 제시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집중된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외열대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포괄적 대응이 요구된다.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 4번 목표에서는 교육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교육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다. 교육은 인류의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숙련된 인력의 공급을 책임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저하는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성인의 문해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 시대에 필요한 ICT 역량은 대체로 향상되고 있지만 온라인 안전 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이래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추세는 주요국 대비 양호

-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수학(전년 대비 -4.0%)을 제외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뚜렷한 감소세는 관찰되지 않음
- 202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주요국 대부분의 읽기 및 수학 점수가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1점씩 상승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4년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최고치인 41.7%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4년 33.1%로 전년 대비 0.8%p 상승
- ‘중졸 이하’ 인구의 참여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대졸 이상’ 인구와의 격차가 2020년 23.1%p에서 2024년 17.8%p로 소폭 감소

» 청소년과 성인의 ICT 역량 보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지만 안전 영역에서는 취약

-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 발송’ 역량을 보유한 비율은 2017년 57.4%에서 2024년 97.3%로 크게 상승
- ‘기초 이상’ 수준의 역량 보유율은 대부분 영역에서 79~91%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안전 영역의 역량 보유율은 25.1%에 그침

» 2024년에 발표된 2023년 기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에서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과 수리력은 1주기(2012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언어능력과 수리력 점수는 각각 249점과 253점에 그치며 1주기 당시 273점과 263점에 비해 크게 하락
- ‘1수준 또는 그 미만’으로 평가된 ‘하위 수준’ 비율도 언어능력 30.8%, 수리력 27.6%로 OECD 평균(각각 26.1%, 24.8%)보다 다소 높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감소세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 (☞ 관련 지표 4.1.1)

교육 분야에는 여러 하위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그 중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교육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는 ‘학업성취도’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 학교급에서의 학업성취도가 SDG 4번 목표의 여러 지표 중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하여 조사하는 교육부 주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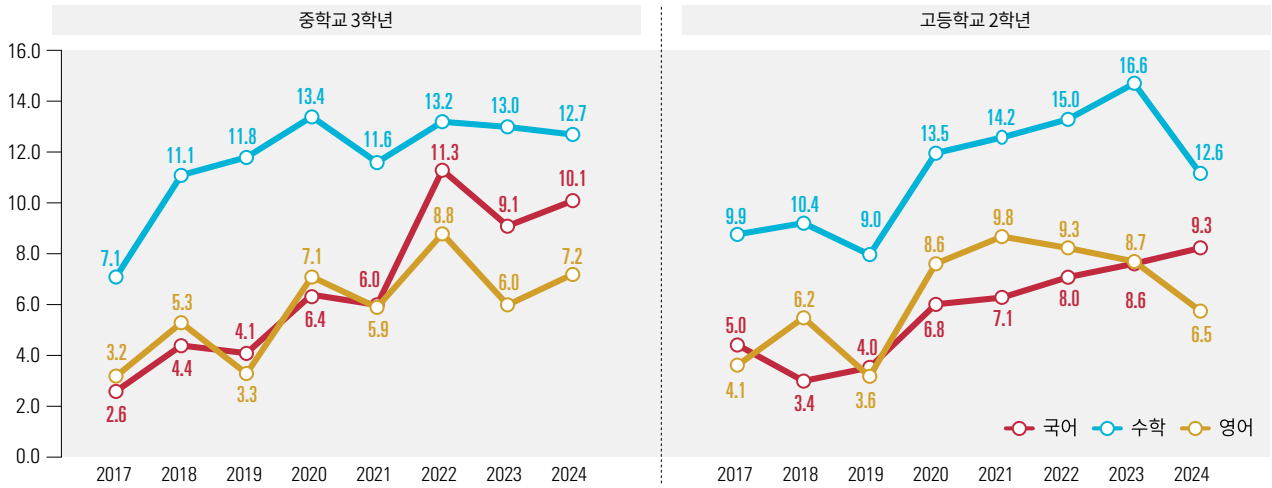
학생들의 국어·수학·영어 과목 숙달도를 1~4수준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수준’은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되는 기본적인 성취 기준에 미치지 못함(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며, 여기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CBT)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평가방식이 변경되어, 그 결과를 이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24년도 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12.6%)이 전년 대비 4.0%p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국어·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2017~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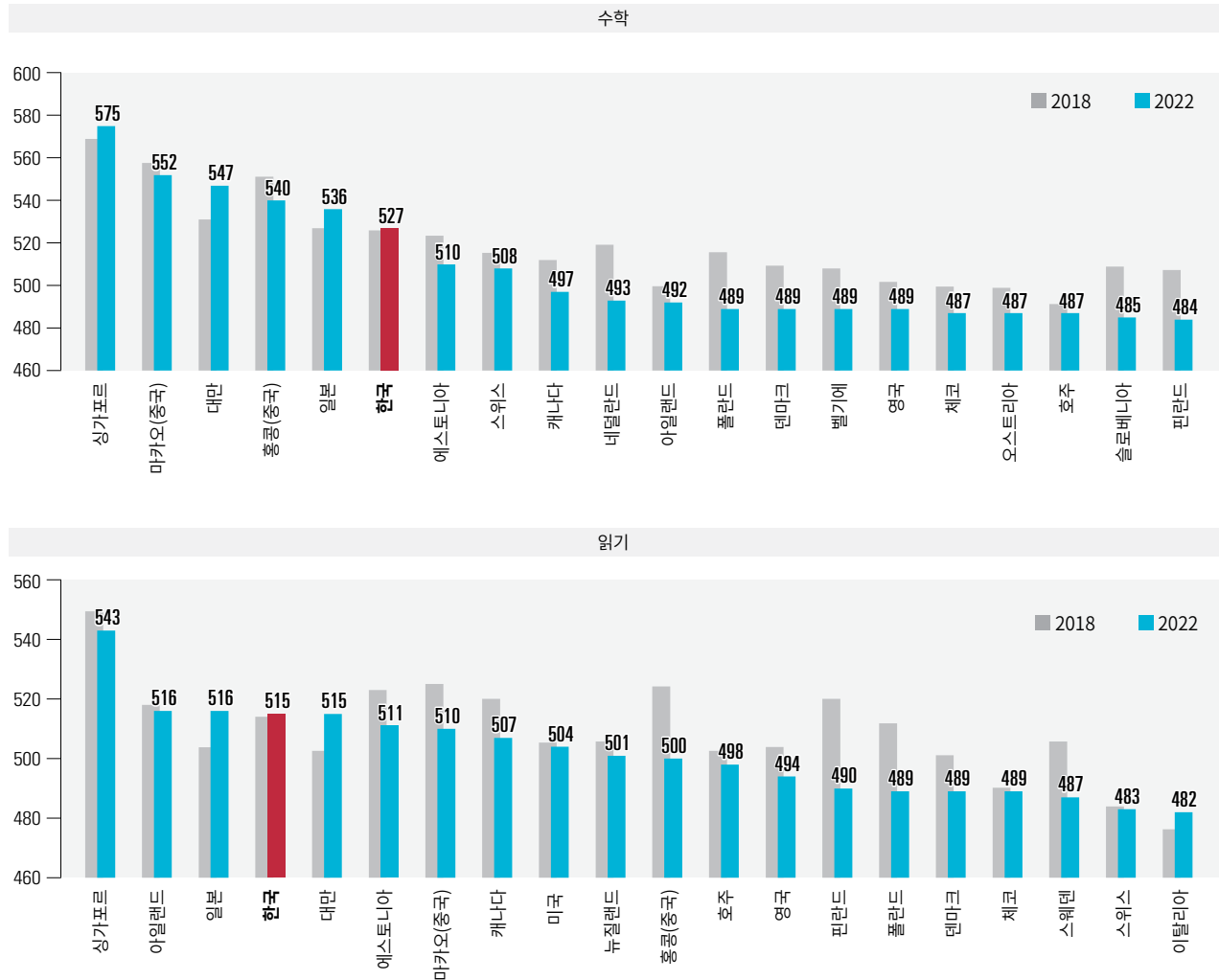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 :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가 도입되는 등 평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려움

주요국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점수, 2018, 2022

(단위: 점)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https://doi.org/10.1787/5f07c754-en>); PISA 2022 Results(<https://doi.org/10.1787/53f23881-en>)

주: OECD 38개국과 아시아 주요국(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중 2022년 기준 20위까지 나타냄

점이다. 고2 영어 과목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6.5%)이 전년 대비 2.2%p 줄어들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평가 방식이 바뀐 2022년 이후 두 해 연속 감소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중3 수학 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22년 13.2%에서 소폭이지만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12.7%로 낮아졌다. 한편 국어 과목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각각 10.1%와 9.3%에 달하였다. 특히 고2 학생의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22년 8.0%에서 두 해 연속 증가하였으며, 중3 학생의 국어와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23년에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전년도보다 각각 1.0%p와 1.2%p 증가하였다.

표집 조사로 전환된 2017년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연도별 등락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급과 과목에서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넓은 학력 저하가 관찰되었던 2020년도도 포함된다. 최근 고등학교 수학과 과목에서 기초학력의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학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편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만 15세 학생 대상 약 3년 주기의 읽기·수학·과학 분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2018년 대비 2022년 학업성취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ISA 2022 참여국들의 수학, 읽기 과목 평균 점수가 2018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OECD 평균은 수학에서 17점, 읽기에서 11점 하락하였다. OECD 38개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을 통틀어 이 시기에 점수가 하락하지 않은 국가는 수학에서 4개국(대만,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읽기에서 5개국(일본, 대만, 이탈리아,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한국의 PISA 2022 점수는 수학과 읽기에서 각각 527점과 515점을 기록해 2018년보다 1점씩 상승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주요국의 추세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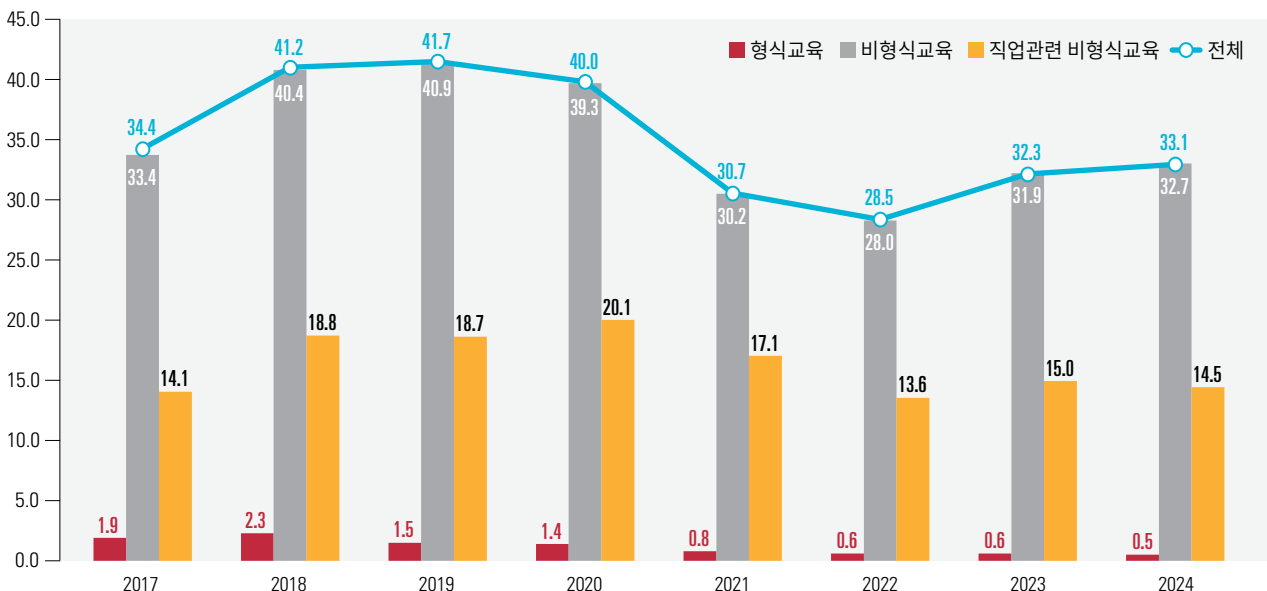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향해

더딘 회복 중 (● 관련 지표 4.3.1)

SDG 4.3.1 지표는 학령기 인구만이 아닌 모든 연령대의 교육 참여를 측정하는 것으로, SDG 4번 목표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이라는 측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만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를 매

평생학습 참여율, 2017~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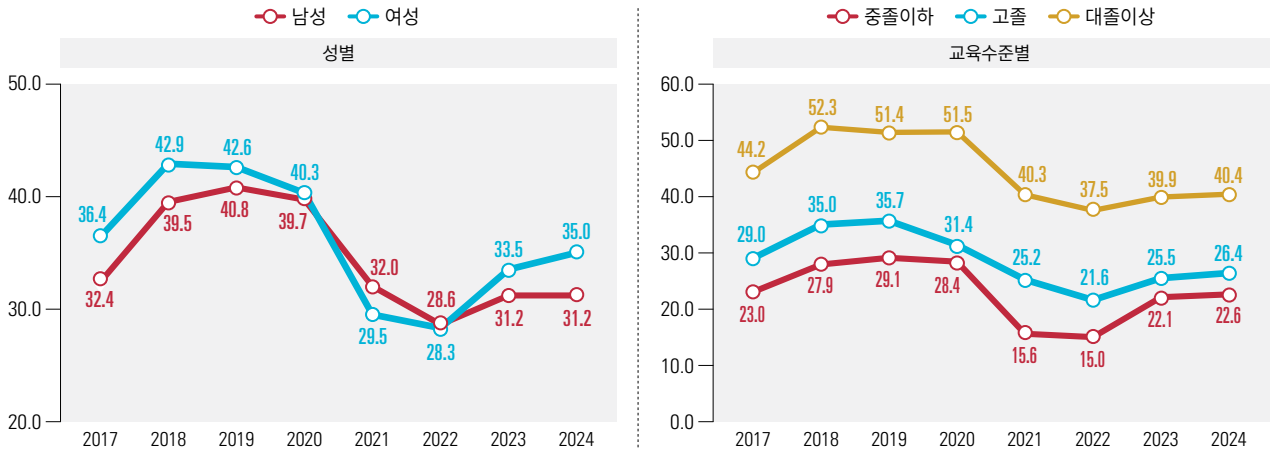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https://kess.kedi.re.kr>, 2025.8.25. 인출)

주1: 2017년부터 조사 대상이 만25~64세 인구에서 만25~79세 인구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주2: 2020년까지는 전년도 7월부터 조사 연도 6월까지 1년을 조사하였고,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조사함

주3: 형식교육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https://kess.kedi.re.kr>, 2025.8.25. 인출)

주 : 2020년까지 전년도 7월부터 조사년도 6월까지의 1년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전년도 1월부터 전년도 12월까지의 1년을 조사함

년 측정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1%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2년에 28.5%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41.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은 초·중·고 또는 대학·대학원과 같이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형식교육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으로 나뉜다. 이 중 비형식교육이 평생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형식교육 참여율은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2024년에 성인 인구의 0.5%만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20년 20.1%에서 2022년 13.6%로 급감한 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5.0%와 14.5%에 그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3년부터 남녀 모두에서 회복세를 보이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시기에는 남성보다 더 빠르게 참여율이 하락하였고 팬데믹 이후에는 남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평생학습 참여율의 변화 양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하락기에는 ‘중졸 이하’ 인구에서 참여율

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의 회복기에는 ‘중졸 이하’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졸 이하’ 인구와 ‘대졸 이상’ 인구의 참여율 차이가 팬데믹 이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개인 ICT 역량은 전반적 상승세 속

온라인 안전에 취약성 드러나 (☞ 관련 지표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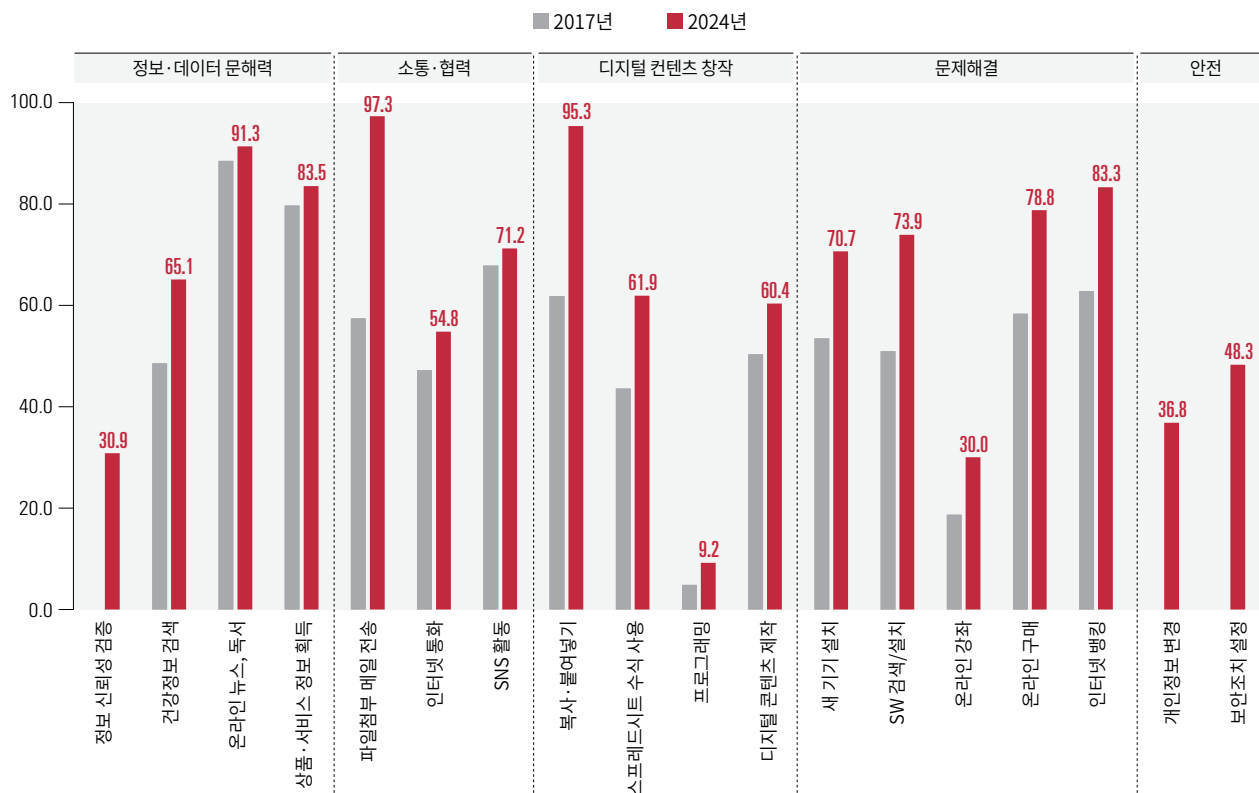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 동시에, 미래 사회를 바꿀 메가트렌드의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5개 영역에 걸쳐 각국의 개인 ICT 역량(skill) 보유율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데이터를 보유한 18개 부문의 역량 중 소통·협력 영역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전송’(97.3%) 역량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 영역의 ‘문서 내에서 복사·붙여넣기 도구 사용’(95.3%) 역량, 그리고 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의 ‘신문·잡지·서적 읽기 또는 내려받기’(91.3%) 역량은 이제 거의 모든 한국인이 가진 기본 역량이 되었다.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83.5%) 역량과 ‘인터넷 뱅킹’(83.3%) 역량을 보유한 인구도 80% 이상에 이른다.

한편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작성’(9.2%) 역량을 보유한 인구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좌 수강’(30.0%) 역량, ‘온라인 정보 신뢰성 검증’(30.9%) 역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유형별 보유율,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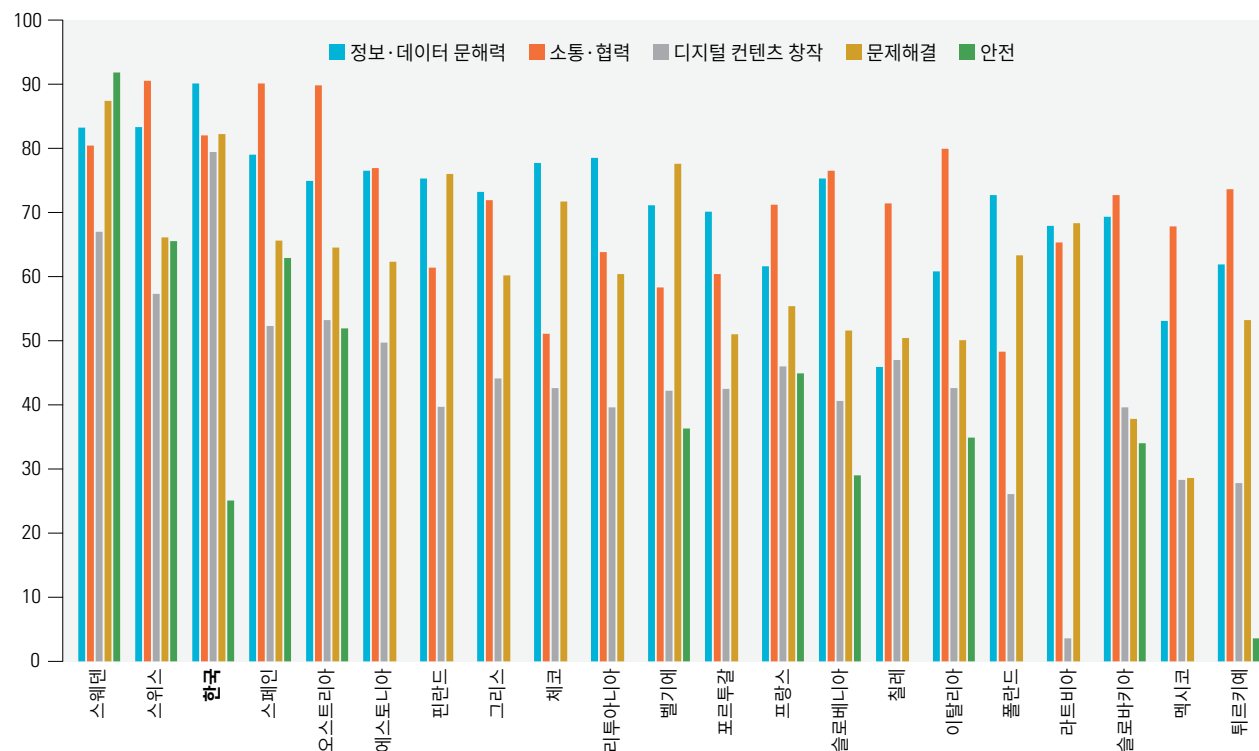
출처: ITU, DataHub(<https://datahub.itu.int>, 2025.12.16. 인출)

주1: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ICT 활동을 수행한 비율만 측정됨

주2: 2024년도 한국 수치가 없는 경우 나타내지 않음

OECD 국가별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보유율, 2023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2.15. 인출)

주: 각 영역에 대한 '기초 이상(above basic)' 역량 보유율을 나타냄



량, '기기·계정·앱의 개인정보 설정 변경'(36.8%) 역량을 보유한 인구도 비교적 낮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2017년의 역량 보유율과 비교하면, 자료가 가용한 모든 역량 유형에서 과거보다 역량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만 해도 60% 수준에 불과하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 전송' 역량과 '복사·붙여넣기 도구 사용' 역량의 경우 2024년에는 95% 이상에 달하며 크게 향상되었다.

개별 역량 자료를 바탕으로 5개 역량 영역에 대한 '기초 이상(above basic)' 수준의 역량 보유율도 제시된다. 2023년 조사에서 한국은 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에서 90.1%, 소통·협력 영역에서 82.0%, 디지털 콘텐츠 창작 영역에서 79.4%, 문제해결 영역에서 82.2%의 높은 역량 보유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안전 영역에서는 25.1%만이 '기초 이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21개국 중 한국은 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 영역에서 1위, 문제해결 영역에서 2위, 소통·협력 영역에서 4위로 평가되었지만 안전 영역에서는 자료가 가용한 OECD 11개국 중 10위에 그쳤다.

ICT 기술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개인의 역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기·계정·앱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보안 조치를 설정하는 등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는 역량이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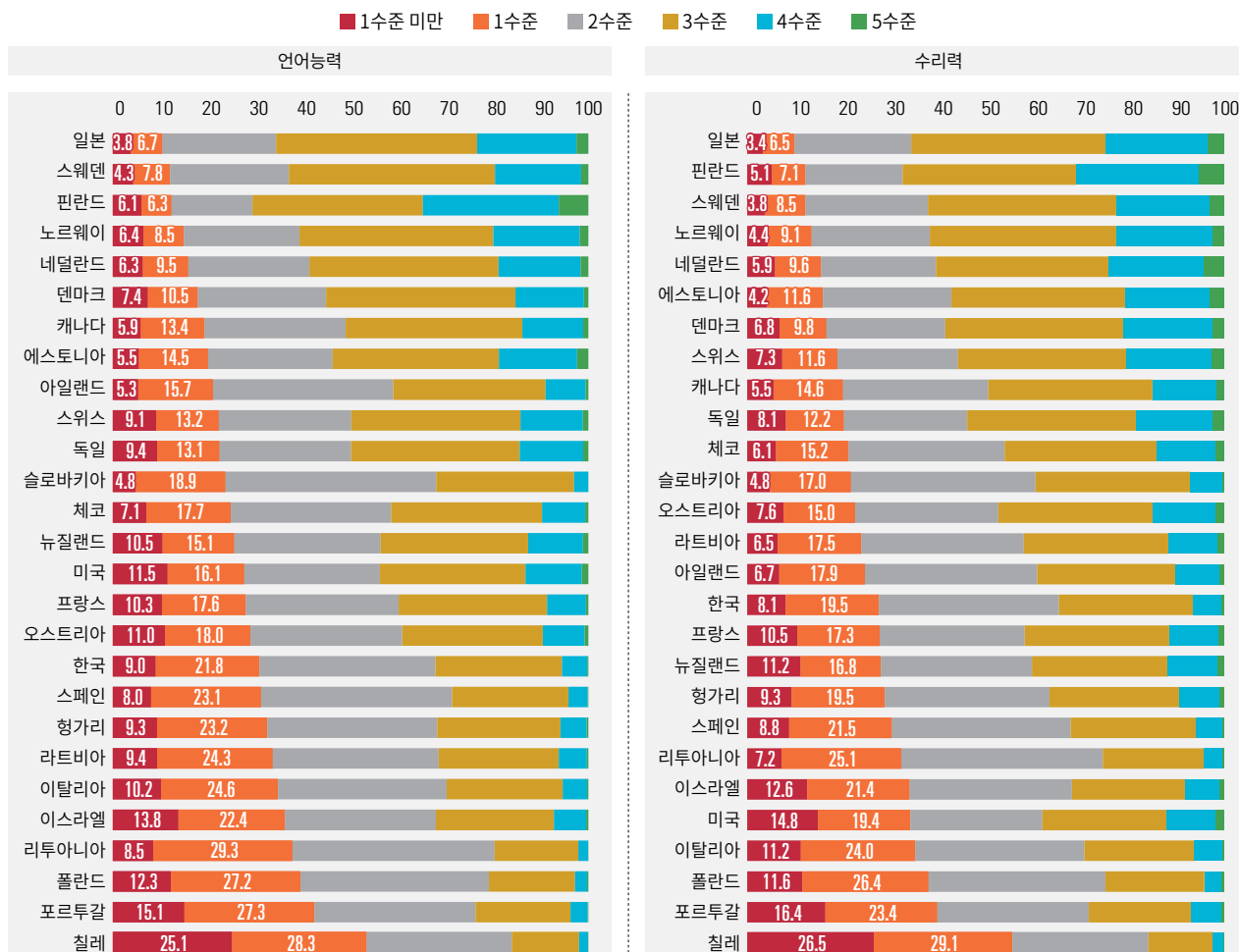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로 측정한

한국 성인 문해력의 하락 (▶ 관련 지표 4.6.1)

SDG 4.6 세부목표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청소년과 성인

OECD 국가별 성인역량 수준 분포, 2023

(단위: %)



출처: OECD, PIAAC(<https://doi.org/10.1787/b263dc5d-en>)

주1: 만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1에서 5수준으로 갈수록 높은 역량을 나타냄

주2: 2주기 조사 참여국 중 OECD 회원국

의 문해율'이 있다. 성인 문해율에 관한 국내 조사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성인문해능력조사」가 있고, 국제 조사로는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4년에 발표된 PIAAC 2주기(2023년)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 점수는 1주기(2012년) 조사 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능력의 경우 1주기 당시 273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273점)과 동일하였으나, 2주기에는 249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OECD 평균(260점)에 훨씬 뒤처졌다. 수리력에서도 한국은 1주기 263점에서 2주기 253점으로 하락하였고 OECD 평균(1주기 269점, 2주기 263점)과의 격차가 커졌다.

PIAAC에서는 평가 점수에 따라 총 6단계의 역량 수

준(proficiency level)을 구분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1수준' 또는 '1수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하위 수준(low performers)'으로 본다. 이번 조사에서 '하위 수준'으로 평가된 한국 성인의 비율은 언어능력에서 30.8%(1수준 미만 9.0%, 1수준 21.8%), 수리력에서 27.6%(1수준 미만 8.1%, 1수준 19.5%)로 나타났다. 이는 2주기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의 평균(언어능력 26.1%, 수리력 24.8%)보다 다소 높고, '하위 수준' 비율이 가장 낮은 일본(언어능력 10.4%, 수리력 9.9%)보다는 세 배나 높은 수치이다.

중·고등학생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과 함께 최상위 수준에 속하였던 일본과 에스토니아가 PIAAC에서도 최상위 또는 상위권을 유지한 것과도 대조적인 현상이기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1995년 베이징 선언을 필두로 여성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성평등에 관한 SDG 5번 목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구적으로는 아직도 성평등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령과 관행이 존재한다. 돌봄 및 가사 노동의 불평등한 분담, 노동 시장 내 임금과 고용에서의 격차, 의사결정과 리더십에서의 대표성 부족 등도 공통된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사와 돌봄 노동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공적 활동과 자아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2015)과 ‘여성폭력기본법’(2019)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 추진 중

- 유엔 여성기구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 기반과 공적 생활 영역에서 OECD 국가 중 우수한 편이나 고용과 경제적 권리 부문에서는 미진한 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1%에서 2024년 4.3%로 감소하였고, 여성 직원의 경험률도 14.2%에서 6.1%로 감소

- 2차 피해 경험률은 2024년 12.3%에 달하여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61.1% → 50.4%)이나 회식 자리 성희롱(43.7% → 28.6%)과 같은 전형적인 성희롱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성희롱(2024년 7.8%)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여성이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에 들이는 시간은 2024년 기준 하루 시간의 11.5%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남성의 경우에는 4.0%에 그쳐,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은 시간을 무급 가사노동에 사용

- 가사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는 1999년 7.0배에서 2024년 2.8배로 완화되었지만 가사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
-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2.9배이고, 심지어 아내 외벌이 가구에서도 아내(11.1%)가 남편(7.4%)보다 긴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관리자급 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24.5%와 34.7%에 이르며,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25.4%에 도달

-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8%로 낮고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4년 19.2%에서 2024년 22.7%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가 다소 미흡한 편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

(◎ 관련 지표 5.1.1)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의 확대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SDG 5.1.1에서는 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적 체계의 마련 여부를 (1) 법적 기반과 공적 생활 (2) 여성을 향한 폭력 (3) 고용과 경제적 권리 (4) 결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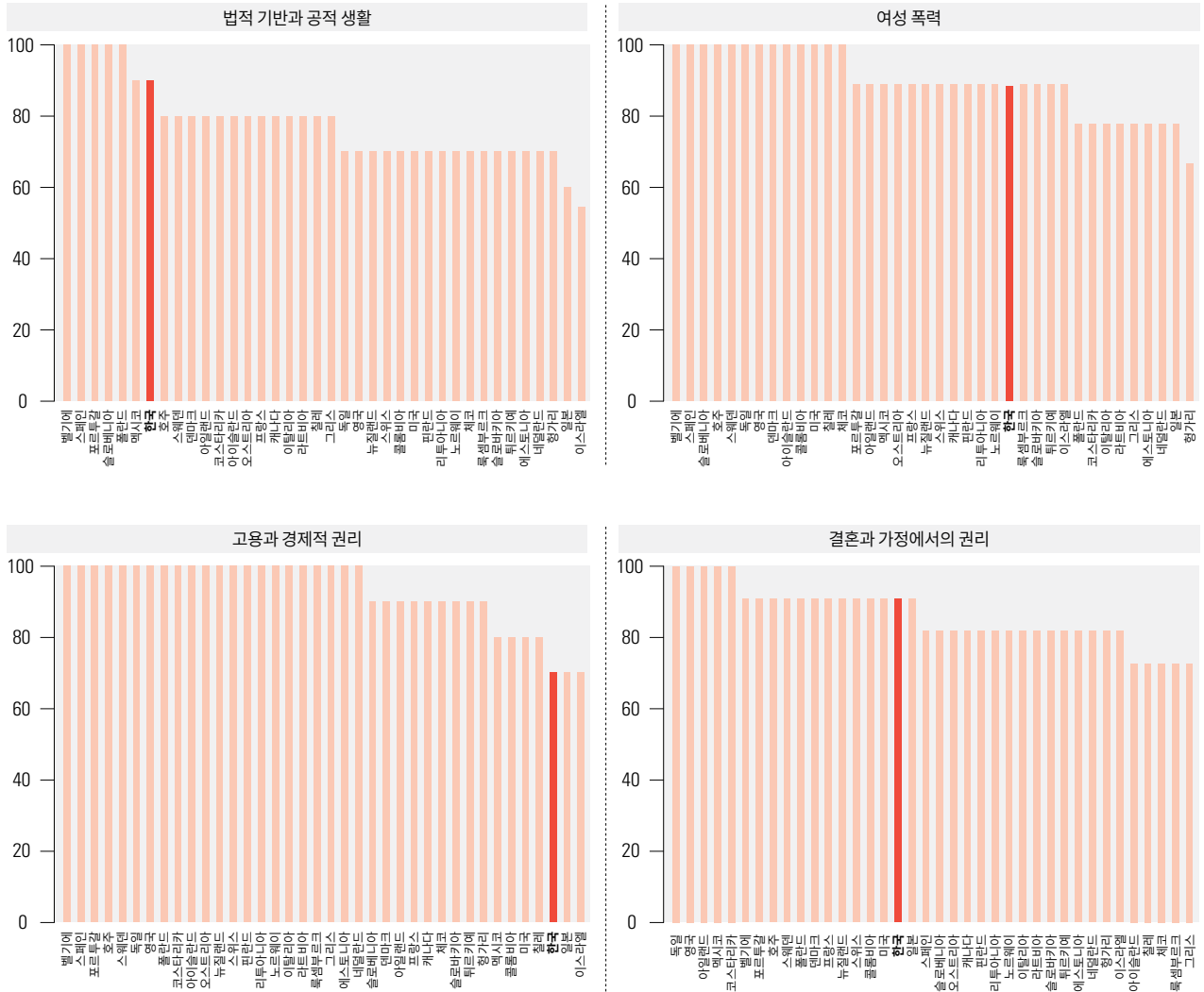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권리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제1영역(법적 기반과 공적 생활)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90점을 받아, OECD 38개국 중 만점을 받은 5개국에 이어 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제2영역(여성 폭력)에서는 13개국이 만점을 받은 가운데 한국은 다른 15개국



OECD 국가별 성평등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 정도, 2024

(단위: 점)



출처: UN, Women Data Hub(<https://data.unwomen.org/data-portal>, 2025.12.21. 인출)

과 함께 88.9점을 받아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제3영역(고용과 경제적 권리)에서는 22개국이 만점을 받은 가운데 한국은 일본, 이스라엘과 함께 70점을 받으며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제4영역(결혼과 가정에서의 권리)에서 한국은 다른 12개국과 함께 90.9점을 받아, 만점을 받은 5개국 다음의 중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성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서 앞서 있지만 여성의 고용과 경제활동 측면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평등을 위한 한국의 주요 법·제도 마련 노력을 보면, 1948년 제헌 헌법에 평등권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를 중요한 정신으로 명시한 이래, 성평등 달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였고, 1995년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장을 위한 최초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기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채용·승진 등에서 성차별 금지, 육아휴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여성 인권을 증진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꾸준히 제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차별 금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여성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제도,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제도, 차별 금지와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이 제출한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24년 심의에서 ‘한부모지원법’(2019)과 ‘여성폭력기본법’(2019)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23~20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2019),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2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부재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와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감소 추세 (📈 관련 지표 5.2.2)

SDG 지표 5.2.2는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을 측정하며, 성희롱을 비롯한 광범위한 성적 폭력을 포괄한다. 금년 보고서에서는 해당 지표의 이행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분석하여, 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이행 수준을 다각도에서 점검하고자 하였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세력화(empowerment)를 실현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중요 국가 의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는 국가 전략이기도 하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성희롱 피해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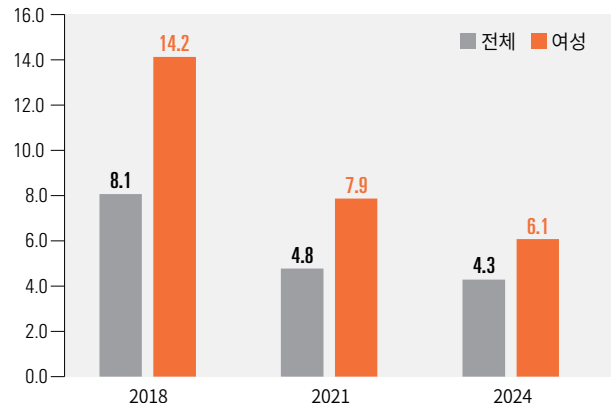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성희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4.3%로 조사되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조사 당시 8.1%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수치이다. 여성 직원의 경험률은 2018년 14.2%에서 2024년 6.1%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회식 등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미투 등의 사건

을 겪으며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고 관련 정책이 뒷받침된 데 따른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2차 피해 경험률도 2018년 27.8%에서 2024년 12.3%로 절반 넘게 감소하였다.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2018년 61.1%에서 2024년 50.4%로 줄어든 반면 동료에 의한 성희롱은 같은 기간 21.2%에서 24.2%로 소폭 늘어났다. 고객, 민원인, 거래처 등 외부인에 의한 피해도 꾸준히 10% 내외 수준으로 보고된다. 이는 성희롱 가해자가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동료나 외부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희롱 발생 장소도 달라졌다. 2018년 43.7%에 달하

성희롱 피해 경험률, 2018~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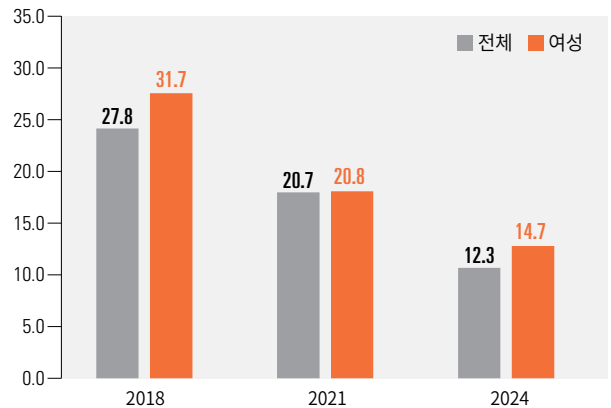


출처: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www.kosis.kr, 2025.12.20. 인출)

주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주2 :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년 조사에서 13개, 2021년 조사에서 14개, 2024년 조사에서 15개 피해 유형 중 지난 3년간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 2018~2024 (단위: %)



출처: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www.kosis.kr, 2025.12.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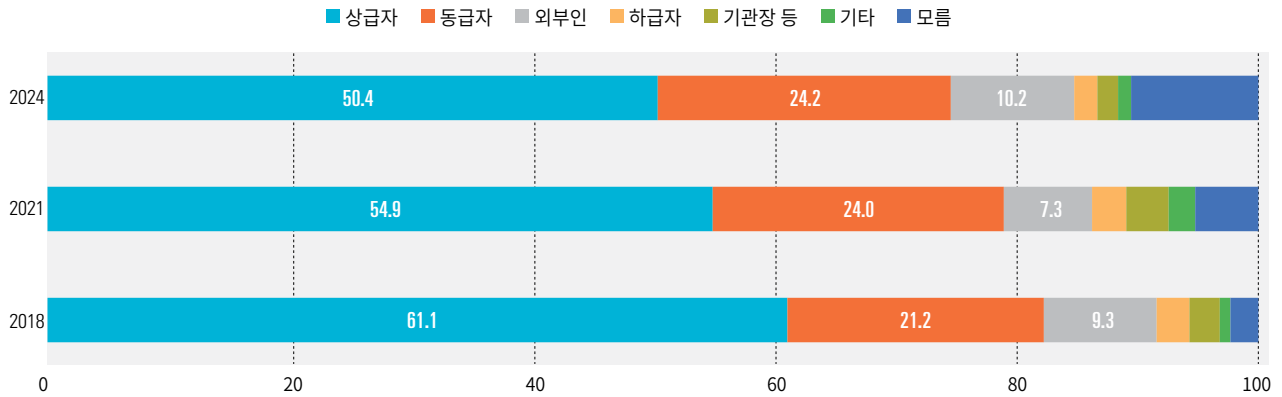
주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주2 :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은 2018년 조사에서 9개, 2021년과 2024년 조사에서 14개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성희롱 행위자별 비율, 2018~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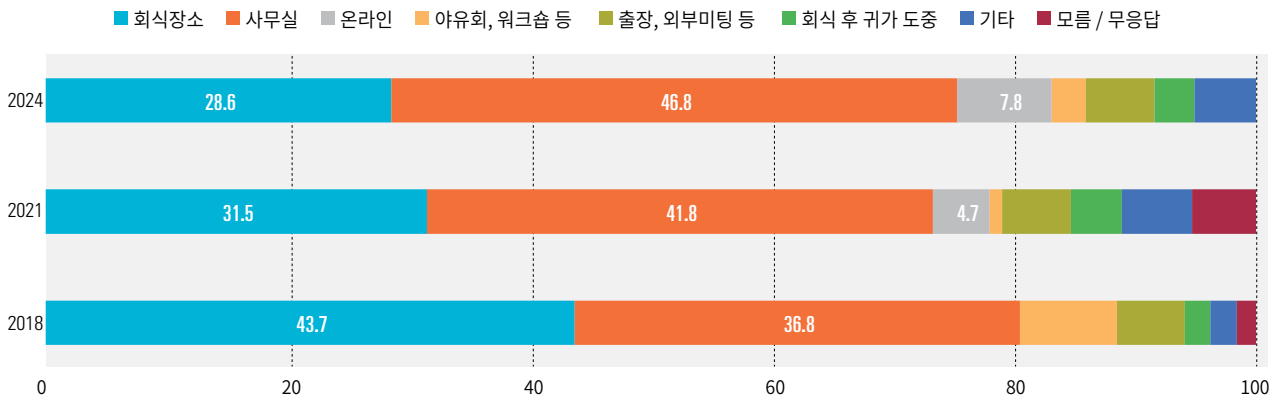


출처: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www.kosis.kr, 2025.12.20. 인출)

주: '모름' 항목은 2018년, 2021년 조사에서는 '모름' 또는 '무응답'을 의미하며, 2024년 조사에서는 '누군지 모름'을 의미

성희롱 발생 장소별 비율, 2018~2024

(단위: %)



출처: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www.kosis.kr, 2025.12.20. 인출)

주: '온라인(단체 채팅방, SNS, 메신저 등)'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 신설. '모름/무응답' 항목은 2024년 조사에서 제외

였던 회식 자리 성희롱은 2024년 28.6%로 크게 감소하였다. 주52시간제 등으로 저녁 회식이 줄어들어 데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회식 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같은 기간 36.8%에서 46.8%로 늘어났다. 2024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7.8%에 달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회식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성희롱도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과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희롱은 또 다른 과제이다. 성희롱에 취약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

화하며 온라인 성희롱 대응 체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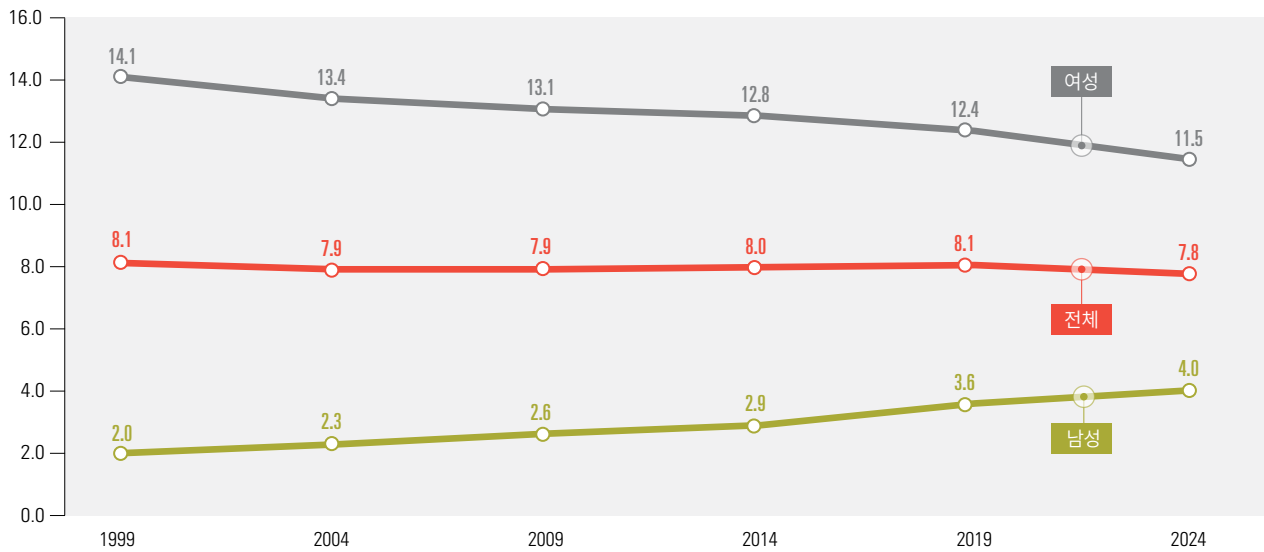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성별 불균형은 완화 추세 (☞ 관련 지표 5.4.1)

한국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와 그 격차는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인이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은 1999년에 하루 시간의 14.1%를 가사노동에 사용하였으나 2024년에는 11.5%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비중은 2.0%에서 4.0%로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여성의 부

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중, 1999~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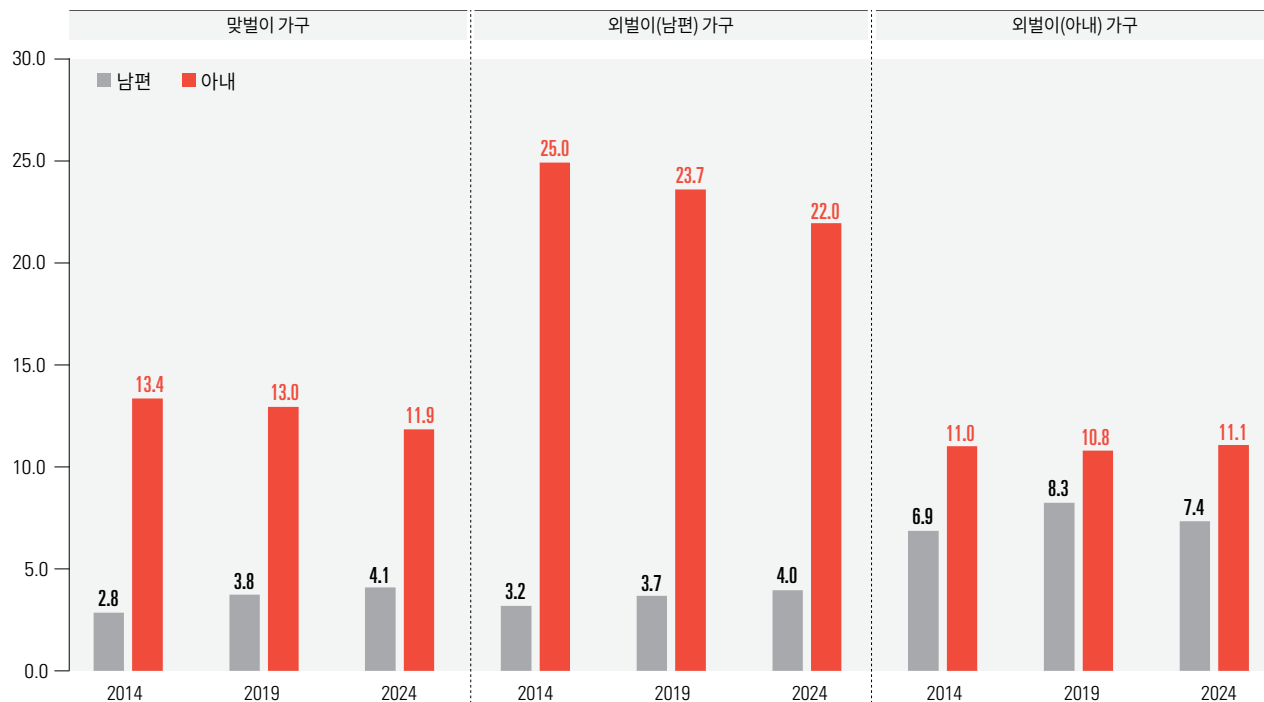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www.kosis.kr, 2025.12.21. 인출)

주 : 10세 이상 남녀의 하루 중 가정 관리(가사)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돌봄) 시간의 비중임

가구특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중, 2014~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www.kosis.kr, 2025.12.21. 인출)

주 : 10세 이상 남녀의 하루 중 가정 관리(가사)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돌봄) 시간의 비중임

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의 7.0배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완화되었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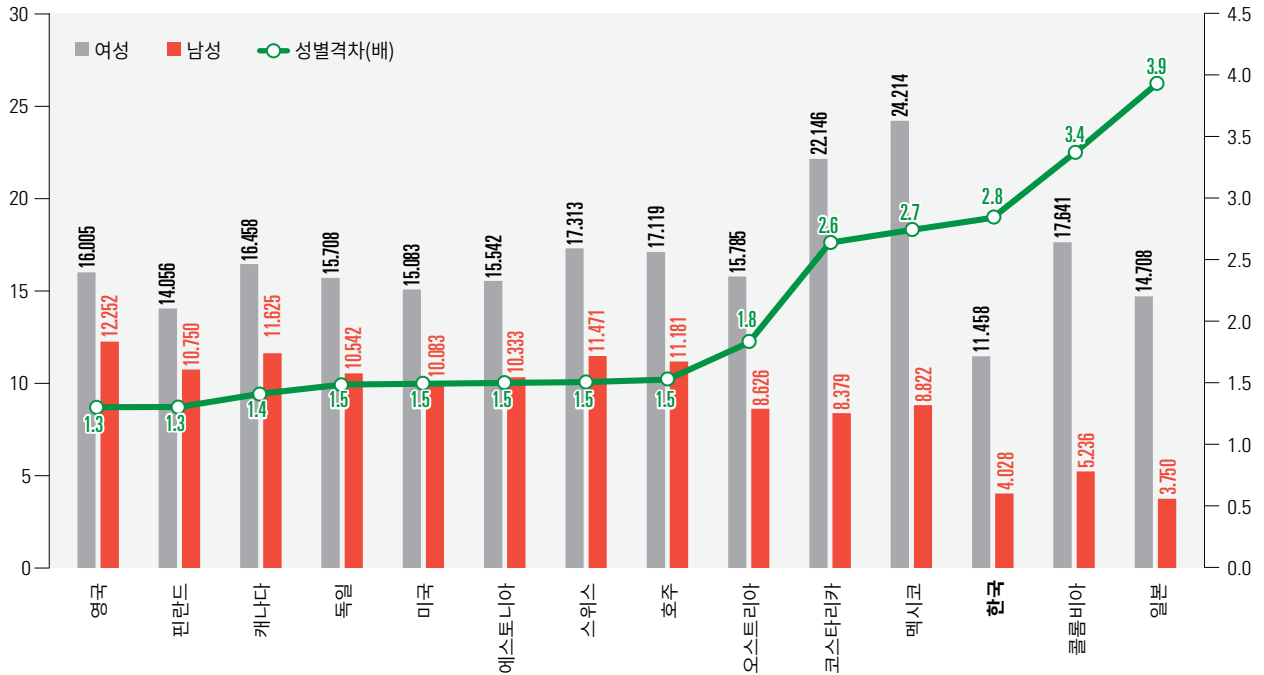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가

사노동 시간 비중은 2024년 기준 11.9%로 남편의 4.1%보다 2.9배 높다. 다만 과거에 비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 외벌이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아내 외벌이 가구에서조차 아내



OECD 국가별 남녀 무급 가사·돌봄 노동 시간 비중 및 성별 격차

(단위: %, 배수)

출처: WorldBank, Gender data portal(<https://genderdata.worldbank.org>, 2026.1.14. 인출;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www.kosis.kr, 2025.12.21. 인출)

주: 한국은 2024년(생활시간조사), 캐나다는 2023년, 영국,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는 2022년,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콜롬비아, 일본은 2021년, 스위스는 2020년, 멕시코는 2019년, 코스타리카는 2017년 기준임

(11.1%)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7.4%)보다 여전히 많다. 지난 25년간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져야 할 부담은 여전히 남성보다 크다. 가사 분담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 내 가사노동의 남녀 간 불균형은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하루 무급노동 시간은 남성의 2.8배에 달하는 165분이다.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길다. 하지만 무급노동에서 한국 남녀의 불평등은 세계은행에 수치가 제공되는 OECD 14개국 중 일본과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 (☞ 관련 지표 5.5.2)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24년 48.8%로 성별 균형에 근접하였다. 경찰, 소방, 교육, 우정직, 전문·연구직, 임기제 등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일반행정직군(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의 여성 비율도 2011년 30.0%에서 2024년 42.8%로 크게 늘었다. 이 중 관리자급(4급 이상)의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7.4%에서 24.5%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해당 직군 전체 여성 비율을 고려하면 관리자급에 도달하는 여성이 현저히 적어 유리천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24년 51.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성별 균형에 도달하였다.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11년 9.2%에서 2024년 34.7%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20년부터는 매년 3%p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가파른 증가세는 성평등 제도 개선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어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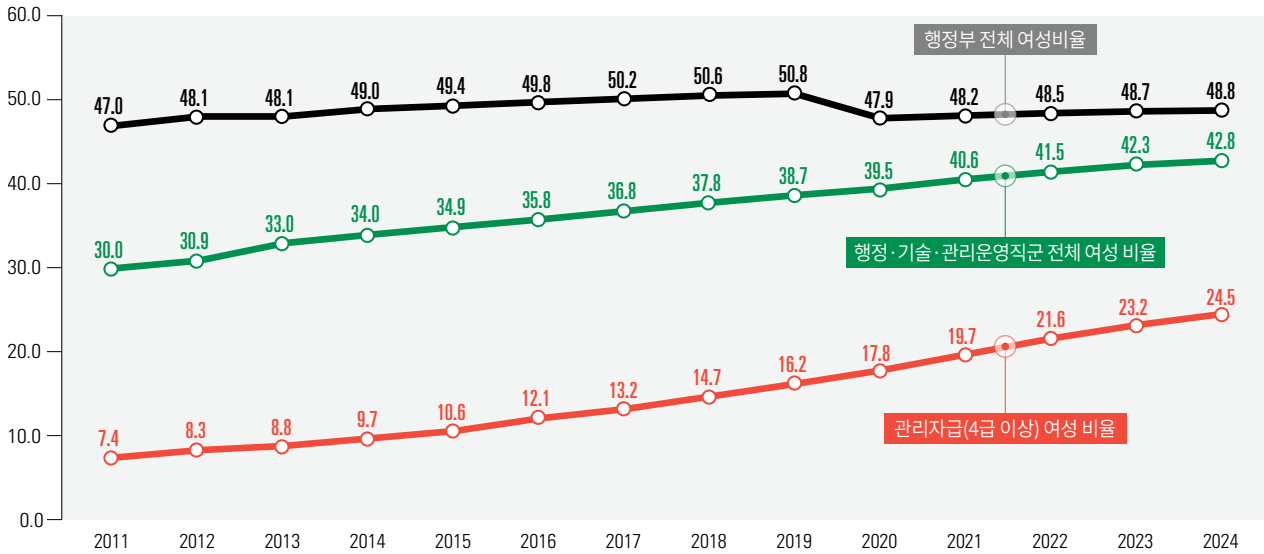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은 2014년 35.7%에서

2024년 46.4%로 크게 늘어나 성별 균형에 근접하였다. 지방공기업에서도 여성 고용 비율이 2018년 26.1%에서 2024년 32.7%로 증가하였다. 민간기업에서는 37%대에 정체를 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4년 13.9%에서 2024년 25.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9.2%에서 22.7%로 꾸준히 높은 수준

국가공무원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4

(단위: %)



출처: 인사혁신처,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2025.12.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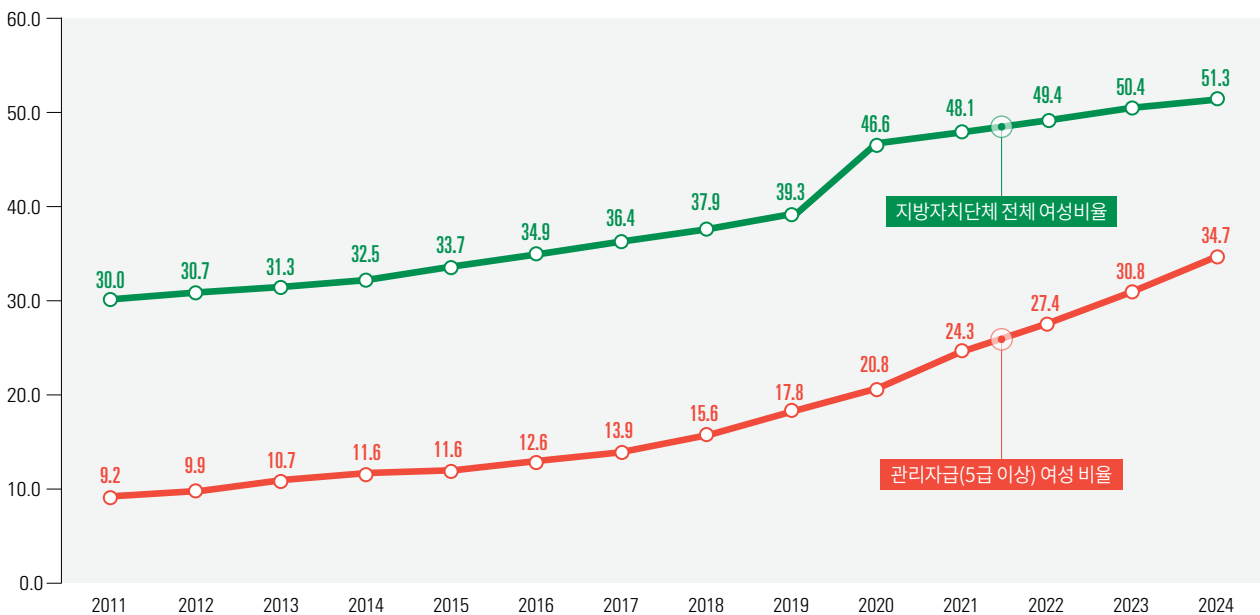
주1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함

주2 :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에는 특정직(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정무직, 별정직이 제외되며,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연구·지도·우정직과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시간선택제와 일반·전문·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됨

주3 :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직급별 여성 비율 자료가 제공되는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임

지방공무원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 비율, 2011~2024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4.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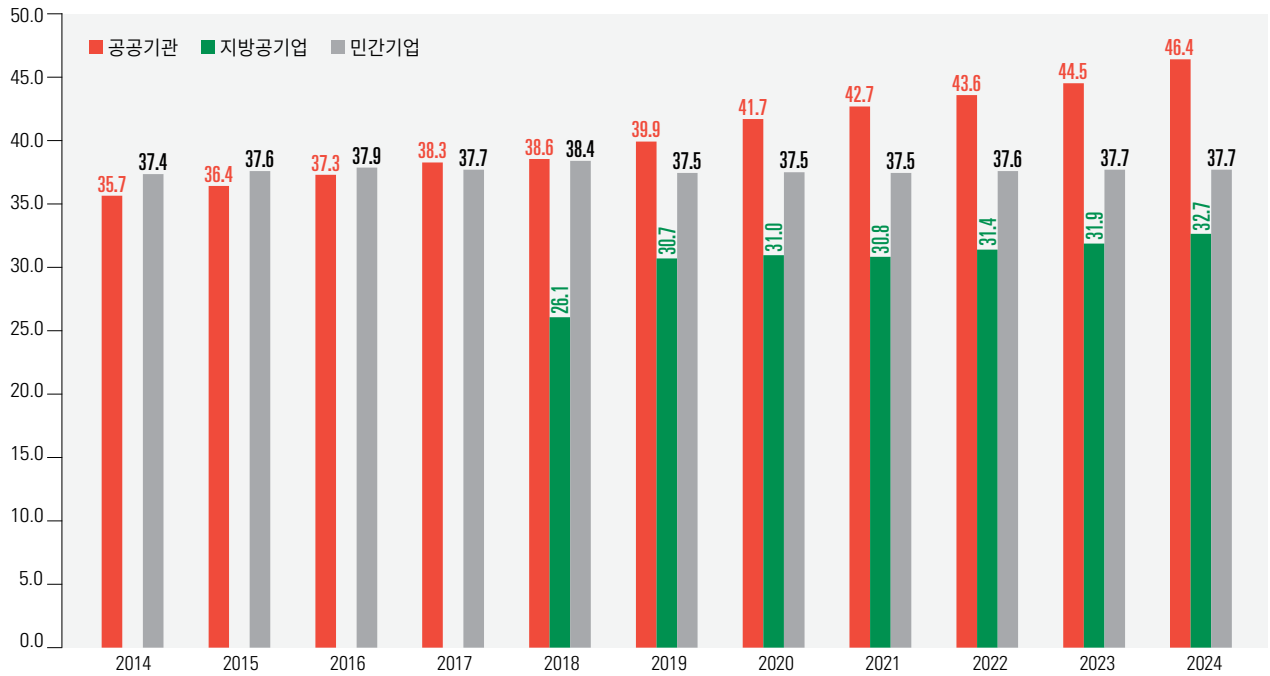
주1 : 지방공무원 중 교육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임

주2 : 관리자급(5급 이상)에는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 임기제 포함) 1~5급, 일반 임기제 5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5급 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 이상이 포함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2014~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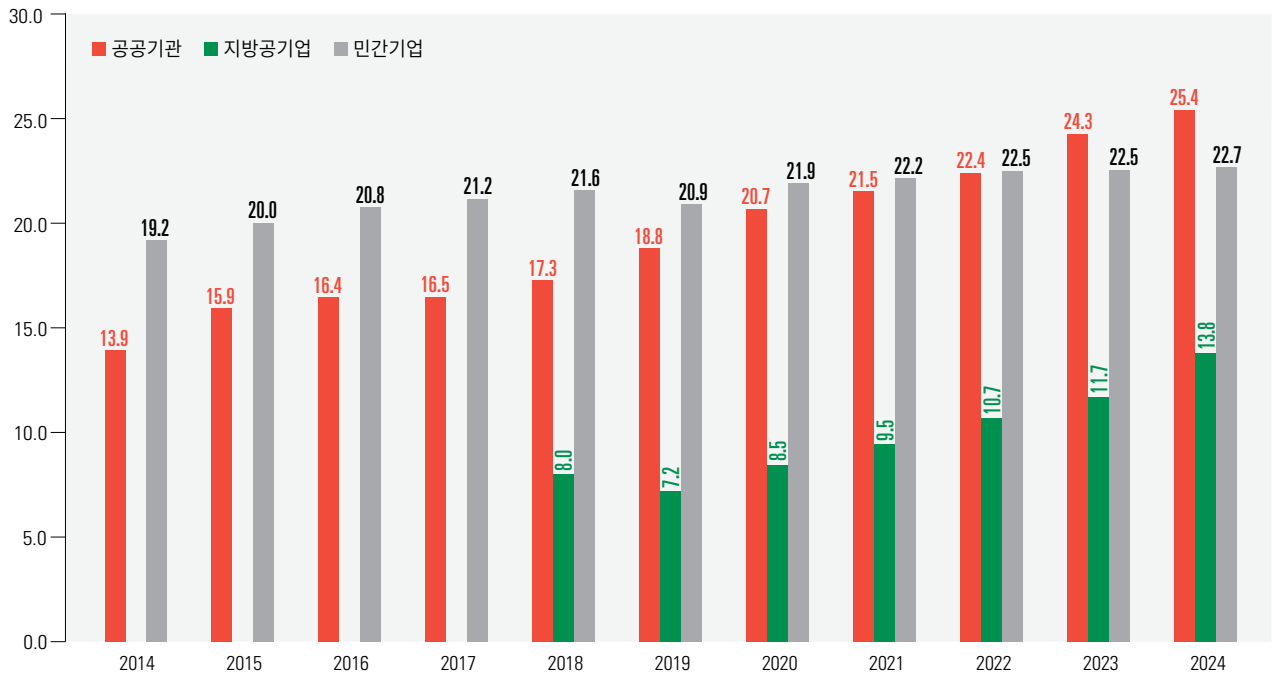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주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단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2014~2024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주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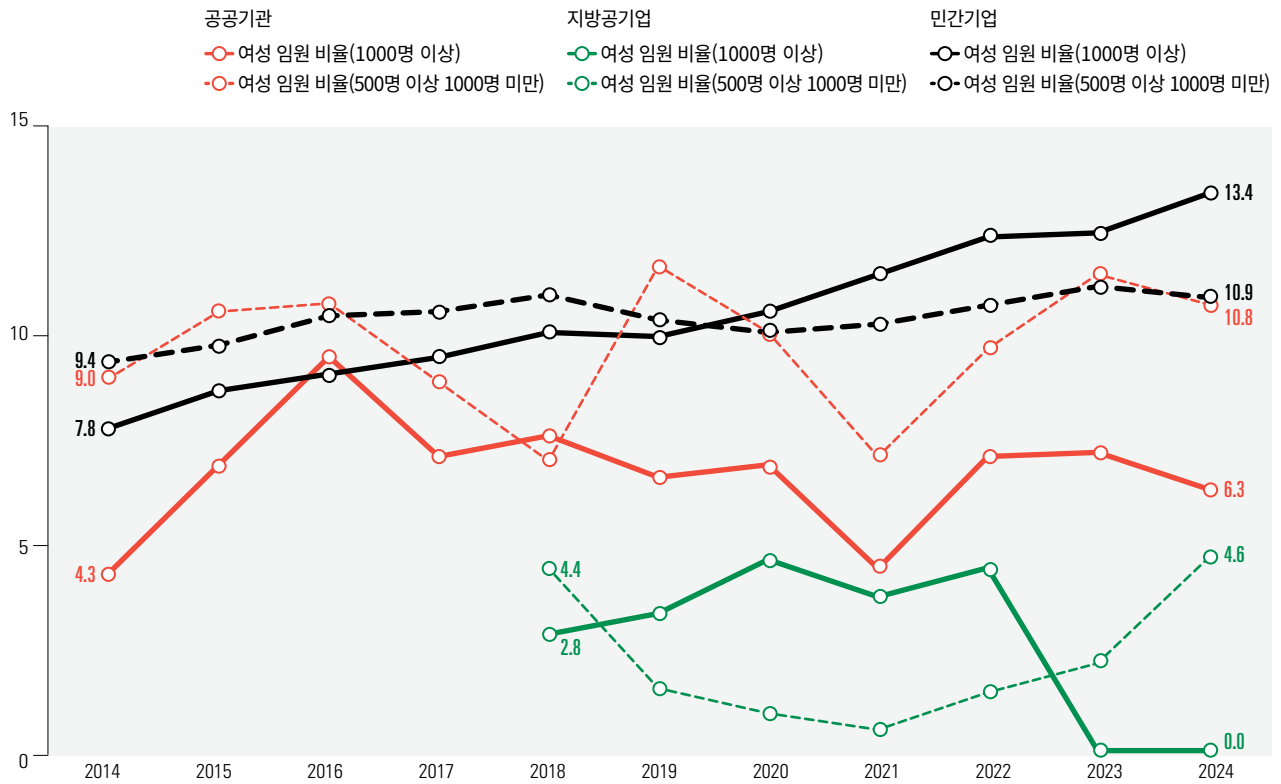
이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2018년 8.0%에서 2024년 13.8%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

과 민간기업에서 여성 리더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규모로 비교할 때 여성 임원 비율은 민간기업에서 가장 높다.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4년 7.8%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13.4%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2014~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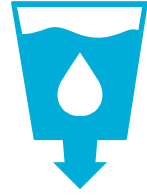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주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단임

반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같은 기간 6% 안팎에 머물며 변동성이 크고, 지방공기업에서는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고용과 승진에서 남녀 간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임원급 진출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유리천장을 걷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단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 6번 목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하고 수질오염 감소, 물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식수와 위생 서비스의 접근성이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2024년에도 22억 명이 식수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서비스의 질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9.5%에 도달하였고 농어촌 지역도 96.5%에 달함

- 전국과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격차는 2011년 10.8%p에서 2024년 3.0%p로 감소
- 농어촌 인구의 12.0%가 활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 중

»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2024년 95.6%로 2011년 대비 4.7%p 증가

-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95.6%)을 상회하지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지역 격차 해소 필요
- 2024년 74.8억 톤의 하수처리수 중 15.6%가 재이용되며, 향후 특히 장외 재이용량(2024년 6.5억 톤)을 2030년까지 13.2억 톤으로 확대할 계획

» 2024년 하천의 88.7%(BOD), 호소의 59.2%(TOC), 지하수의 96.6%에서 법정 수질 목표기준이 달성되고 있음

- 하천, 호소, 지하수를 통틀어 ‘좋은 수질’을 달성한 수계의 비율은 2023년 93.6%로 OECD 2위 수준

» 물 이용 효율성은 2022년 58.27달러/㎥로 2011년 대비 1.36배 향상

- 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은 꾸준히 향상하고 있는 반면 농업 부문에서는 2022년 1.01달러/㎥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수준을 밑돌고 있음

상수도 보급률의 도농 간 격차 완화

(☞ 관련 지표 6.1.1)

상수도시설을 통해 급수를 제공받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은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SDG 세부목표 6.1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이다.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그리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9.5%에 도달하였다. 2011년 87.1%에 불과하였던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도 빠르게 늘어나 2024년 96.5%에 이른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급수 보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수도 정책의 과제 중 하나였는데, 전국 대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격차는 2011년 10.8%p에서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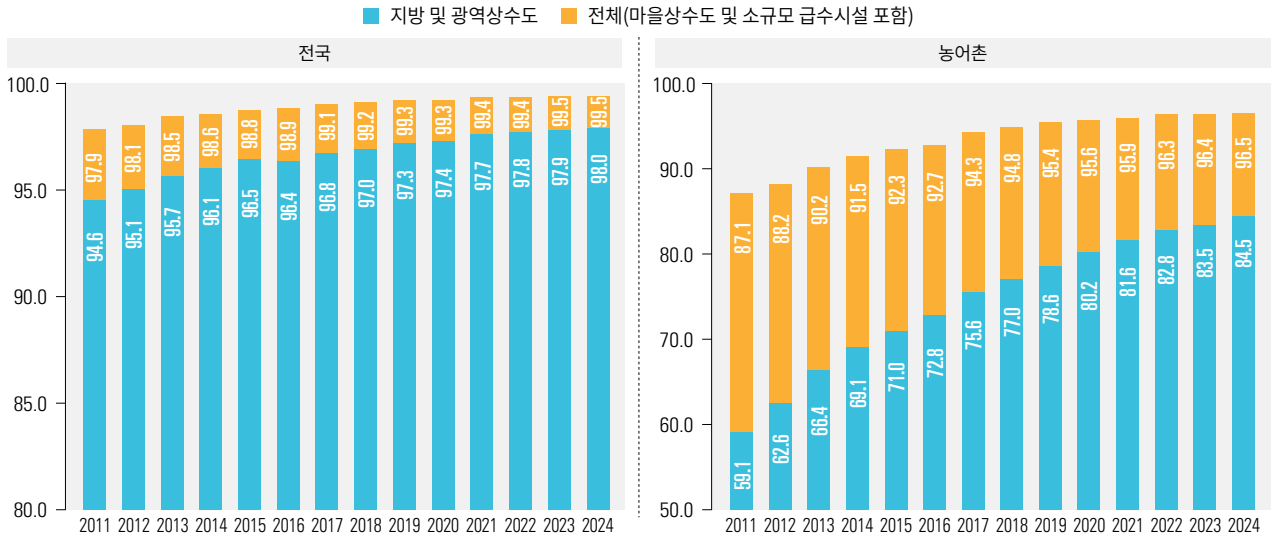
3.0%p로 크게 감소하였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수도시설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의 국가 수도 정책은 지방 및 광역 상수도 중심의 시설 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2022년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되는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유지 및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급수 취약 지역의 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2024년 기준 농어촌 인구의 12.0%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 2011~2024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https://www.waternow.go.kr>, 2026.2.6.인출)
 주 : 농어촌 보급률은 전국의 면 지역 보급률임

하수도 보급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재이용 확대 필요

(🔗 관련 지표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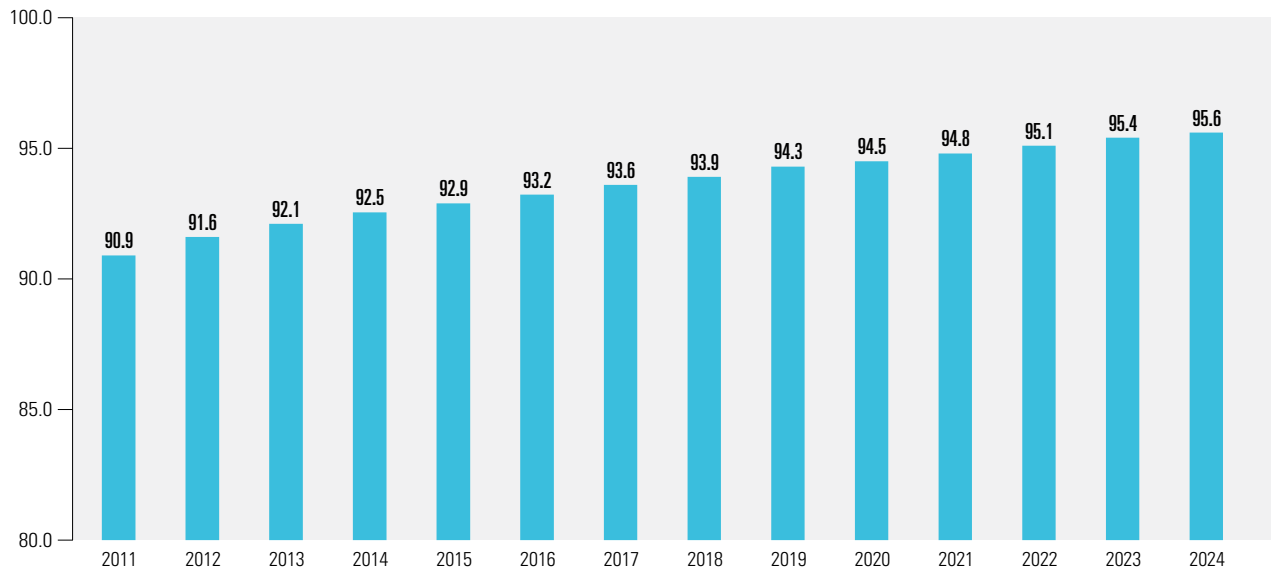
SDG 세부목표 6.3에서는 가정과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재이용하며,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표 6.3.1은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의 비율로 이 목표의 달성을 측정한다. 하수도 보급률이란 공공 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하

수처리가 이루어지는 하수처리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그간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 2024년 하수도 보급률은 2011년 90.9%에서 4.7%p 늘어난 95.6%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00.0%)을 비롯한 특·광역시와 경기도(96.6%)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95.6%)을 상회한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특히 전남(84.8%), 충남(85.3%), 경북

하수도 보급률,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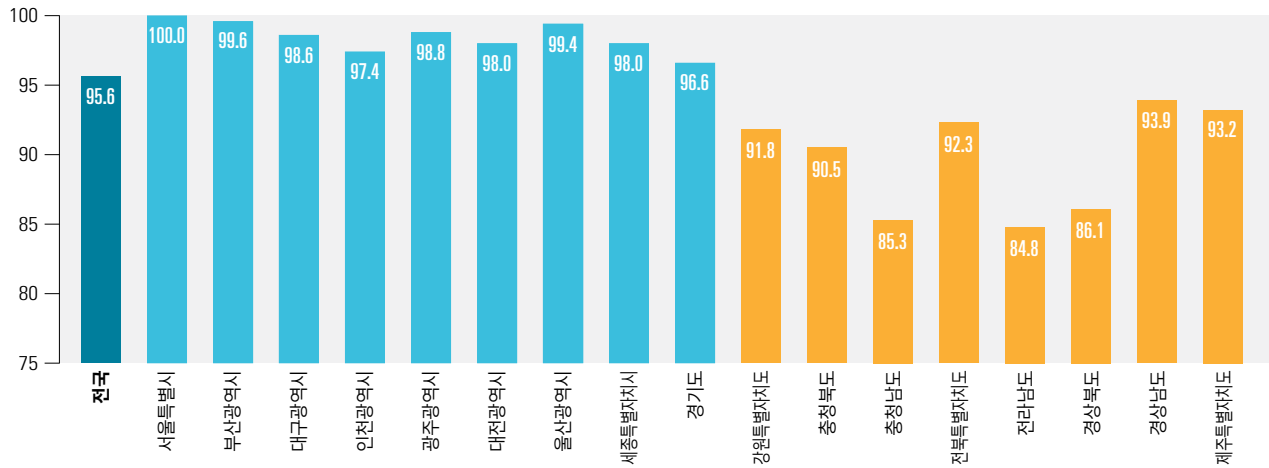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통계(<https://hasudoinfo.or.kr/>, 2026.2.6.인출)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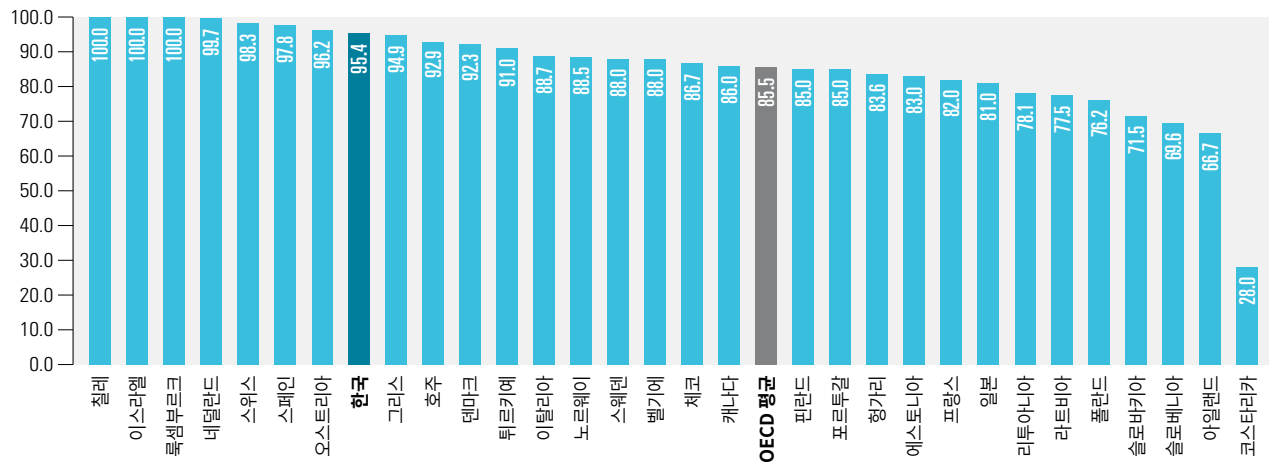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통계(<https://hasudoinfo.or.kr/>, 2026.2.6.인출)

OECD 국가별 하수도 보급률,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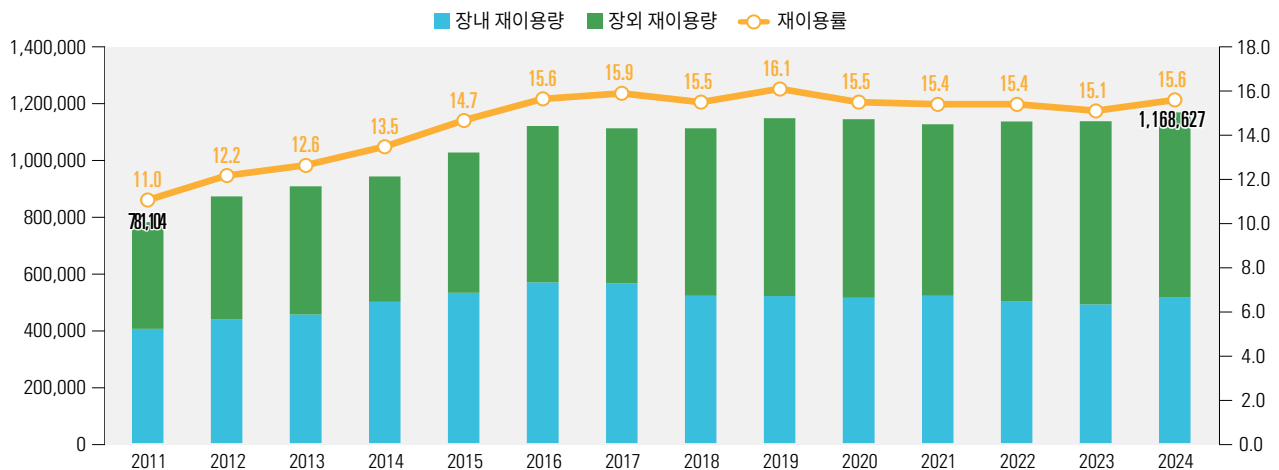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6.2.6. 인출)

주 : 포르투갈은 2020년, 스페인은 2021년, 캐나다·칠레·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스웨덴·튀르키예는 2022년 자료이고, 룩셈부리아·아이슬란드·멕시코·뉴질랜드·영국·미국·독일은 자료 없음

하수처리수 재이용량과 재이용률, 2011~2024

(단위: 1,000톤/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통계(<https://hasudoinfo.or.kr/>, 2026.2.6.인출)



(86.1%)의 경우 90%에도 미달한다. 농어촌 지역 중심의 하수도 보급 확대와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 2020~2023년 자료가 제공되는 31개국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85.5%로 집계된다. 최상위국인 칠레,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0%에 이른다. 한국은 2023년 기준 95.4%로, 이는 비교 대상 31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목표 6.3에는 하수의 재이용도 포함된다. 처리된 하수를 방류하지 않고 적절한 용도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로 더욱 심해지는 물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수 재이용률은 하수처리장이 정화한 하수 중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장, 공장, 농지, 소방 등에 공급해 재이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4년 기준 총 74억 7,914만 톤의 하수 처리수 중 15.6%에 해당하는 11억 6,863만 톤이 장내 또는 장외에서 재이용되고 있다. 재이용률은 2011년 11.0%에서 4.6%p 증가하였다. 2024년 재이용량 중 44.1%는 하수처리장 내에서 세척, 냉각, 청소 등으로 활용되며, 나머지는 장외로 이동하여 하천유지용수(40.9%), 공업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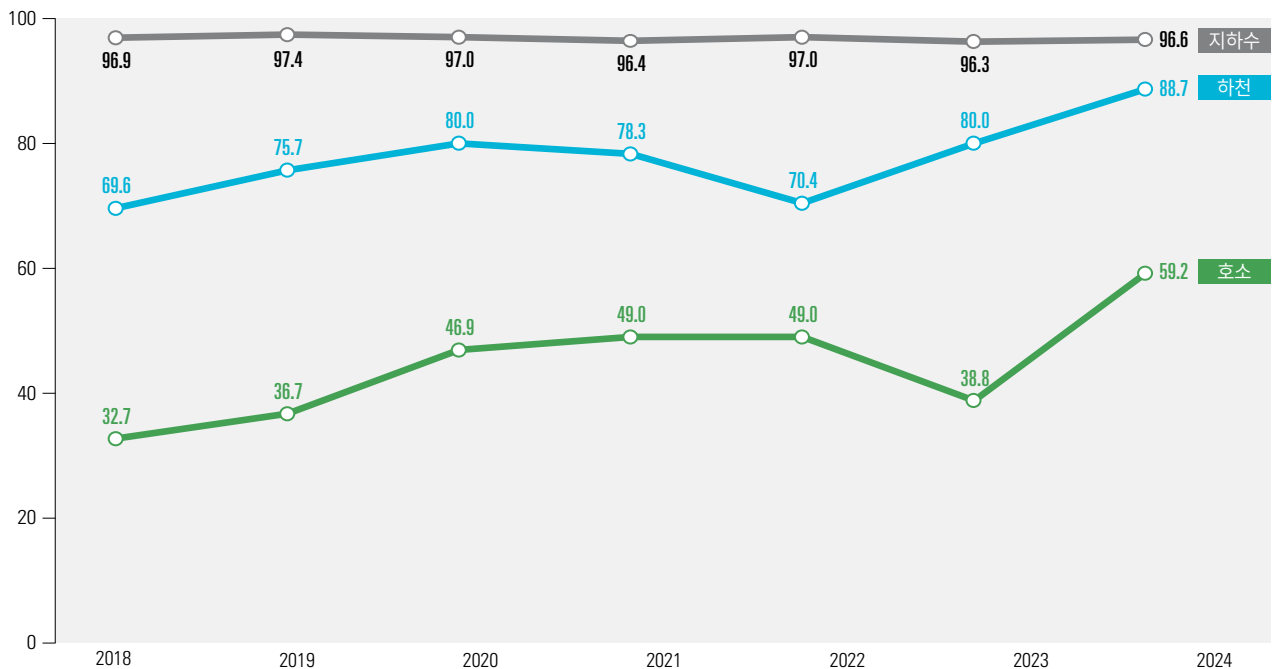
(11.7%), 농업용수(1.1%) 등으로 활용된다.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18억 9,8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2024년 6.5억 톤에 불과한 장외 재이용량을 2030년 13.2억 톤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좋은 수질’ 달성 비율은 높은 편 (● 관련 지표 6.3.2)

하천, 호소, 지하수의 수질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먼저, 법에서 정한 수질 목표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과 호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금속, 유해물질 등의 20개 건강보호 항목은 모든 권역에 적용되며, 수질과 수생태계에 관한 생활환경 항목은 권역별로 목표기준이 정해진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20개 건강보호 전 항목에서 목표기준을 달성하였다. 생활환경 항목은 115개 하천 중권역 중 2018년에는 80개 권역(69.6%)에서만 목표기준이 달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102개 권역(88.7%)에서 달성되었다. 호소의 경우 목표기준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2018년 49개 중권역 중 16개 권역(32.7%)에서, 2024년에는 29개 권역(59.2%)에

수질 목표기준 달성률, 2018~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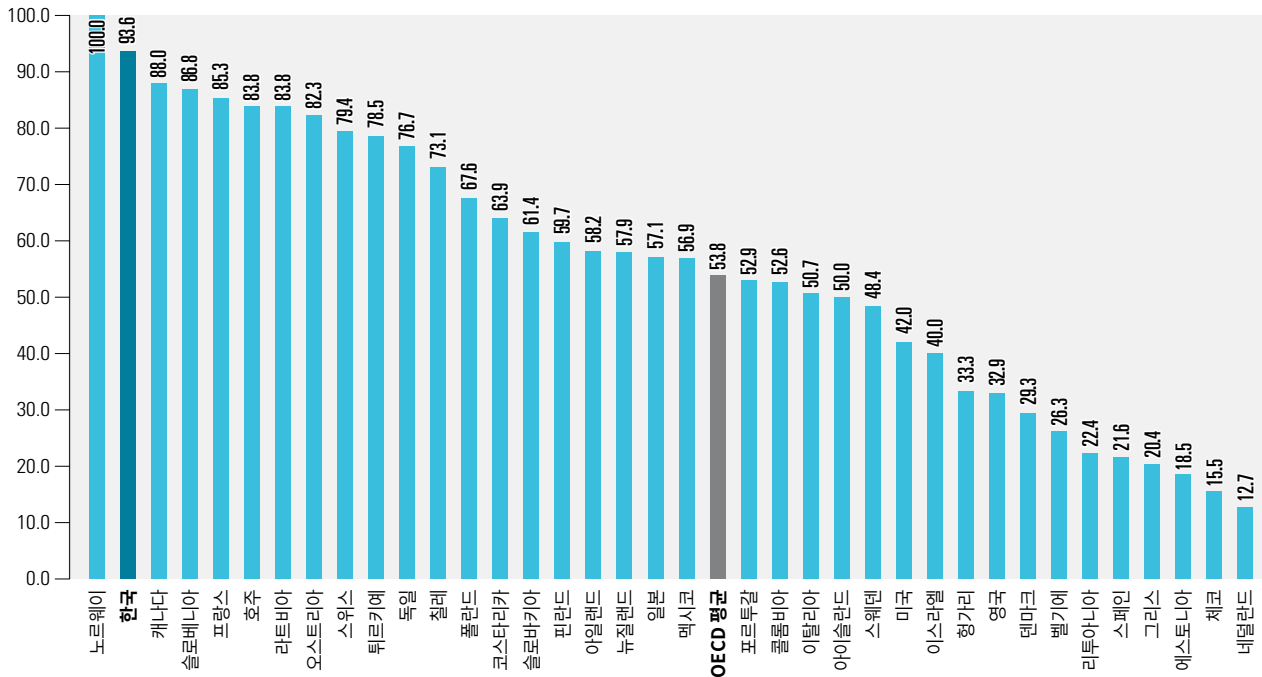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조사연보 2025

주 : 하천과 호소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목표기준(생활환경 항목, 하천은 BOD, 호소는 TOC)에 대한 권역별 달성률이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별 적합률임

OECD 국가별 ‘좋은 수질’을 가진 수역의 비율, 2023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24. 인출)

주 : 하천, 호소, 지하수를 통틀어 산정하는 전체 수역 기준

서 달성되었다.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률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등락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먹는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등 용도별로 수질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2024년 기간에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률은 96~9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SDG 6.3.2를 측정하기 위해 각국의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해 ‘좋은 수질’로 평가되는 수계의 비율을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하천의 86.3%, 호소의 92.5%, 지하수의 95.2%, 그리고 이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93.6%가 좋은 수질로 평가되었다. 이는 자료가 제공된 OECD 37개국 중 노르웨이(10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물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업 부문에서는 하락 (🔗 관련 지표 6.4.1)

SDG 세부목표 6.4에서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부문에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SDG

6.4.1 지표인 물 이용 효율성은 물 이용량 대비 경제활동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경제-환경 통합 지표이다. 물 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같은 양의 물을 이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의 물 이용 효율성은 58.27달러/m³로 2011년 42.81달러/m³에 비해 1.36배 증가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산업구조 고도화, 공정 개선, 물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해 물 이용 효율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충격이 컸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물 이용 효율성은 부문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22년 서비스업 부문과 공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은 각각 153.51달러/m³와 120.80달러/m³에 달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1.01달러/m³에 불과하다. 또한 2011년 이후 서비스업 부문과 공업 부문에서 각각 1.50배와 1.26배 증가하는 사이 농업 부문에서는 2011년 수준(1.02달러/m³)을 오히려 밀돌고 있다. 2011년 이후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은 2019년 0.97달러/m³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여 2021년 1.11달러/m³까지 올랐으나 2022년 다시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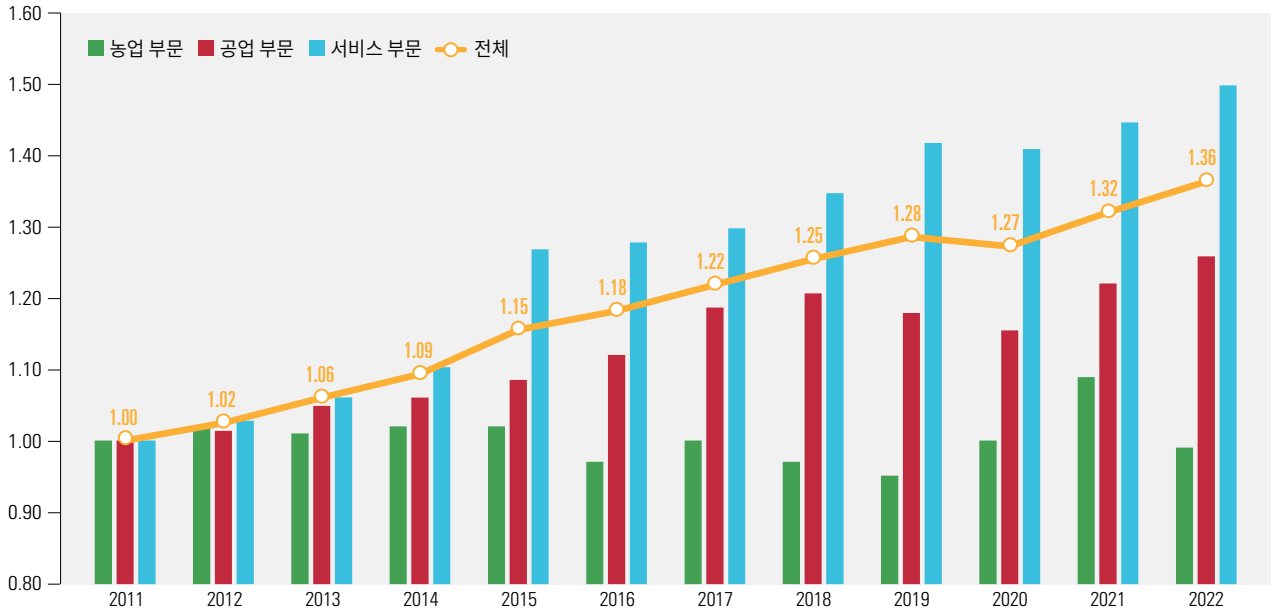
(단위: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42.81	43.86	45.36	46.77	49.42	50.54	52.10	53.64	54.96	54.39	56.42	58.27
농업 부문	1.02	1.04	1.03	1.04	1.04	0.99	1.02	0.99	0.97	1.02	1.11	1.01
공업 부문	96.14	97.45	100.78	101.88	104.27	107.60	113.95	115.84	113.23	110.90	117.18	120.80
서비스 부문	102.68	105.52	108.86	113.16	130.04	131.01	133.04	138.09	145.25	144.38	148.20	153.51

출처: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SDGB>, 2026.2.6. 인출)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변화(2011년 대비),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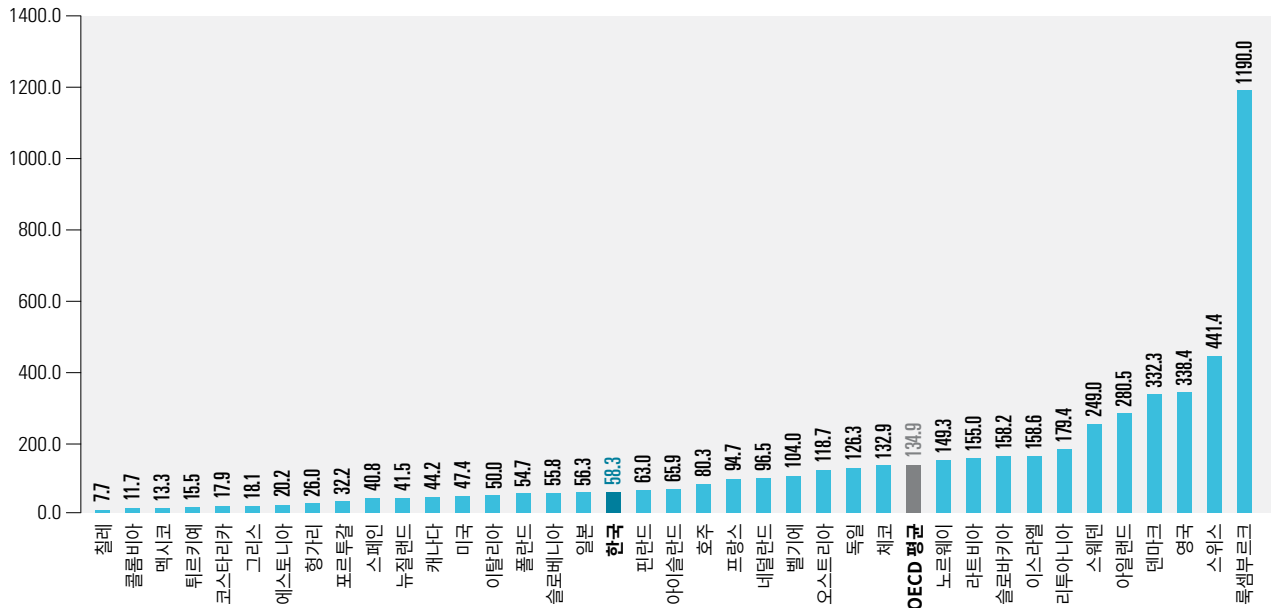
(단위: 2011년=1)



출처: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SDGB>, 2026.2.6. 인출)

OECD 국가별 물 이용 효율성, 2022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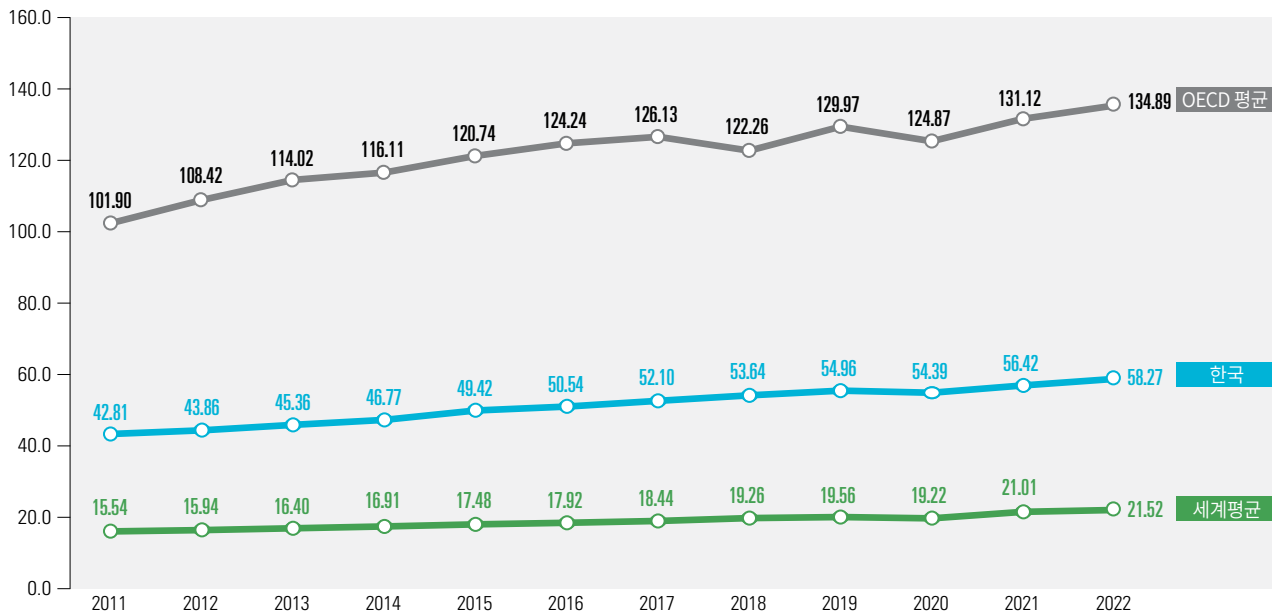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24. 인출)

주 : 2011년은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를 제외한 평균임

물 이용 효율성 변화, 2011~2022

(단위: 달러/m³)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7. 인출)

1.01달러/m³로 하락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부문과 공업 부문의 물 이용 효율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전년 대비 각각 3.6%와 3.1% 증가하였다.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은 OECD 38개국 중 21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친다. OECD 국가들의 2022년 물 이용

효율성은 평균 134.89달러/m³로 한국의 2.3배 수준이다. 한편 물 이용 효율성의 개선 정도를 보면, OECD 평균 기준으로 2011년(101.90달러/m³) 대비 2022년에 1.3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은 1.36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개선 속도가 약간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 7번 목표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접근성도 향상되고 있다. 2025년 저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AI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후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

- 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생산량은 2011년 351만 TOE에서 2024년 1,676만 TOE로 4.8배 증가
-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1.30%에서 2024년 5.52%로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같은 기간 1.33%에서 6.19%로 증가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2024년 42.8%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풍력은 4.2%로 유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9.18%에 도달하였고, 신·재생에너지로는 2024년 처음으로 10%를 넘어 10.69%에 도달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수력 제외)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으며,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

»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들며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정체

- 2024년 에너지원단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0.133TOE/100만 원으로 집계
- 2023년 한국의 에너지원단위(0.099TOE/1,000USD)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으며, 2010년 이후 개선율(연평균 1.8%)이 영국(4.2%), 독일(3.6%), 미국(2.6%), 일본(2.8%) 및 OECD 평균(2.5%) 대비 부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관련 지표 7.2.1)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을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부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수립과 달성 노력,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RE100 캠페인 확산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차에너지는 천연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1차에너지 기준 재생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생산량은 2011년 350만 7,000TOE로 1차에너지 총생산량의 1.30%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1,675만 5,000TOE로

거의 다섯 배가량 늘어나며 1차에너지 총생산량의 5.52%를 차지한다. 여기에 신에너지를 합친 신·재생에너지로 보면 2011년 357만 TOE(1.33%)에서 2024년 1,881만 3천 TOE(6.19%)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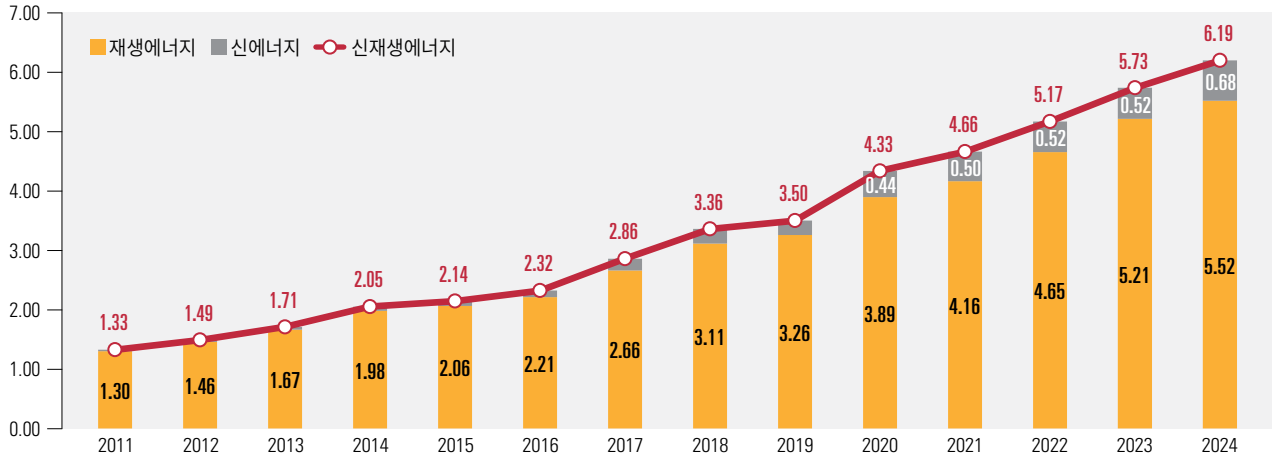
원별 비중도 크게 변하여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의 5.6%를 차지하던 태양광이 2024년에는 42.8%로 크게 성장하였다. 풍력은 2024년 여전히 4.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각각 31.0%와 27.0%를 차지하던 폐기물(비재생폐기물 제외)과 수력은 2024년 7.3%와 4.9%로 줄었다. 신에너지에 속하는 연료전지의 비중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의 1.8%에서 2024년 8.6%로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전력 부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15년 2.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9.18%에 도달하였다. 신·재생에너지로 보면 발전 비중이 2015년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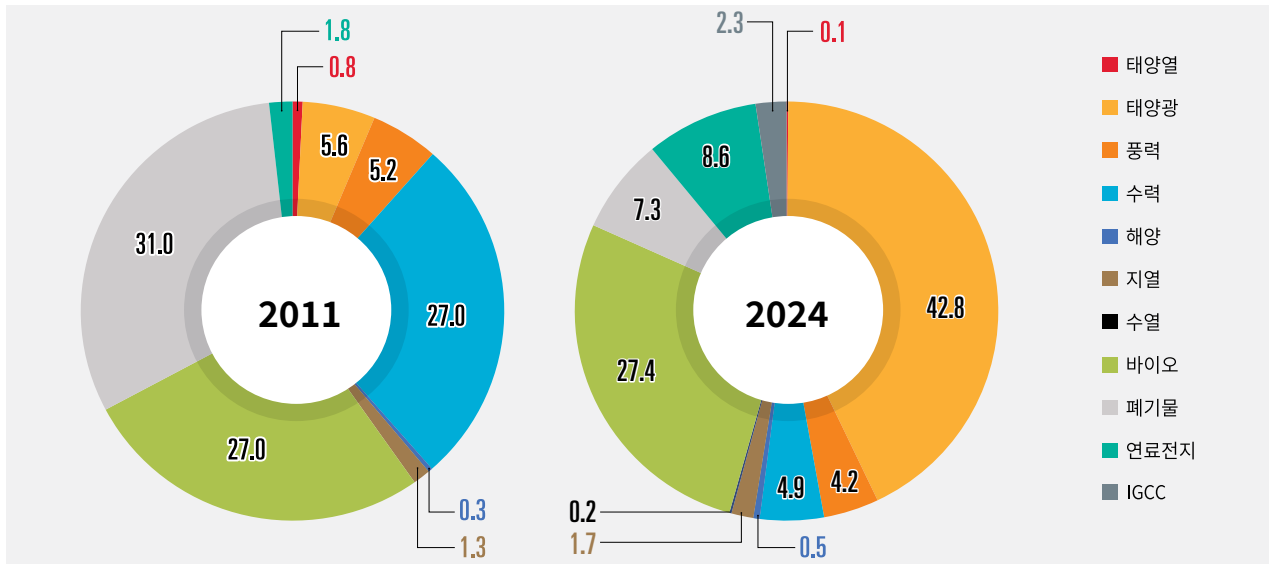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https://www.knrec.or.kr>, 2025.12.31. 인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https://kesis.keei.re.kr>, 2025.12.31. 인출)
 주: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2019.10.1. 시행)됨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기준을 2011년에 적용하여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 2011, 2024

(단위: 1,000TO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 (<https://kesis.keei.re.kr>/ 2025.12.31. 인출)
 주: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2019.10.1. 시행)됨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기준을 2011년에 적용하여 산출함

2.72%에서 2024년 10.69%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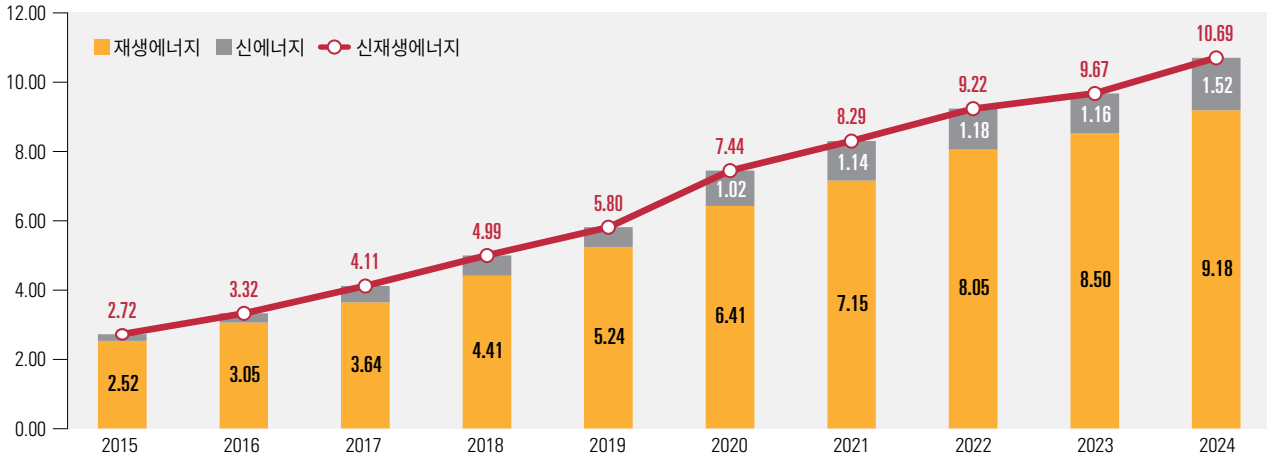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2025년 기준 총발전량의 1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비중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0년에는 25.0%를 달성해야 한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의무량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REC 거래에 따른 추가적

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복잡한 REC 거래시장을 개편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신규 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경매 기반의 입찰을 실시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20년의 장기 고정 가격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에서 집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료에는 수력발전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15~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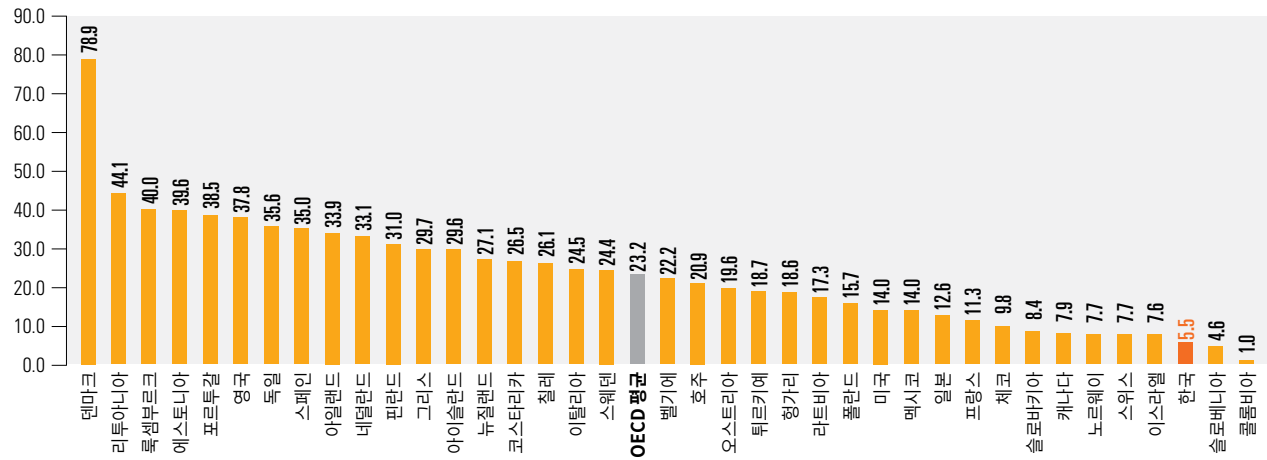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https://www.knrec.or.kr>, 2025.12.31. 인출)

주1: 양수발전을 포함한 총발전량 기준이며, 신·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포함됨

주2: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2019.10.1. 시행)됨에 따라 2019년 4분기부터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비재생폐기물 분리 산정 기준을 2011~2019년에 적용하여 산출함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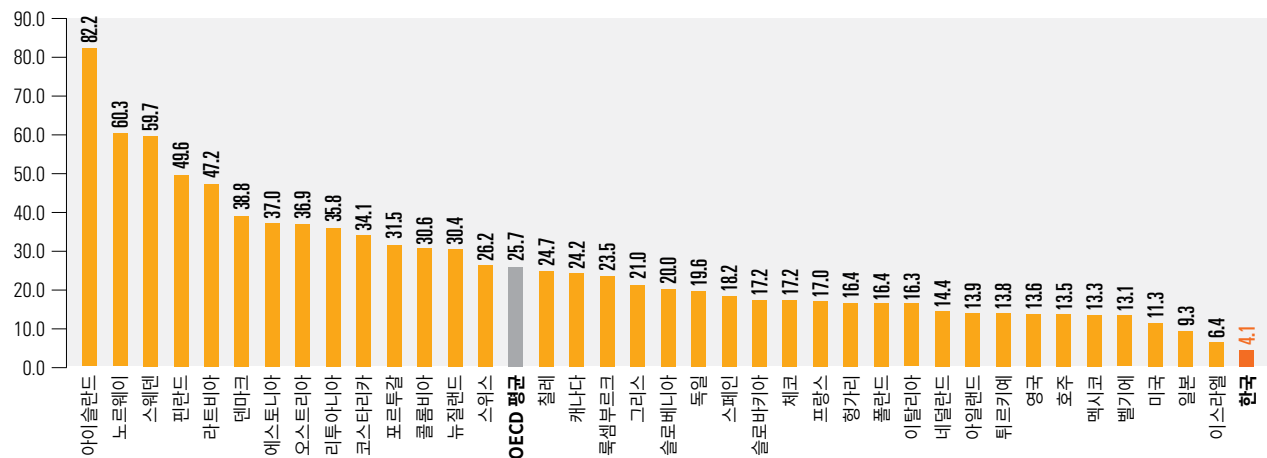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Group,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ELC.RNWX.ZS>, 2026.1.29. 인출)

주: 재생에너지에서 수력은 제외됨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30. 인출)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다. OECD 38개국 평균인 23.2%에 크게 못 미친다. 덴마크(78.9%)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나라이다.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2년 기준 4.1%에 그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에너지원단위 개선세 정체

(☞ 관련 지표 7.3.1)

국가 경제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TOE/100만 원)로 정의된다. 에너지원단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투입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여 에너지효율이 개선된다는 뜻이다. 에너지원단위는 국가의 산업구조와도 연관성이 크다. 한국의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다. 이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증가의 연계성을 완화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산업 부문은 2024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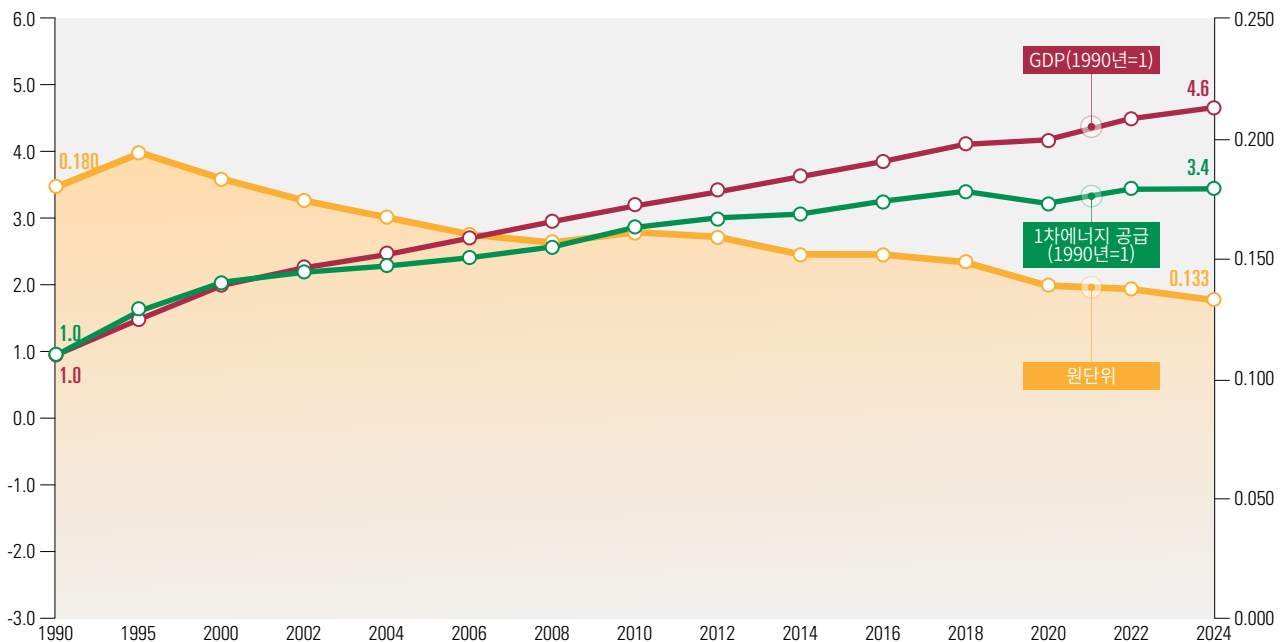
의 61.6%를 차지한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등락하고 있다. 산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1년 1억 3,354만 TOE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4년 잠정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 3,072만 TOE로 집계된다. 그 외 수송과 건물(가정 및 공공·상업) 부문은 2024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각각 16.5%와 22.0%를 차지한다.

GDP 대비 1차에너지 공급량의 비율로 정의되는 에너지원단위는 1993년 0.200TOE/100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들며 개선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선세가 정체되고 있다. 2024년 잠적치는 전년도와 동일한 0.133TOE/100만 원으로 집계된다.

그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2023년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099TOE/1,000USD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시간에 따른 에너지원단위의 개선 속도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1990년과 2023년 사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이 각각 연평균 3.1%, 2.5%, 2.1%, 1.3% 그리고 1.8% 개선된 데 비해 한국은 같은 기

에너지원단위, 1990~2024

(단위: 1990년=1, TOE/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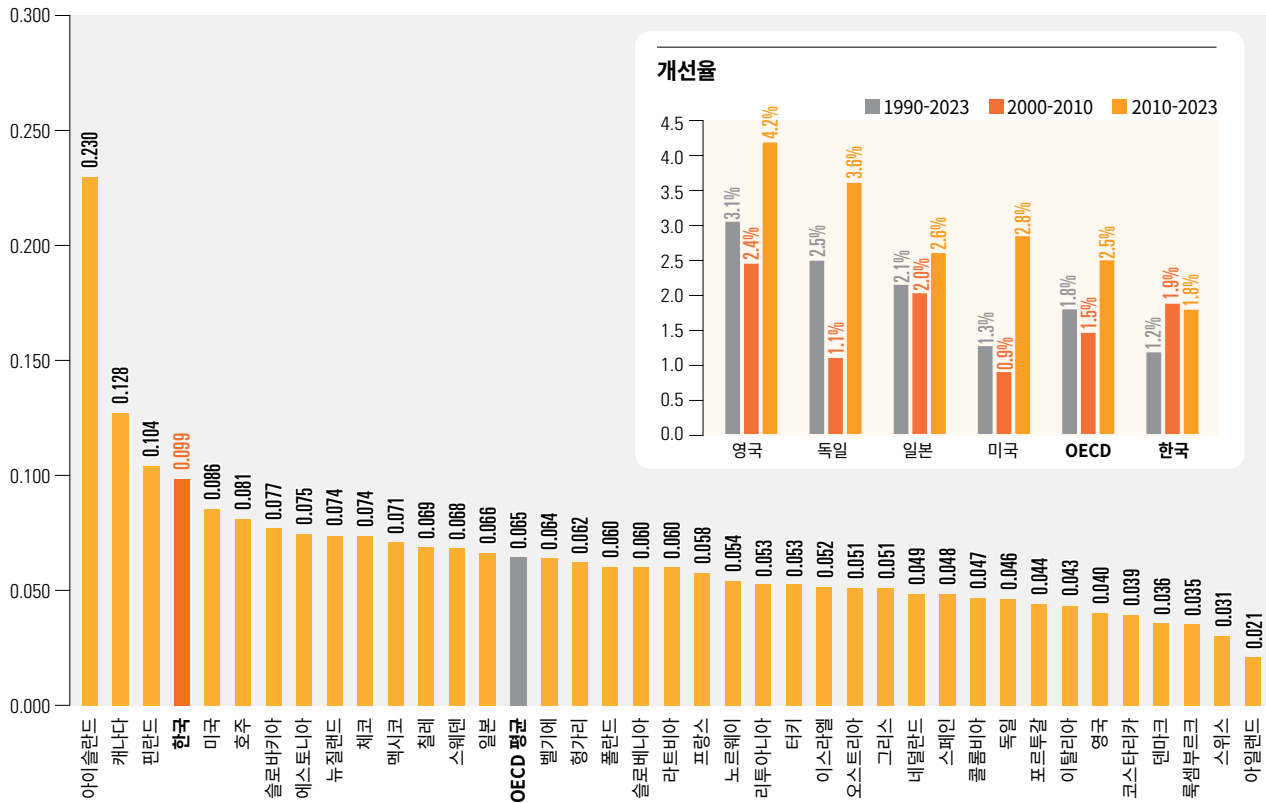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6, 2026/1 에너지통계월보 (<https://kesis.keei.re.kr>, 2026.2.10. 인출)

주1 :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차에너지 공급량의 비율

주2 : 2024년은 잠정치

주3 : GDP와 1차에너지 공급은 1990년 대비 변화율임 (1990년=1)



출처: World Bank Group, Data 360(https://data360.worldbank.org/en/indicator/WB_WDI_EG_USE_COMM_GD_PP_KD, 2026.1.31. 인출)

간 연평균 1.2% 개선되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한국의 연평균 개선율(1.9%)이 앞서 언급한 주요국 (0.9~2.4%)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선율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10년과 2023년 사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이 각각 연평균 4.2%, 3.6%, 2.6%, 2.8%, 그리고 2.5% 개선되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연평균 1.8% 개선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26.6%에 달한다. 이는 영국(8.0%), 독일(18.0%), 미국(2021년 10.7%), 일본(2023년 20.6%) 등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준이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에너지효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실시하여 목표 설정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30대 핵심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KEEP30)’을 맺어 효율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KEEP30에 참여한 30대 기업은 2024년 기업당 평균 2.6%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였다. 6대 우수 기업의 개선율은 평균 8%에 이른다.

-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Renewable Energy 100%)
- **1차에너지**: 석탄, 석유, 재생에너지 등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
- **최종에너지**: 1차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거쳐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최종 소비 부문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최종 소비자의 이용 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
- **에너지원단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1차에너지 공급량의 비율
- **KEEP30**: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 사용량 20만 TOE 이상)과 맺은 자발적 협약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 제공(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 **PPP**: 국가간 화폐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통화 교환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PPP 환율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 각국 통화로 표현되는 상대가격비율, Purchasing Power Parit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8번 목표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무역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비공식 부문, 아동노동, 청년과 여성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가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의 경제 회복과 고용 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여성, 청년, 고령 근로자 등의 고용 상황과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9%로 전년(1.5%) 대비 개선되었으나 2013~2018년(2.4~3.1%)에 비하면 제한적 회복

- 독일, 영국 등이 2023~2024년에도 역성장 또는 0.1% 성장한 데 비하면 양호한 편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 등에 따른 부진 전망

» 시간당 임금은 2024년에 2만 5,156원으로 전반적 상승세 유지

- 여성 임금은 2024년 남성의 70.9%로 성별 격차가 완화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전체 대비 60세 이상 고령층 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2011년 72.5%에서 2024년 82.1%로 상승
- 직종별로는 2024년 관리직 임금이 전체 평균의 314.7% 수준으로 월등히 높고 2011년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
- 2024년 한국의 시간당 임금(27.3달러, PPP)은 독일(52.1달러), 미국(46.2달러), 영국(42.1달러), 프랑스(40.7달러), 일본(30.6달러)보다 낮으나 2011년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33.9%)

» 실업률(2025년 2.8%)은 2022~2025년까지 2.7~2.9%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0년대 중후반보다 높은 고용률(2025년 62.9%)과 동시에 나타나 양호한 고용 상황을 시사

- 20대의 실업률(2025년 6.1%)이 가장 높으나 2020~2025년 사이 2.9%p 줄어들어 하락세가 뚜렷하며,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1년 이후 상승세 지속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재해율은 산재보험 확대 등에 따라 2017년 0.48%에서 2024년 0.67%로 증가한 반면 사망 만인율(2024년 0.98‰)과 사고성 사망만인율(0.39‰)은 감소세

-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24년 전체 재해자의 38.2%, 재해 사망자의 52.8%를 차지

»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핵심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2024년 약 45만 명으로 문화·오락·레저스포츠 산업(24.9%), 관광운수업(22.2%) 등에 종사

- 2024년 관광산업(관광진흥법 기준)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여전히 2019년의 79.5% 수준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제한적 회복

(📌 관련 지표 8.1.1)

1인당 실질 GDP는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며, 연 성장률은 그 개선 정도를 나타낸다.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은 2013~2018년 사이 2%대 중후

반에서 3%대 초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2.0%로 하락하였고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역성장으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이후 2021년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2020년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2023년과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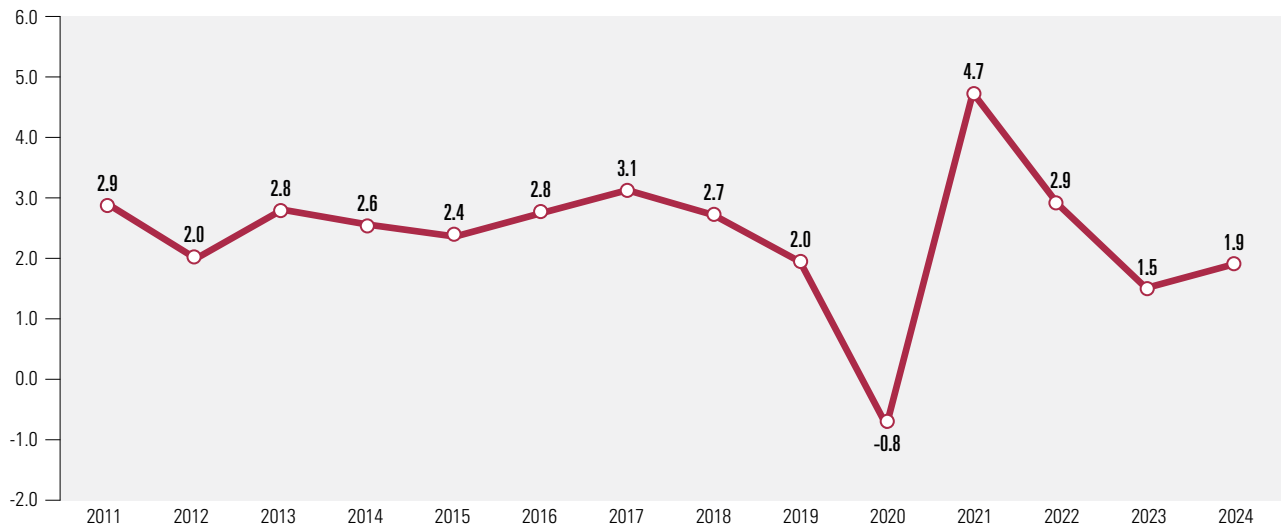
에 성장률이 1%대에 그치면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2023년 1.5%보다는 높아졌지만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쳤다.

OECD 주요국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은 2020년과 그 기저효과로 인해 급격한

성장률을 보인 2021년 이후에도 독일과 영국은 여전히 2020년 전보다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영국은 2023년 역성장에 이어 2024년 0.1% 성장에 그쳤다. 미국은 2023년과 2024년 1.9~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6%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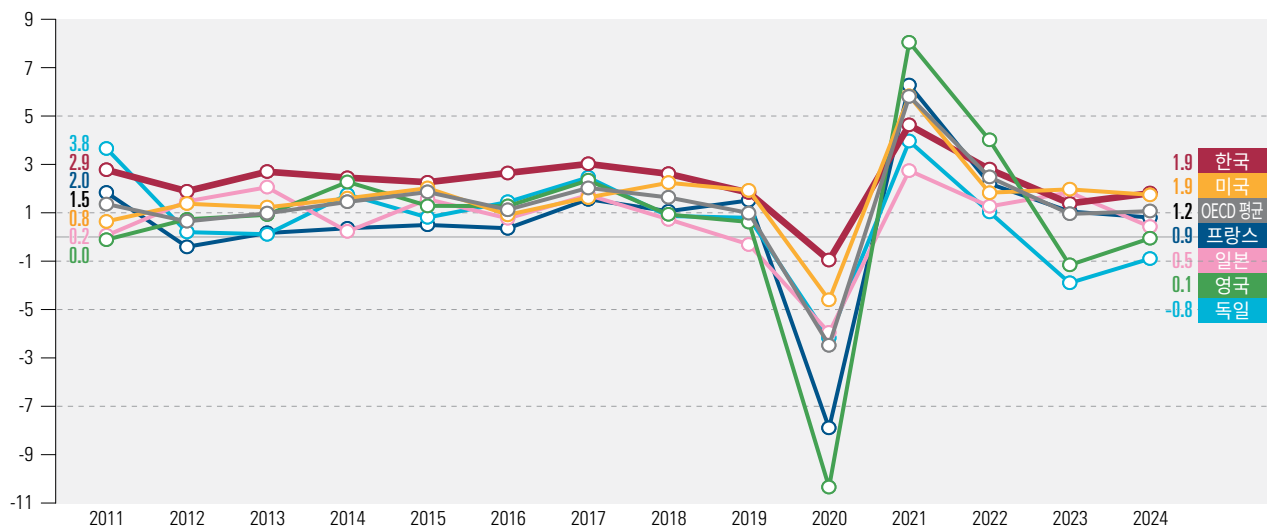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kosis.kr>, 2025.8.28. 인출)

주: 1인당 명목 GDP(원화 기준)를 GDP 디플레이터(2020=100)로 나눈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OECD 주요국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11~2024

(단위: %)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19. 인출)

주1: PPP 환율 기준(2020년 미국 달러 고정가)

주2: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임

다. 일본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2.0%와 0.5% 성장하며 과거 수준(2011~2019년 평균 1.0%)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프랑스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1.2%와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예전 수준(2011~2019년 평균 0.9%)의 완전한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주요국의 실질 성장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삶의 수준을 비교적 양호하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의 속도는 이전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향후 한국은 빠른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1인당 GDP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2025)에서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2020년대 하반기에 1.6%, 2030년대에 1.0%, 2040년대에 0.7%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완화되고

고령층의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 (● 관련 지표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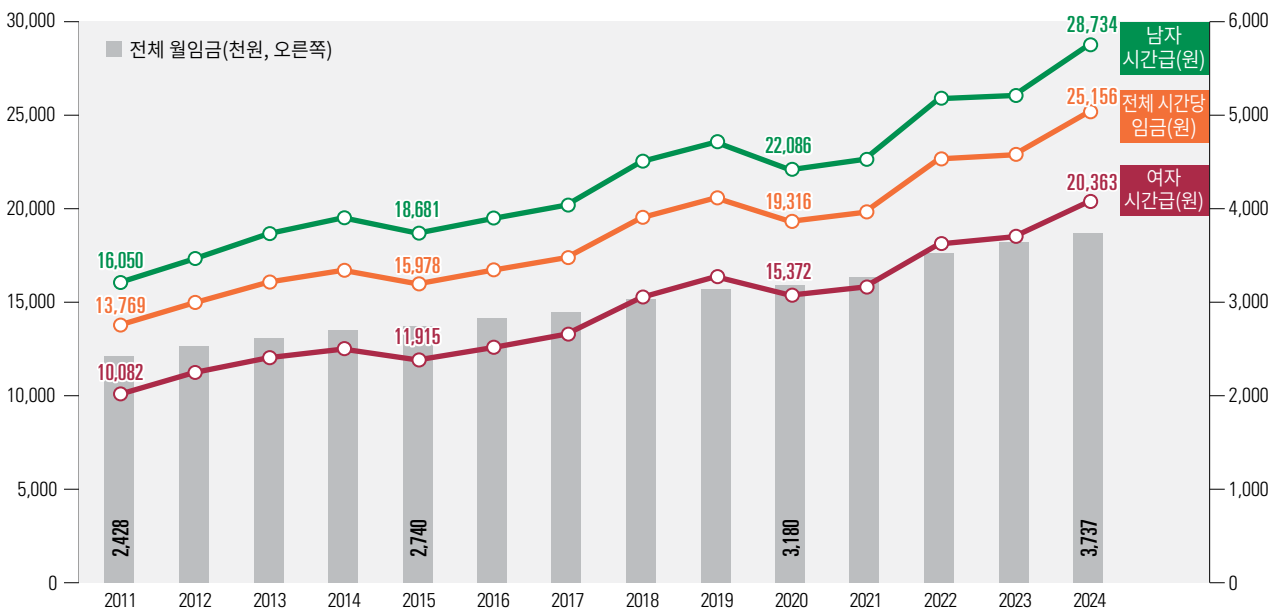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1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인적 또

는 사업체 속성에 따른 일자리 질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1년 1만 3,769원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2만 5,156원에 달하였다. 2020년의 시간당 임금 하락은 조사월의 근로일이 전년도에 비해 1.5일이 길어지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의 하락이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노동 대가의 수준 하락을 나타낸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한 편이다. 2024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363원으로 남성 근로자(2만 8,734원)의 70.9%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1년(62.8%)과 2024년 사이 8.1%p 오르며 성별 격차가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2011년에는 40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 6,171원)이 30대(1만 4,807원)와 50대(1만 4,638원) 근로자보다 높았고 29세 이하 청년(9,811원)

성별 시간당 임금,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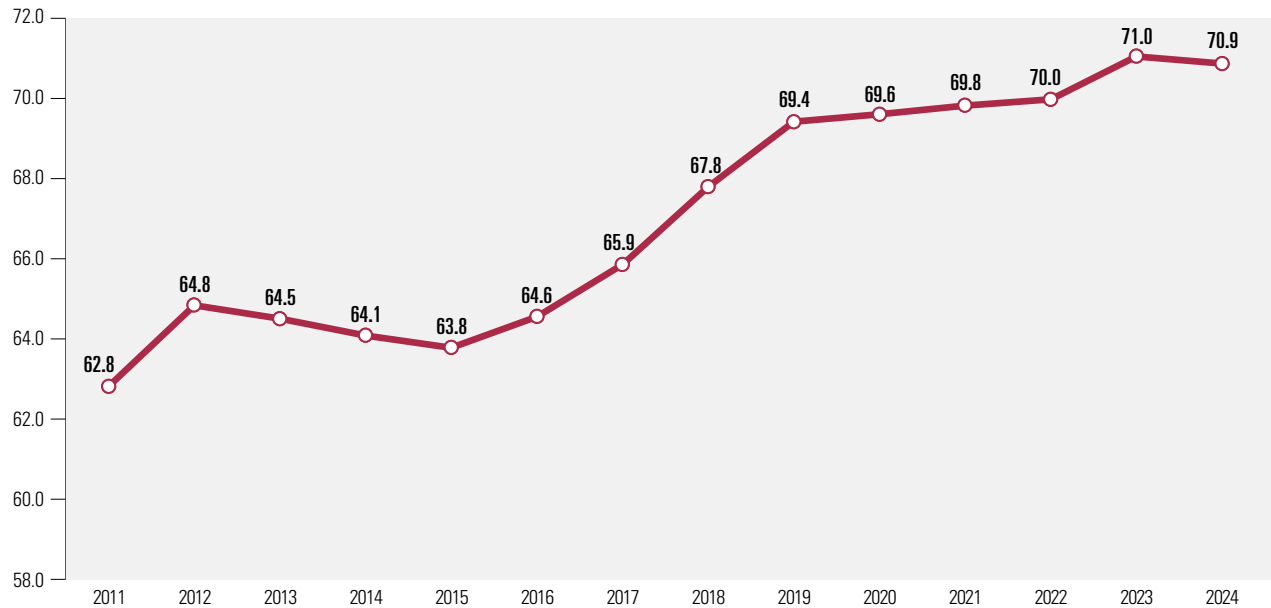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주 : 2020년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데는 당해 조사월(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 있음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 2011~2024

(단위: %, 남성=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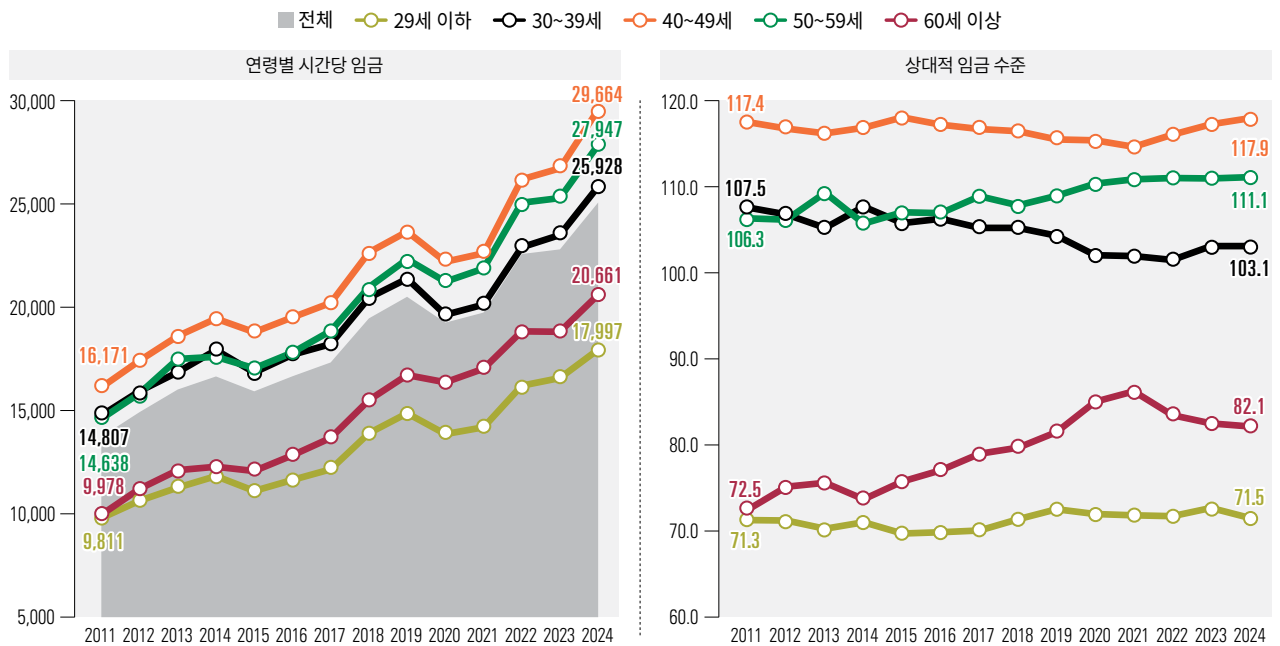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주1: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임

주2: 2020년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데는 당해 조사월(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 있음

연령별 시간당 임금과 상대적 임금 수준, 2011~2024

(단위: 원, %, 전체 평균=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주1: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대비 각 연령별 임금

주2: 2020년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데는 당해 조사월(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 있음

과 60세 이상 고령(9,978원) 근로자는 이들보다 더 낮았다. 그런데 거의 15년이 지난 2024년에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40대 이상 근로자에 비해 40대 미만 근로자의

임금 상승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면서 연령대별 임금 수준에 분화가 발생한 것이다. 40대의 임금(2만 9,664원)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30대(2만 5,928원)는 50대(2만

시간당 임금, 2011~2024									
	관리	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조작조립	단순
2011	33,458	17,856	16,202	7,436	11,887	11,126	12,897	12,292	7,804
2015	44,002	20,335	18,473	8,792	12,678	11,917	15,328	14,278	9,358
2020	59,024	23,446	21,777	11,837	16,131	15,447	19,495	17,904	13,131
2021	62,043	23,898	22,441	12,295	16,398	15,962	20,226	18,074	13,074
2022	73,158	27,328	25,786	13,378	18,625	16,875	22,345	20,322	14,530
2023	71,349	28,006	25,677	13,929	18,512	16,816	22,634	20,937	15,433
2024	79,155	30,843	28,776	15,117	20,426	19,185	24,920	22,848	16,011

상대적 임금수준, 2011~2024									
	관리	전문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조작조립	단순
2011	243.0	129.7	117.7	54.0	86.3	80.8	93.7	89.3	56.7
2015	275.4	127.3	115.6	55.0	79.3	74.6	95.9	89.4	58.6
2020	305.6	121.4	112.7	61.3	83.5	80.0	100.9	92.7	68.0
2021	313.3	120.7	113.3	62.1	82.8	80.6	102.1	91.3	66.0
2022	323.0	120.6	113.8	59.1	82.2	74.5	98.6	89.7	64.1
2023	311.9	122.4	112.2	60.9	80.9	73.5	98.9	91.5	67.5
2024	314.7	122.6	114.4	60.1	81.2	76.3	99.1	90.8	63.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주 :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대비 직종별 임금

7,947원)에 비해, 청년(1만 7,997원)은 고령자(2만 661원)에 비해 뚜렷이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평균 임금 대비 상대적 수준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근로자 대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2011년 72.5%에서 2024년 82.1%로 9.7%p 상승하였으나 30대 근로자는 같은 기간 107.5%에서 103.1%로 4.5%p 하락하였다.

직종별로 보면, 2024년 관리직의 시간당 임금은 7만 9,155원으로 2011년 대비 136.6% 상승하여 타 직종(71.8~105.2%)에 비해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 근로자 대비 관리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2011년 243.0%에서 2024년 314.7%로 상승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그러나 관리직을 제외하면 직종 간 임금 격차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이 2011년 각각 54.0%와 56.7%였으나 2024년에는 60.1%와

63.6%로 증가하여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 2011년 상대적 임금 수준이 비슷하였던 농림어업직(80.8%), 판매직(86.3%), 조작·조립직(89.3%), 기능원(93.7%) 사이에는 상당한 분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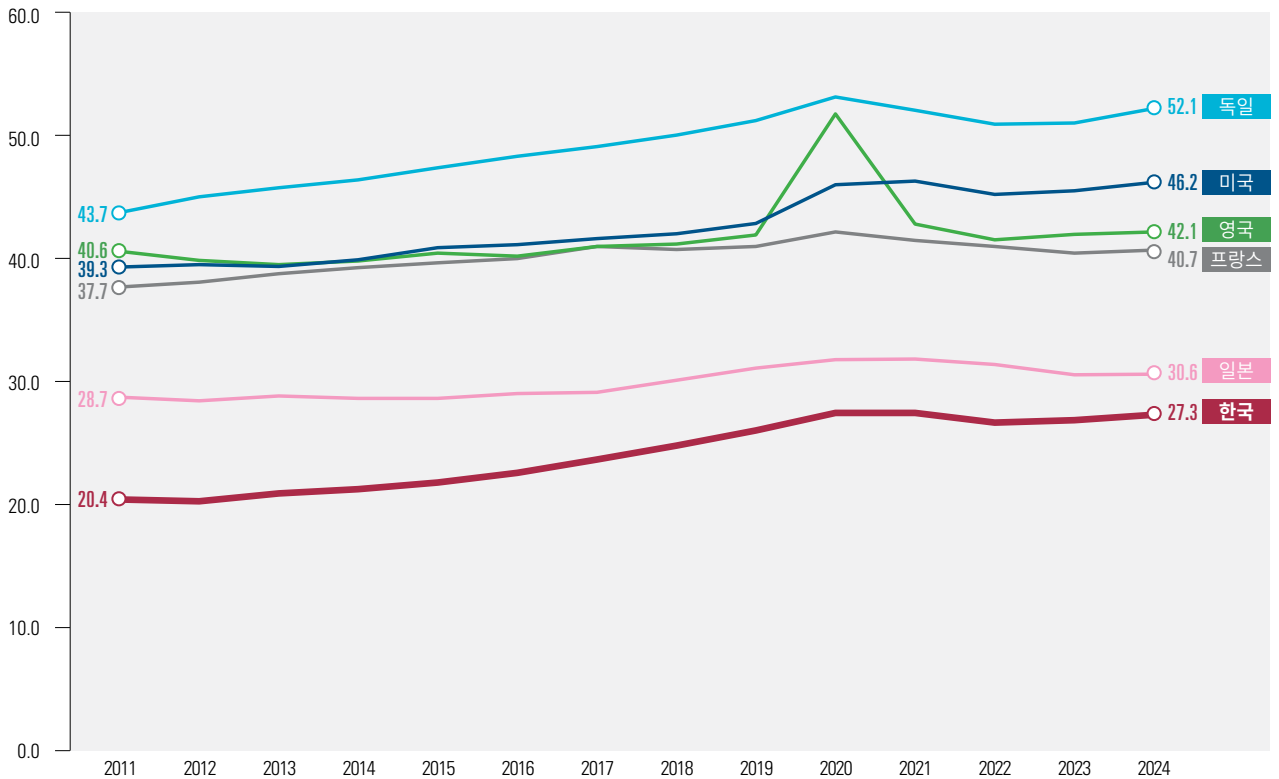
2024년 농림어업직과 판매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각각 76.3%와 81.2%로 2011년 대비 하락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같은 해 기능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99.1%로 상승하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다. 조작·조립직의 경우 90.8%로 큰 변동이 없다. 임금이 높은 편인 사무직과 전문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2011년 117.7%와 129.7%에서 2024년 114.4%와 122.6%로 조금 낮아졌다. 30대는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30대의 상대적 임금 수준 하락은 전문직과 사무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주요국의 연 임금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



OECD 주요국별 시간당 임금, 2011~2024

(단위: USD)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19. 인출)

주1 : 연간 임금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2024년 불변가격, 구매력(PPP) 기준

주2 : 영국의 2020년 시간당 임금이 급등한 데는 당해 연간 근로시간이 급감한 영향(2019년 1,509시간, 2020년 1,207시간, 2021년 1,486시간)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연간 근로시간이 100시간 이상 줄었으나 연간 임금도 크게 감소하여 시간당 임금이 급등하지 않음

누어 시간당 임금(2024년 불변가격, PPP)을 계산해 보면, 2011년에는 독일(43.7달러), 영국(40.6달러), 미국(39.3달러), 프랑스(37.7달러)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24년에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들 국가 중 독일과 미국은 2011년에서 2024년 사이 시간당 임금이 각각 19.3%와 17.5% 상승하여 2024년에는 각각 52.1달러와 46.2달러에 달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7.9%와 3.8%에 불과해 2024년 시간당 임금은 40.7달러와 42.1달러에 머물렀다. 한국과 일본의 시간당 임금은 2011년 20.4달러와 28.7달러였으나 이후 각각 33.9%와 6.5% 상승하면서 2024년에는 격차가 줄어든 27.3달러와 30.6달러가 되었다. 한국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연간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4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미국(1,796시간)과 일본(1,617시간)보다 길고 영국(1,512시간), 프랑스(1,491시간), 독일(1,331시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25년 실업률은 2.8%로 낮게 유지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상승 지속 (☞ 관련 지표 8.5.2)

실업률은 공급된 노동력의 저활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취업 희망자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업률은 노동시장 상황이 좋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상승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는 고용률도 함께 살펴본다.

한국의 2025년 실업률은 전년도에 이어 2.8%로 집계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2022년부터 2%대로 하락한 후 2025년까지 2.7~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도 2022~2025년 기간 동안 62.1~62.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4~2021년 기간의 60%대와 비교해 1%p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고용률 수준을 고려할 때, 최근의 낮은 실업률은 양호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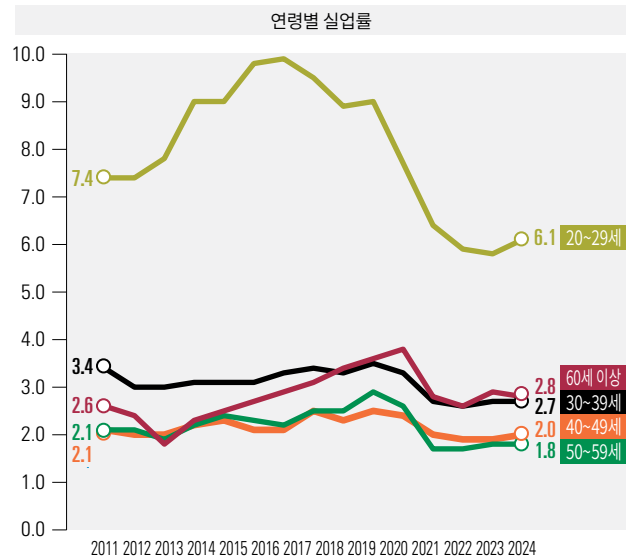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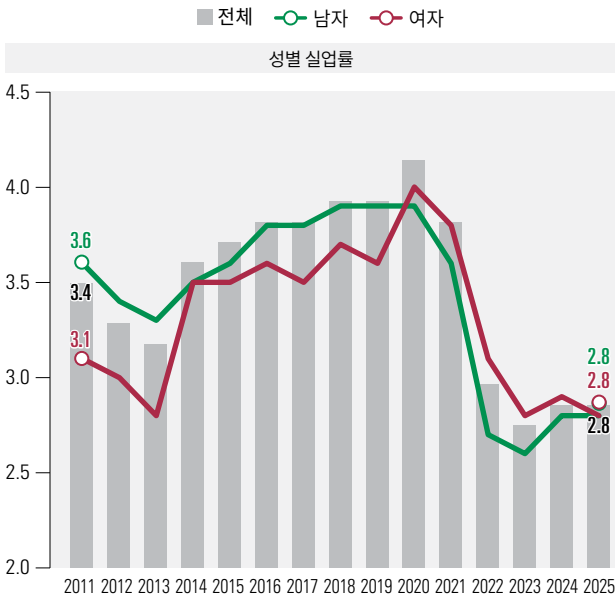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2020년에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을 0.1%p 앞서 역전한 뒤 2022년에 격차가 0.4%p까지 커졌고 이후 감소되면서 2025년에는 남녀 실업률이 같아졌다. 여성 실업률의 상승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하려는 여성이 늘어나면

서 생긴 현상이다. 이는 최근 남성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여성 고용률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고용률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69.8~71.5% 수준을 맴돌고 있지만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0.7%에서 55.3%로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5년 6.1%를 기록한 20대 실업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201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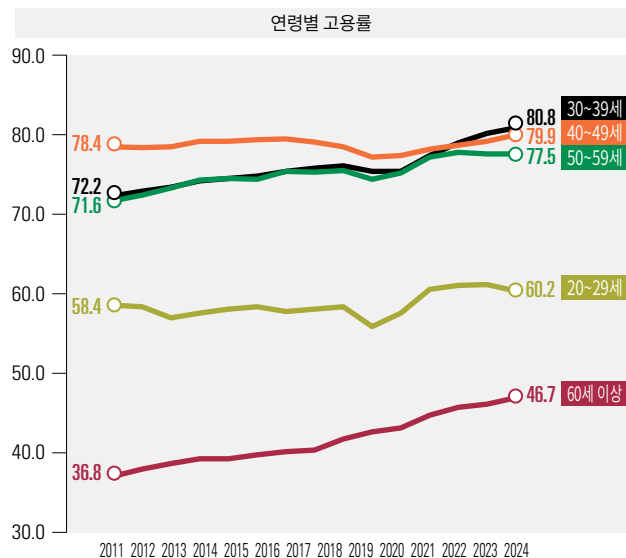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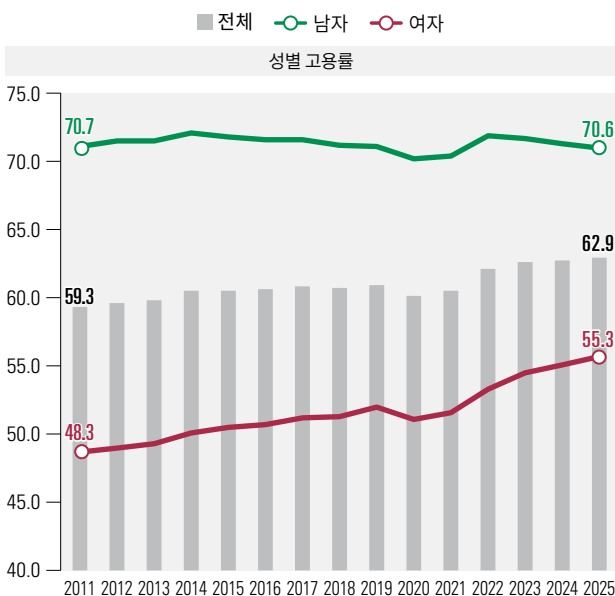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6.1.31. 인출)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 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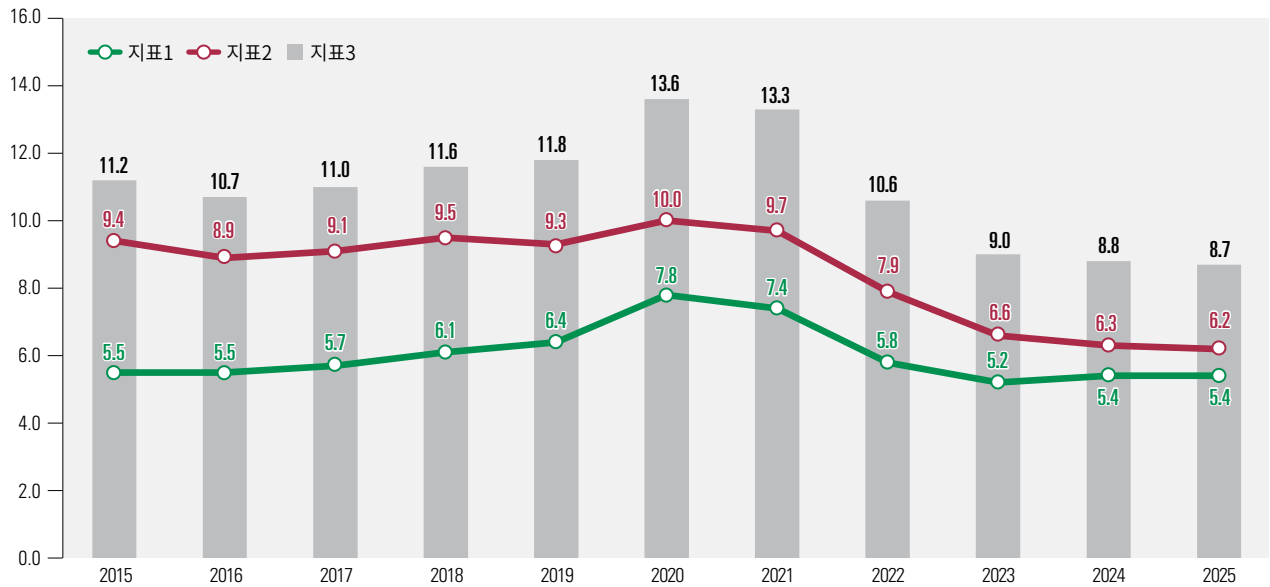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실업률 보조지표, 2015~2025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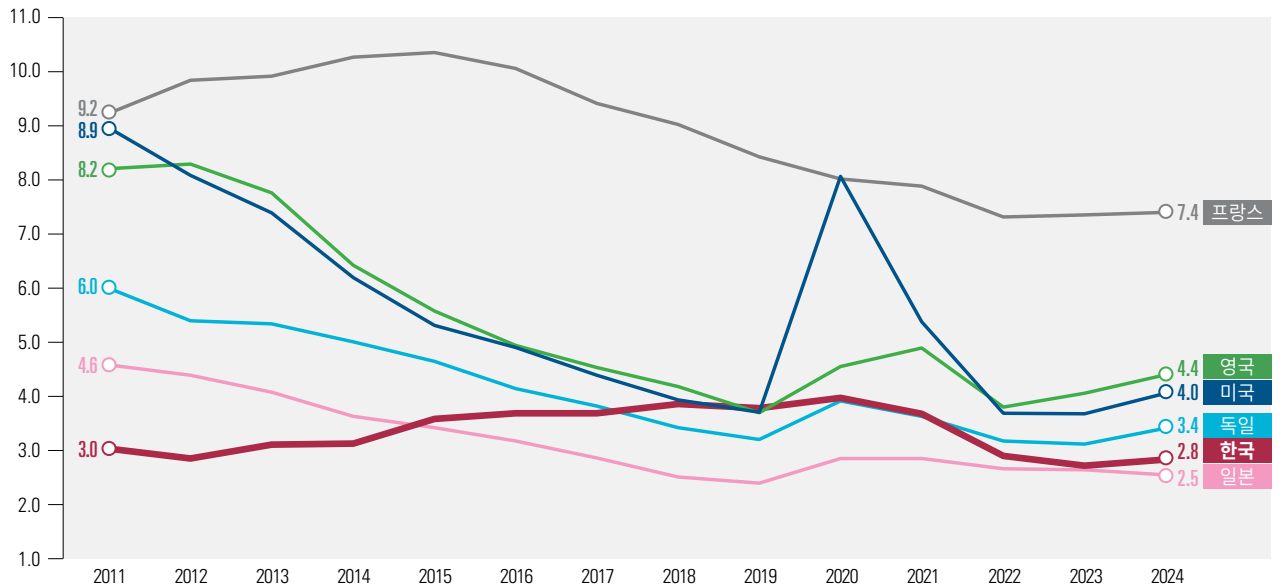
주 :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OECD 주요국별 실업률, 2011~2024

(단위: %)



출처: ILO,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5.9.19. 인출)

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2.9%p 줄어들어 하락세도 뚜렷하다. 20대의 경우 최근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다.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팬데믹 시기에도 꺾이지 않고 2011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0.8%p 상승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실업률과 고용률 외에 실업률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실업자에 추가한 실업률 보조지표1과, 구직활동을 하지만 당장 일할 수 없는 자나 구직활동

을 하지 않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자를 실업자에 추가한 보조지표2 모두 빠르게 하락하였다. 보조지표1은 2020년 7.8%에서 2025년 5.4%로, 보조지표2는 같은 기간 10.0%에서 6.2%로 낮아졌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한국(2.8%)의 실업률은 프랑스(7.4%), 영국(4.4%), 미국(4.0%), 독일(3.4%)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일본(2.5%)의 경우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주요국의 실업률은 대체로 201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급등한 뒤 그 이후 안정되면서 최근 다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한 것은 고용 유지 지원에 힘썼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제한된 영역에 종사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사고성 사망률은 감소하나 취약부문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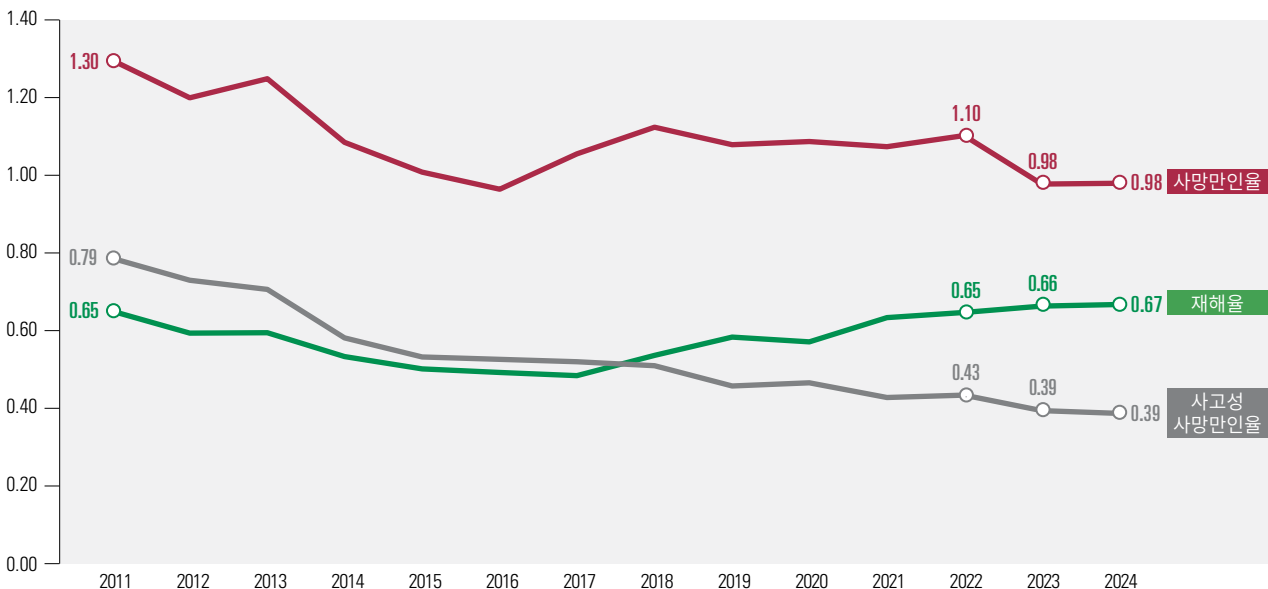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해율은 2017년 0.48%까지 감소한 뒤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1월에 보험가입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주의 승인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고, 7월에는 추정 원칙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일부 산재에 대해 사업장 신고 확인 없이 산재가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적용 직종이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다. 2021년 7월에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낮은 가입률의 원인이 되었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7월에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면서 적용 대상 직종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포함하여 통계 집계 대상이 늘어나면서 재해율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0.67%를 기록하였다.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024년 0.98‰로 최근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년 0.79‰에서 2024년 0.3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48‰에 이르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

근로자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2011~202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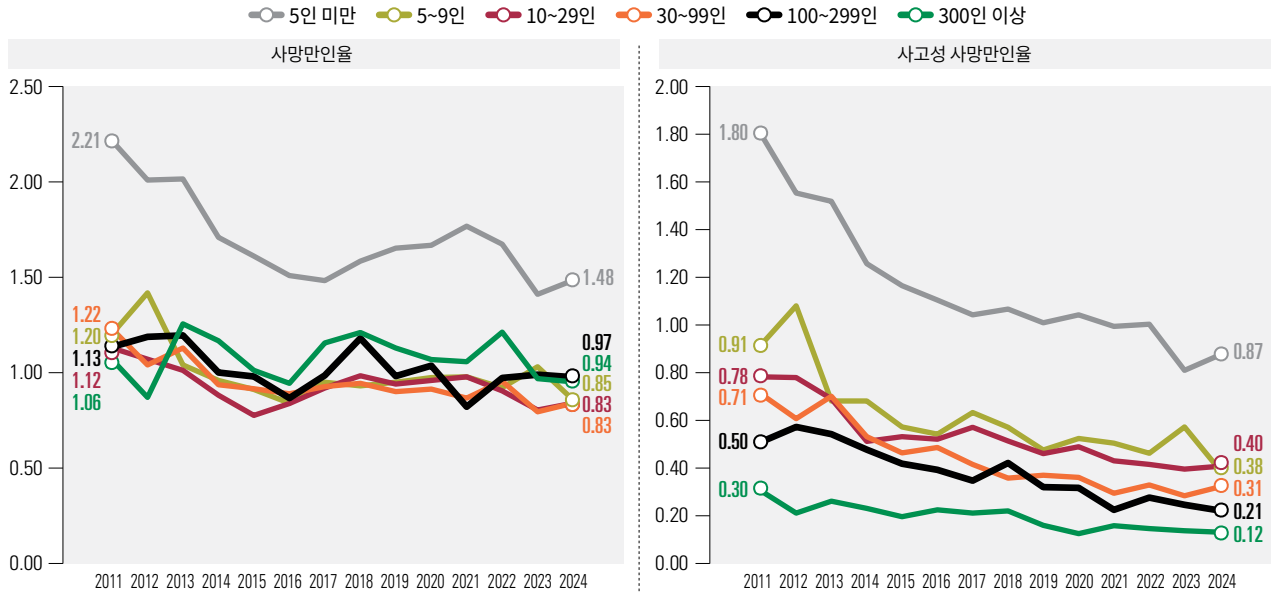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 2025.10.20. 인출)

주 : 2012년부터 사고 사망자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는 제외(단,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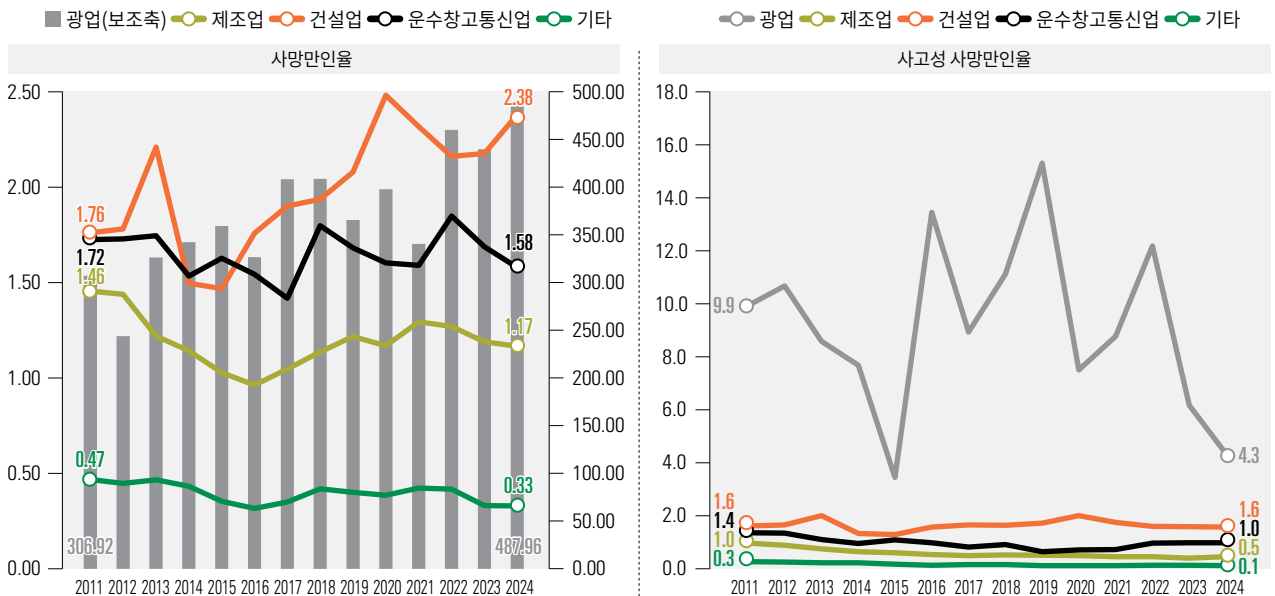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 2025.10.20. 인출)

업종별 사망만인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201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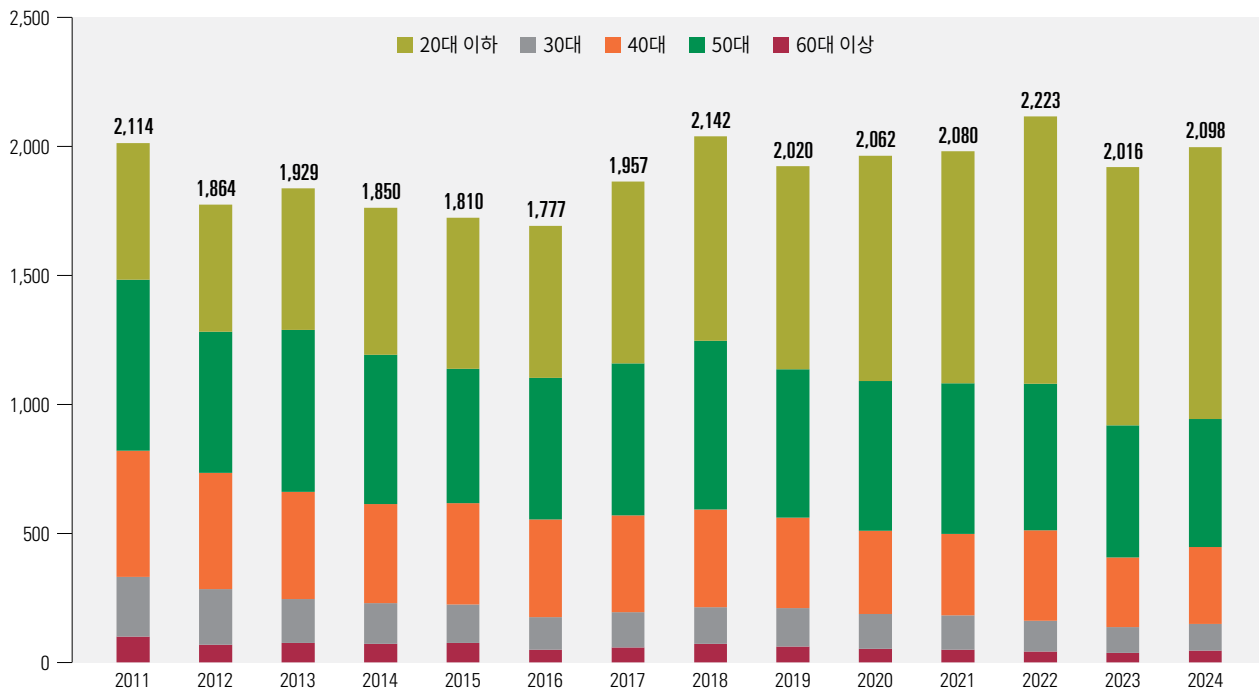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 2025.10.20. 인출)

는 1‰ 미만에 그친다. 사고성 사망만인율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0.87‰에 달하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는 0.4‰ 이하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2024년 기준 광업의 사망만인율이 487.96‰로 압도적으로 높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다른 업종의 사망만인율은 3‰ 미만에 그친다. 광업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2024년 동안 3.4~15.3‰ 사이에서 크게 등락하였는데, 2024년에는 4.3‰로 타 업종(2‰ 미만)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었다.

연령별 재해 사망자 수,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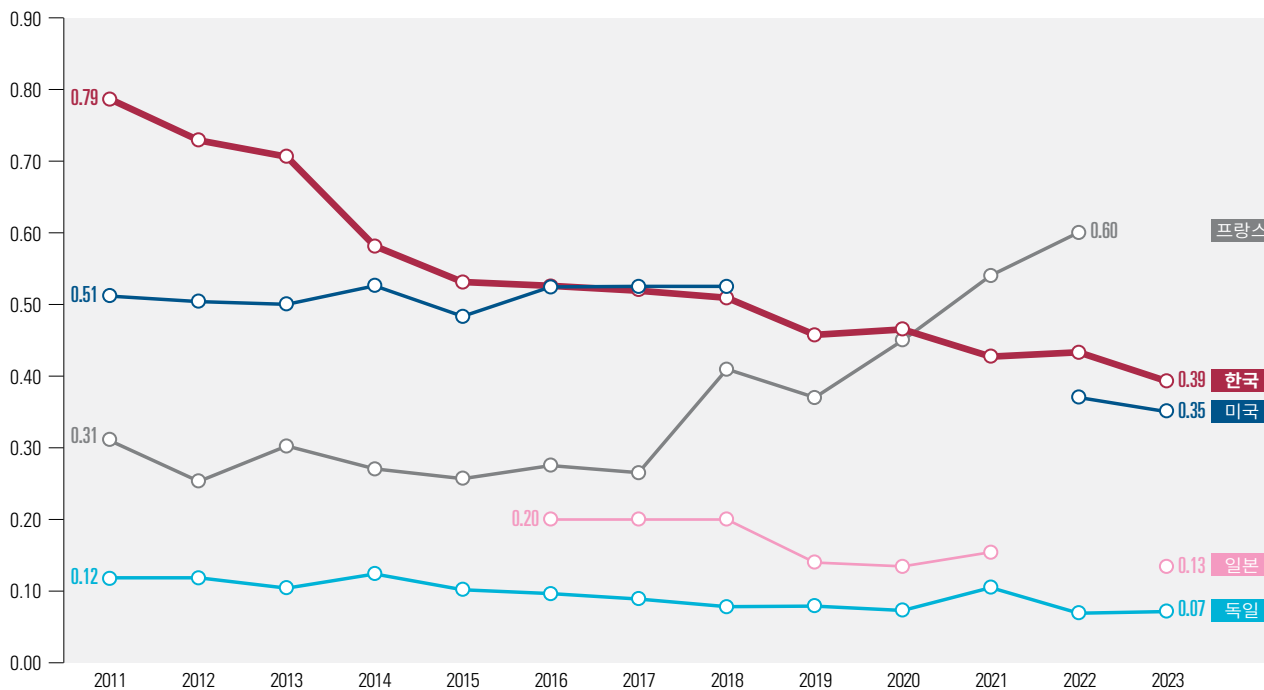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https://kosis.kr>, 2026.2.12. 인출)

OECD 주요국별 중대 재해 만인율, 2011~2023

(단위: ‰)



출처: ILO,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5.9.19. 인출)

주 : 국가별로 자료가 다르다. 한국·프랑스·독일은 산재보상 기록, 2020년 이후 일본은 감독 기록, 미국과 2019년 이전 일본은 조사 결과임

광업 사망자의 대부분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이고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5% 미만이다.

최근 산업재해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고

령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재해자와 재해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2024년 전체 재해자 14만 2,77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5만 4,573명으로 38.2%에 달한다.



재해 사망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2024년 전체 재해사망자 2,098명의 절반이 넘는 1,107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른 한국의 중대재해 만인율은 2011년 0.79‰로 집계되어 미국(0.51‰), 프랑스(0.31‰), 독일(0.12‰)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23년에는 0.39‰에 그친다. 이는 같은 기간 오히려 증가한 프랑스(0.60‰, 2022년)보다 낮고 미국(0.3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0.07‰)이나 일본(0.13‰)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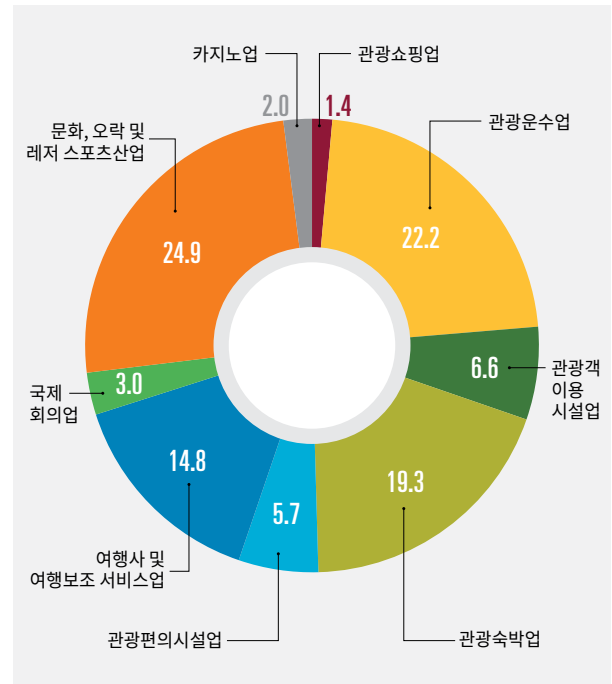
관광산업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아직 회복 중 (● 관련 지표 8.9.2)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은 지역의 자연자산이나 문화자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관광이 창출하는 고용과 소득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 환경, 사회, 경제를 잇는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SDG 8.9.2 지표인 관광산업 종사자 수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상품을 진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핵심관광산업의 종사자 수는 2024년 기준 44만 9,272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총 87

세부업종별 관광산업 종사자 비율, 2024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https://know.tour.go.kr>, 2026.2.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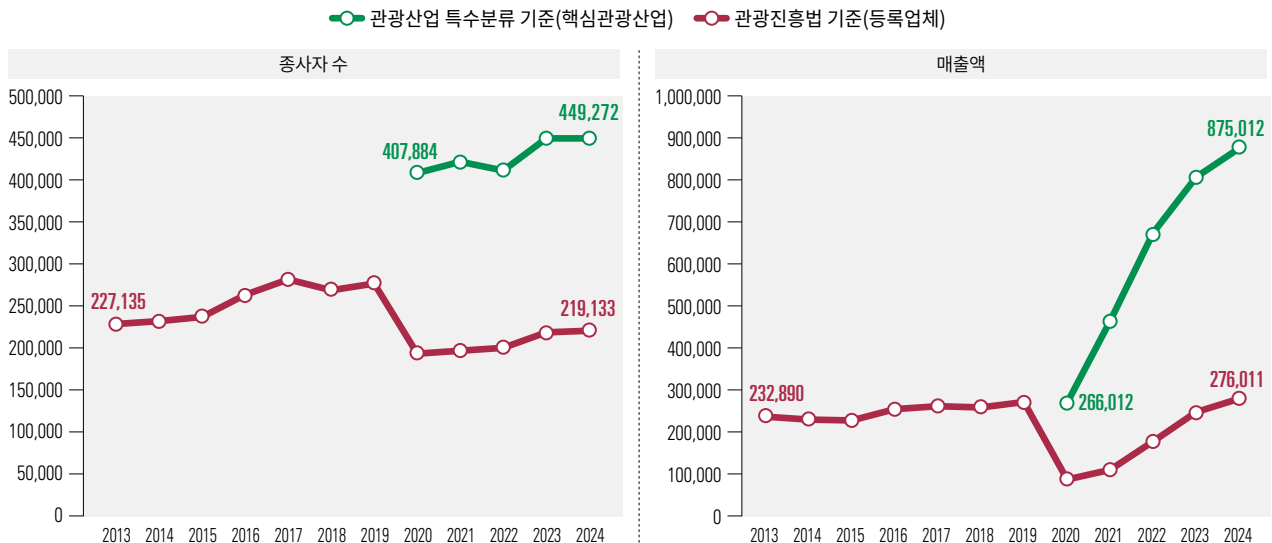
주: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핵심관광산업 기준

조 5,012억 원으로 집계된다. 관광산업 종사자는 그중 문화·오락·레저스포츠 산업(24.9%), 관광운수업(22.2%), 관광숙박업(19.3%),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14.8%)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집계된 관광산업 특수분류 통계 대신 관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2013~2024

(단위: 명, 억 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https://know.tour.go.kr>, 2026.2.3. 인출)

주1: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핵심관광산업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신고·지정 사업체 기준

광진흥법 기준 통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69.5%로 급락하였고, 같은 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6%로 급락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종사자 수와 매출액 모두 회복하고 있지만 그 양상은 조금 다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며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여전히 2019년의 79.5% 수준에 그친다.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잠재취업가능자**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확장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1**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보조지표2**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보조지표3**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재해율** : $(\text{재해자 수} \div \text{근로자 수}) \times 100$
- **사망만인율** : $(\text{사망자 수} \div \text{근로자 수}) \times 10,000$
- **사고성 사망만인율** : $(\text{사고성 사망자 수} \div \text{근로자 수}) \times 10,000$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 9번 목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회복력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지구적으로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의 고용은 오히려 소폭 줄어들었다. 팬데믹, 공급망 이슈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 각국 산업의 역량과 회복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조업 고용 비율은 최근 계속 줄고 있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는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여성 연구원, 소규모 제조업 등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혁신과 산업 환경이 요구된다. 도로에 집중된 운송 인프라의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25년 15.2%에 그치며 2015년 17.6%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2025년 9.5%)은 더 급속히 감소**

-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13.0%)보다 높은 편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제조업 고용 비율과 OECD 순위가 모두 하락하여 산업 전환 시대의 고용 변화에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 **2023년 제조업 총매출액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은 각각 32.1%와 8.6%의 비중을 차지하며, 두 수치 모두 최근 감소세**

-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평균 고용 20명 미만)의 비중도 2022년 7.9%로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OECD 22개국 중 15위에 불과

»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인 수준 유지**

- 2023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위 수준이며, 같은 해 인구 대비 상근상당 연구원 수(인구 1,000 명당 9.5명)는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음
- 재원별로는 민간 부문이 연구개발비의 76.1%, 수행주체별로는 기업체가 79.2%를 담당하며 민간과 산업계에서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상근상당 기준 여성 연구원의 비중도 2011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3년 23.7%에 달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승객 운송량은 2023년 5,278억 명·km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화물 운송량은 2023년 18.9억 톤으로 2018년 20.5억 톤 이후 다소 감소**

- 2023년 승객 운송의 79.8%와 화물 운송의 92.7%가 공로(도로)에 의존하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운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제가 제기됨

제조업 고용 비율 감소세 지속,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고용 정책 필요 (☞ 관련 지표 9.2.2)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제조업은 성장 동력과 혁신의 원천이다.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제조업 고용 비율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도 2015년 17.6%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2025년에도 전년 대비 0.4%p 감소하며 15.2%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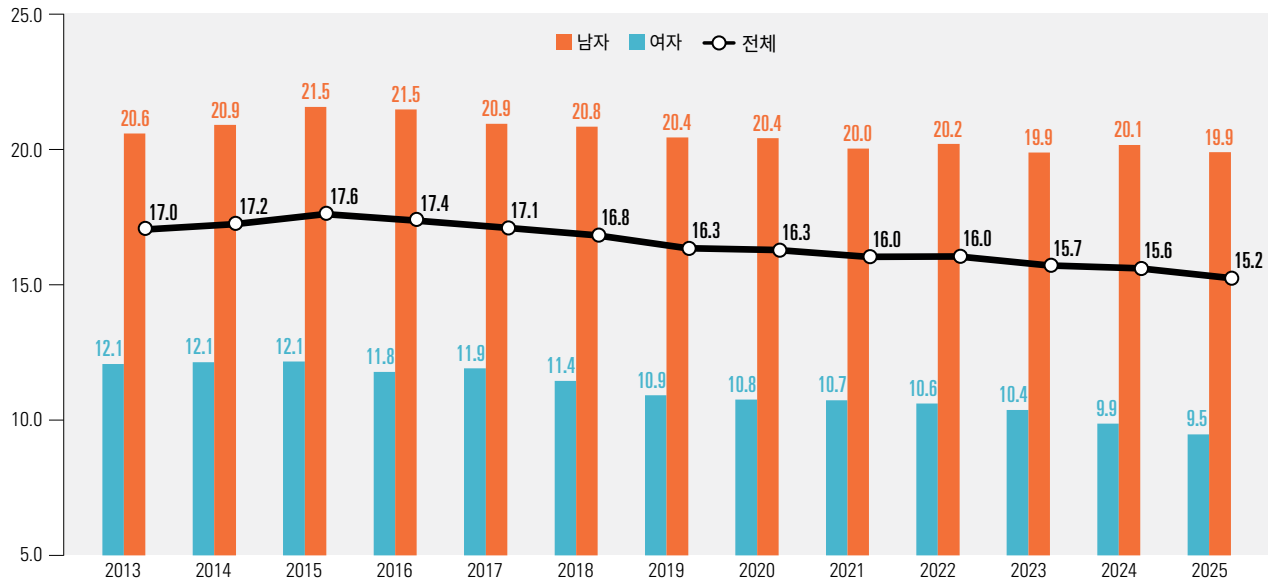
제조업 고용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고 그 변화 추세도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5년 여성 취업자의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9.5%로, 같은 해 남성 취업자의 제조업 고용 비율인 19.9%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15년 12.1%에 달한 후 2025년까지 2.7%p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1.5%에서 1.7%p 감소하였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제조업 고용 비율이 높은 상위 5개국은 체코(25.8%), 슬로베니아(22.6%), 헝가리(20.8%), 폴란드(18.8%), 에스토니아(18.7%) 등 동유럽권



성별 제조업 고용 비율, 2013~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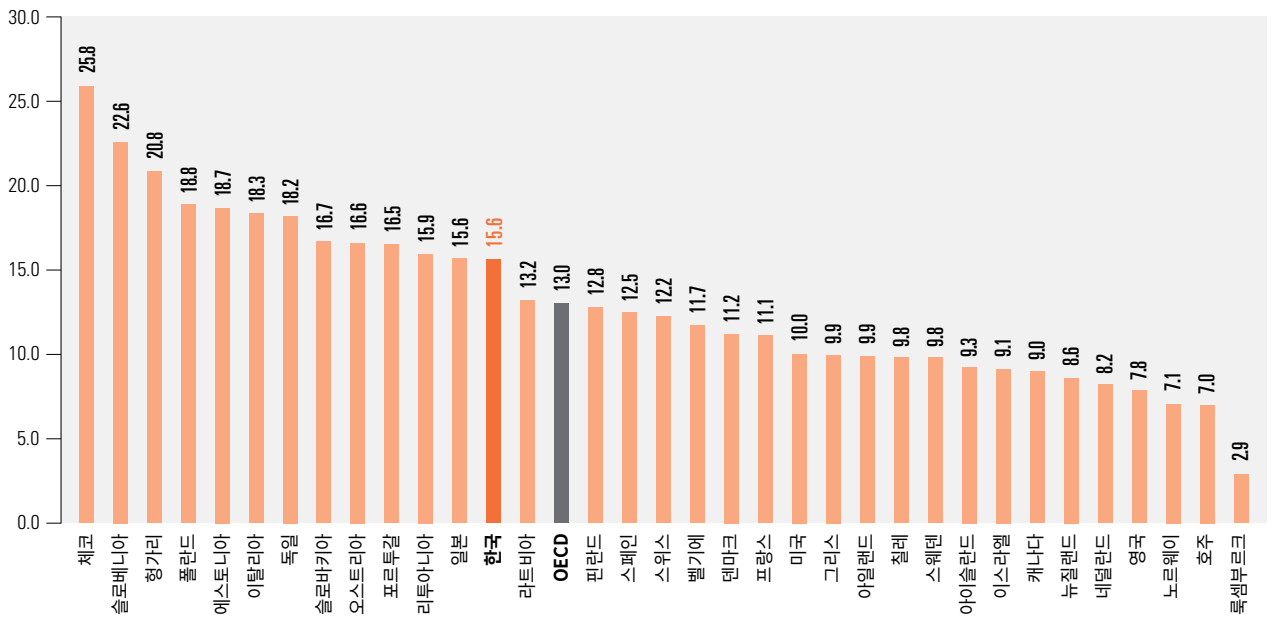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6.1.24. 인출)
주: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율을 나타냄

OECD 국가별 제조업 고용 비율, 2023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18. 인출)
주1: 총고용 중 제조업 고용 비율을 나타냄
주2: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예 4개국은 제외함

국가이다. 2023년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OECD 평균(13.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은 자료가 제공된 34개국 중 일본과 함께 12위로 기록되는데, 이는 전년도 11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이다.

제조업 고용은 학력이나 경력이 낮은 노동자도 장시간 근로를 통해 중상위 노동소득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중산

층 일자리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적인 생산 충격을 인력 감축으로 민감하게 전파하지 않는 완충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길은선, 2021).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급속한 산업 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산업의 고용 변화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이 요구된다.

제조업에서 소규모 산업 비중 감소세

(📌 관련 지표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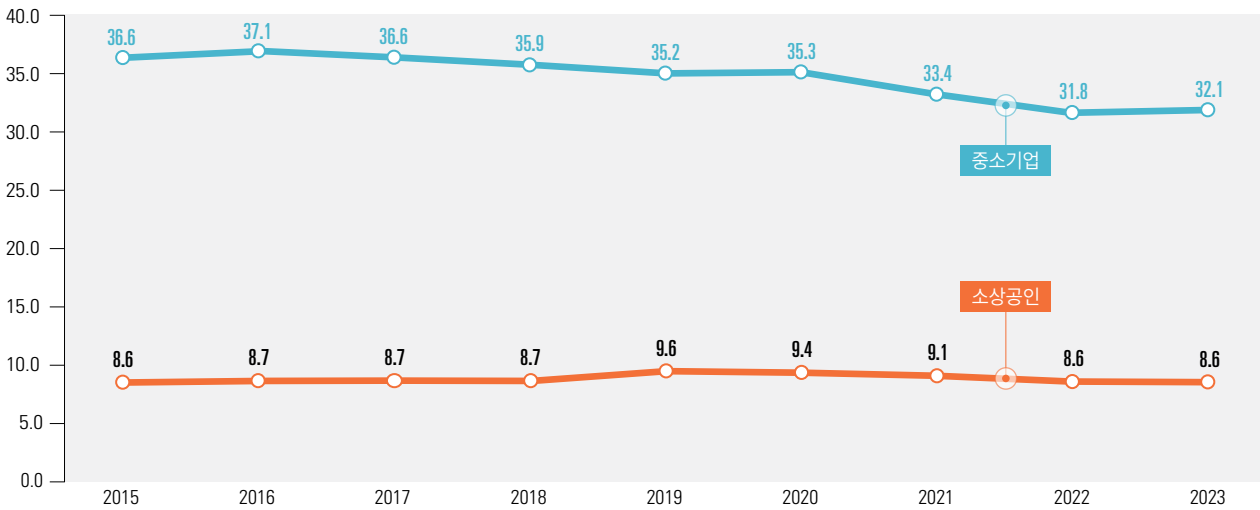
SDG 세부목표 9.3에서는 소규모 산업이 적절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가치사슬과 시장에 편입되도록 지향한다. 소규모 산업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생산 및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도 하며,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SDG 9.3.1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기여도를 측정한다.

제조업 총매출액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각각 32.1%와 8.6%로 집계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15년 36.6%에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 왔고, 소상공인의 매출액 비중은 2019년 9.6%에서 감

제조업 총매출액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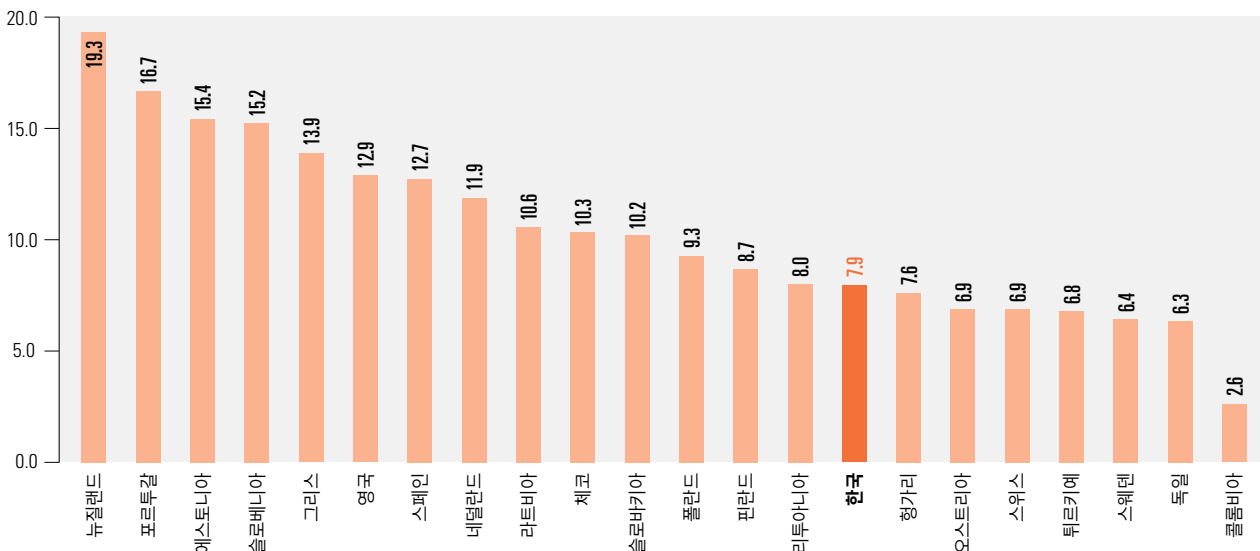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https://kosis.kr>, 2026.1.24. 인출)

OECD 국가별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18. 인출)

주1 : 소규모 산업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른 기준으로, 기준 기간에 평균 20명 미만을 고용한 업체를 말함

주2 : OECD 38개국 중 2022년 자료가 제공되는 22개국을 나타냄



소하고 있다.

한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는 평균 고용이 20명 미만인 업체를 소규모 산업(small-scale industries)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의 비중은 2022년 7.9%로, 2020년 8.9%에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자료가 제공되는 OECD 22개국 중 한국은 15위에 그쳐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편이다. 뉴질랜드(19.3%), 포르투갈(16.7%), 에스토니아(15.4%), 슬로베니아(15.2%) 등에서 소규모 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기반의 공방을 비롯한 다양한 소규모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규모 업체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OECD, 2024). 소규모 산업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체계에 다양성을 높이는 원천이 된다.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소규모 산업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 세계적 수준, 여성 연구원 비중 증가하나 성별 격차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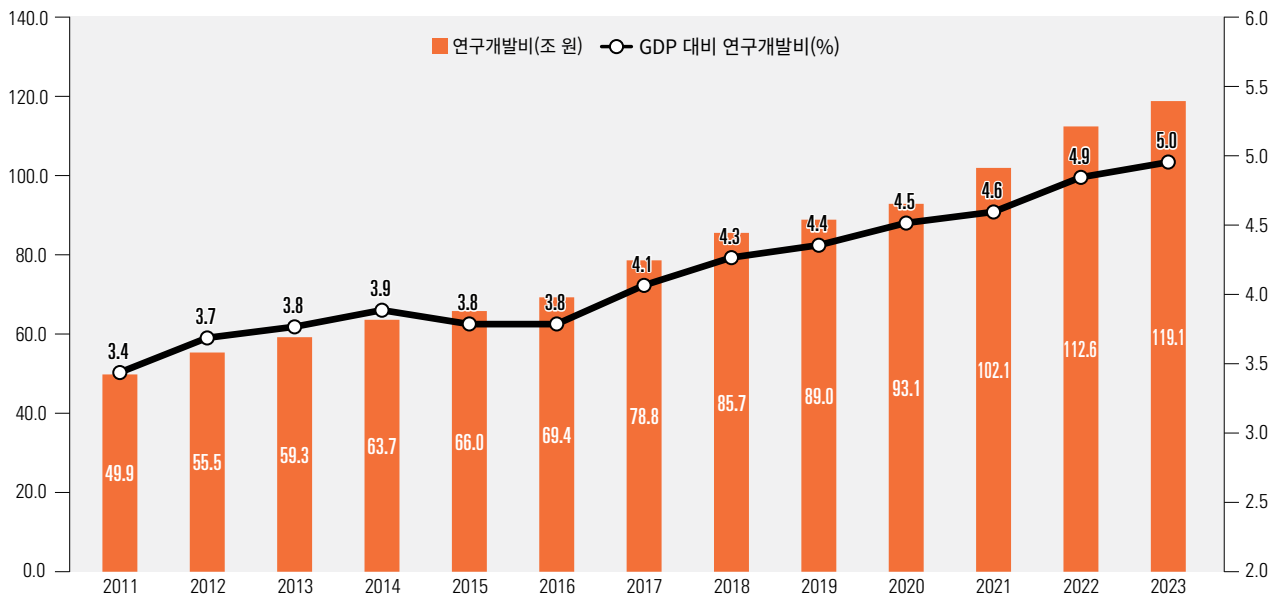
(☞ 관련 지표 9.5.1 / 9.5.2)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는 2023년에도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49.9조 원이었던 한국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3년 119.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5.0%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간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가 뚜렷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비교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자료가 제공된 34개국 중 이스라엘(6.3%)에 이은 두 번째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3위인 스웨덴(3.6%)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는 그 재원에 따라 민간 부문 76.1%, 정부와 공공부문 23.6%, 그 외 외국 부문 0.3%로 구성된다. 연구개발비에 민간 부문의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행주체별로는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순서로 연구개발 수행 비중이 크다. 2023년 기준으로 기업체가 연구개발비 지출의 79.2%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11.7%와 9.1%를 수행한다. 기업체의 수행 비중은 2011년 76.5%에서 더 늘어났지만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2011년에 비

연구개발비 총액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11~2023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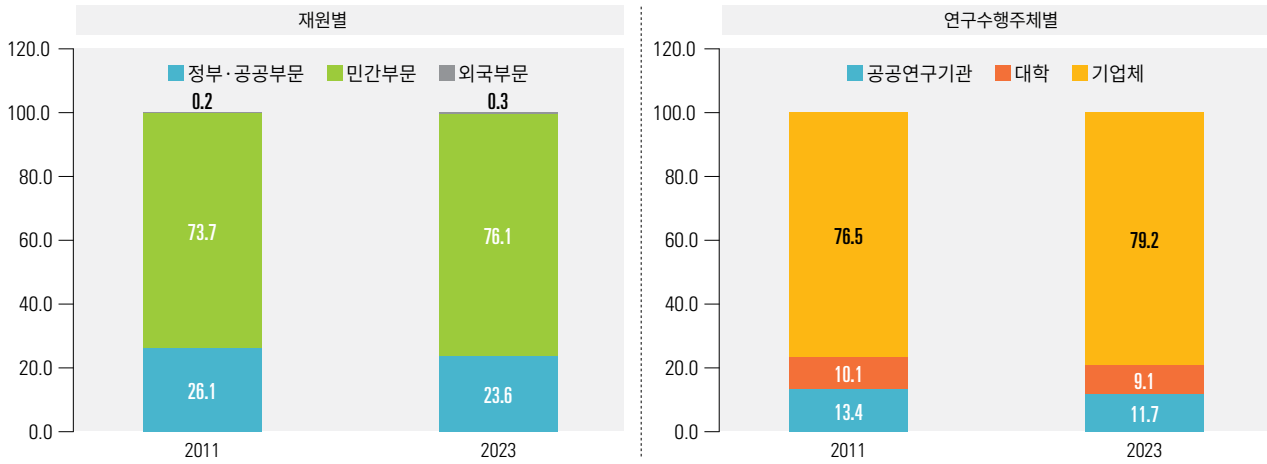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5.8.27. 인출)

주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됨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은 기존 수치와 다름

재원별 및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율, 2011,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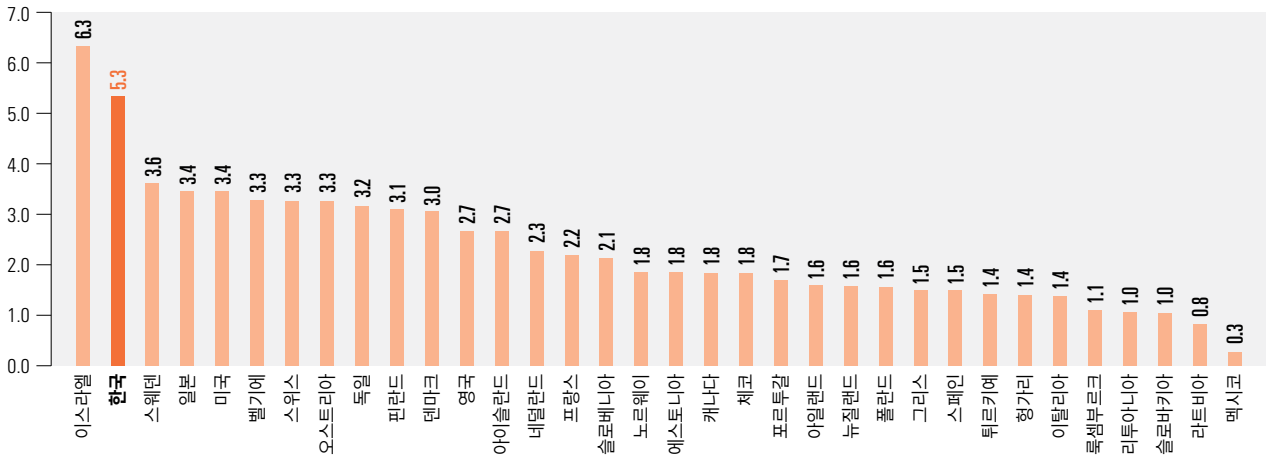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5.8.27.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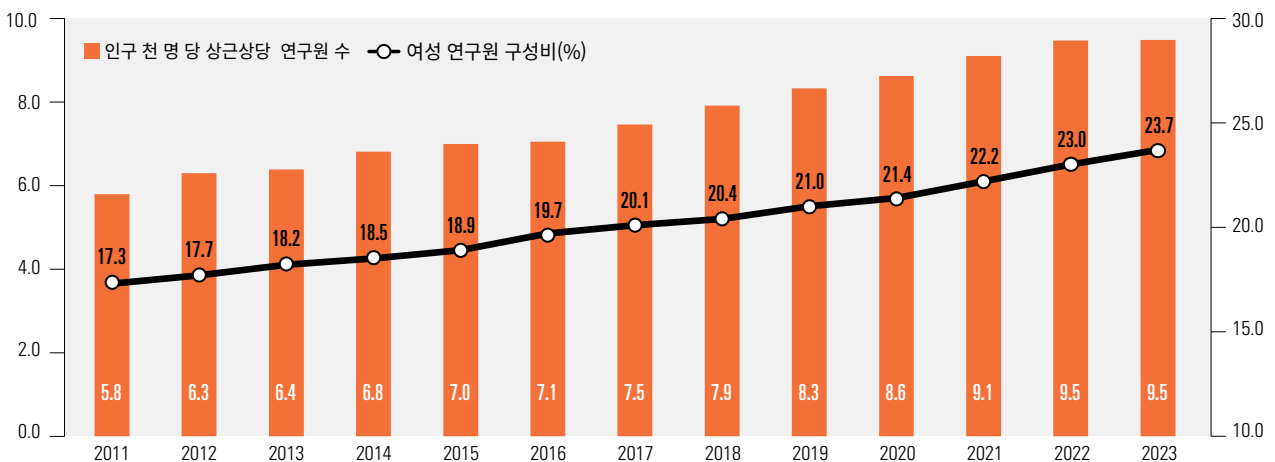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24.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제외함

연구개발 인력 밀도와 여성 비율, 2011~2023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해 줄어들었다.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산업계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는 연구인력이 실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근무시간을 상근(full-time)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한국의 상근상당(Full-Time Equivalent, FTE) 연구원 수는 2011년 인구 1,000명당 5.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3년에는 전년과 같이 9.5명을 유지하였다. 괄목할 만한 점은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원의 비율이 뚜렷이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상근상당 기준으로 여성 연구원 비율은 2011년 17.3%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3.7%를 기록하였다. 여성 연구원이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완화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여전히 전체의 1/4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인력 규모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연구인력 밀도는 자료가 제공된 OECD 30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8.9명), 덴마크(8.8명), 핀란드(8.3명), 노르웨이(7.5명)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적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2024년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4.8% 감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된 바 있어, 연구개발 예산의 변동이 국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연구인력과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승객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도로에 집중된 운송 환경에 지속가능성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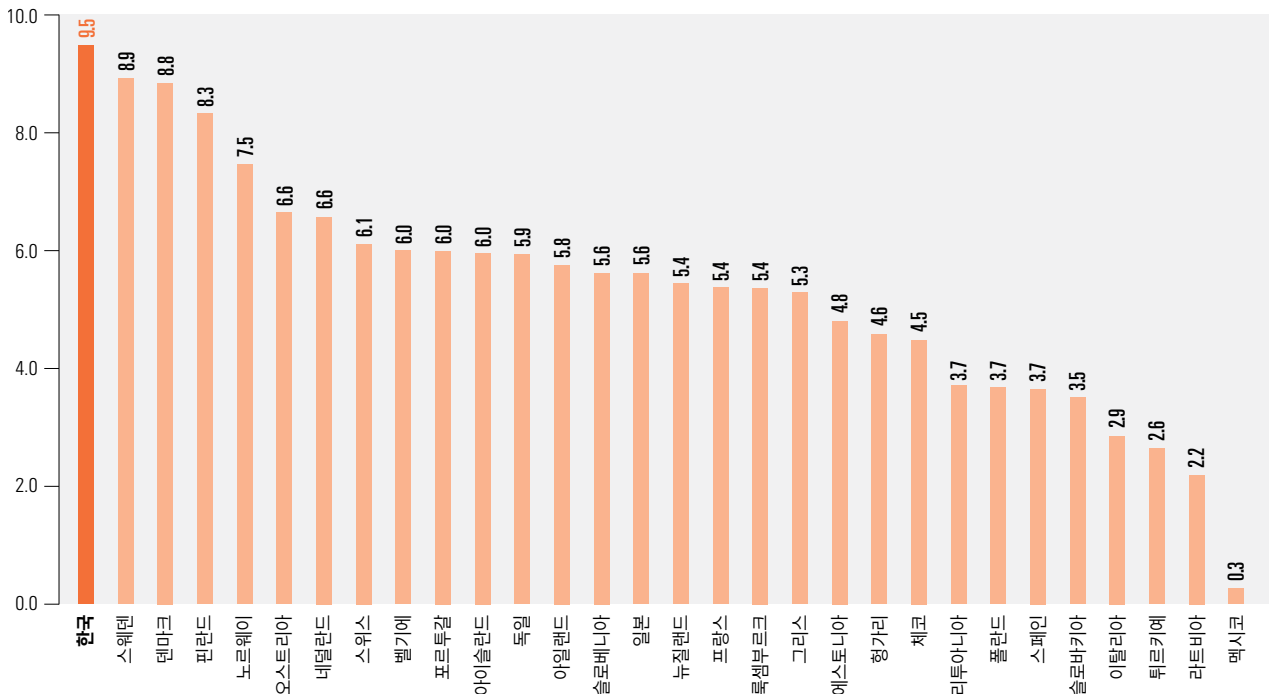
(📌 관련 지표 9.1.2)

승객 수에 운송 거리를 곱하여 산출한 승객 운송량은 2011년 4,163억 명-km에서 계속 증가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감한 뒤 회복하여 2023년에는 5,278억 명-km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운송 수단별로는 공로(公路)를 통한 승객 운송이 2023년 기준 4,213억 명-km로 79.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철도(539억 명-km, 10.2%), 지하철(396억 명-km, 7.5%), 항공(122억 명-km, 2.3%), 해운(8억 명-km, 0.2%) 등의 순이다.

화물 운송량은 등락이 있으나 2011년 16억 551만 톤에서 2018년 20억 4,720만 톤까지 증가한 후 2023년 18억

OECD 국가별 연구개발 인력 밀도, 2023

(단위: 인구 1,000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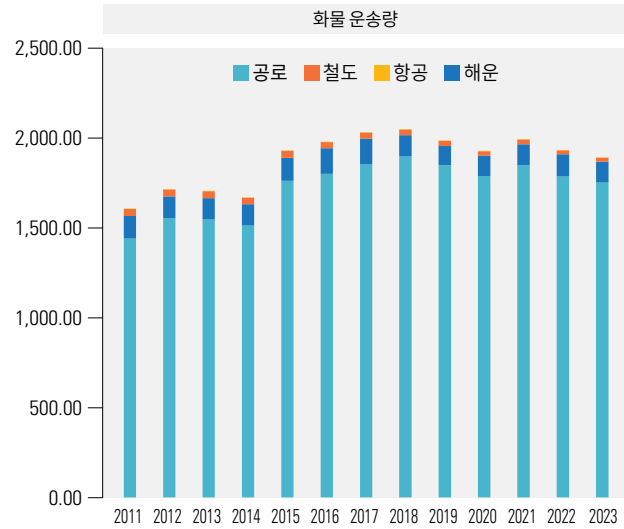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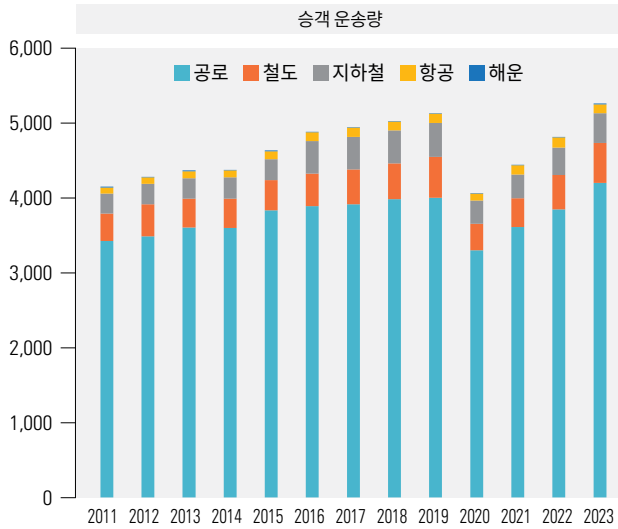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24.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 8개국은 제외함

승객 및 화물 운송량, 2011~2023

(단위: 억 명·km, 100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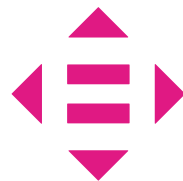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https://kosis.kr>, 2025.8.29. 인출)

8,863만 톤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도 승객 운송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화물 운송에서는 도로(公路)를 통한 이동이 더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3년 기준 17억 5,167만 톤으로 무려 92.7%에 달한다. 그다음으로 해운(1억 1,550만 톤, 6.1%), 철도(2,126만 톤, 1.1%), 항공(21만 톤, 0.0%) 등의 순이다.

한국은 승객과 화물 운송 모두 도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도로를 제외하면 승객 운송에서 철도와 지하철, 화물 운송에서 해운만이 5% 이상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운송 부담이 도로에 집중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운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 10번 목표에서는 모든 사람과 국가가 공정한 기회와 분배 구조 속에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 이후 하위 40%의 소득 및 소비 증가율은 국가 평균을 웃돌았으나 노동소득 분배율의 정체, 차별의 심화, 난민의 급증, 개발원조의 불확실성 등으로 불평등 완화는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에서 소득 하위계층의 빠른 성장이 엿보이고 노동소득 비율과 금융건전성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만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뚜렷이 드러난다.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호와 포용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 소득 하위계층의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이 빠르게 성장하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 뚜렷

- 2016~2024년 기간에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13.1% 증가하였고 소득 1, 2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각각 28.3%와 16.1% 증가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
-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줄고 이전소득에 의존하며, 2024년에 소득 5분위의 근로소득(69.2%)과 재산소득(10.0%)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 대비 가장 높음
- 2019~2024년 기간에 전체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2.5%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11.2% 증가해, 1분위 가구에서 소비지출이 월등히 높게 성장
-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와 기타 지출 비중이 뚜렷이 증가하고 역량개발과 여가·서비스 소비가 커지는 소비 구조의 격차 뚜렷

»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21~2024년 기간 58~59%대로 안정적 유지

- 2024년 OECD 평균(55.0%)을 상회하여 중상위권에 위치

» 금융건전성을 나타내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산 비율은 2011년 11.1%에서 2020~23년 14%대로 상승

-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나 국제기준(6.0%) 대비 양호한 수준
- 2023년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6.3%로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은 중하위권

» 난민 신청자 수는 2014년 2,896명에서 2024년 1만 8,336명으로 증가

- 2024년까지 누적 심사완료 건 대비 난민 인정자 비율은 2.7% 수준이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더한 난민 보호율은 7.4%
- 2024년 심사 완료 건에 대한 난민 보호율은 3.6% 수준

2016~2024년 소득 하위 40%의 가구소득 성장률이 평균보다 높으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 뚜렷 (◎ 관련 지표 10.1.1)

SDG 10번 목표에서 지향하는 불평등 감소를 위해, 세부목표 10.1에서는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의 소득 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국가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표 10.1.1에서는 가구 지출 또는 소득의 성장률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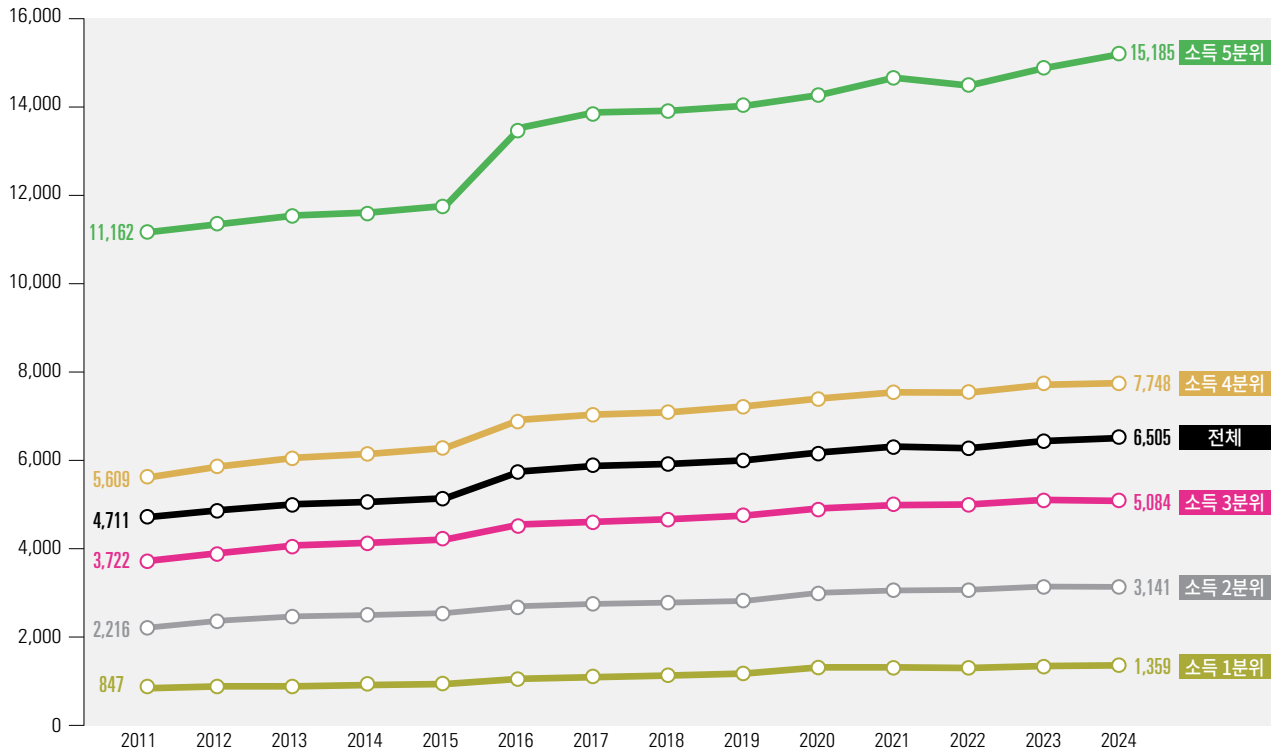
2024년 한국의 가구 실질소득(2020년 기준 가격)은 평균 6,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2016년 대비 13.1% 성장하였다. 2024년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59만 원, 2분위 3,141만 원, 3분위 5,084만 원, 4분위

7,748만 원, 5분위 1억 5,185만 원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소득 성장의 속도가 다른데, 2016년에서 2024년 사이 소득 1, 2분위의 실질소득 성장률은 각각 28.3%와 16.1%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3, 4, 5분위의 실질소득 성장률은 평균을 밑도는 11.7%, 11.9%, 12.3%에 그친다. 이는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득 하위 40%의 소득 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세부목표 10.1이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구현된 셈이다. 다만 2024년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 소득 5분위(2.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성장의 세분화된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위별 가구 실질소득, 2011~2024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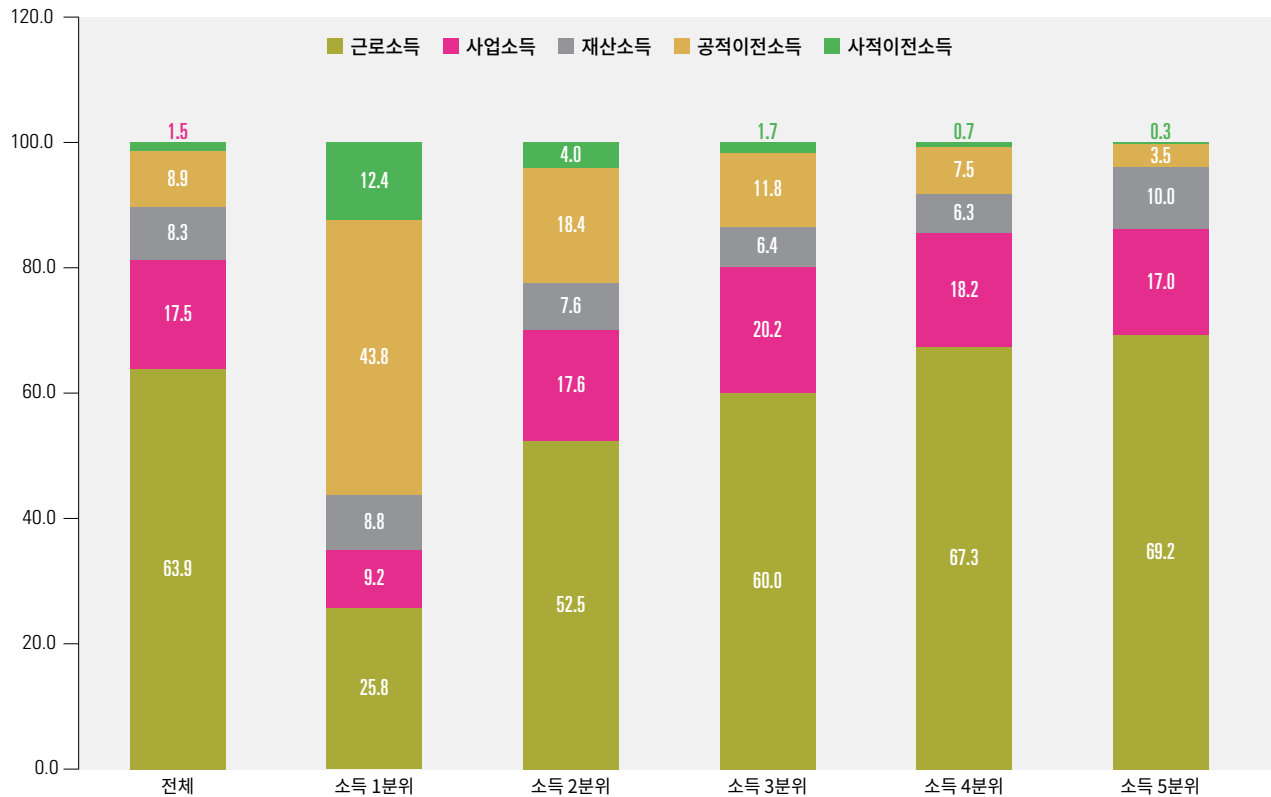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6.1.5. 인출)

주1 : 명목소득에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적용한 실질소득(2020년 기준 가격)임

주2 : 2016년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 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되었으므로 2015년 이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의 소득원천별 비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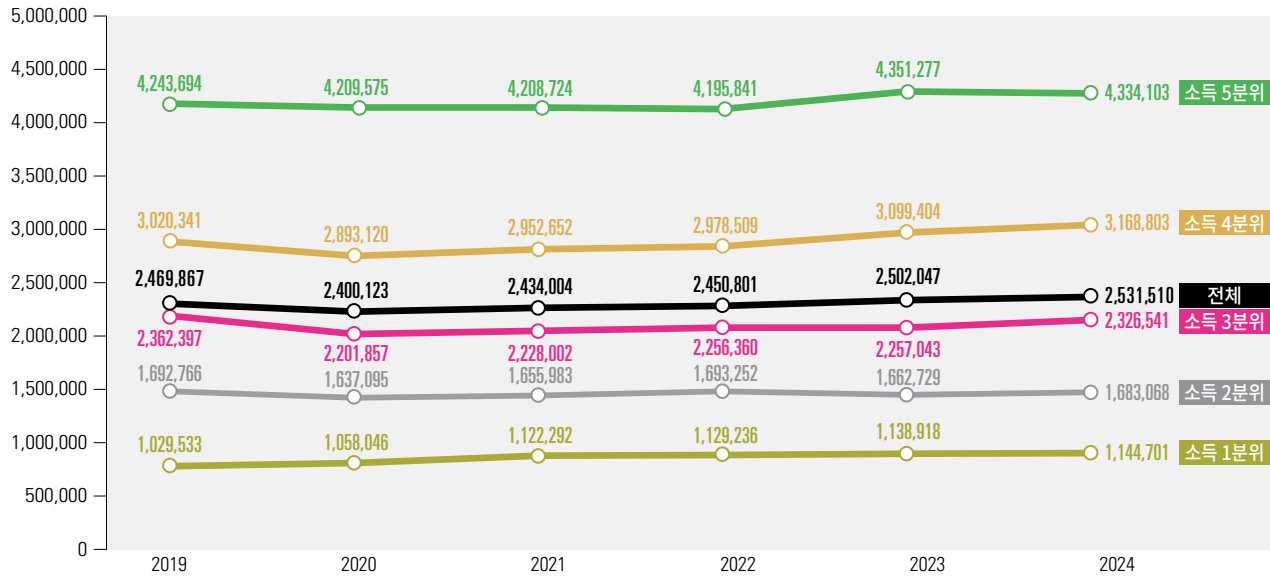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6.1.5. 인출)

소득분위별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 2019-2024

(단위: 원)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https://kosis.kr>, 2026.1.5. 인출)

주 : 실질소비지출은 2020년 기준 가격임

2024년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63.9%, 사업소득 17.5%, 공적이전소득 8.9%, 재산소득 8.3%,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1.5%로 구성된다. 소득 구성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69.2%를 차지하고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은 3.5%와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은 25.8%에 불과하지만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43.8%와 12.4%에 달한다. 사업소득은 2~5분위에서 17~21% 수준이나 1분위에서는 9.2%에 불과하다. 재산소득 비중은 1분위(8.8%)에서 4분위(6.3%)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5분위(10.0%)에서 크게 늘어난다. 고소득층에서 자본 및 자산 기반 소득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시장소득 기반이 견고함을 시사한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2020년 기준 가격)은 2024년 2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2019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114만 원, 2분위 168만 원, 3분위 233만 원, 4분위 317만 원, 5분위 433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소비 여력의 격차를 볼 수 있다. 2019~2024년 기간 동안 실질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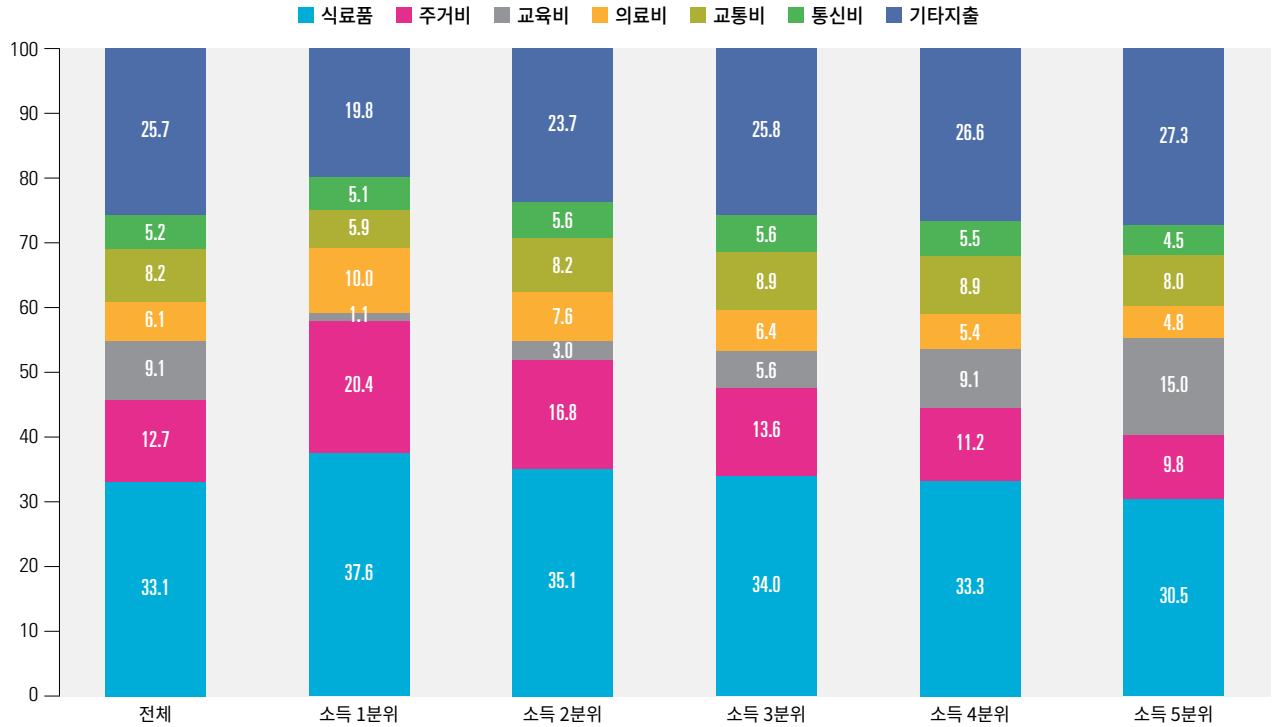
성장률은 소득 1분위에서 11.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같은 기간 2, 3분위는 2020년의 감소 폭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각각 -0.6%, -1.5%로 역성장을 보였다. 4, 5분위는 각각 4.9%와 2.1%의 성장을 나타냈다. 단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은 2020년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2.8%와 6.1% 성장하여 이 두 해 동안 대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2022년 이후로는 1% 미만에 그치며 평균 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다.

소비지출 비목별로는 2024년 기준 식료품비가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지출(25.7%), 주거비(12.7%), 교육비(9.1%), 교통비(8.2%), 의료비(6.1%), 통신비(5.2%) 순이다. 소득 구성과 마찬가지로 소비지출 구성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필수재 중심의 저소득층 소비 구조를 잘 보여 준다. 소득 1분위의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비중은 각각 37.6%, 20.4%, 10.0%에 이르지만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30.5%, 9.8%, 4.8%에 그친다. 물론 절대적인 소비 수준, 즉 지출액은 이들 비목에서도 고소득층이 높다.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로 연간 495만 원을 지출하지만 소득 5분위의 식료품비 지출은 1,731만 원에 이른다. 주거비와 의료비도 소득 1분위는 각각 269만 원과 132만 원을 지출하는 반면 소득 5분위는 각각 557만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의 비목별 비율, 2024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6.1.5. 인출)

원과 274만 원을 지출한다. 한편 교육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소득 1분위에서 교육비 지출은 1.1%로 연간 15만 원에 불과하지만 소득 5분위에서는 전체 소비의 15.0%에 달하는 851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교육 투자 여력의 이러한 차이는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기타 지출 비중도 소득이 높을수록 뚜렷이 늘어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선택재인 여가 및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생계형 필수 지출의 비중이 줄고 그 대신 소비의 다양성과 선택성이 확대되는 소비 구조의 계층 간 격차를 보여 준다.

2021~2024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58~59%대 유지 (● 관련 지표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피고용자의 보수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의 산출이 노동으로 배분되는 분배 구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가구의 소득이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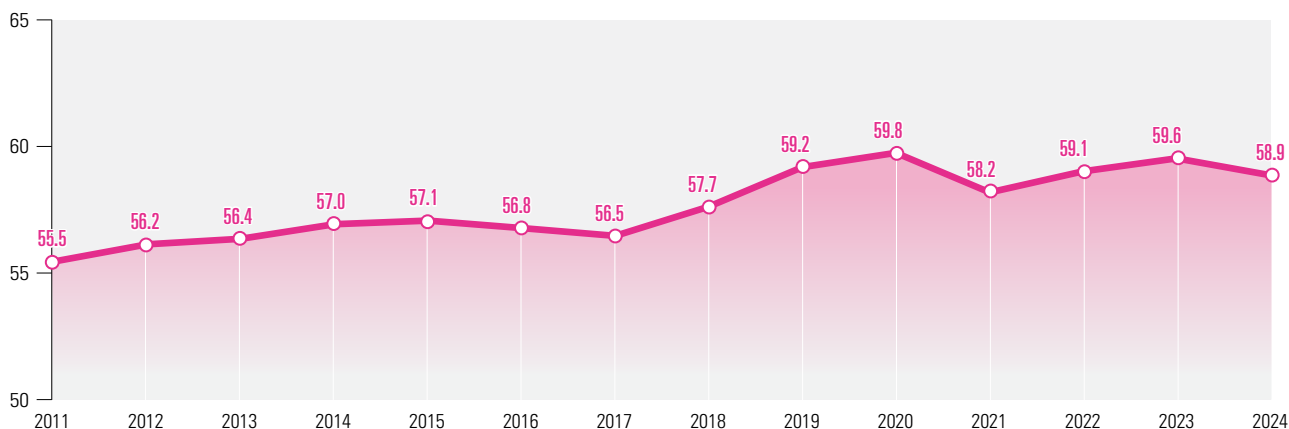
에 의존하므로 노동소득 비중은 국민 다수의 생활 안정성 과도 직결된다. 또한 자본소득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형적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55.5~57.1%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8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59.8%에 달하였고 이후 2021년부터는 줄곧 58~59%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본소득의 감소와 정부의 고용 안정 지원 정책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24년 기준 최저 33.5%(아일랜드)에서 최고 70.2%(스위스) 수준을 나타낸다. 스위스(70.2%), 오스트리아(64.8%), 벨기에와 라트비아(각각 64.0%), 아이슬란드(62.5%) 등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 국가는 노동소득의 몫이 큰 나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아일랜드(33.5%), 튀르키예(35.4%), 멕시코(36.5%) 등 3개국은 40% 미만에 그쳐, 자본소득의 비중이 지배적인 나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2024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8.9%로 OECD 38개국 평균(55.0%)보다 높은 중상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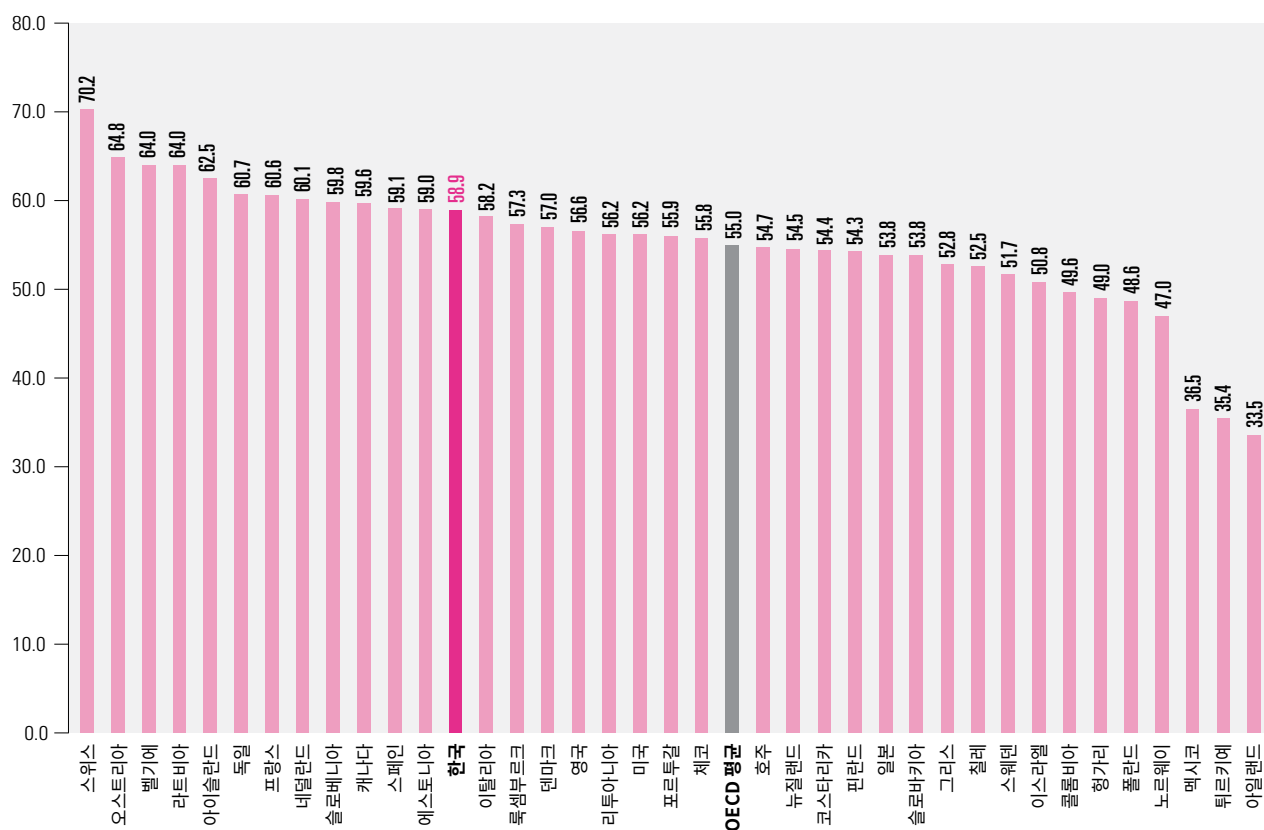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6.2.26.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24

(단위: %)



출처: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6.2.26. 인출)

위권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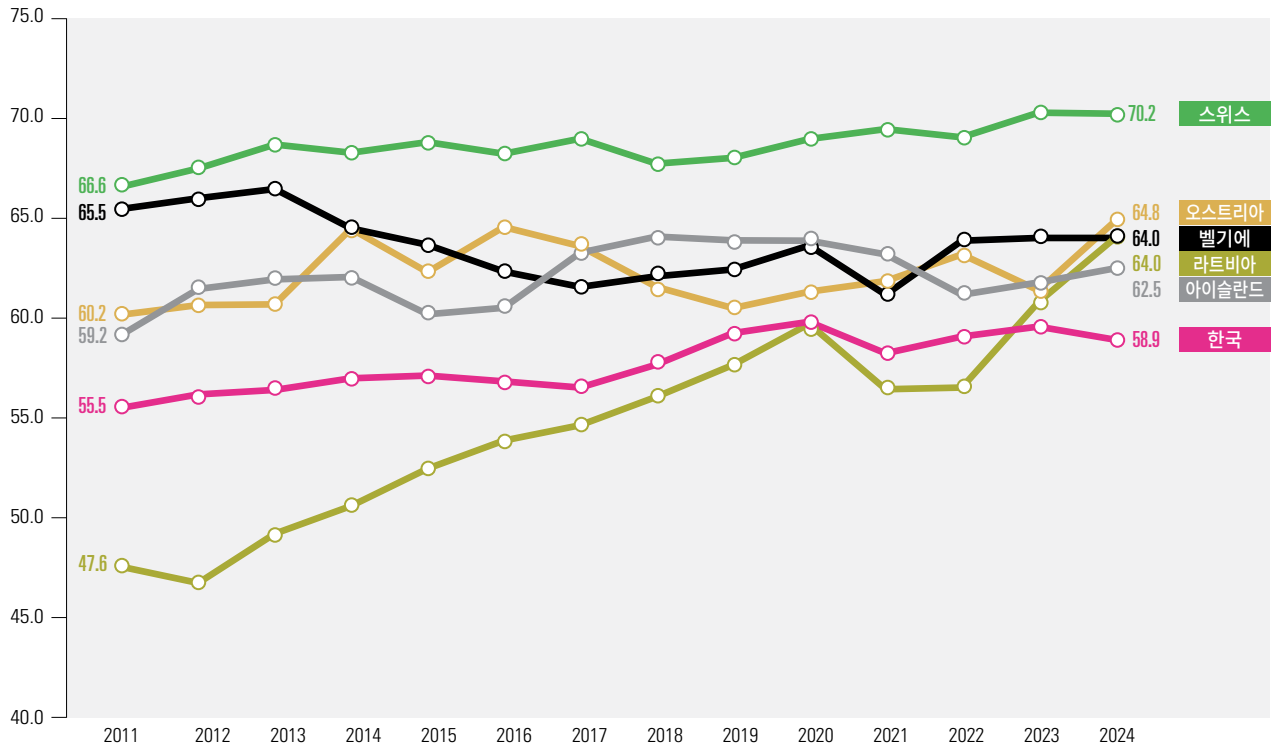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상위 5개국 중 스위스는 2011년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선도적 위치를 이어 가고 있다. 스위스는 2011년 66.6%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부터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안정적인 고임금 구조와 견고한 노동시장 제도가 높은 수

준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라트비아는 2012년까지만 해도 46.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벨기에와 공동 3위인 64.0%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라트비아의 노동시장 회복, 임금 상승, 노동비용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위 5개국 및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11~2024

(단위: %)



출처: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ilostat ilo.org/topics/sdg>, 2026.2.26. 인출)
주1: 2024년 기준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상위 10개국과 한국(13위)임

금융건전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나 국제 기준 충족하며 양호한 수준 유지

(☞ 관련 지표 10.5.1)

금융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 자본(Tier 1 Capital) 비율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도가 반영된 자산에 대해 기본자본이 얼마나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총 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자산 중에서 기본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적정성 수준을 보여 준다.

먼저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2011년 6.7%에서 시작하여 2013~2021년에는 7.0~7.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6.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6.3%로 소폭 반등하였다. 위험가중치 조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표가 하락하였음은 금융기관의 전체 자산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자기자본은 그만큼 늘지 않아 자산 규모의 확대에 비해 자본 확충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금융기관의 총자산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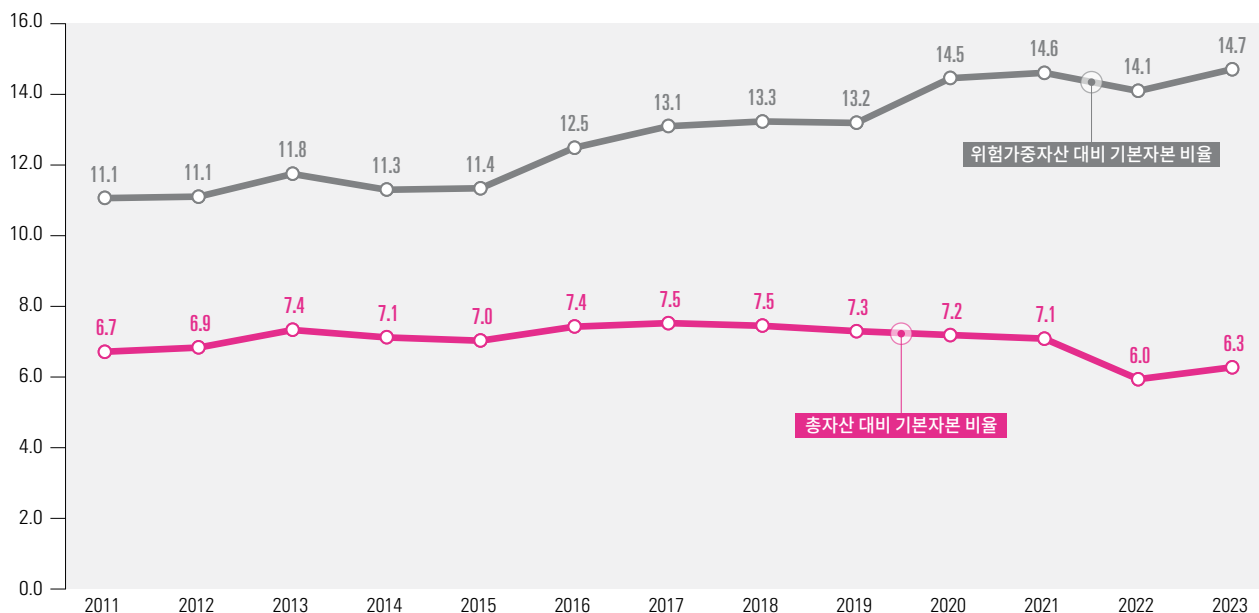
등의 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20.1%나 증가하며 이례적으로 변동하였으나 같은 기간 기본자본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대에 그치다가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13%를 넘었고 2020년에 들어서는 14%대로 오른 뒤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표의 등락에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뿐만 아니라 금리 및 환율 변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보증 대출의 확대와 같은 정책 시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비교 대상 36개국 모두 10~25% 수준을 나타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른 국제 기준인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24.5%), 룩셈부르크(22.3%), 아이슬란드(21.9%), 노르웨이(21.8%)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스라엘(11.3%)과 칠레(12.1%)가 비교적 낮다. 한국과 호주(각각 14.7%),

금융건전성 지표,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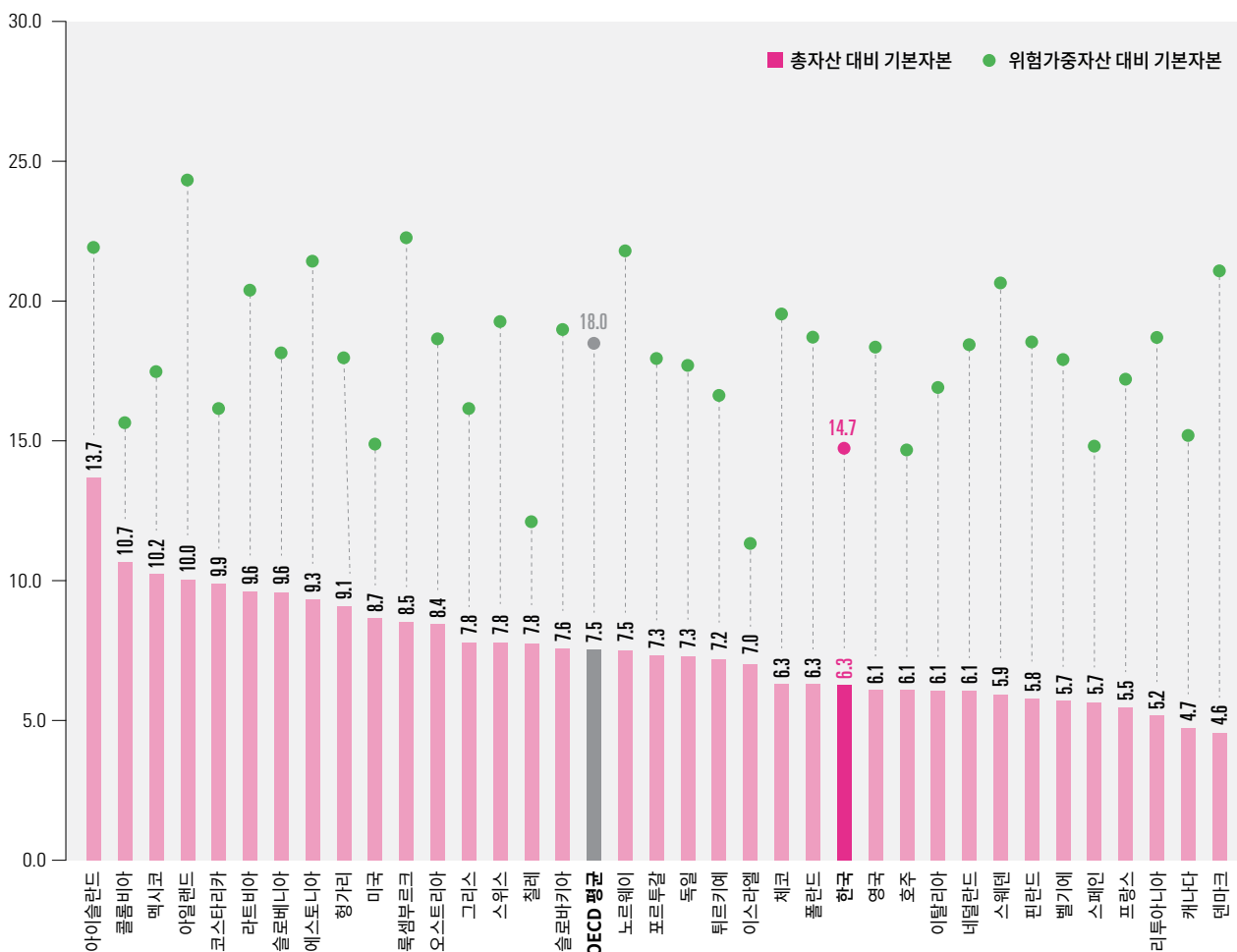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IMF, IMF Data(<https://data.imf.org>, 2026.2.14. 인출)

OECD 국가별 금융건전성 지표, 2023

(단위: %)



출처: IMF, IMF Data(<https://data.imf.org>, 2026.2.14.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일본, 뉴질랜드는 제외함



한국의 금융건전성 지표 (2022)

지표	값(%)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0.24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0.48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Regulatory capital to assets)	5.95
총자산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Non-performing loans net of provisions to capital)	1.22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Regulatory Tier 1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14.12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Liquid assets to short-term liabilities)	97.51
총자산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Net open position in foreign exchange to capital)	3.77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13. 인출)

주 : 금융건전성 지표(FSI)는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및 시장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MF가 제시한 지표임

스페인(14.8%)과 미국(14.9%)도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14.7%)은 OECD 평균(18.0%)에는 미달하지만 국제 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양호한 건전성을 보인다. OECD 국가들의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2023년 기준 4~14% 수준을 나타낸다. 그중 아이슬란드(13.7%), 콜롬비아(10.7%), 멕시코(10.2%)는 10%를 넘는다. 한국은 6.3%로 OECD 평균(7.5%)보다 낮다.

한편, 금융건전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를 보면 2022년 기준 부실채권 비율(0.24%)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97.5%)은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 대비 외환포지션 비율(3.8%)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노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금융기관의 금융건전성 지표는 국제 기준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난민 신청자는 1만 8천여 명에 달하며

난민 보호율은 3.6% (☞ 관련 지표 10.7.4)

한국에서는 1992년 난민 협약 가입, 2001년 최초의 난민 인정, 그리고 2013년 난민법 시행 등을 거치며 난민 제도가 정비되는 동안 난민 신청이 크게 늘어 왔다. 난민 신청자 수는 2014년 2,896명에서 2018년 1만 6,1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난민 신청자 수가 2020년 6,684명, 2021년 2,341명으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회복하여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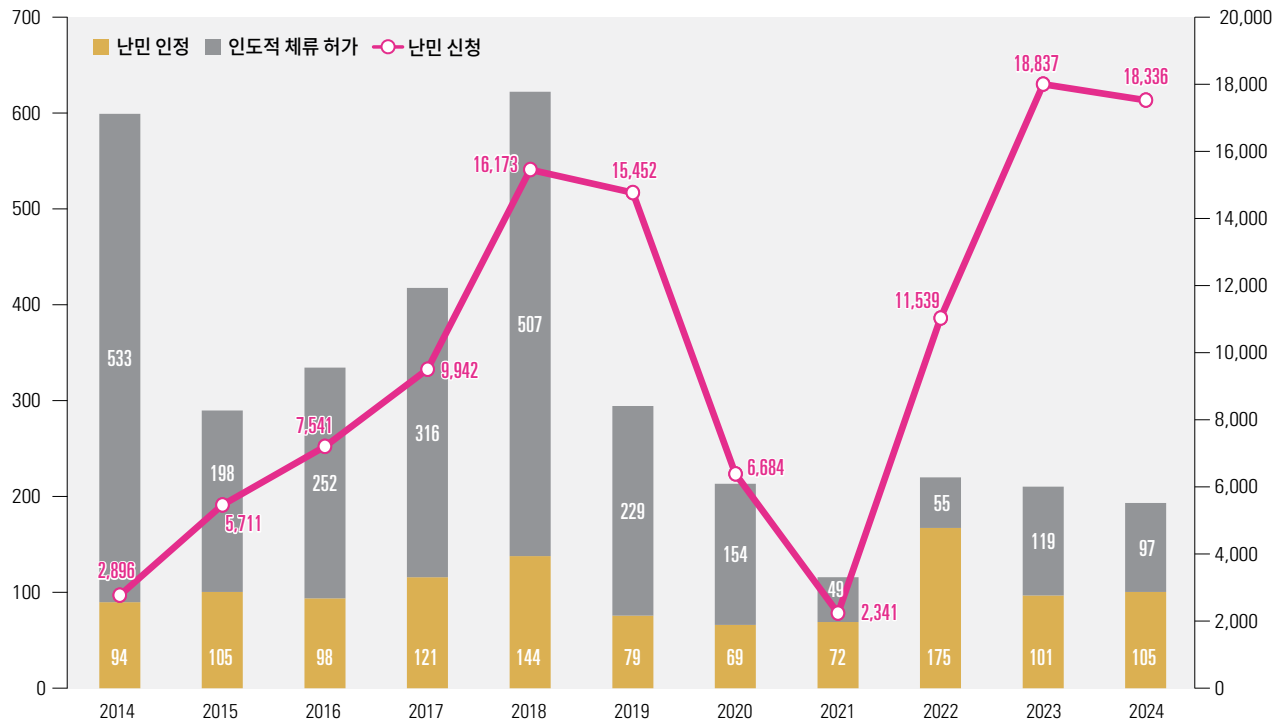
에는 1만 8,83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4년 난민 신청자 수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1만 8,836명으로 집계된다.

난민 신청 규모에 비해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5년 난민 인정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144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뚜렷이 늘지 않고 등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난민 신청자 수가 급감하던 2020~2021년에는 난민 인정자 수도 69~72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2022년에는 1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신청자 수가 1만 8,000명을 넘어서며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 수는 101~10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난민 업무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에 대한 누적 심사 완료 건수는 총 5만 7,090건이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1,544명으로 2.7%에 해당한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문과 같은 비 인도적 처우·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에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2014~2024년 기간 동안 난민 심사 결과에 따라 매년 49~533명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있다. 심사 완료 건수 대비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비율을 난민 보호율이라고 하는데, 2024년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 1,544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 2,686명을 더하면 누적 난민 보호율은 7.4%로 산정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014년과 2018년에 연간 500명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간 100여 명 내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 2014~2024

(단위: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난민종합통계('94년~'25년)

외로 감소하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심사가 완료된 5,610건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 인도적 체류 허가는 97명으로, 당해 난민 보호율은 3.6%에 그친다. 난민 통계는 기준시점 이후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불안이 커진 데다 한국의 난민

제도가 정비되고 국가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난민 신청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난민 지위의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벽은 여전히 높다. EU+ 국가들의 2024년 난민 보호율은 42%에 달한다. 한국 난민 제도의 한계와 포용성 증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08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DG 11번 목표에서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속에 3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약 11억 명 이상이 빈민가 또는 비공식 거처에서 기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시의 적응과 재난 대응 역량의 한계, 녹지공간의 부족,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의 개선과 도시공원의 확대,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의 포용성 향상이 관찰되는 한편 수도권 등에서 주거의 질이 낮고 비용 부담이 커 지역 격차가 드러난다.

» 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3.8%)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수도권(4.4%)의 미달 비율이 광역시 등(2.8%)과 도 지역(3.4%)보다 높은 양상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음

- 자가점유율은 2024년 58.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타 지역보다 낮은 편인 수도권(52.7%)에서 뚜렷이 증가
- 2014년 이후 고소득층(2024년 74.8%)과 중소득층(63.6%)의 자가점유율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46.7%)과의 격차 확대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에도 수도권(18.4%), 광역시 등(15.2%), 도 지역(12.7%)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24년 초미세먼지(PM_{2.5}) 오염도(인구 가중 평균)는 16 $\mu\text{g}/\text{m}^3$ 로 관측 이래 최저치이며, 대기환경기준 달성률과 '나쁨' 발령 일수도 개선

-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환경기준(15 $\mu\text{g}/\text{m}^3$)과 WHO 권고기준(AQG level, 5 $\mu\text{g}/\text{m}^3$)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1년 8.3 m^2 에서 2024년 12.8 m^2 로 54.2% 증가하였는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침

-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크게 증가
- 세종(62.2 m^2)과 전남(26.6 m^2) 및 전북(26.0 m^2)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월등히 크고 서울(4.7 m^2)과 대구(9.8 m^2)는 작은 편

» 2024년 기준 57.2%의 인구가 10분 내로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고 94.2%의 인구는 20분 내로 대중교통에 접근

-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4년 44.4%에 이르지만, 서울(71.0%)과 세종(58.3%)에서 월등히 높고 울산(18.7%)과 제주(22.5%)에서 특히 낮아 지역 간 차이를 보임

자가점유율이 낮고 주택임대료 부담이 높으며 주거기준 미달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거복지 증진 필요 (☉ 관련 지표 11.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주거 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2024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8%로, 2018년부터 이어 오던 완만한 감소세를 멈추고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과거 미달가

구 비율이 높았던 도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서 특히 개선 속도가 빨랐다. 2006년에 미달가구 비율은 수도권 12.8%,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 17.7%, 도 지역 21.6%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5.8%, 5.0%, 5.1%로 감소하며 지역 간 격차가 거의 해소되었다. 과거보다 지역 간 격차의 폭은 줄어들었지만, 2016년부터는 수도권의 미달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이러한 양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수도권의 미달가구 비율은 4.4%로 광역시 등(2.8%)과 도 지역(3.4%)보다 높다. 주거환



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었지만, 최근 정례해 있는 주거 개선 속도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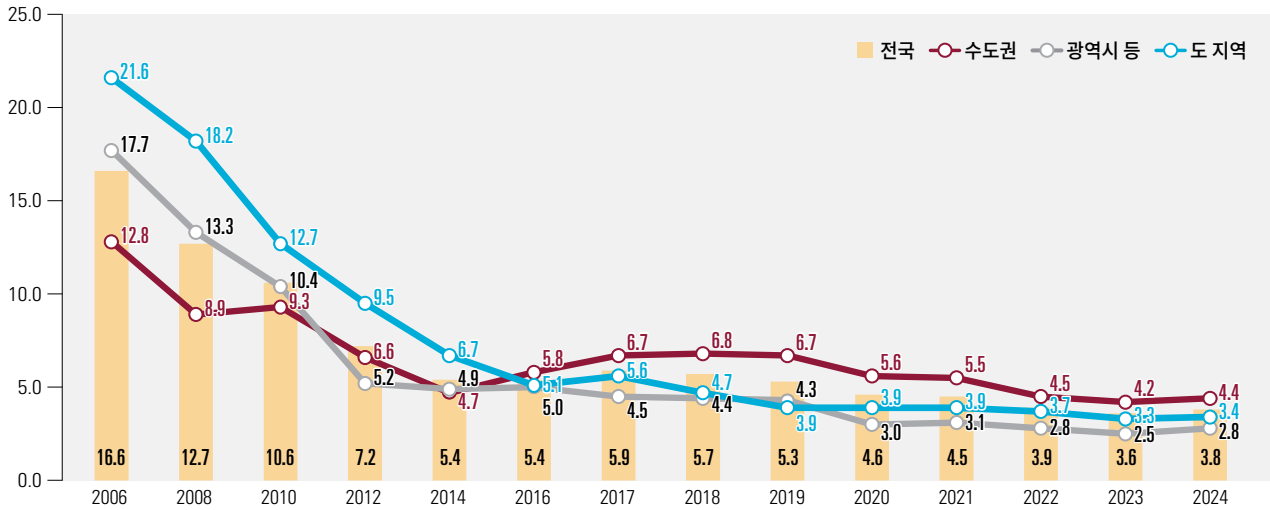
자가점유율은 2006년 55.6%에서 2024년 58.4%로 완만하게 증가해 왔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6.8~58.0% 수준에서 등락하며 정체하였는데 2024년에

는 전년 대비 1.0%p 증가한 58.4%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자가점유율은 소득계층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데, 과거에 비해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64~70%, 51~56%, 46~52% 수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06~2024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1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란 주택법에 따른 면적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사용면적이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미만인 경우), 시설기준(전용 임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침실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방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경우)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를 말함

주2 : 2016년까지 격년 조사, 2017년부터 매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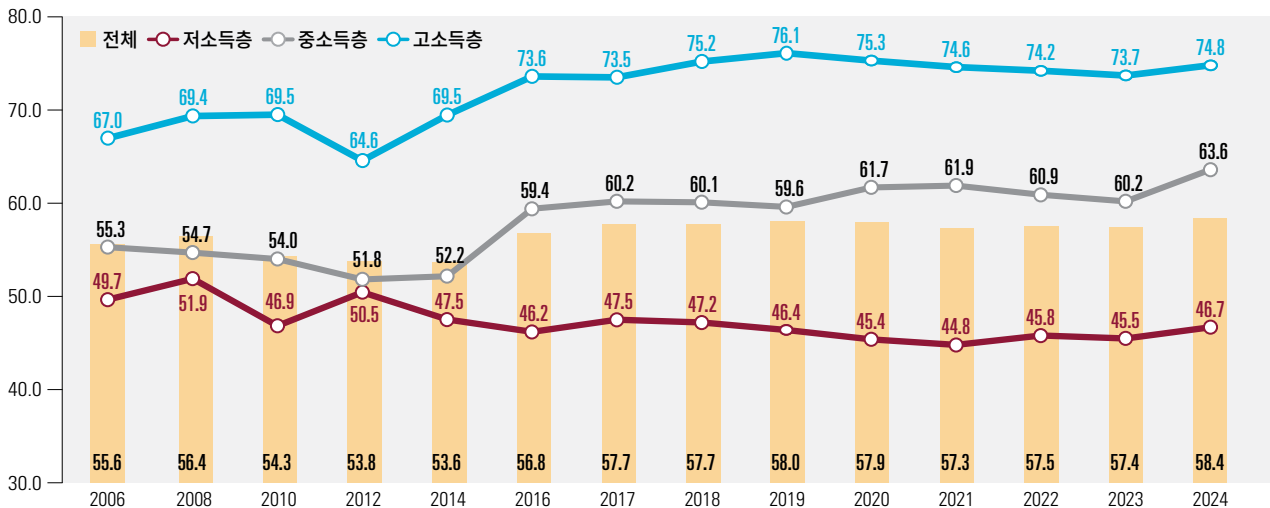
주3 : 2017년 주거실태조사부터 공동주택의 주거면적은 행정자료를 활용함

주4 : 분석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 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

주5 :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에 포함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2006~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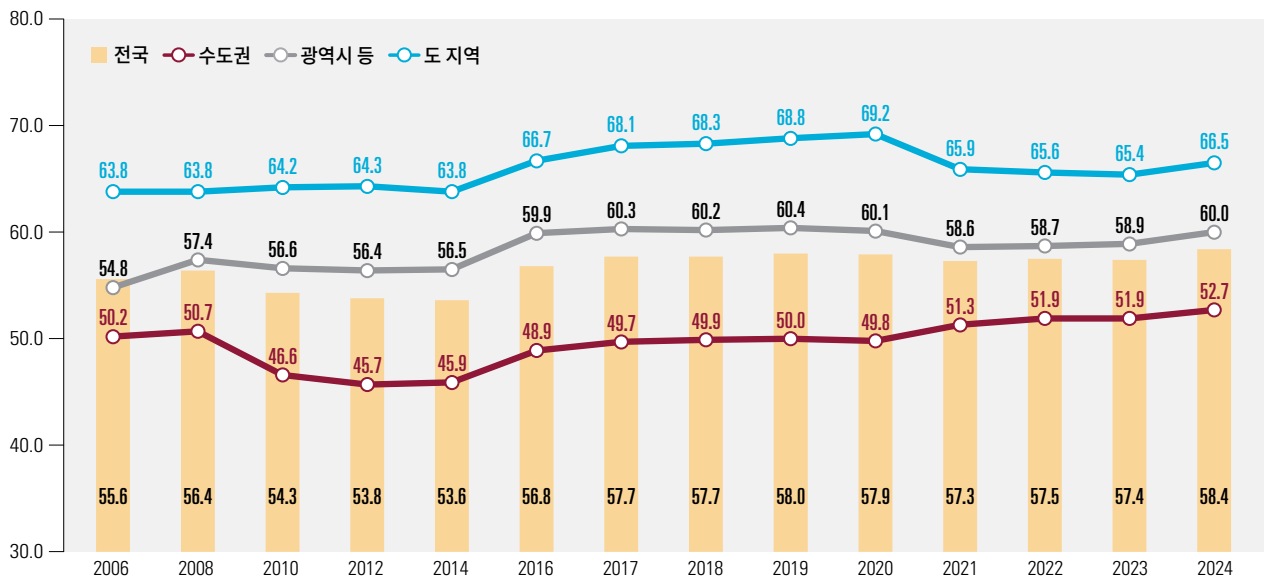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1 :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주2 :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지역별 자가점유율, 2006~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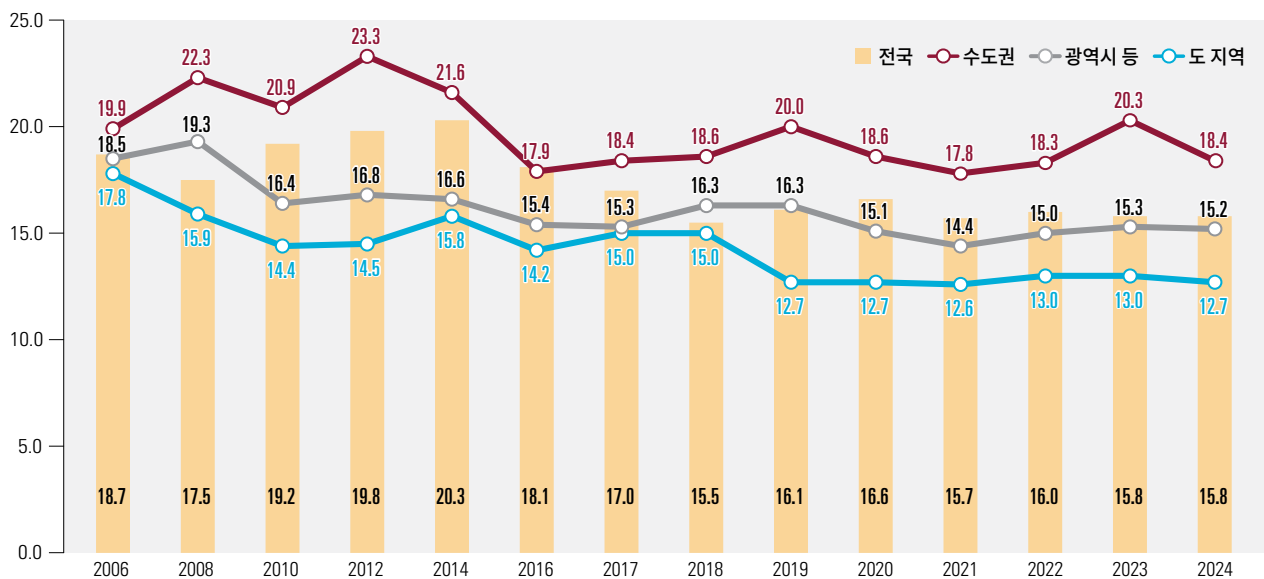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지역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24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 월임대료 ÷ 중위 월가구소득) × 100

준이었다. 이후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각각 70% 중반과 60% 초반 수준으로 증가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40% 중반 수준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특히 중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전년 대비 3.4%p 증가하며 약진하기도 하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 격차는 2006년 17.3%p에서 2024년 28.1%p로 커졌다. 중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의 격차도 같은 기간 5.6%p에서 16.9%p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역에 따른 자가점유율은 도 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의 순으로 높다. 2020년대 들어 도 지역에서 줄어 들고 수도권에서 늘어나면서 지역 간 격차는 그 전에 비해 줄어든 양상이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2016~2020년 기간 48~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51.3%로 상승하였고 2024년에는 52.7%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도 지역의 자가점유율은 2017~2020년 기간 68~70%에서 2021~2023년 기간 65%대로 급락하였고 2024년에는 66.5%로 소폭 반등한 상태에 있다. 광역시 등의 자가점유율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8~61%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공급 한계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에서 자가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최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낮은 수도권의 자가점유, 그리고 2020년대 들어 뚜렷이 감소한 도 지역의 자가점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여 준다. 전국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여 2018년 15.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2021~2024년에는 15.7~16.0%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2006~2012년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주택임대료 비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2012년 23.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4~2018년에는 공공임대가 확대되고 전세시장이 안정되면서 크게 올라 있던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었다.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고 도 지역에서 가장 낮다. 2024년에도 수도권 18.4%, 광역시 등 15.2%, 도 지역 12.7%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난다.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변동 폭도 크다. 전국 주택임대료 비율(RIR)의 변동 폭(15.7~16.0%)이 크지 않았던 2021~2024년에도 수도권에서는 변동 폭(17.8~20.3%)이 상대적으로 컸다.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수도권 임대시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포용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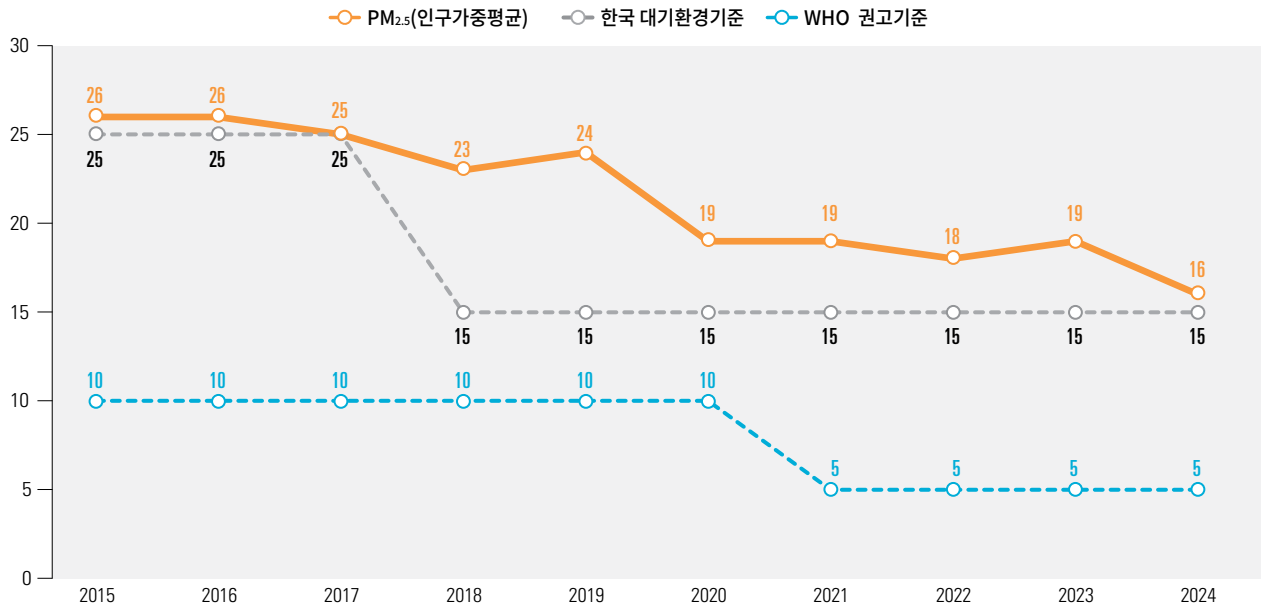
2024년 초미세먼지 오염도 16 $\mu\text{g}/\text{m}^3$ 로

역대 최저치 기록 (● 관련 지표 11.6.2)

전국 초미세먼지($\text{PM}_{2.5}$) 오염도의 인구 가중 평균값은 2024년 16 $\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3 $\mu\text{g}/\text{m}^3$ 줄며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26 $\mu\text{g}/\text{m}^3$ 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19 $\mu\text{g}/\text{m}^3$ 로 급감한 뒤 2023년까지 18~19 $\mu\text{g}/\text{m}^3$ 수준에서 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염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달성률도 크게 올랐

초미세먼지($\text{PM}_{2.5}$) 연평균 오염도, 2015~2024

(단위: $\mu\text{g}/\text{m}^3$)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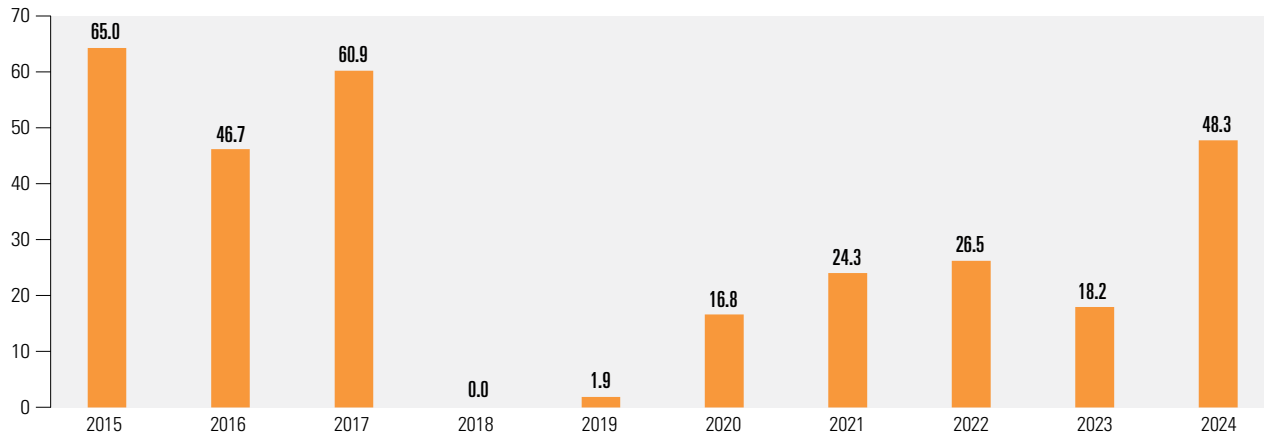
주1 :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text{PM}_{2.5}$) 농도($\mu\text{g}/\text{m}^3$)의 인구 가중 평균값임

주2 : 한국 대기환경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이며, 2018년 3월부터 25 $\mu\text{g}/\text{m}^3$ 에서 15 $\mu\text{g}/\text{m}^3$ 로 강화됨

주3 : WHO 권고기준은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이며, 2021년판부터 10 $\mu\text{g}/\text{m}^3$ 에서 5 $\mu\text{g}/\text{m}^3$ 로 강화됨

초미세먼지(PM_{2.5}) 대기환경기준 달성률, 2015~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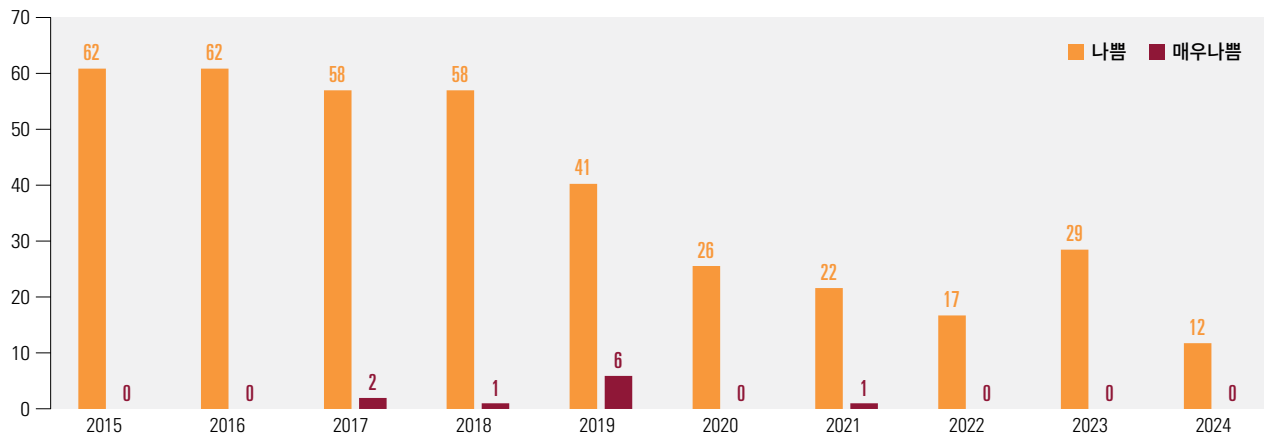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1: 전체 유효 측정소 수 대비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 달성 측정소 수의 비율

주2: 대기환경기준(초미세먼지 연평균)이 2018년 3월부터 25μg/m³에서 15μg/m³로 강화됨

초미세먼지(PM_{2.5}) ‘나쁨’ 및 ‘매우 나쁨’ 발령 일수, 2015~2024

(단위: 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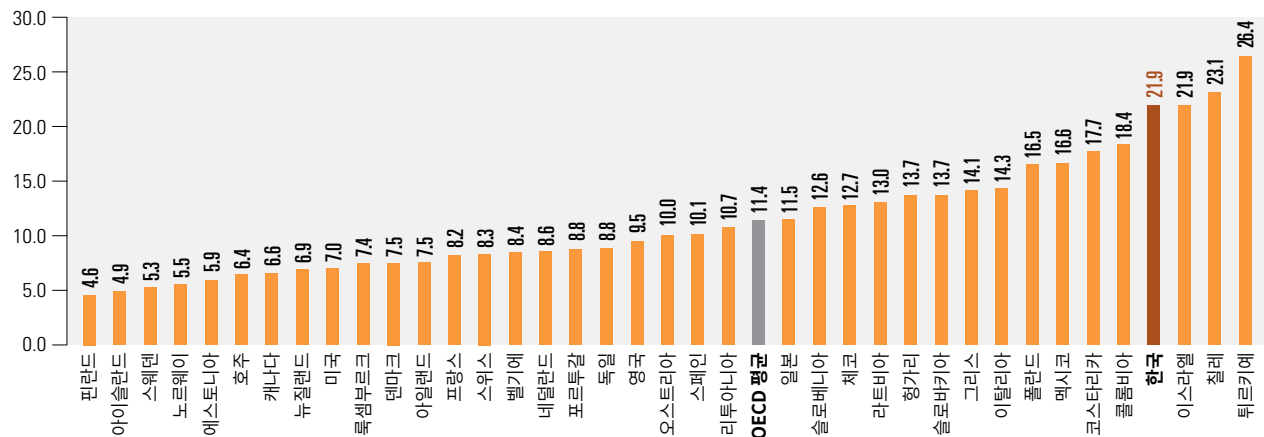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1: 초미세먼지(PM_{2.5}, 24시간) 기준으로 ‘나쁨’은 36~75μg/m³, ‘매우 나쁨’은 75μg/m³ 초과이며, 2018년 3월까지의 ‘나쁨’이 51~100μg/m³, ‘매우 나쁨’이 101μg/m³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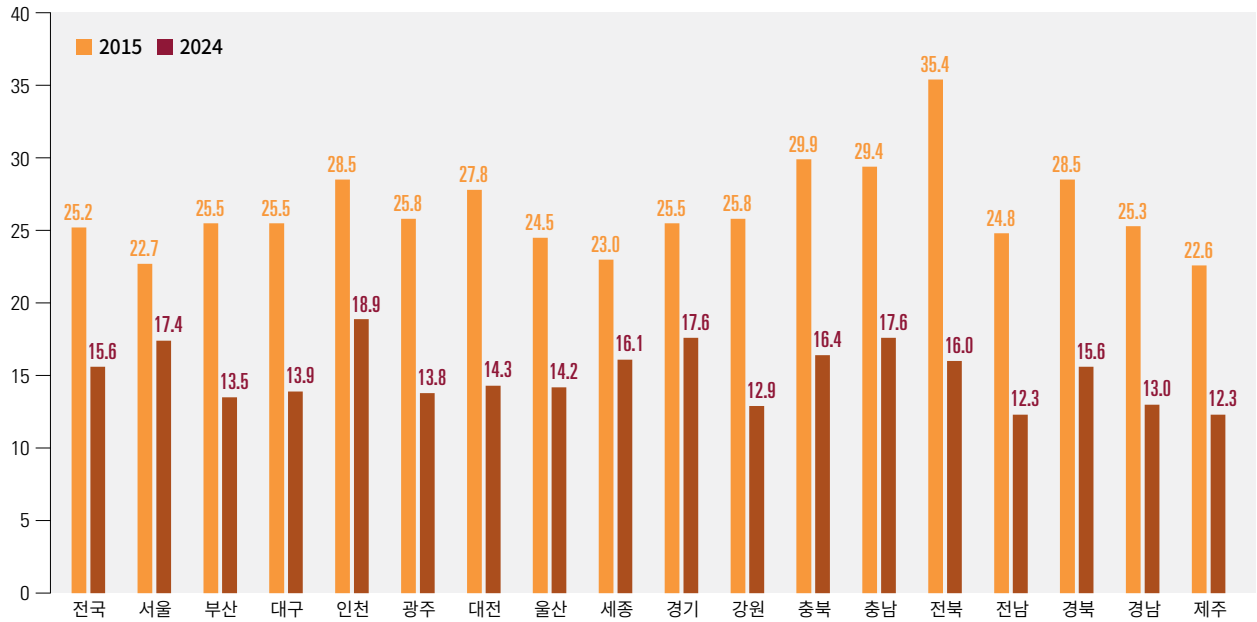
OECD 국가별 초미세먼지(PM_{2.5}) 인구가중 연평균 노출도, 2023

(단위: μg/m³)



출처: IHME, GBD 2023 Air Pollution Exposure Estimates (2026) (<https://ghdx.healthdata.org/record/ihme-data/gbd-2023-air-pollution-exposure-estimates-1990-2023>)
2026.3.3. 인출)

주: 위성영상 등에 기반한 추정치임

지역별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오염도, 2015, 2024(단위: $\mu\text{g}/\text{m}^3$)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25.2.11.), “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 $\mu\text{g}/\text{m}^3$, 관측 이래 최저”

주1: 세종시는 2015년 측정망 미설치로 2016년 자료 기준

주2: 황사제의 농도 사용, 2024년 농도는 잠정치임

다. 측정소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달성률은 2018년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 이후 2023년까지 30%를 넘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전국 측정소 중 48.3%의 측정소에서 연평균 기준을 달성하였다. 대기오염 예보에 따른 ‘나쁨’ 등급의 발령 일수도 2024년 12일로 최소 일수를 기록하였다. ‘매우 나쁨’ 등급은 단 하루도 발령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의 개선은 대기권역별 총량관리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등 전 부문에 걸친 저감 정책의 효과와 함께 국외 유입의 감소와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환경기준(15 $\mu\text{g}/\text{m}^3$)과 WHO 권고기준(AQG level, 5 $\mu\text{g}/\text{m}^3$)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보건 지표 및 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가 위성영상 등으로 추정한 2023년 기준 초미세먼지(PM_{2.5}) 인구가중 연평균 노출도를 비교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24년 기준 인천(18.9 $\mu\text{g}/\text{m}^3$),

경기와 충남(각각 17.6 $\mu\text{g}/\text{m}^3$), 서울(17.4 $\mu\text{g}/\text{m}^3$), 충북(16.4 $\mu\text{g}/\text{m}^3$), 세종(16.1 $\mu\text{g}/\text{m}^3$) 등의 순으로 높아 수도권과 충청권에 오염이 집중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당시에는 전북이 35.4 $\mu\text{g}/\text{m}^3$ 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나 2024년 16.0 $\mu\text{g}/\text{m}^3$ 로 크게 개선되며 7위로 내려섰다. 경북도 2015년 4위(28.5 $\mu\text{g}/\text{m}^3$)에서 2024년 8위(15.6 $\mu\text{g}/\text{m}^3$)로 내려섰다. 강원은 2015년에 7위(25.8 $\mu\text{g}/\text{m}^3$)였으나 2024년에는 15위(12.9 $\mu\text{g}/\text{m}^3$)에 그치며 오염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서울은 2015년 22.7 $\mu\text{g}/\text{m}^3$ 로 제주(22.6 $\mu\text{g}/\text{m}^3$)와 견줄 만큼 오염도가 낮은 지역이었으나 그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2024년 오염도 4위(17.4 $\mu\text{g}/\text{m}^3$) 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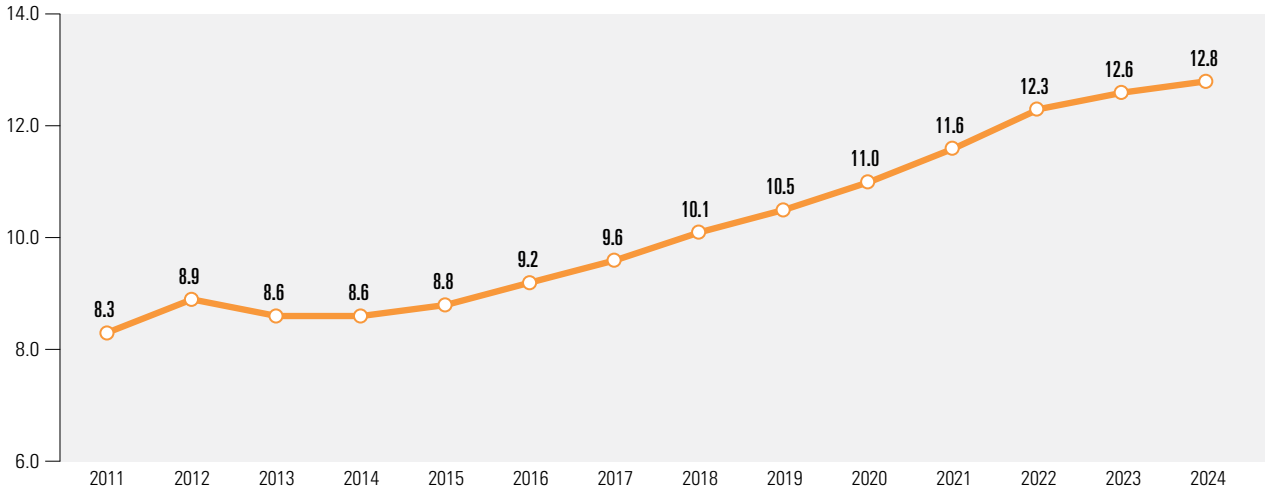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나

지역 간 격차 존재 (☉ 관련 지표 11.7.1)

한국의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1년 8.3 m^2 에서 2024년 12.8 m^2 로 54.2% 늘어났다. 이 시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때이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11~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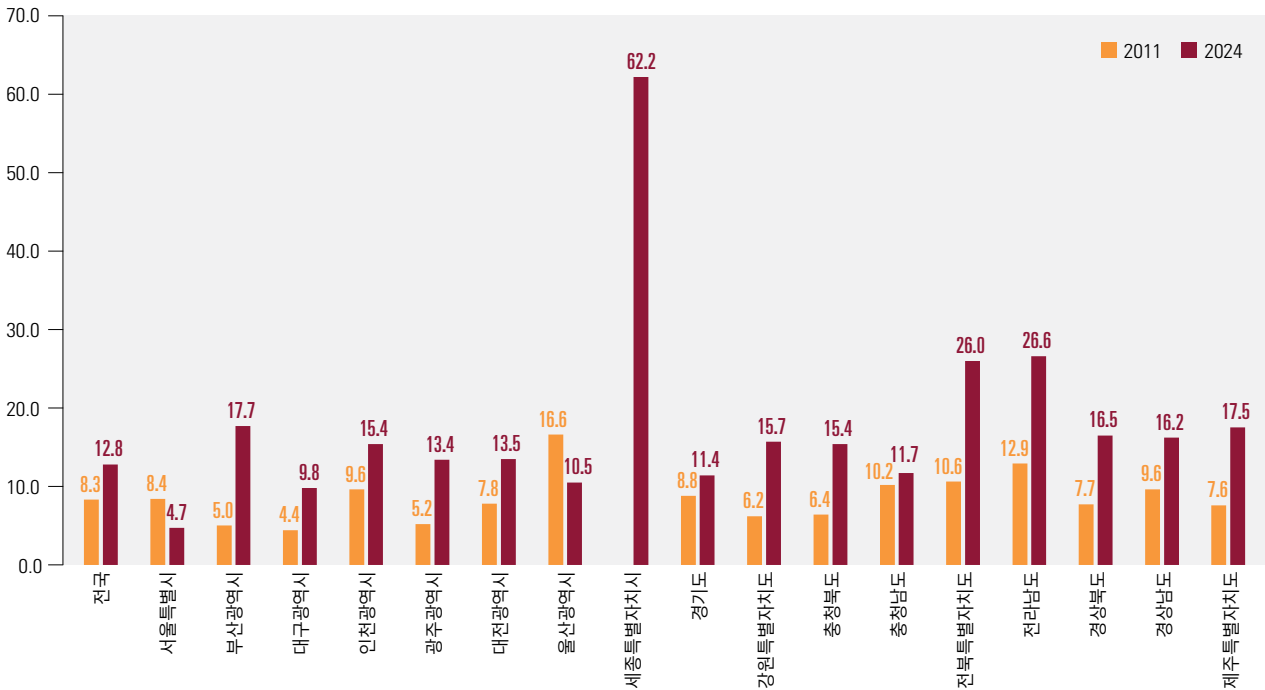
(단위: m²)



출처: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https://kosis.kr>, 2026.2.16. 인출)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11, 2024

(단위: m²)



출처: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https://kosis.kr>, 2026.2.16. 인출)

주 : 세종시는 2012년 출범으로 2011년 자료 없음

기도 하다. 2020년 이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공원 사업과 생활권 공원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꺾여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인구 대비 도시공원 면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다. 신규 계획도시인 세종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4년 기준 62.2m²로 이례적으로 크다. 전남(26.6m²)과 전북(26.0m²)도 월등히 큰 규모이다. 반면 서울(4.7m²)과 대구(9.8m²)는 10m² 미만에 불과하다. 그 외 시도 지역은 10~18m² 규모로 나타난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압력도 높아 공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4년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011년(8.4



m²)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2011년 대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줄어든 곳은 서울 외에 울산(2011년 16.6m², 2024년 10.5m²)뿐이다. 도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녹지 생태휴식공간 확보와 함께 공원의 질적·기능적 활용성, 시민 접근성 및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저상버스 도입률 44.4%에 이르지만

지역 간 차이가 큰 편 (☉ 관련 지표 11.2.1)

15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에 5분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는 2024년 13.0%로 조사된다. 이를 포함하여 10분 미만은 57.2%, 15분 미만은 85.4%, 20분 미만은 94.2%, 그리고 30분 미만인 인구는 99.0%로 나타난다. 즉 절반 이상의 인구가 10분 내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인구가 20~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포는 2014년 이래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024년 기준 2만원 미만이 8.1%, 이를 포함한 4만원 미만이 36.1%, 6만원 미만이 65.5%, 8만원 미만이 85.4%, 10만원 미만이 93.4%, 그리고 12만원 미만이 96.0%이다.

대중교통 접근수단 중 도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도보로 접근하는 인구는 2024년 기준 83.4%에 달한다. 도보 외에 승용차, 택시, 기타 수단을 이용하는 인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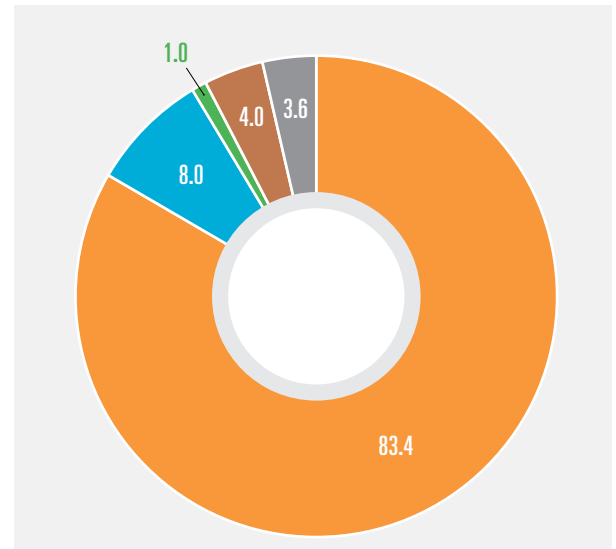
각각 8.0%, 4.0%, 3.6%로 나타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0%에 불과하다. 이는 거주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보행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환경이나 승용차를 위한 환승주차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형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여 주는 저상버스 도

대중교통 접근수단별 비율, 2024

(단위: %)

도보 승용차 자전거 택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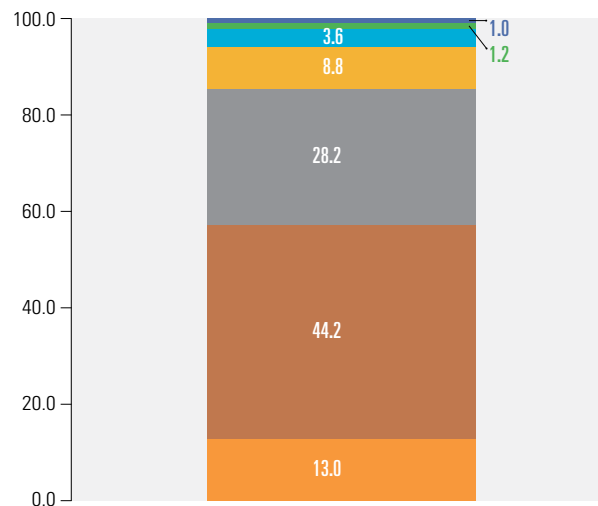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https://kosis.kr>, 2026.2.15. 인출)

주: 15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 주 4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대중교통 접근시간별 비율, 2024

(단위: %)

30분 이상 25분~30분 20분~25분 15분~20분
10분~15분 5분~10분 5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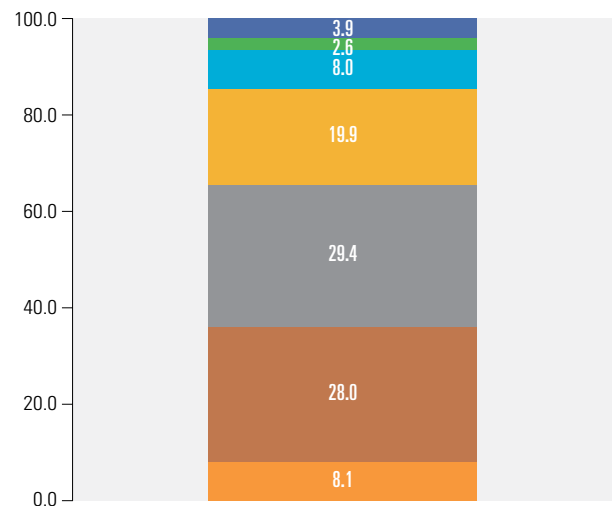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https://kosis.kr>, 2026.2.15. 인출)

주: 15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 주 4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대중교통 월평균 이용금액별 비율, 2024

(단위: %)

12만원 이상 10만원~12만원 8만원~10만원 6만원~8만원
4만원~6만원 2만원~4만원 2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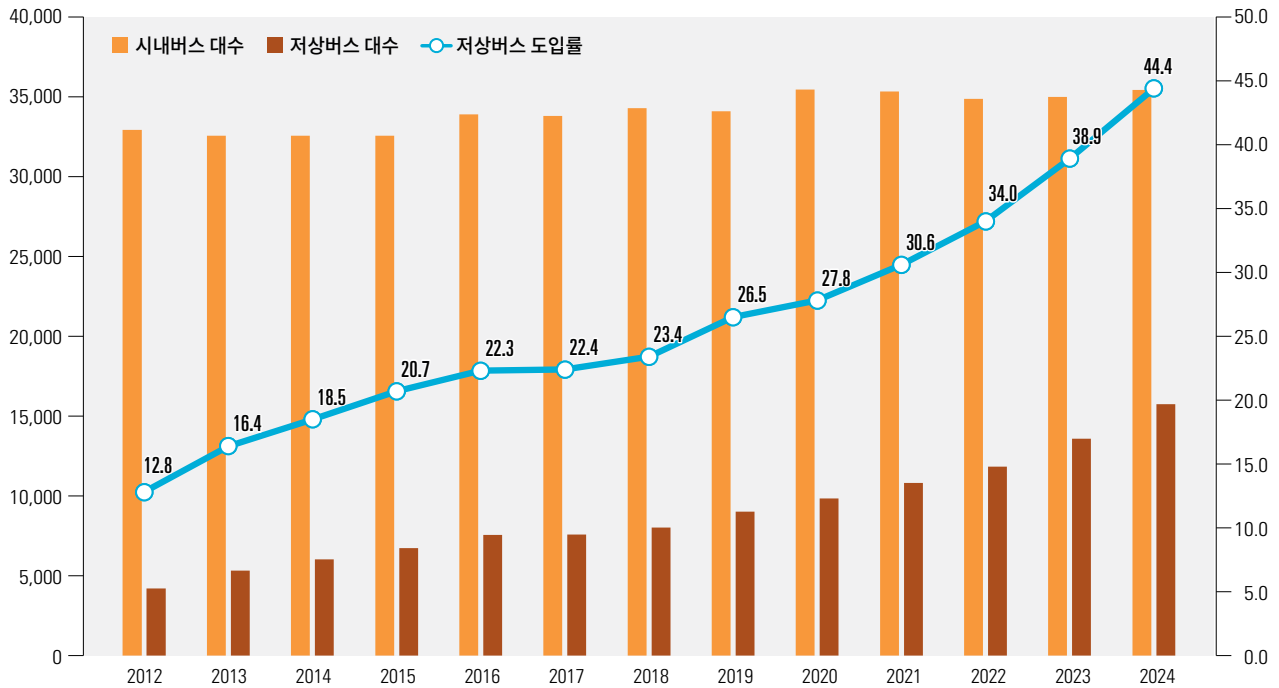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https://kosis.kr>, 2026.2.15. 인출)

주: 15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 주 4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저상버스 도입률, 2012~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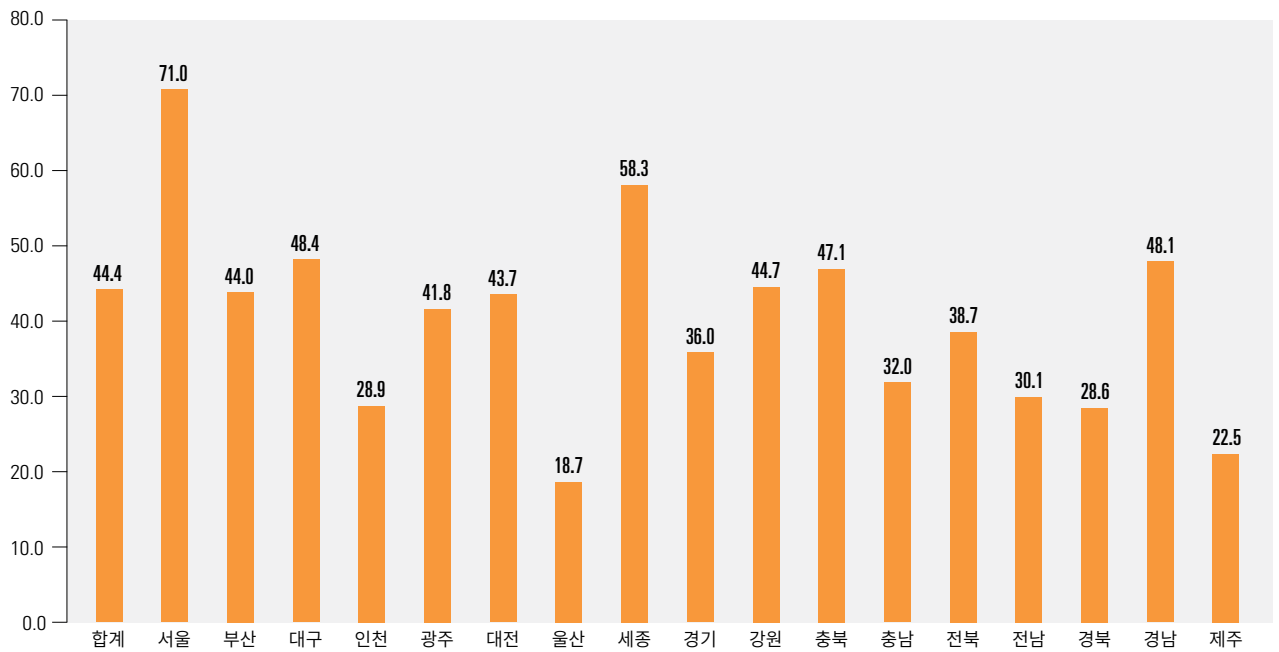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저상버스도입현황(<https://stat.molit.go.kr>, 2026.2.16. 인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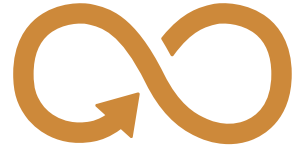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저상버스도입현황(<https://stat.molit.go.kr>, 2026.2.16. 인출)

입률은 2012년 12.8%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44.4%에 이른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2024년 전국 3만 5,432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가 1만 5,743대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크다. 저

상버스 도입률은 서울(71.0%)과 세종(58.3%)에서 월등히 높고, 그 외 시도 지역에서는 도입률이 50% 미만인 그린다. 특히 울산(18.7%)과 제주(22.5%)에서는 20% 안팎에 불과하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18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DG 12번 목표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 배출을 저감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지구적으로는 소매·외식·가정과 생산·가공·도매 단계에서의 식품 폐기량이 아직도 많고 전 세계 국가자원소비량(DMC)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23.3% 증가하여 자원소비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자원소비량이 감소하며 경제성장과 탈동조화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물질재활용에 대한 분리 통계가 구축되는 등 정책을 더욱 고도화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국가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천연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국가자원소비량(DMC)은 2017년 8.9억 톤에서 2022년 8.6억 톤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도 2022년 16.7톤으로 감소

- GDP당 GDP 국가자원소비량은 2017년 0.542kg/달러에서 2022년 0.466kg/달러로 줄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원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확인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5~2020년 기간 550~600만 톤에서 2020~2023년 기간 530~57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발생량은 2023년 104.6kg으로 2015년 이래 최저치

- 1인당 발생량은 제주(146.4kg) 등에서 많고 경기(93.5kg)와 서울(98.4kg) 등에서 적는데,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 2012년 대비 2023년 1인당 발생량이 24~80% 증가하여 농촌 지역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합산한 재활용률은 2023년 78.1%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 중

- 2023년부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분리하여 집계한 통계가 공표되는데, 재활용률 78.1% 중 68.5%만 물질재활용률에 해당
- 발생량의 74.5%를 차지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의 물질재활용률이 76.2%로 가장 높고, 발생량의 14.9%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의 물질재활용률은 46.2%로 낮은 편
-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OECD 32개국 중 3위 수준이나 시설 반입량 기준의 재활용 통계에 개선 필요

» 유해폐기물의 연간 1인당 발생량은 2011년 72.1kg에서 2023년 119.6kg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2021년 이후 감소세

- 유해폐기물 재활용률(2023년 63.8%)은 OECD 26개국 평균(2022년 56.4%)보다 높지만 물질재활용률(2023년 42.1%)은 OECD 평균(2022년 43.8%)보다 약간 낮은 수준

GDP 대비 국가자원소비량(DMC)은

2022년까지 감소하여 경제성장과 탈동조화 양상

(☞ 관련 지표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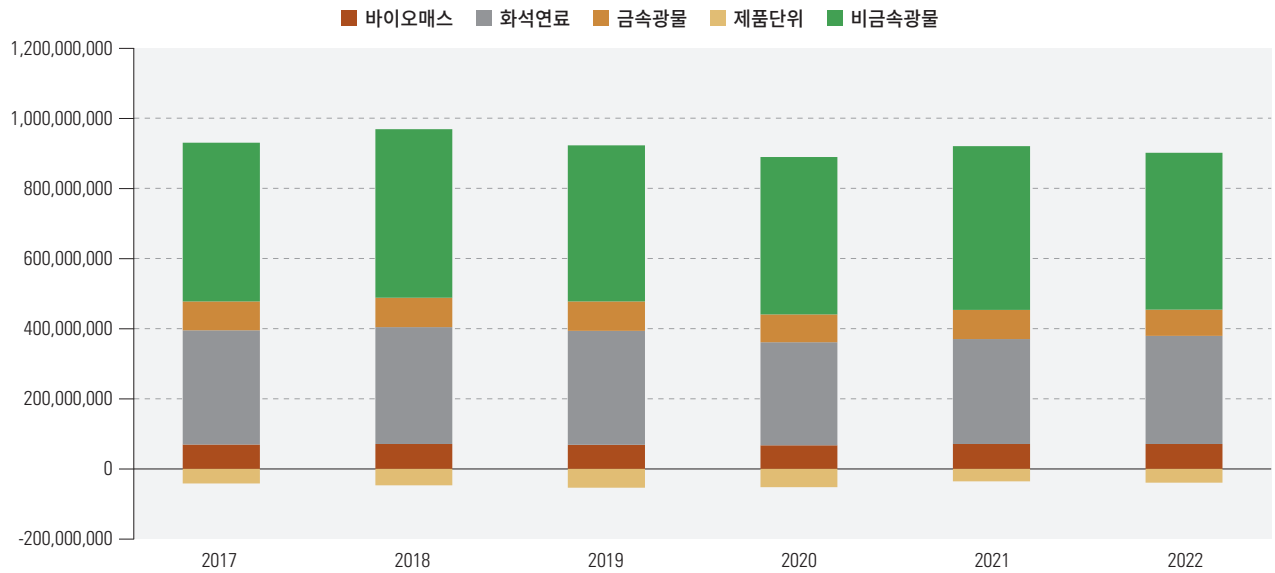
세부목표 12.2에서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물질발자국(지표 12.2.1)과 국내물질소비량(지표 12.2.2)이라는 두 지표를 활용한다. 먼저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MF)은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천연자원의 총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해 국외에서 발생한 자원소비까지 포함된다.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은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천연자원의 양을 가리킨다. 여

기에는 국내에서 채취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양을 반영하되, 수입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동원된 물질 흐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엔 SDG 데이터베이스에서 물질발자국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추정 한 국내물질소비량 자료는 제공하고 있다. 국내물질소비량(DMC)은 국내 자원채취량(domestic extraction)에 직접 수입(direct import)을 더하고 직접 수출(direct export)을 뺀 수치로 계산된다. 그간 한국에서는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 말 ‘국가자원생산성지표’가 승인 통계로 공표되면서 국내물질소비량 통계가 ‘국가자원소비량’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향



국가자원소비량(DMC),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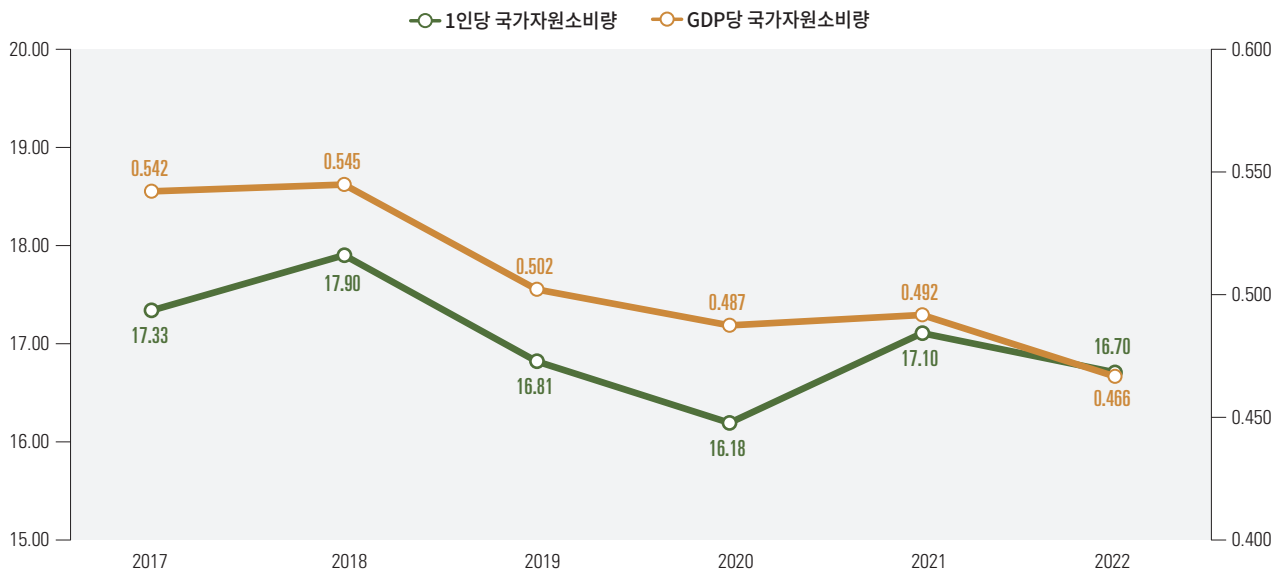
(단위: 톤/년)



출처: 산업통상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

1인당 및 GDP당 국가자원소비량, 2017~2022

(단위: 톤/인/년, kg/달러)



출처: 산업통상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

주 : 연앙인구(장래인구추계)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 USD달러(기준연도 2015년)당 국가자원소비량임

후 정기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산업통상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른 한국의 국가자원소비량은 2017년 8억 9,028만 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억 3,893만톤으로 급감한 뒤 다시 증가하여 2022년 8억 6,295만톤으로 나타났다. 물질군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비금속광물(4억 4,738만 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화석연료(3억 861만 톤), 금속광물(7,479만 톤), 바이오매스(7,142만 톤) 등의 순으로 많이 소비된다. 국외 수출이 더 많은 기타 혼합·복합제품(-3,924만 톤)은 국가 자원소비량에서 차감된다.

1인당 국가자원소비량도 2017년 17.33톤에서 2022년 16.70톤으로 감소하였다. GDP당 국가자원소비량은 물질집약도(Material Intensity)라고도 하는데,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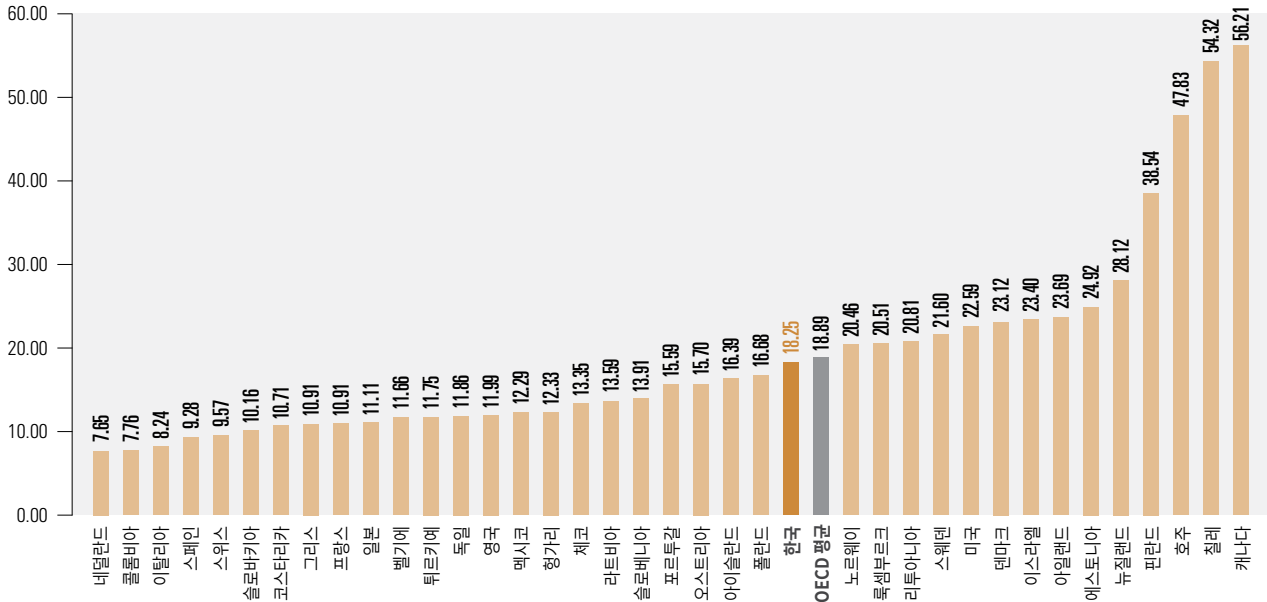
과 2022년 사이 GDP당 국가자원소비량은 0.542kg/달러에서 0.466kg/달러로 줄어 들었다. 2017~2022년 기간 동안 한국의 실질 GDP가 2020년(-0.7%)을 제외하고 매년 2~5% 성장을 거듭해 왔음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질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양

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정한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평균 18.89톤으로 한국(18.25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국내물질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7.65톤), 콜롬비

OECD 국가별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2024

(단위: 톤/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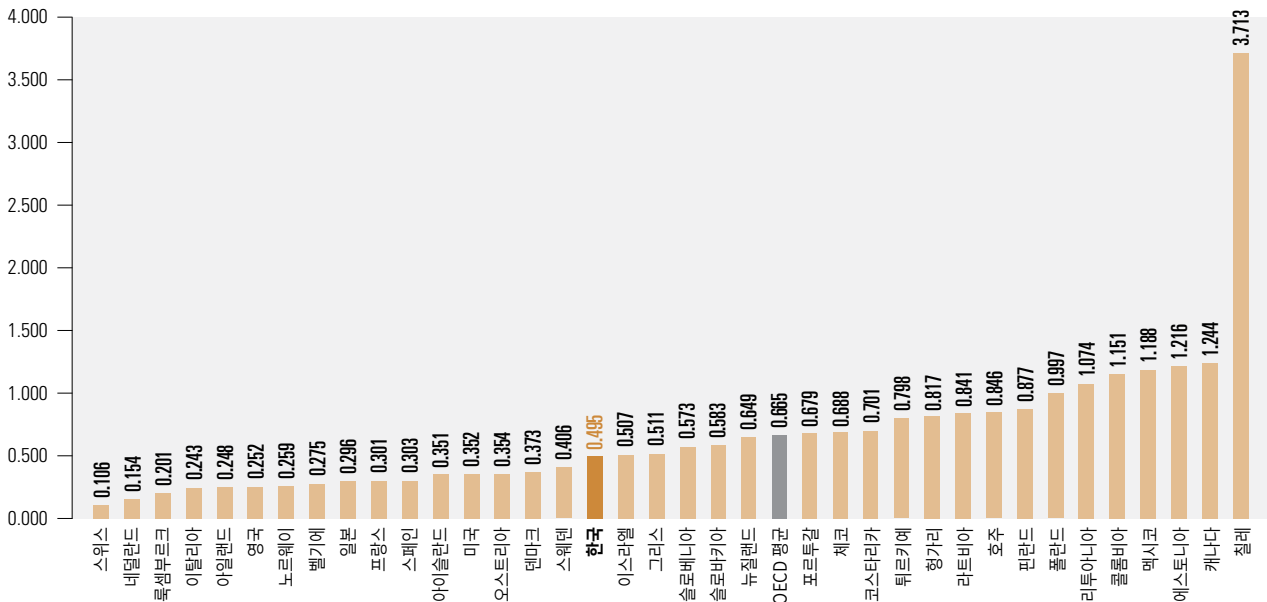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11. 인출)

주1: 노르웨이, 튀르키예는 2023년 자료임

주2: 한국의 2023년, 2024년 기준 국내물질소비량은 향후 공표예정인 국가자원소비량(국가승인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ECD 국가별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2023

(단위: kg/달러)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11. 인출)

주1: 2015년 불변가격 USD 기준

주2: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독일은 제외함

주3: 한국의 2023년, 2024년 기준 국내물질소비량은 향후 공표예정인 국가자원소비량(국가승인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7.76톤), 이탈리아(8.24톤), 스페인(9.28톤), 스위스(9.57톤) 등이다. 인구 대비 국내물질소비량이 많은 캐나다(56.21톤)나 칠레(54.32톤)와는 격차가 크다. 국내물질소비량은 국가의 산업구조, 천연자원 생산 및 수출 규모, 순환경제 구축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GDP당 국내물질소비량은 평균 0.665kg/달러인데, 한국(0.495kg/달러)은 그보다 조금 낮아 물질소비의 경제적 효율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다. GDP당 국내물질소비량이 가장 적은 나라는 스위스(0.106kg/달러), 네덜란드(0.154kg/달러), 룩셈부르크(0.201kg/달러) 등이다. 다만, 한국의 2023년, 2024년 기준 국내물질소비량은 향후 공표예정인 국가자원소비량(국가승인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식품 폐기량 감소하나 지역 간 차이가 큰 편

(☉ 관련 지표 12.3.1)

SDG 12.3.1 지표는 식품의 손실과 폐기(Food Loss and Waste, FLW)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손실지수와 식품폐기지수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통계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식품 폐기량에 해당하여 이를 분석한다. SDG에서 식품의 폐기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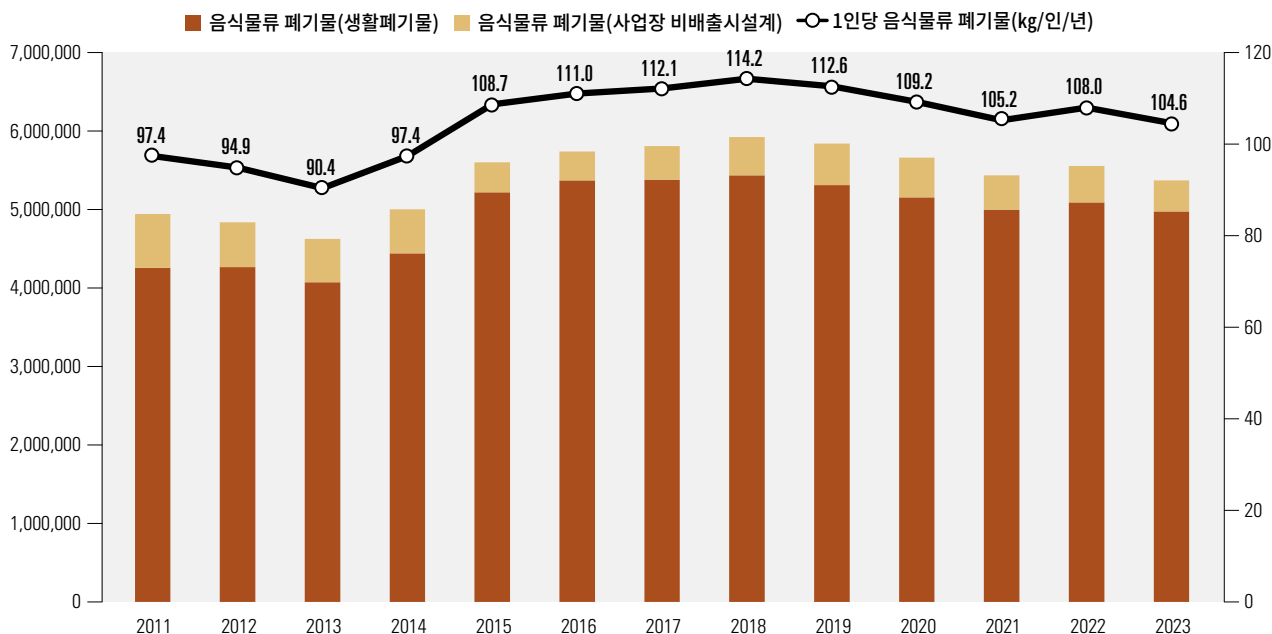
외식업, 소매업 등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리키며, 한국의 폐기물 통계에서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식품 폐기량에 해당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산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연간 총 537만 톤에 이른다. 이는 인구 1인당 104.6kg에 해당하는 양이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1~2014년 기간 동안 460~500만 톤에서 2015~2020년 기간에는 550~60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부터는 530~570만 톤 수준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2023년 연간 총발생량 537만 톤과 1인당 발생량 104.6kg은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식품 폐기량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2023년 전국 발생량 중 경기(23.7%)와 서울(17.2%) 지역의 발생량이 40.9%를 차지한다. 하지만 1인당 발생량으로는 경기(93.5kg)와 서울(98.4kg)이 전국 평균(104.6kg)보다 오히려 적다. 제주(146.4kg), 강원(130.7kg), 전남(130.1kg), 전북(128.2kg), 충북(127.3kg)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1인당 발생량의 2012년 대비 2023년 증감률을 보면, 특·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에서 증가 추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및 1인당 발생량, 2011~2023

(단위: 톤/년, kg/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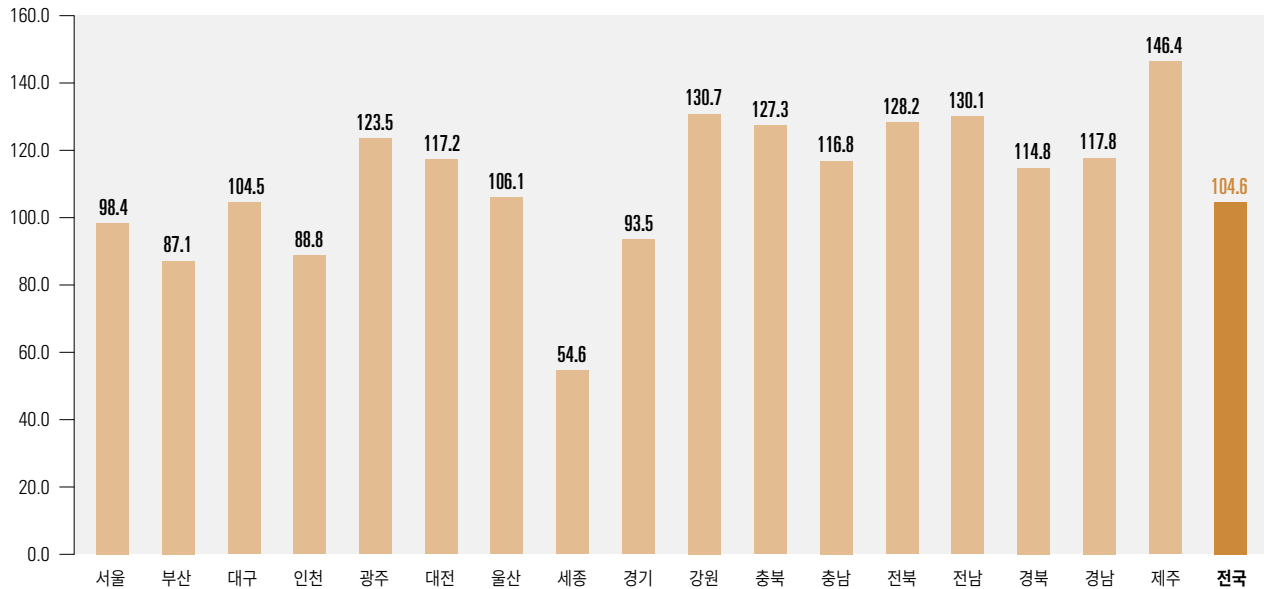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2. 인출)

주1 :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한 것이며, 1인당 발생량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2 : 생활폐기물에는 사업장 규모(하루 300kg) 미만의 소형음식점 폐기물도 포함됨

지역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023

(단위: kg/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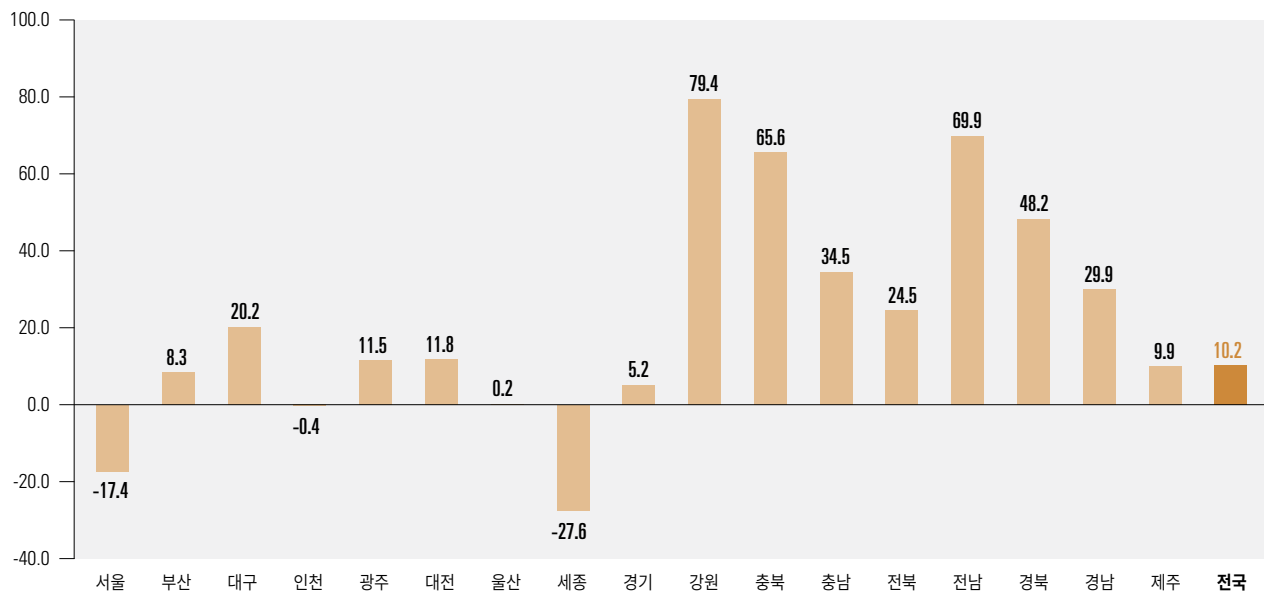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2. 인출)

주1 :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한 것이며, 1인당 발생량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2 : 생활폐기물에는 사업장 규모(하루 300kg) 미만의 소형음식점 폐기물도 포함됨

2012년 대비 2023년 지역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2. 인출)

주1 :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한 것이며, 1인당 발생량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2 : 생활폐기물에는 사업장 규모(하루 300kg) 미만의 소형음식점 폐기물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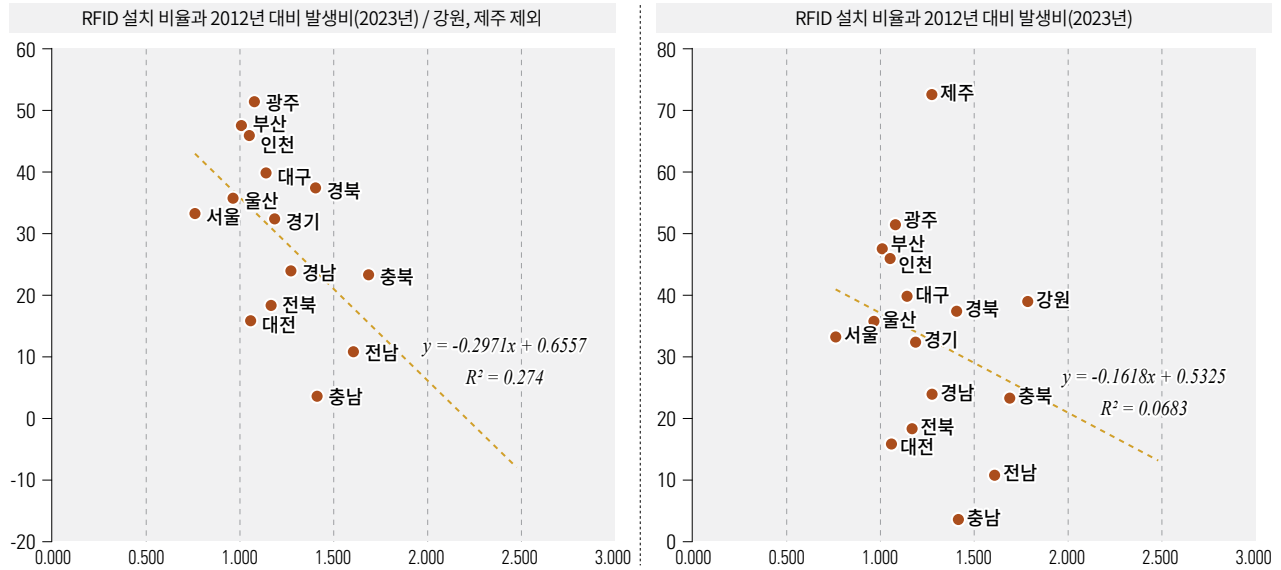
세가 두드러진다. 이 기간 1인당 발생량이 뚜렷이 감소한 서울(-17.4%)과 인구 변동이 극심하였던 세종(-27.6%)을 제외하면 광역시 지역에서는 2012년 대비 2023년 1인당 발생량이 정체 내지 20% 이하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5.2%)와 제주(9.9%)를 제외한 도 지역

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24~80%에 달하였다. 서울에서 음식물류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데는 소형 감량기와 탈수기 보급,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종량기기 설치 확대, 업종별 맞춤 감량 자문단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2023년 RFID 종량기기 설치비율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감지수(2012년=100)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발생량 증감지수 (2012년=100)	76.0	100.8	113.9	105.0	107.7	105.7	96.4	247.5	118.5	178.1	168.6	141.2	116.6	160.5	140.3	127.2	127.1
RFID 설치 비율(%)	33.3	47.5	39.8	45.9	51.4	15.9	35.8	0.0	32.4	39.0	23.3	3.6	18.3	10.8	37.4	23.9	72.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환경공단_자치단체별 RFID기반 음식물종량기기 설치 현황(2023)」(<https://www.data.go.kr/data/15061767/fileData.do>, 2025.11.1.인출)

주 : 시도면 단면 분석 결과, RFID 종량기 설치비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다만, 전체 시도를 포함할 경우 설명력은 제한적($R^2=0.07$)이었으나, 체류인구 영향이 큰 제주와 강원도 제외 시 설명력은 $R^2=0.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RFID 보급 확대가 폐기물 감축과 일정 부분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함

어 도시와 농촌 간 소비패턴의 차이, 감량 정책의 유형과 재정 여건에 따른 실시율의 차이, 거주인구와 관광 체류 인구의 변화 등이 1인당 식품 폐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감량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에 맞춰 물질재활용률 산정 시작, 재활용률 상위 수준 (☞ 관련 지표 12.5.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을 합산하여 산출한 한국의 재활용률(에너지회수 포함)은 2023년 78.1%로 산정된다. 2011년 68.8%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지만 2020년부터 4년간은 77.9~78.1% 수준에 정체해 있다. 2023년부터는 재활용 통계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로 구분하여 공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재활용률 78.1% 중 68.5%만이 물질재활용이고 나머지 9.6%는 에너지회수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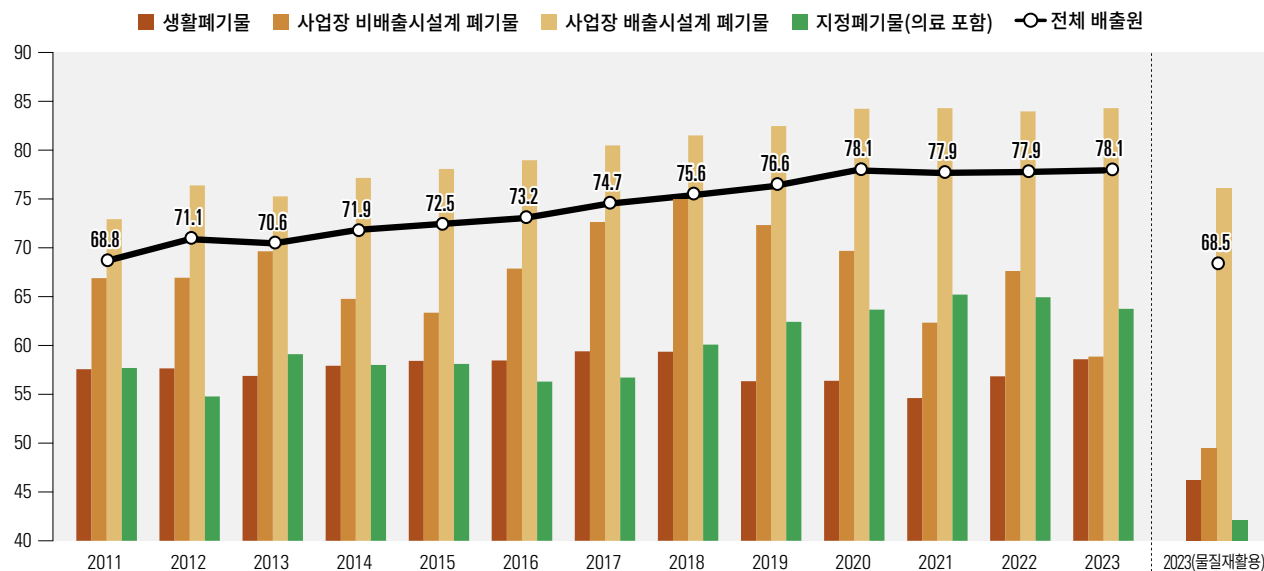
주요 배출원별로는 2023년 기준 발생량의 74.5%를 차지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물질재활용

률이 76.2%로 가장 높다. 에너지회수를 합산할 경우 재활용률은 84.4%에 이른다. 발생량의 14.9%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물질재활용률이 46.2%이고, 에너지회수를 합산한 재활용률은 58.6%이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에너지회수 포함)은 2017년 59.5%에 이른 뒤 뚜렷이 하락하여 2021년에는 54.7%에 그쳤으나 이후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023년 58.6%에 도달하였다. 그 외 전체 발생량의 각각 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의 물질재활용률은 49.5%와 42.1% 수준이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배출원 중 물질재활용률이 가장 낮지만, 에너지회수율(21.7%)이 높아 이를 포함한 재활용률은 63.8%에 달한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기관 같은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의 재활용률은 한국이 53.9%(2021년)로 OECD 비교 대상 32개국 평균(31.3%, 2022년)보다 높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활용 시설 반입량

주요 배출원별 재활용률, 2011~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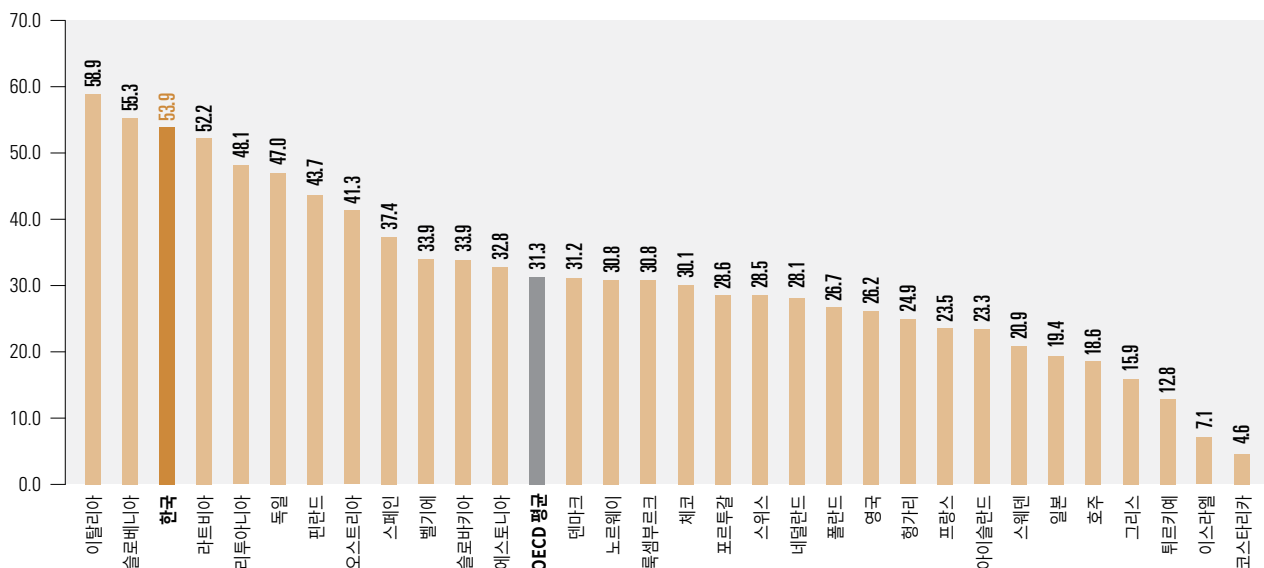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9.22. 인출)

주1: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포함한 재활용률을 나타내며, 분리 통계가 제공되는 2023년은 물질재활용률도 함께 나타냄

주2: 배출원 중 건설폐기물은 제외함

OECD 국가별 도시폐기물 재활용률,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12. 인출)

주1: 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일본, 호주, 그리스, 튀르키예는 2021년 자료임

주2: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뉴질랜드는 제외함

으로 재활용률을 집계하므로, 재활용되지 않고 남은 잔재물을 제외하면 재활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에너지회수를 제외한 물질재활용률은 더욱 낮게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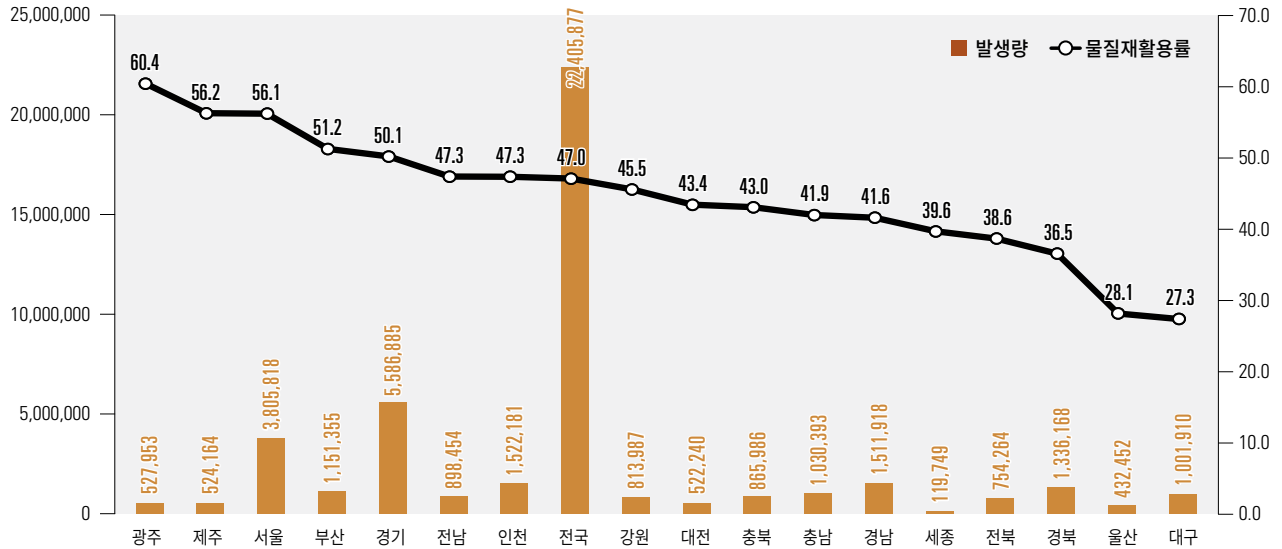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합산한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재활용률은 2023년 47.0%로 집계된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60.4%),

제주(56.2%), 서울(5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구(27.3%)와 울산(28.1%)에서는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곳은 경기(559만 톤), 서울(381만 톤), 인천(152만 톤)의 수도권과 경남(151만 톤), 경북(134만 톤), 부산(115만 톤)의 경상권이다. 이들 시도 중 서울(56.1%), 부산(51.2%), 경기(50.1%) 지



시도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및 물질재활용률, 2023

(단위:톤/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9.22. 인출)

주 : 생활계 폐기물 = 생활(가정 등)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역의 물질재활용률은 높은 편이나 경남(41.6%)과 경북(36.5%) 지역의 물질재활용률은 평균에 못 미친다. 인천의 경우 생활계 폐기물 중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생활폐기물(54.2%)에 비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38.8%)의 물질재활용률이 현저히 낮다. 학교나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 체계가 가정(생활)폐기물보다 촘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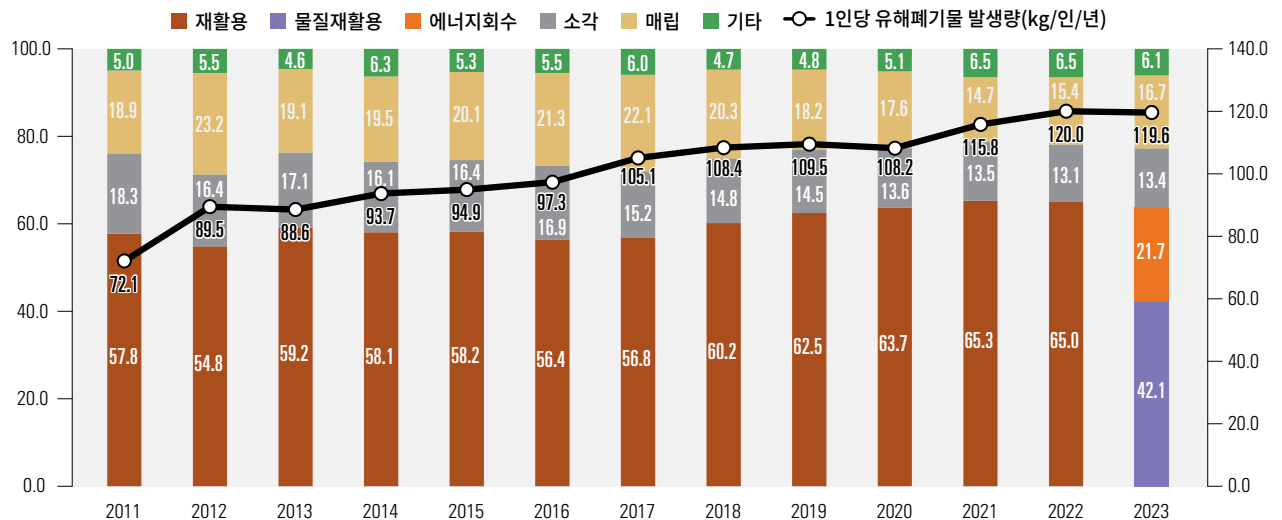
분리배출 품목 확대와 처분량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유해폐기물 재활용률은 최근 감소하고,
물질재활용률은 OECD 평균 수준 (○ 관련 지표 12.4.2)

유해폐기물은 국내법상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며,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이 여기에 속한다.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연간 366만 톤에서 2023년 614만 톤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및 유해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 2011~2023

(단위: kg/인/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9.22. 인출)

주1 : 유해폐기물은 사업장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합한 것이며, 1인당 발생량은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2 : 2011~2022년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재활용”으로 집계하였으며, 2023년부터 재활용 통계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로 구분하여 공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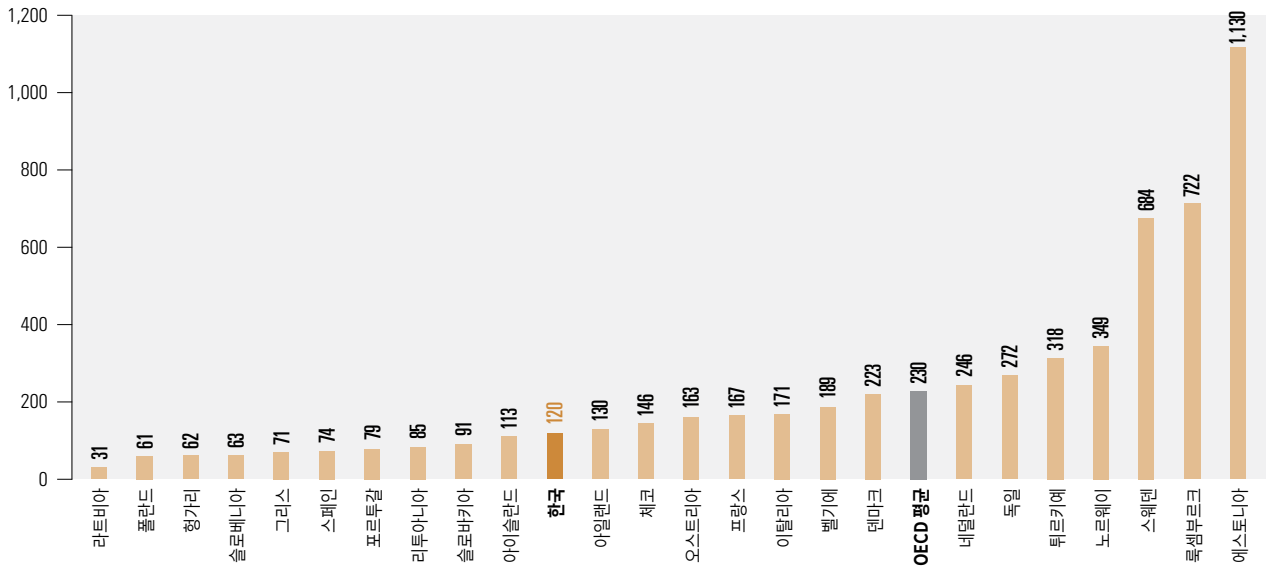
으로 67.8% 증가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 전년 대비 6.6%와 3.3% 증가하였지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6% 줄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도 2011년 72.1kg에서 2023년 119.6kg으로 늘어났다.

처리방법별로 보면 2023년 기준 유해폐기물은 재활

용(63.8%), 매립(16.7%), 소각(13.4%), 기타(6.1%) 등의 순으로 처리된다. 그간 증가해 오던 재활용률이 2021년 65.3%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그간 감소해 오던 매립률은 2021년 14.7%에서 2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3년부터 재활용 통계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OECD 국가별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2022

(단위: kg/인/년)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2. 인출)

주1: 한국 자료는 국내 통계(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를 사용한 것이며, OECD 평균도 한국을 포함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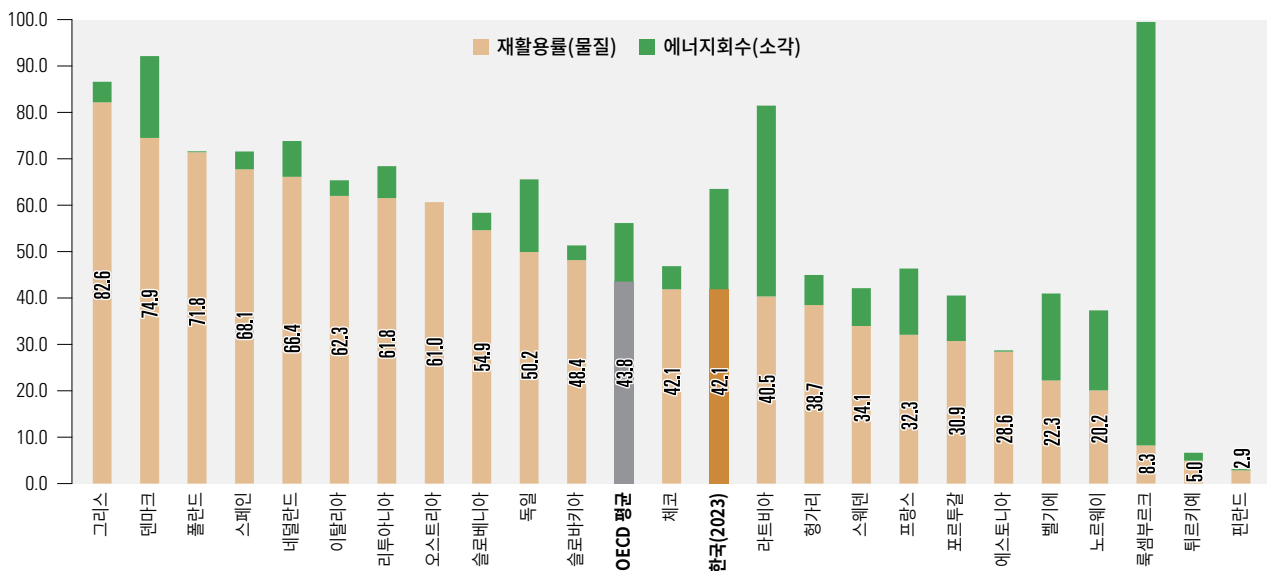
주2: 아이슬란드는 2020년 자료임

주3: 핀란드(5,267kg/인/년, 전년도 9.0배)는 이상치로 판단되어 제외함

주4: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은 제외함

OECD 국가별 유해폐기물 물질재활용률 및 에너지회수형 소각률,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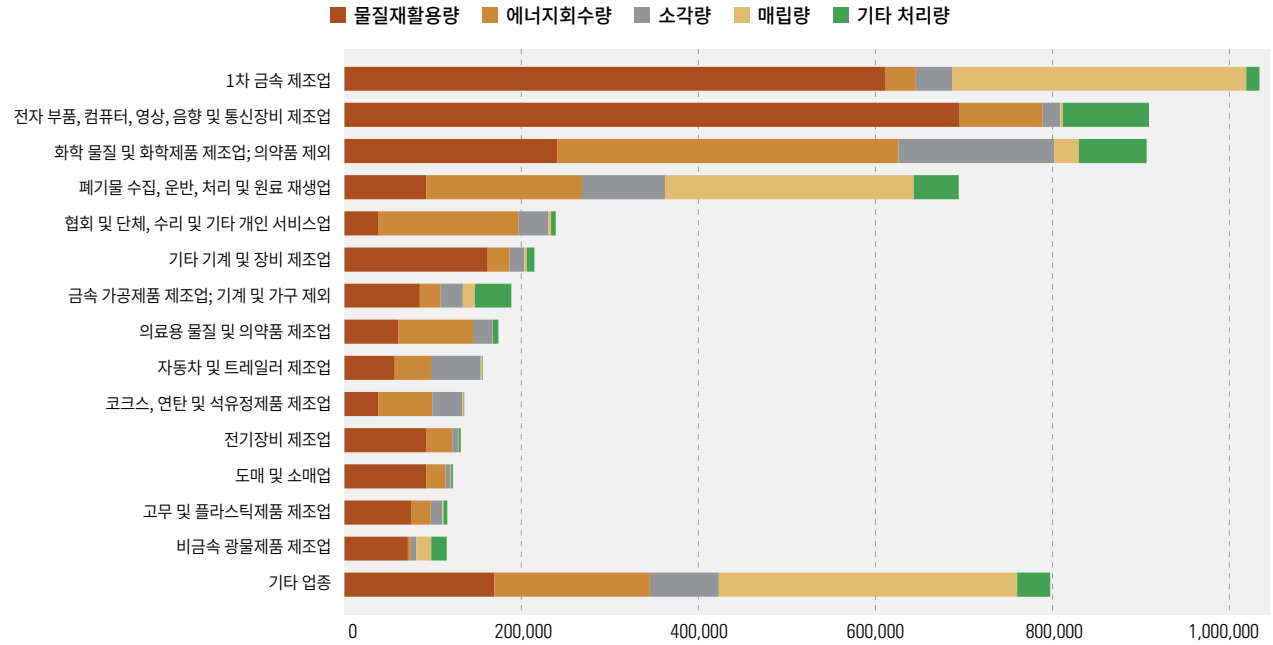
주1: 한국 자료는 국내 통계(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를 사용한 것이며, OECD 평균도 한국을 포함하여 산출함

주2: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은 제외함



업종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량,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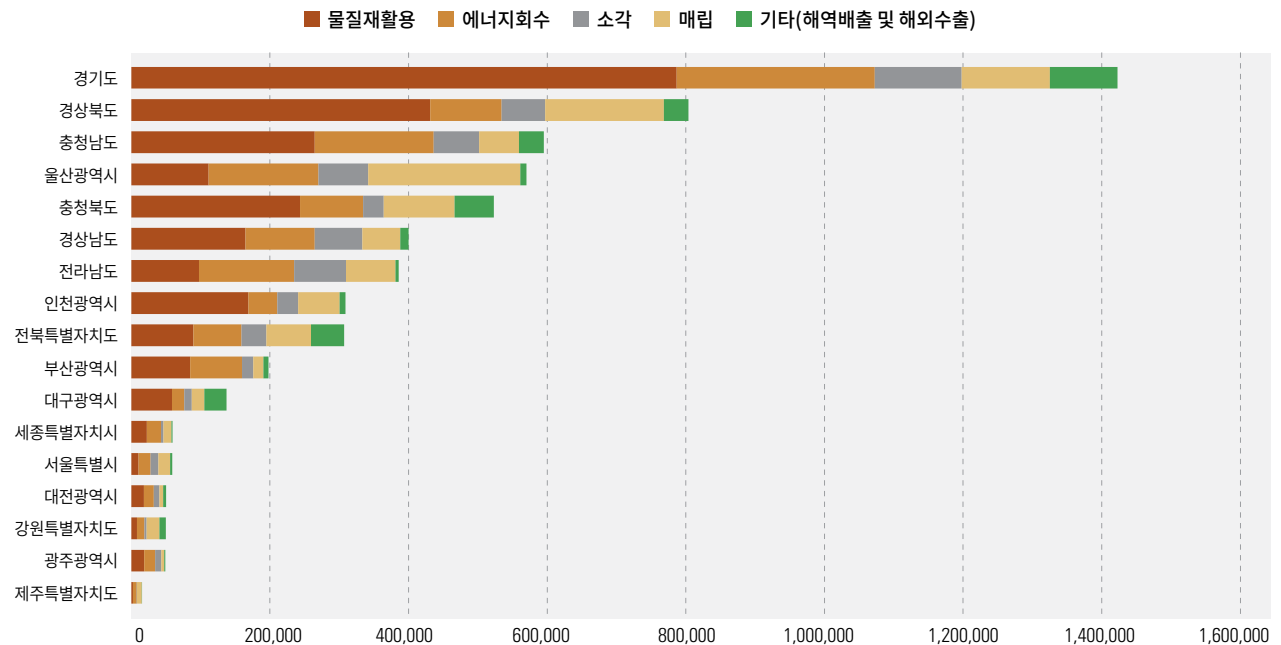
(단위: 톤/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2. 인출)

시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량, 2023

(단위: 톤/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5.11.2. 인출)

로 구분하여 공표하기 시작하였는데, 2023년 63.8%로 집계되는 재활용률 중 물질재활용률이 42.1%이고 나머지 21.7%는 에너지회수에 해당한다.

한국의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120 kg으로 나타난다. 이는 OECD 비교 대상 26개국 중 11위

로 중상위권 수준이다.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합산한 한국의 유해폐기물 재활용률(2023년 63.8%)은 2022년 OECD 평균(56.4%)보다 7.4%p 높다. 그러나 새로 공표된 물질재활용률(2023년 42.1%)로 비교하면 2022년 OECD 평균(43.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유해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발생과 처리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금속류를 다루는 두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과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지정폐기물 발생량에서 1, 2위를 차지한다. 이들 두 업종은 물질재활용률(각 59.2%, 76.5%)도 높다. 지정폐기물 전체 물질재활용량의 절반 이상이 두 업종에서 처리된 것이다. 반면 발생량 3위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물질재활용(26.5%)보다 에너지회수(42.6%)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고, 소각률(19.4%)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2만 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경북(80만 톤), 충남(60만 톤), 울산(57만 톤), 충북(52만 톤) 등의 순으로 발생량이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질재활용률이 에너지회수율보다 높는데, 발생량이 많은 경기와 경북에서 물질재활용률(각각 55.3%, 53.7%)이 특히 높다. 다만 이는 지정폐기물을 발생 지역에 따라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처리되는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지만, 최근의 유해폐기물 재활용률 감소와 매립률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물질재활용 확대와 매립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식량손실지수** : 식량의 생산 및 가공, 도매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지수(국가별로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손실률을 측정함)
- **식량폐기지수** : 식량의 소매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1인당 폐기량을 기준 연도 대비 해당 연도 값으로 산출한 지수
- **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 **유해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국내에서는 지정폐기물로 정의함)
- **사업장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13 CLIMATE ACTION



130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DG 13번 목표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등 기후위기와 그 영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과 극한기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기후 재정 목표의 이행과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경로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고, 최근 한층 강화된 감축 목표를 수립 하였다. 한편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한 사망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24년 총 121명(인구 10만 명당 0.24명)으로 집계

-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0.15명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0.27명과 0.24명으로 늘어남
- 201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폭염 피해는 2018~2024년 기간 자연재난 실종·사망의 68.7%를 차지하였고 2023년 85명, 2024년 10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속으로 경신

» 2015~2024년 기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연평균 5,191억 원(2024년 환산가격 기준)에 이르며, 2020년대 들어 더욱 증가하며 2024년에는 9,107억 원의 피해 발생

- 2015~2024년 기간 피해액의 60.5%가 호우, 23.3%가 태풍, 10.3%가 대설에 의해 발생
-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비율은 0.03%(2022년)로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

»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NAP), 기후 적응 보고 등을 이행 중

-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두 번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

»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720만 톤(CO₂eq)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

- 2018년 배출 정점 기록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 중이며, 2018년 대비 9.3% 감소
- 실질 GDP가 1.6% 증가함에도 총배출량은 2.1% 감소하여 GDP 대비 배출량 3.6% 감소
- 산업 부문(40.3%)의 감축은 0.1%에 불과하나, 전기와 열 생산 등을 포함하는 전환 부문(32.8%)에서 4.3% 감축으로 2023년 감축 성과를 이끌었고, 건물 부문(6.3%)에서도 6.0% 감축, 흡수량은 4.1% 증가
- 2022년 한국의 총배출량은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음

131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최고치 경신

(☉ 관련 지표 13.1.1)

SDG 세부목표 13.1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자연재난으로부터 회복력과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예·경보 시스템 등이 발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98년 이후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간 실종·사망자 수는 1998년 384명, 2002년 270명, 2003년 148명(인구 10만 명당 각각 0.82명, 0.56명, 0.31명)에 달하였으나 이후 줄어들어 2004~2022년 기간에는 연간 최대 78명(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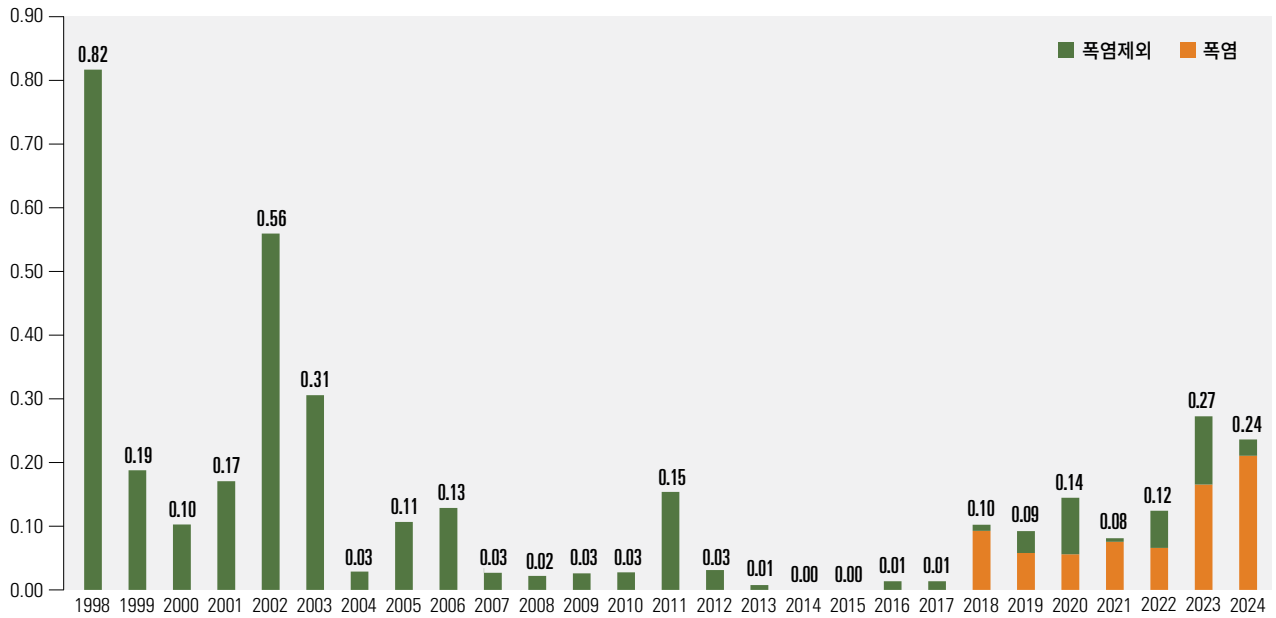
0.15명)에 그쳤다.

2018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정식으로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인명 피해 수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자연재난에 따른 실종·사망자 수는 연간 140명과 121명(인구 10만 명당 각각 0.27명, 0.24명)으로 이 전보다 증가하였다. 이 중 폭염 피해자가 85명(60.7%)과 108명(89.3%)을 차지하였다. 2018~2024년 기간에 발생한 자연재난 실종·사망자 중 폭염 피해자의 비중은 연도별 최소 38.7%에서 최대 92.9%(평균 68.7%)에 달한다. 최근 자연재난 인명 피해가 폭염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부터는 한파로 인한 피해



인구 10만 명당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 1998~2024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행정안전부, 2024 재해연보

주1: 연도별 자연재해 실종·사망자 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주2: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8년,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3년부터 집계함

자연재난 유형별 실종·사망자 수, 2015~2024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34	85	108	53.3
호우	-	1	7	2	-	44	3	19	53	6	13.5
태풍	-	6	-	2	18	2	-	11	-	-	3.9
대설	-	-	-	-	-	-	-	-	-	7	0.7
한파	미산정								2	-	1.0
태풍·호우	-	-	-	1	-	-	-	-	-	-	0.1
합계	0	7	7	53	48	75	42	64	140	121	55.7

출처: 행정안전부, 2024 재해연보

주1: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8년,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3년부터 집계함

도 집계되고 있는데, 2023년에 2명이 한파로 사망하였다. 2024년에는 한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폭염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는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연간 29~48명 수준에서 꾸준히 발생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명과 10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두 해 연속으로 경신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 열대야 등 관련 기상 지표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C에 달하며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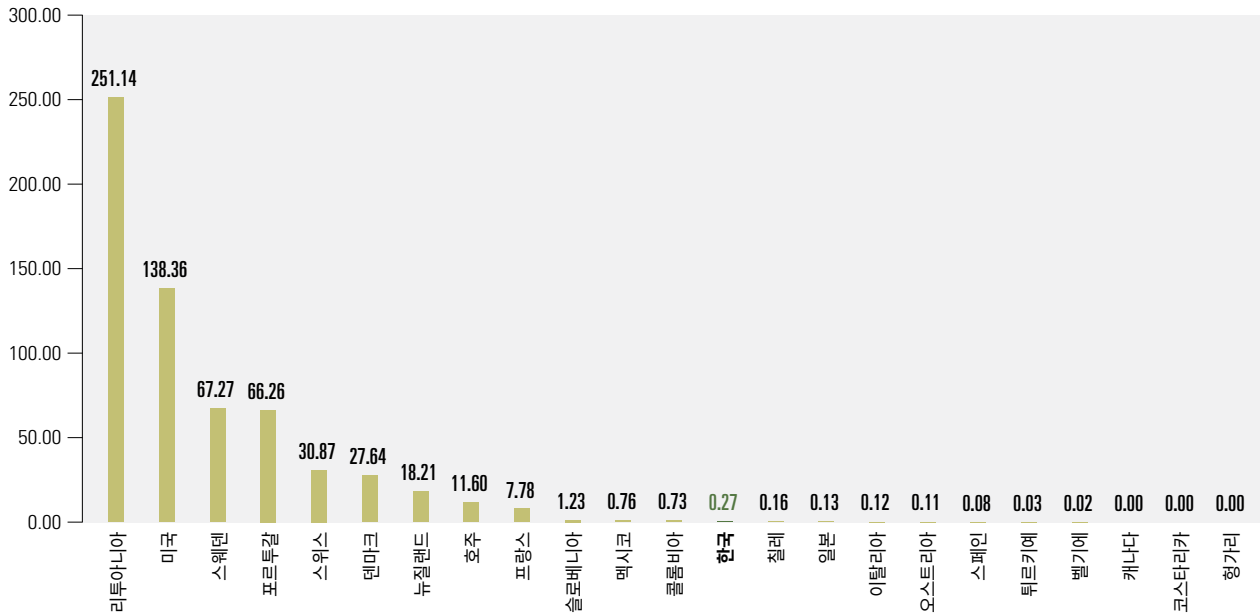
염 사망이 역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던 2023년(85명)과 2018년(48명)에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24.7°C와 25.3°C로 각각 역대 5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2024년과 2018년은 폭염일수에서도 전국 평균 24.0일과 31.0일로 역대 3위와 1위를 기록하였고, 이 두 해는 열대야일수에서도 20.2일과 16.5일로 역대 1위와 2위였다. 한편 2015년 이래 발생하지 않았던 대설에 의한 사망·실종자도 2024년에는 7명 발생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자연재난 피해 양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24년 여름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였고, 그 양상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국 주요 기상관측 지점 66곳 중 총 10곳에서 여름철 폭염일수 역대 1위를 경신하였고, 그중

경남 밀양과 합천은 49일에 달하였다. 반면 대관령과 백령도는 2024년에도 폭염으로 기록된 날이 없어 지역 간 편차를 보여 준다. 여름철 열대야일수도 전국 66곳 중 절반이 넘는 36곳에서 역대 1위를 경신하였고, 제주에서는

OECD 국가별 재난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실종자 수, 2023

(단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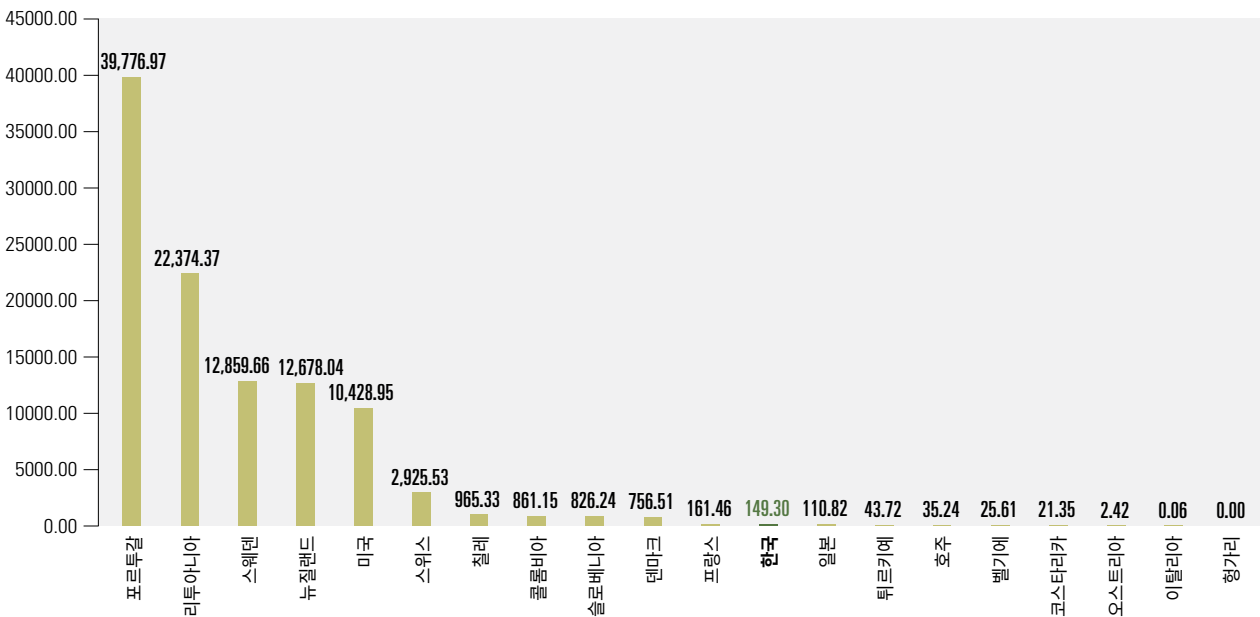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6. 인출)

주1 : 한국은 국내 통계 수치임

주2 : 리투아니아·미국·캐나다는 2021년, 스웨덴·포르투갈·스위스·일본·오스트리아·튀르키예·헝가리는 2022년 자료임

OECD 국가별 재난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직접 피해자 수, 2023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6. 인출)

주1 : 직접 피해자는 부상·질병, 주택 피해(파손·전파), 생계 피해 등을 포함하는 지표로 사망자 및 실종자 수와 별도 산출

주2 : 리투아니아·미국은 2021년, 포르투갈·스웨덴·스위스·한국·일본·튀르키예·오스트리아·헝가리는 2022년 자료임



무려 56일을 기록하였다. 태백, 대관령 등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하루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서울도 여름철 폭염일수가 27일(해당 지점 역대 3위), 열대야일수가 39일(해당 지점 역대 1위)로 나타나 도시 열섬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폭염 등 자연재해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강도와 빈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난은 지역별로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적응 능력을 더욱 향상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23년 기준 자료가 제공되는 OECD 2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리투아니아(251.14명, 2021년), 미국(138.36명, 2021년), 스웨덴(67.27명, 2022년), 포르투갈(66.26명, 2022년)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은 0.27명으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3년 자료가 제공되는 OECD 20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부상·질병, 주택 피해, 생계 피해 등을 포함한 직접적 피해자 수는 포르투갈(39,776.97명), 리투아니아(22,374.37명), 스웨덴(12,859.66명), 뉴질랜드(12,678.04명), 미국(10,428.95, 2021년)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은 149.30명(2022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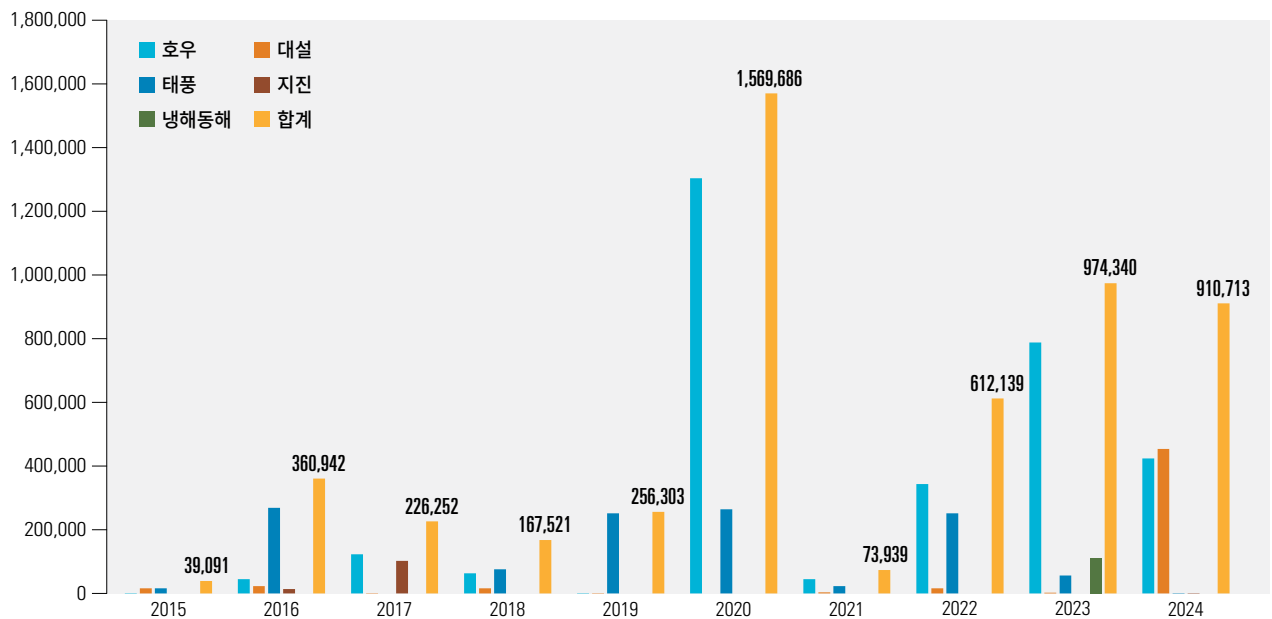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증가하며, 호우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관련 지표 11.5.2)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연평균 약 5,191억 원(2024년 환산가격 기준)에 이르며, 2020년대에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5~2019년 기간의 피해액은 연간 3,000억 원대 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1조 5,697억 원에 달하였다. 2022~2024년 기간에도 매년 6,000~9,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호우는 재산 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2024년 기간에 발생한 재산 피해 중 60.5%(연평균 3,139억 원)가 호우로 인해 발생하였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에 대비하는 물 인프라의 정비·확충 및 시설 안전의 강화가 요구된다. 호우 다음으로는 태풍 피해가 23.3%(1,211억 원), 대설 피해가 10.3%(534억 원), 지진 피해가 2.3%(117억 원), 그리고 냉해·동해 피해가 2.2%(112억 원)를 차지한다. 이 밖에 풍랑·강풍, 한파, 태풍·호우, 강풍, 병충해, 폭염, 우박, 낙뢰,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는 각각 1% 미만으로 집계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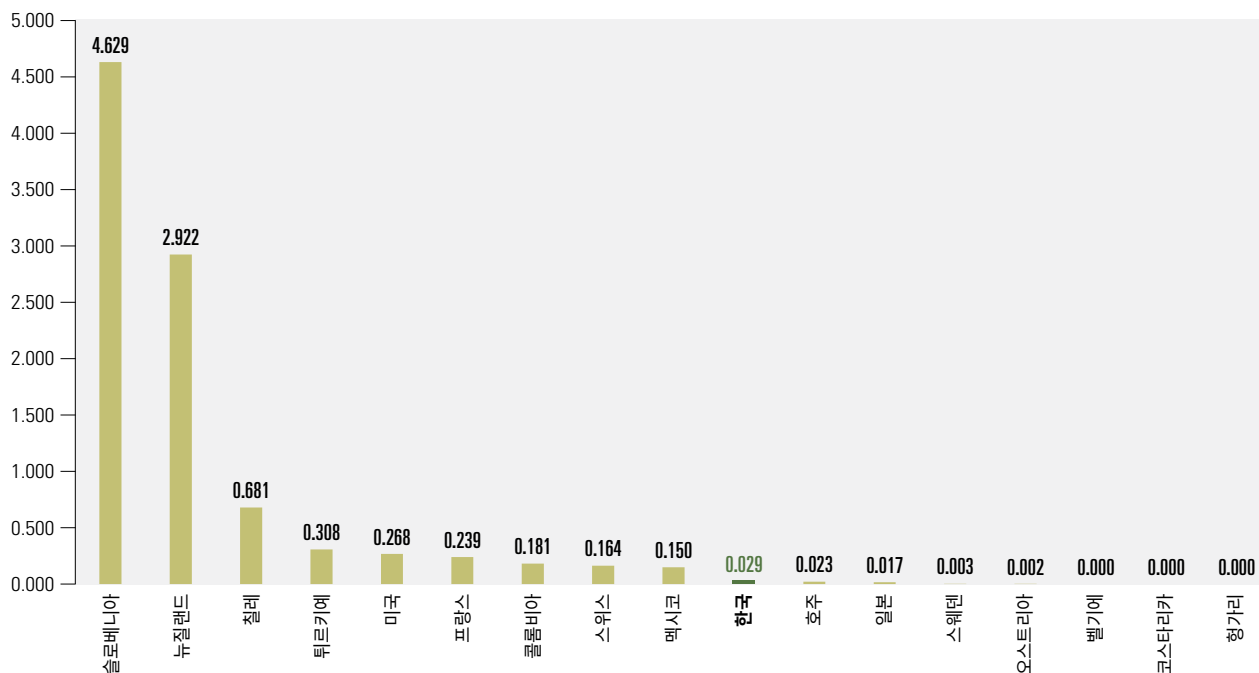
(단위: 100만 원)



출처: 행정안전부, 2024 재해연보

주1: 2024년도 환산가격 기준

주2: 유형별 피해액은 상위 5개 유형만 나타냄 (풍랑·강풍, 한파, 강풍, 병충해, 폭염, 우박, 낙뢰, 폭풍해일, 기타 등은 합계에 포함되나 별도 표시하지 않음)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7. 인출)

주 : 미국·오스트리아는 2021년, 튀르키예·스위스·한국·스웨덴·헝가리는 2022년 자료임

자료가 제공되는 OECD 17개국의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비율을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슬로베니아(4.63%)와 뉴질랜드(2.92%)에 이어 칠레(0.68%), 튀르키예(0.31%, 2022년), 미국(0.27%, 2021년), 프랑스(0.24%), 콜롬비아(0.18%), 스위스(0.16%, 2022년), 멕시코(0.15%) 등의 순으로 높다. 한국은 0.03%(2022년)로 재난 피해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다.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수립

(☞ 관련 지표 13.2.1)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각국은 기후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리협정에서 요구 또는 권고되는 핵심적인 수단을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T-LEDS),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NAP),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s, BTR), 그리고 기후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 등이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하향식으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 의무가 부과되었던 한계를 극복하여,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상향식 체제로 전환되었다. 파리협정 제4조에 근거하여 모든 당사국은 NDC를 ‘마련, 통보 및 유지’해야 하며, 5년마다 이전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국도 2021년 12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NDC를 UNFCCC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7억 4,230만 톤(CO₂eq)) 대비 53~61% 감축하는 더 강화된 목표(NDC)를 마련하여 202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목표는 기존의 총배출량 대신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 모두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최신 통계 기준(2006



IPCC 지침)을 반영하여 산정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은 2050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 비전이자 종합 전략이다. 5~10년 단위의 중기 목표인 NDC와 달리, LT-LEDS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약 30년의 장기 로드맵으로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전환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이는 중단기 목표만으로는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국의 장기적인 탈탄소 전환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은 2020년 12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이름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UNFCCC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를 국가 비전으로 공식화하였다. 여기에는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전략 등이 담겨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NAP)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적응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국가 계획으로, 2010년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마련된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왔다. 현재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년~2025년)’이 이행 중에 있다.

기후 적응 보고는 각국이 자국의 적응 우선순위, 정책·계획·이행 현황 및 지원 필요성 등을 UNFCCC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계획’(NAP)과 별도로 정책의 이행 현황과 성과 등을 국제 사회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소통 및 보고’(communication) 수단으로,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분야의 NDC와 균형을 맞추어 ‘적응(adaptation)’ 노력의 국제적 가시성을 높이고 전 지구적 이행 점검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파리협정 제7조 10항 및 11항에 따라 각국은 주기적으로 적응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NAP, NDC 또는 다른 국가 보고서 등과 연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2023년 3월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UNFCCC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년~2025년)’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의 기후변화 위험과 취약성 현황, 적응 정책의 이행 경과, 향후 계획 등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보고·공유하고 있다.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s, BTR)는 최근 파리협정 이행체계에서 중요성이 큰 보고서로, 강화된 투명성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하에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BTR에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NDC 이행 진전, 정책 및 조치, 기후영향과 적응, 재정·기술·역량지원, 역량강화 수요 등이 포함된다. 한국도 2025년 9월 30일 첫 번째 BTR을 UNFCCC에 제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NAP), 기후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등 파리협정 체계에서 요구되는 주요 보고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이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고 국제적 보고 체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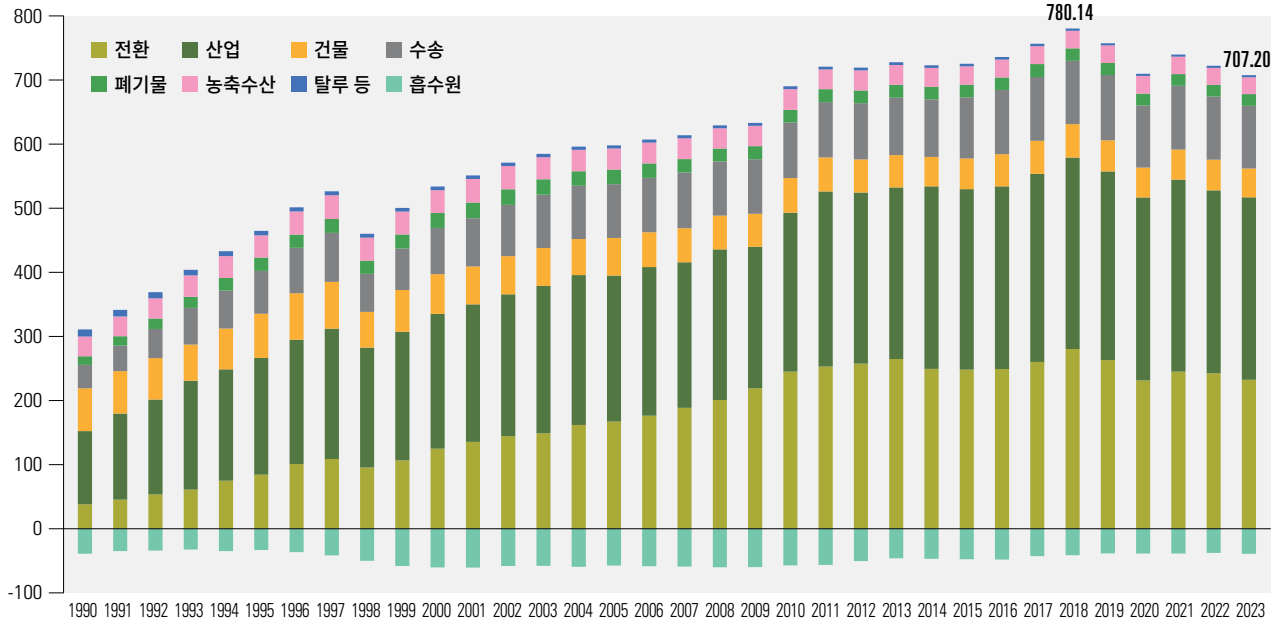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년 대비 2.1% 감축

(📍 관련 지표 13.2.2)

한국의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720만 톤(CO₂eq)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2018년 7억 8,014만 톤으로 배출 정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과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총배출량은 배출 정점이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기준 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9.3% 감소한 것이다. 같은 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대비 2.1% 감소한 13.7톤(CO₂eq)으로 집계된다. 한편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총배출량은 2.1% 감소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23

(단위: 100만 톤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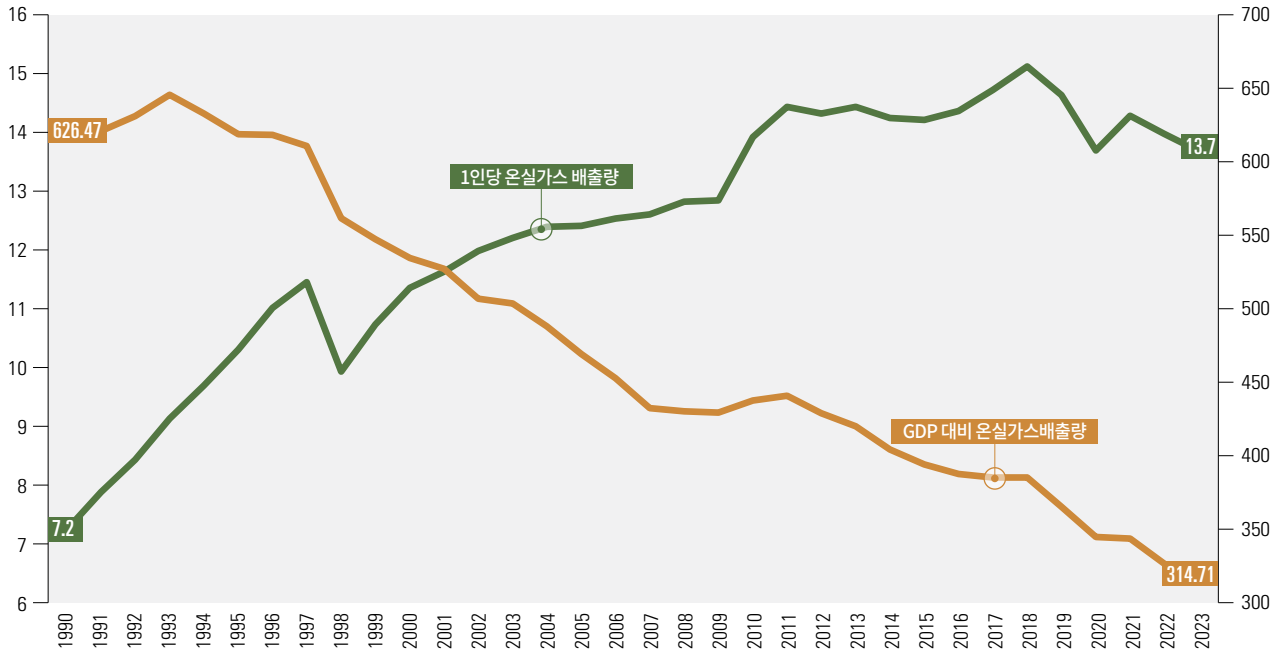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 2025.12.26. 인출)

주 : 2006 IPCC 지침 기준

1인당 및 G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3

(단위: 톤CO₂eq/인, 톤CO₂eq/10억 원)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 2025.12.26. 인출)

주 : 2006 IPCC 지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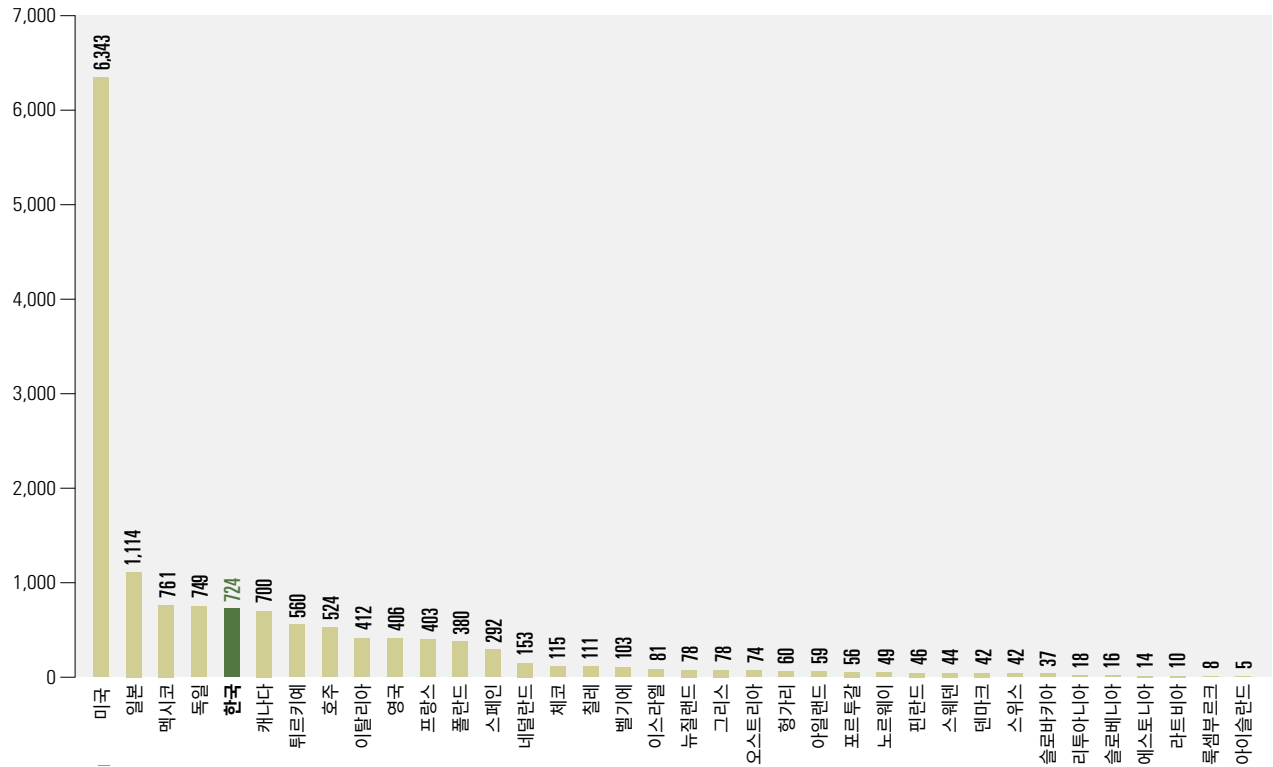
였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23년 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전년 대비 3.6% 감축된 314.7톤(CO₂eq)에 그친다. 이는 2019년부터 5년째 감소

한 것이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과 비교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질 GDP가 10.9% 증가하는 동안 총배출량은 9.3% 감소한 것으로, GDP 10억 원당 배출량은 2018년 385.0톤(CO₂eq)에서 18.3% 감소하였다.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22

(단위: 100만 톤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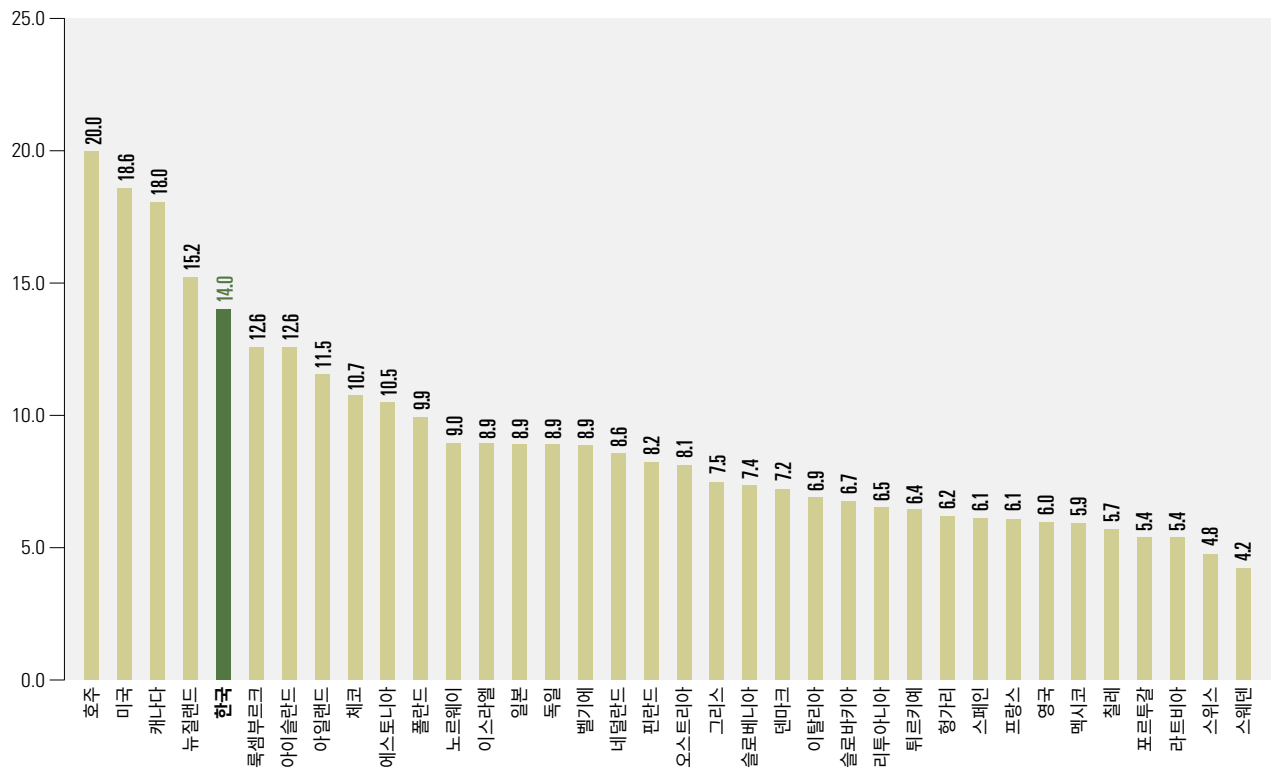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6.2.8.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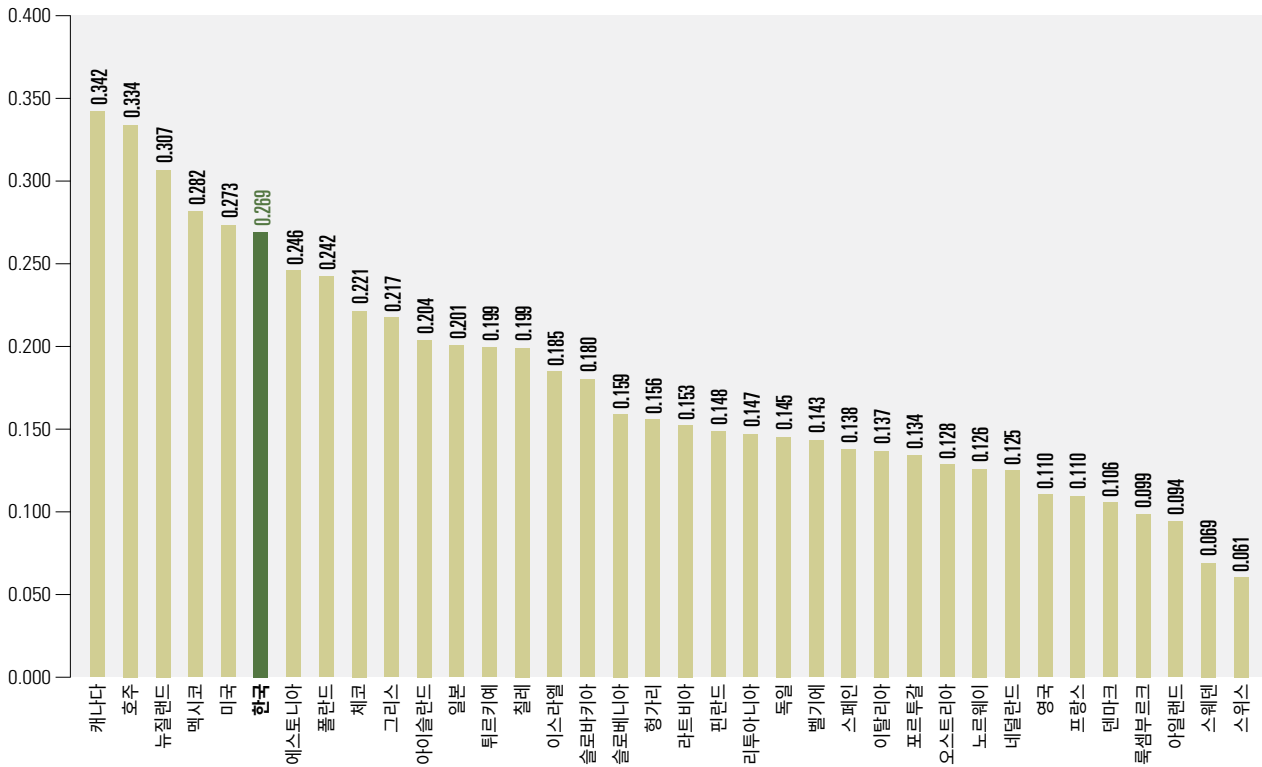
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022

(단위: 톤CO₂eq/인)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15.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제외함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15. 인출)

주1 : 2020년 불변가격 PPP 기준

주2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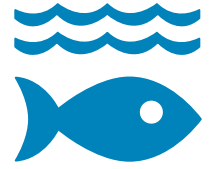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탈루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보면 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2억 8,481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40.3%에 해당하는데, 전년 대비 감축률은 0.1%에 불과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와 열 생산 등을 포함하는 전환 부문이 32.8%(2억 3,209만 톤)를 차지한다. 전환 부문의 감축률은 전년 대비 4.3%에 달하면서 2023년 감축 성과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년 대비 1,483만 톤의 총감축량 중 1,035만 톤이 전환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전력수요가 줄어들며 총발전량이 1% 감소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무탄소 발전량이 늘어난 것이 전환 부문 배출량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총배출량의 13.8%(9,783만 톤)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감축률이 0.8%에 불과하다. 총배출량의 6.3%(4,485만 톤)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률이 6.0%로 가장 높는데,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 사용량 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 폐기물, 탈루 부문은 각각 3.7%(2,621만 톤), 2.6%(1,817만 톤), 0.5%(324만 톤)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감축률은 각각 1.3%, -0.3%, 4.7%로 집계된다. 한편 산림, 농경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3,9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흡수량을 반영한 2023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억 6,77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수치가 제공되는 OECD 36개 국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비교하면 2022년 기준 미국(63억 4,321만 톤), 일본(11억 1,404만 톤), 멕시코(7억 6,135만 톤), 독일(7억 4,879만 톤)에 이어 한국(7억 2,429만 톤)이 다섯 번째로 많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호주(20.0톤), 미국(18.6톤), 캐나다(18.0톤), 뉴질랜드(15.2톤)에 이어 한국(14.0톤)이 다섯 번째로 많다.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캐나다(0.342톤), 호주(0.334톤), 뉴질랜드(0.307톤), 멕시코(0.282톤), 미국(0.273톤)에 이어 한국(0.269톤)이 여섯 번째로 많다.



14 LIFE BELOW WATER



14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SDG 14번 목표는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유일한 목표이다. 바다는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식량을 제공하는 등 지구 위의 생명에게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불법어업과 남획, 해양 오염과 생물다양성 훼손, 그리고 기후변화 등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 세계의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아직도 9.65%에 불과하다. 한국도 해양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 불법어업 방지,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 보호 지역 비율이 아직 낮고 연근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의 수산자원에는 뚜렷한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 해양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2024년 42.95%로 2004년 27.59% 대비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64.86%에는 미치지 못함

- 해양 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이 2025년 2.27%로 OECD 32개 연안국 중 28위 수준이며 육상 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17.72%)보다도 낮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2030년까지 30% 목표 달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중

» 유엔해양법협약 중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국가관할권 외 지역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이 2026년 1월 발효

- 한국도 2025년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고,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준비 중

» 2000년대 이래 연근해어업의 대표적 대중성 어종인 살오징어, 멸치 등의 생산량이 줄고 방어류, 삼치류 등 난류성 어종 생산량은 증가하는 등 수산 자원량의 변동이 뚜렷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업자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974년 90.0%에서 2021년 64.5%로 크게 감소하였고, 한국이 포함된 북서태평양 해역도 2004년 90.0%에서 2021년 63.0%로 감소

» 불법적 어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이행 수준은 2018년 5점 만점 중 5점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원양어선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2022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국내어업에서도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제재를 시행 중이며,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에서 2024년 931건으로 감소
-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건수도 2015년 378건에 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70건 미만으로 감소

해양 보호지역 비율 점진적 증가

(📌 관련 지표 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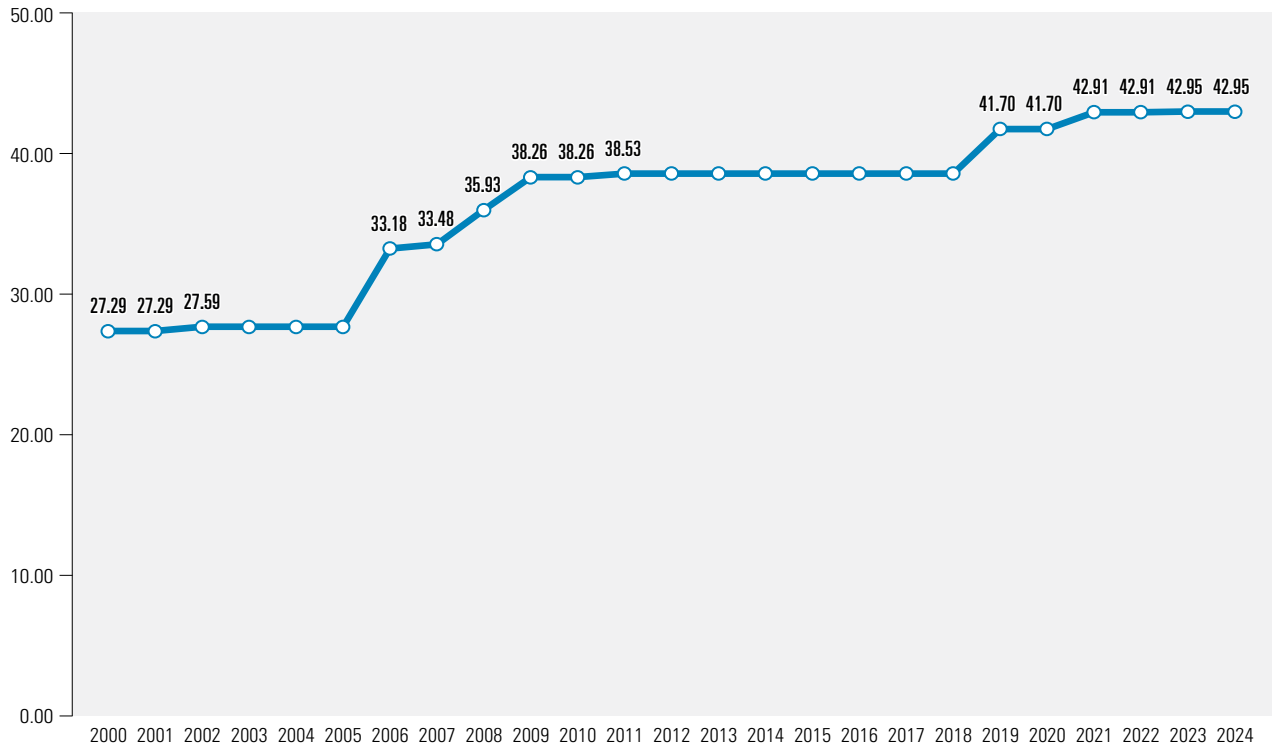
SDG 14.5.1의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해양의 중요생물 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 중 보호지역(Protected Area, PA)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로 측정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이란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한국의 해양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중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2004년 27.59%, 2014년

38.53%, 2024년 42.95% 등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는 2024년 기준 OECD 32개 연안국 중 26위에 불과한 하위권 수준이며, 32개국 평균인 64.86%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전 세계 국가의 평균 해양 보호지역 비율인 46.00%에는 근접해 있다. 다만 증가 속도로 보면 한국의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2004~2024년 기간 15.35%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의 증가 폭(16.44%p)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 비율, 200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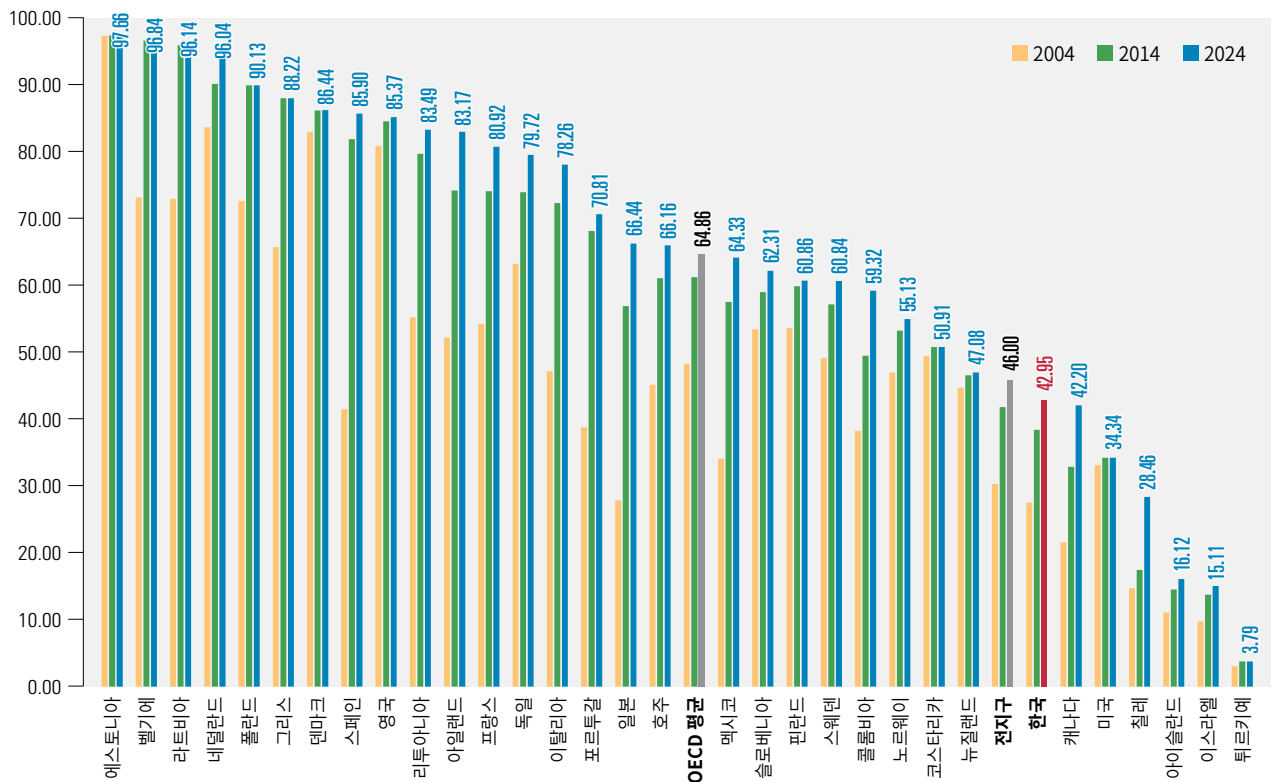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18. 인출)

주 : IUCN에서 정의하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42

OECD 국가별 해양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대비 보호지역 비율, 2004, 2014,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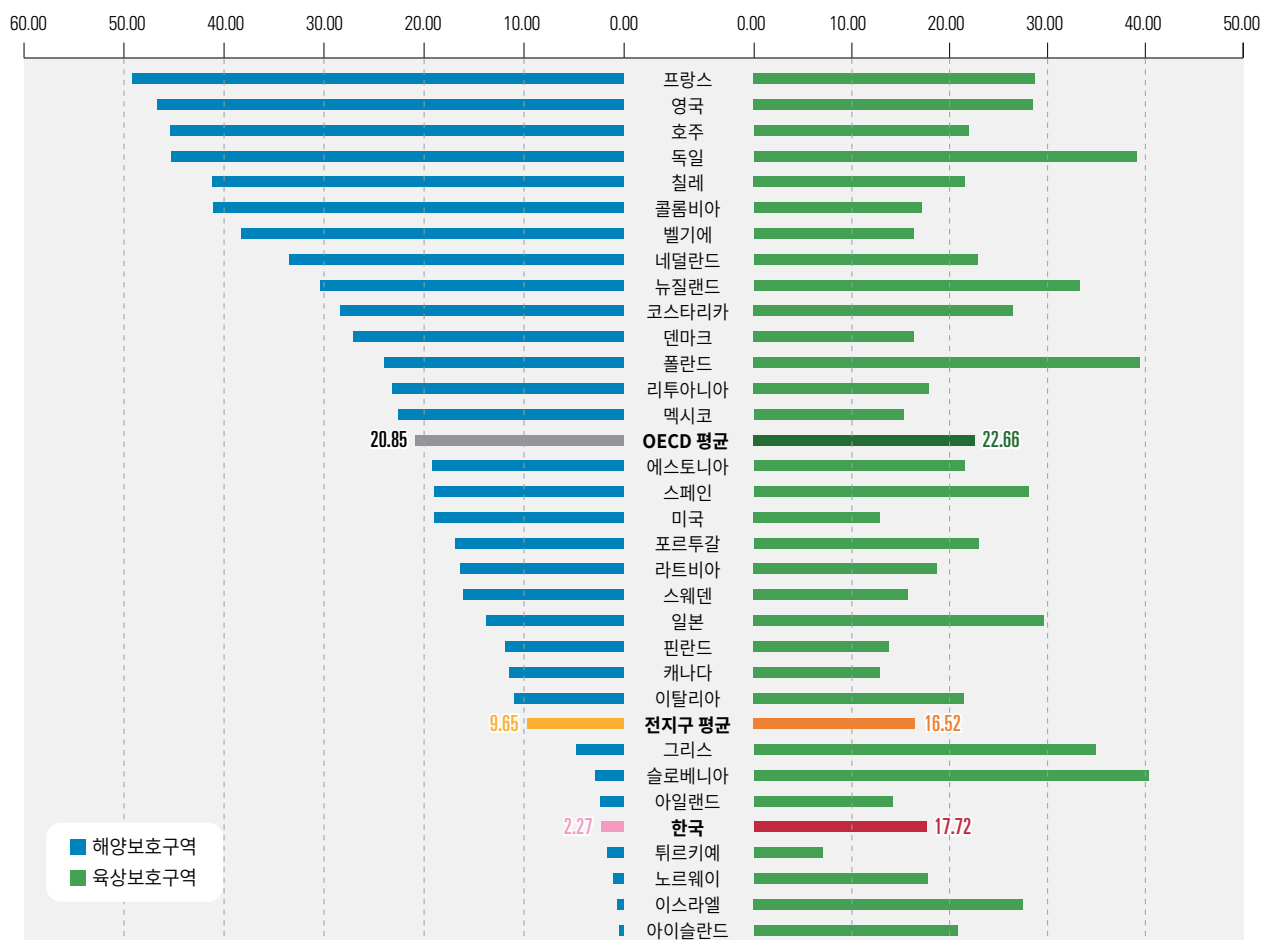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18. 인출)

주1 : IUCN에서 정의하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주2 : OECD 평균은 6개 내륙국(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을 제외한 32개 연안국 평균임

OECD 국가별 해양 및 육상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2025

(단위: %)



출처: UNEP-WCMC,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https://www.protectedplanet.net/en/thematic-areas/wdpa?tab=WDPA>, 2025.11.4. 인출)

주1 : 국가별 해양 또는 육지 전체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이며, 해양은 해양 및 연안 보호지역, 육상은 육상 및 담수 보호지역을 나타냄

주2 : OECD 국가 중 6개 내륙국(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을 제외한 32개 연안국임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SDG 14.5.1의 보호지역 비율 지표와 별도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는 육상과 해양 지역 전체 면적의 각각 30% 이상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설정된 보호지역 면적을 살펴 보면, 2025년 기준 OECD 32개 연안국의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평균 20.85%로, 프랑스 49.24%에서 아이슬란드 0.46%까지 국가 간 편차가 크다. 한편 이들 국가의 육상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평균 22.66%로 해양보다 약간 높으며, 슬로베니아 40.44%에서 튀르키예 7.03%까지 국가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국제 사회에서 정한 목표는 2030년까지 해양과 육상 보호지역 비율 모두 30%를 달성하는 것인데, 2025년 기준 전 세계 평균

은 아직 해양 9.65%, 육상 16.52%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OECD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국의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2025년 기준 2.27%로 OECD 32개국 중 28위에 그친다. 육상에서의 비율이 17.72%로 22위인 것과 비교하면 해양에서는 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해양 보호지역 면적이 2025년 총 7,887km²로 육상 보호지역(1만 7,954km²)의 약 44% 수준인 데다 해양 면적이 육상 면적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보호지역 비율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한국은 2023년에 마련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해양과 육상의 30% 보호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제주도 관탈도 주변의 1,075.08km² 해역을 신규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륙별 유엔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BBNJ) 비준 당사자(2026.1.31. 기준)

아프리카(18개국)	아메리카(20개국)	아시아(15개국)	유럽(20개국)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세이셸, 시에라리온	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그레나다,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동티모르, 튀르키예, 베트남	알바니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중동(3개국)	오세아니아(8개국)	국제기구(1개)	총 85개국
요르단, 카타르, 팔레스타인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유럽연합	

출처: UN,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I-10&chapter=21, 2026.2.9. 인출)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발효 (🔗 관련 지표 14.c.1)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 중에서 64%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바다를 ‘공해(公海)’라고 한다. 그동안 이 넓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국제적 규범이 부족하였다. 2023년 6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이를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이라 부른다. 정식 명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BNJ 협정은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심해저 이행협정(1994년 채택), 공해어업 협정(1995년 채택)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해양 유전자원 관리와 공정한 이익 공유, 둘째, 해

양 보호지역을 비롯한 구역 기반 관리 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셋째, 해양 환경영향평가, 넷째,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이다. 특히 두 번째 내용인 해양 보호지역은 앞서 살핀 14.5.1 지표와 직접 연관된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자국 연안의 해양 보호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더하여, 이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공해와 심해저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BBNJ 협정이 채택되고 90일 후인 2023년 9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9월 19일 60번째 국가의 비준이 이루어져 발효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로부터 120일 뒤인 2026년 1월 17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총 145개국에서 서명하고 85개국에서 비준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 협정에 2023년 10월 31일 서명하고 2025년 3월 19일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지금은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관련 지표 14.4.1)

SDG 14.4.1 지표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어족자원의 비율(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biologically sustainable levels)로, 해양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자원 중 어획 활동 대상이 되는 어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지를 측정한다. 이와 관련된 한국의 어업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한국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 1980년대(1980~1989년) 연평균 151만 톤 수준에서 2000년대(2000~2009년) 116만 톤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최근 2020년대(2020~2024년) 들어서는 91만 톤 수준으로 다시 한번 급감하였다. 2024년에는 연간 84만 톤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에는 고등어, 살오징어, 멸치 등이 있는데, 특히 살오징어와 멸치는 2000년대 이후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최근 생산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살오징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20만 톤을 넘나들었으나 2017년부터는 10만 톤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만 4천 톤으로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하며 급감하였다. 멸치는 1995~2015년간 연간 19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대에는 연평균 15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2만 톤으로 줄었다.

반면 주요 난류성 어종인 방어류, 삼치류, 전갱이류는 지난 40여 년간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방어류는 1980년대 초반 연간 2,000~3,000톤 내외에 불과하였지만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부터 연간 2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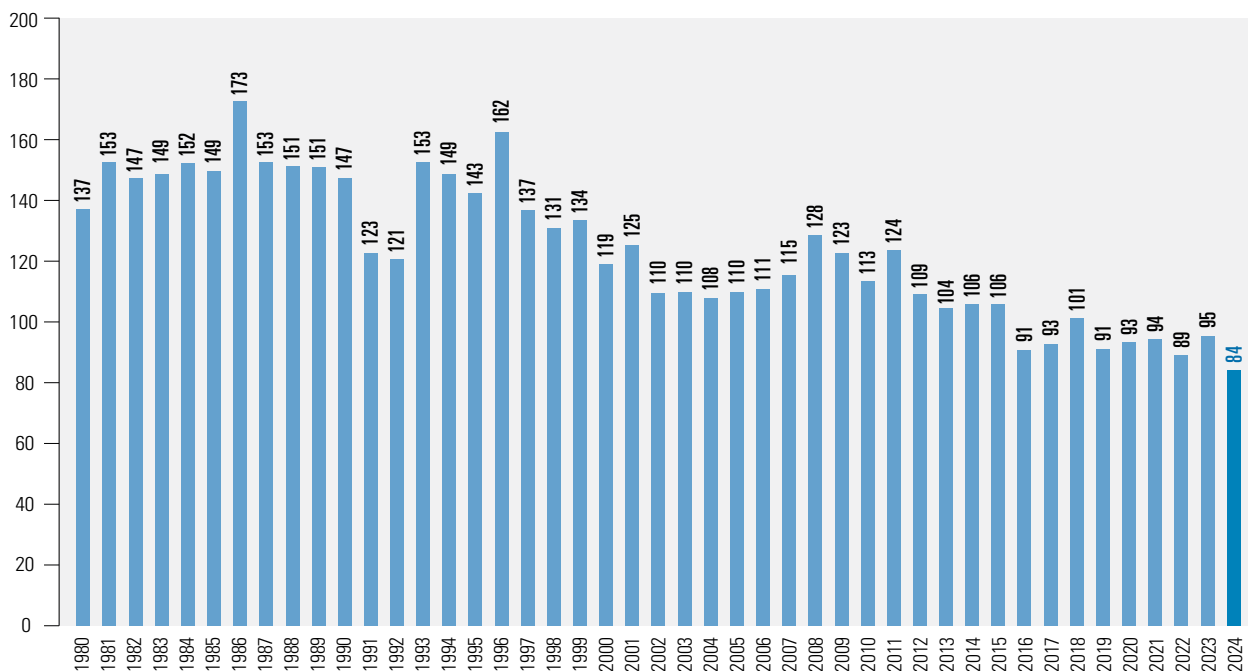
톤 넘게 생산되고 있다. 삼치류도 1980년대 연간 1~3만 톤 수준에서 2020년대 연평균 3만 6,000톤을 넘어섰다.

이처럼 대표적인 대중 어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해역의 변화로 수산 자원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어획량/표준화 톤수’로 나타내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자원량 지수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뒤 낮은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국립수산물학원, 2025). 한국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평가를 통한 연근해 자원 현황의 파악, 감소·고갈 어종의 회복, 연근해 서식 환경 개선, 미성어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종별 어획량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한도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확대해 오고 있다. 2019년에 수립된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는 2017년 25%였던 TAC 관리 대상종의 어획 비율을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980~2024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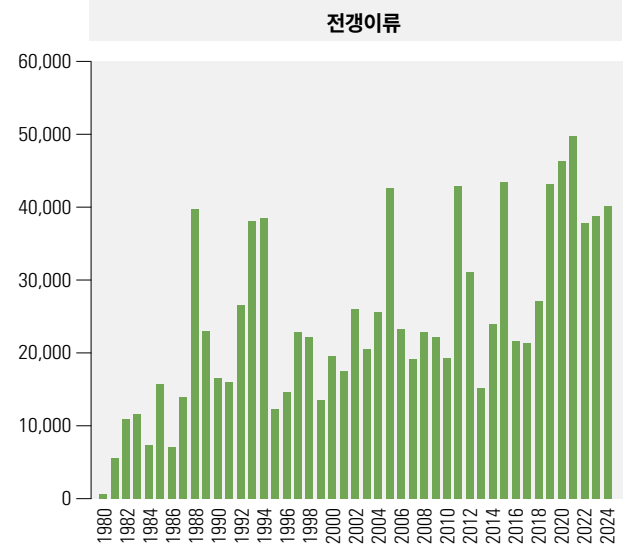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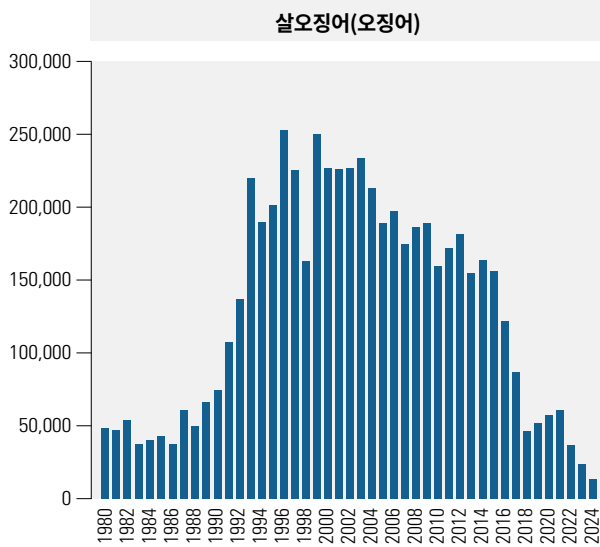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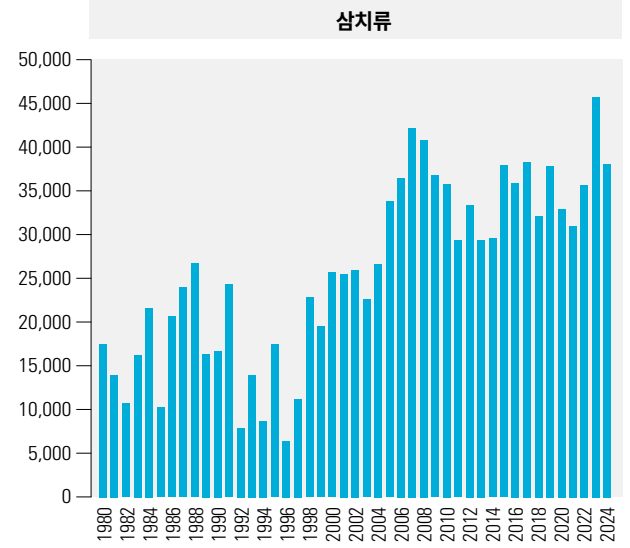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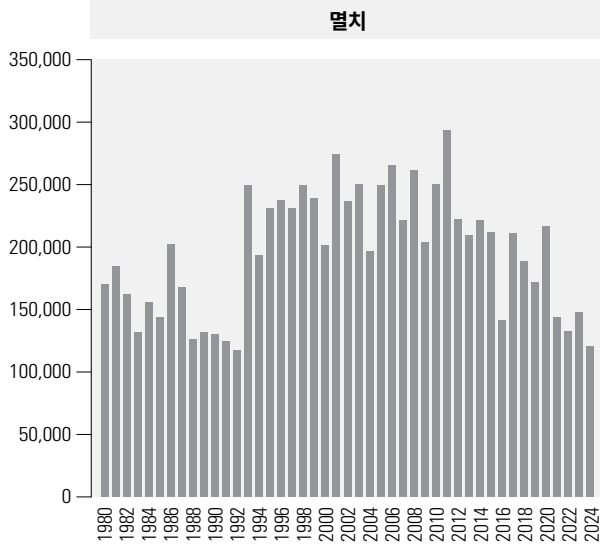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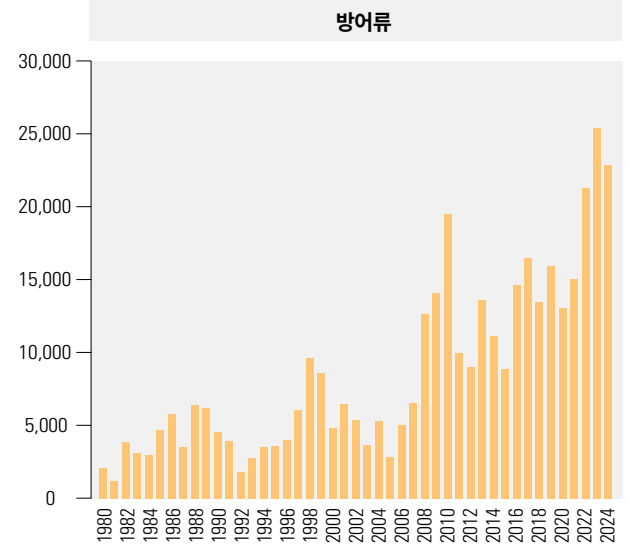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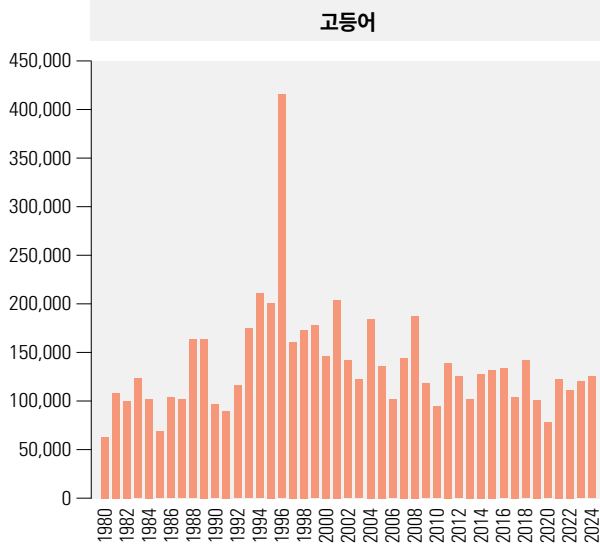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 2025.8.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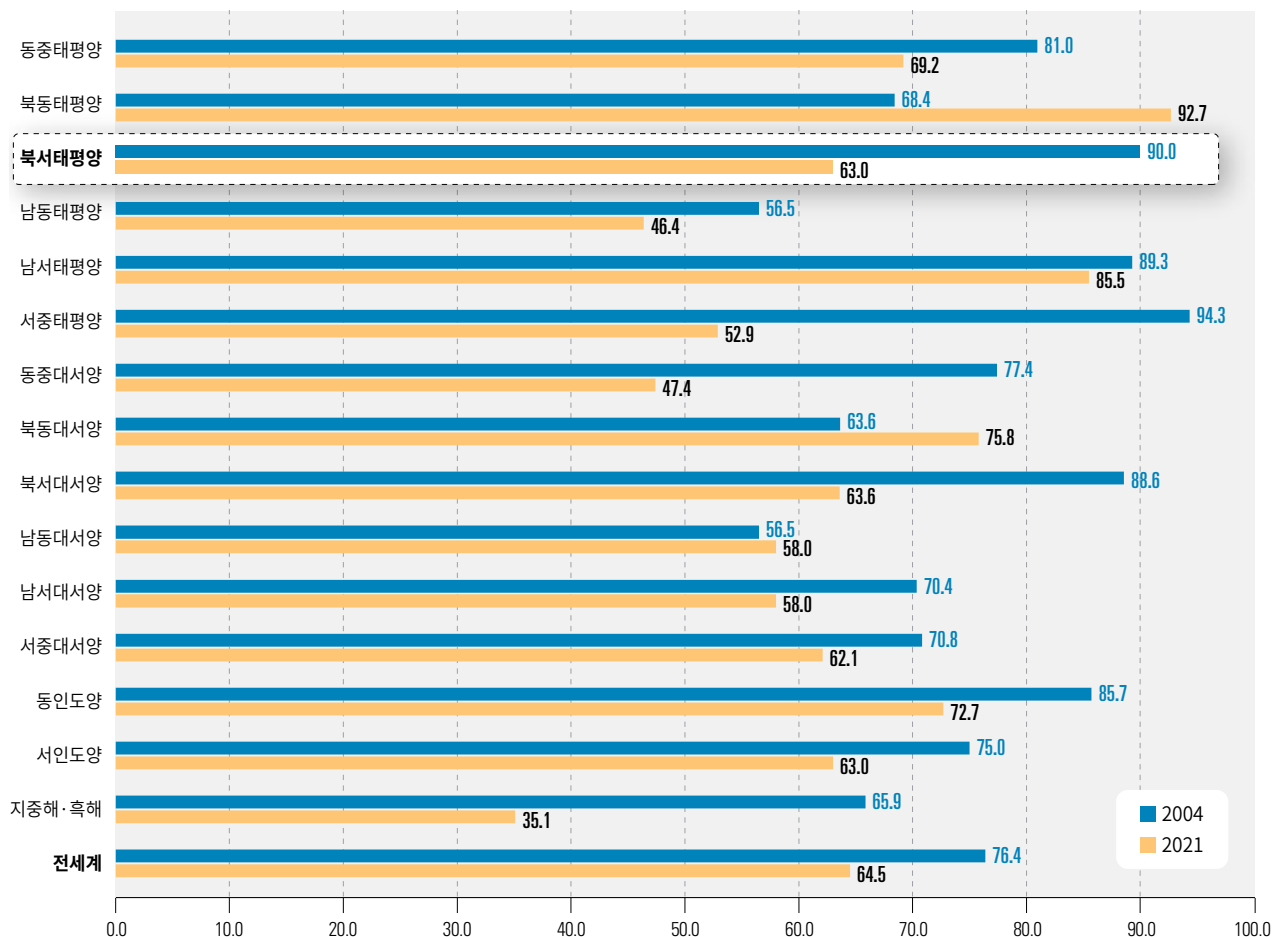


주요 어종별 연근해어업 어획량, 1980~2024

(단위: 톤)



출처: 국가데이터처,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 2025.8.21. 인출)



출처: FAO, FAO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fao.org>, 2026.2.10. 인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04만 톤으로 조사된 연근해 자원량을 최대 지속가능 생산 자원량으로 추정된 503만 톤으로 2030년까지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서는 대상 어종별로 연간 허용가능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1999년에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등 4개 어종과 대형선망, 근해통발 등 2개 업종으로 시작하여 2024년부터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TAC의 적용 대상이 10톤 미만의 소규모 연안어업까지 확대되면서, TAC를 즉시 이행하기 힘든 소규모 어업인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여 준비(1단계), 연습(2단계), 정착(3단계)의 단계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준비) 어종은 꽃게와 붉은대게이며, 연안어업을 포함한 다양한 어업에서 TAC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려는 핵심 관리 대상이다. 2단계(연습)에 해당하는 어종과 업종은 새롭게 TAC 제도에 편입되거나 적용 업종이 확대된 어종(일부 특정 어업 방식으로 어획되는 멸치, 살오징어, 갈치, 삼치 등)이며, 3단계(정착) 대상 어종은 15개 주요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갈치, 참조기, 삼치 등)이다.

SDG 14.4.1 지표인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업자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974년 90%에서 2004년 76.4%, 2021년 64.5%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북서태평양 해역(FAO 61 어장)은 이들 국가가 공유하는 어장으로, 회유성 어종의 경우 공동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이 포함된 북서태평양 해역의 생물학적 지속가능 어업자원 비율도 2004년 90.0%에서 2021년 63.0%로 감소하였고, 2021년 기준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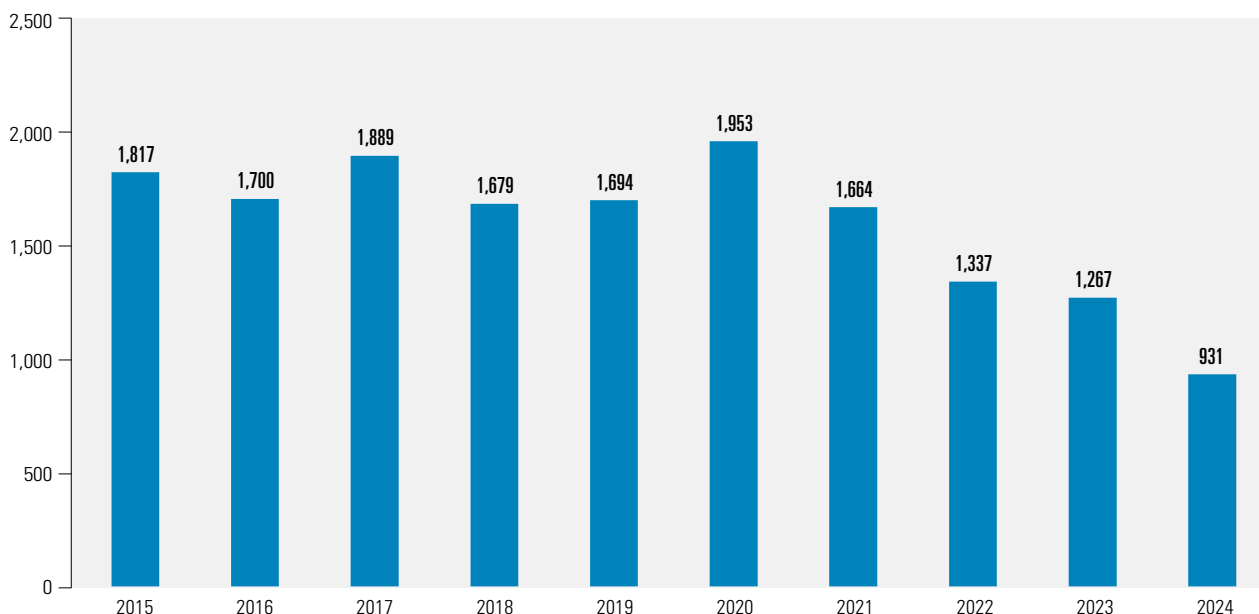
불법어업 적발 건수 감소세 (🔗 관련 지표 14.6.1)

SDG 14.6.1 지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이행 수준을 다룬다. 여기서 국제 규범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어족자원협정(UNFSA),

항만국조치협정(PSMA) 등 IUU 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국제 조약 및 행동계획을 의미한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의 이행 수준을 1~5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한다. 2024년 전 세계의 IUU 관련 국제 규범 이행 수준은 평균 4점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불법어업 단속 건수, 2011~2024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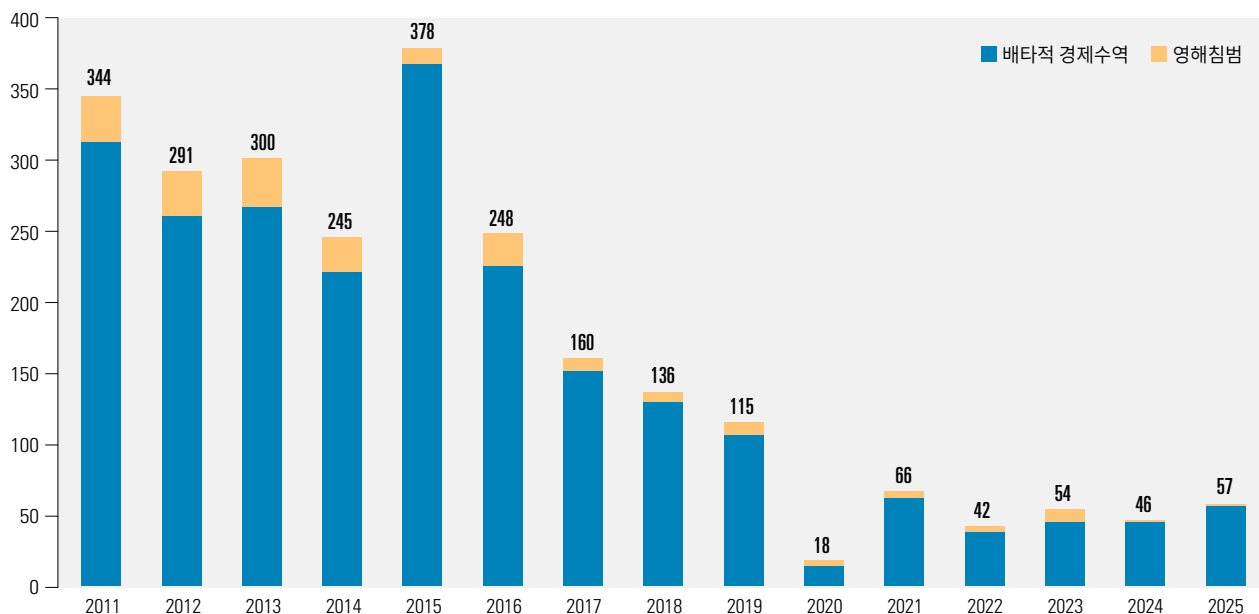


출처: 해양수산부, 연근해 불법 어업 단속 현황, (<https://www.mof.go.kr>, 2026.2.26. 인출)

주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등의 위반에 대한 어업관리단 또는 지자체의 단속 건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건수, 2011~2024

(단위: 건)



출처: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https://www.index.go.kr>, 2026.2.26. 인출)

국 중 일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점, 같은 기간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4~5점과 3~4점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2018년 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 협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에 의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2022년부터 매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원양어업뿐만 아니라 국내어업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서 실효적 제재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 기존 행정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각종 보조 자격 제한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타 업종 대비 불법어업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 감척을 추진하

고, 5년의 허가 기간 중 3회 이상의 불법어업 적발 시 해당 어선의 허가를 2년간 제한하고 직권으로 감척하여 불법조업 어선의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국내 불법어업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20년 연간 1,953건에 달하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24년에는 931건에 그쳤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에 전자모니터링(EM)을 도입,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중국 등의 해역과 접해 있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단속하고 있다. 2015년 연간 378건에 달하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 간의 노력과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사법권 행사로 인해 이후 급격하게 줄어 2020년부터는 연간 70건을 넘지 않고 있다.



15 LIFE ON LAND



150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DG 15번 목표에서는 육상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면적의 감소는 계속되나 그 속도가 둔화되었고, 산호, 소철, 잠자리, 게 등 여러 주요 생물종이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보호 비율은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꺾인 상태이다. 한국에서도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보호지역 지정은 뚜렷이 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와 회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개도국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련 ODA에도 힘쓰고 있다.

» 한국의 육상, 담수, 산악 생태계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2024년 기준 각각 40.7%, 36.6%, 20.2%로, 이는 OECD 평균(65.0%, 66.6%, 61.2%)이나 전 세계 평균(44.6%, 43.7%, 41.4%)보다 낮은 수준

-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이 늘고 있지만 OECD나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000년 대비 증가 속도가 낮아 중요생물다양성 지역 보호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국가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 정책·계획 및 재정 체계에 생물다양성을 통합하여 주류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2023)을 통해 여러 법정 계획에 생물다양성을 반영하고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기반의 자연자본 계정과 생태계 계정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
- 세계적으로 환경경제통합계정 이행국은 2014년 54개국에서 2024년 94개국으로 늘어남

»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ODA는 2023년 3억 6,792만 달러 수준으로, 최근 3년간 크게 확대됨

- 2022~2023년 한국의 양자 ODA 중 생물다양성 관련 비율은 약 7.2%에 달하였으며, 중점 협력 분야로서 그린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151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 강화 필요

(📌 관련 지표 15.1.2 / 15.4.1)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SDG 15.1.2 지표는 육상 및 담수에서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KBA) 중 보호지역(Protected Area, PA)으로 지정된 면적의 비율이며, SDG 15.4.1 지표는 산악 지역에서의 비율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1) 생물종 또는 생태계 단위의 멸종 위험 (2) 고유종 등 지리적 분포가 제한된 종, 군집, 생태계의 보전에의 기여도 (3)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기능하는지의 온전성(integrity) (4) 대규모 번식, 월동과 같은 집합행동 등 핵심 생물학적 과정에의 기여도 (5) 해당 지역에서만 보전될 수 있는지의 대체 불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즉 중요생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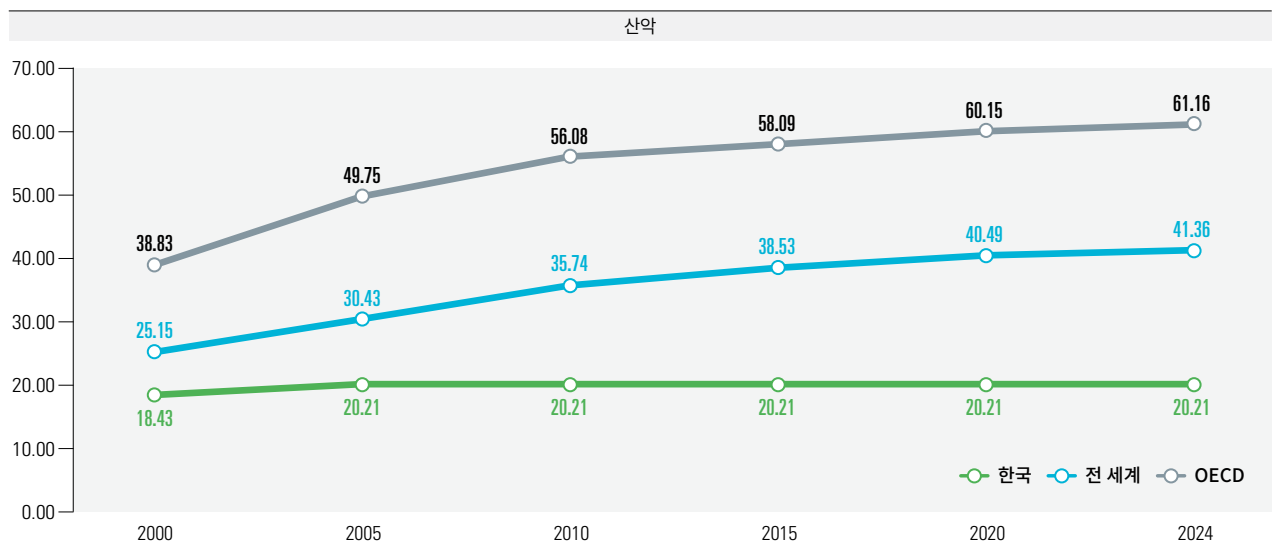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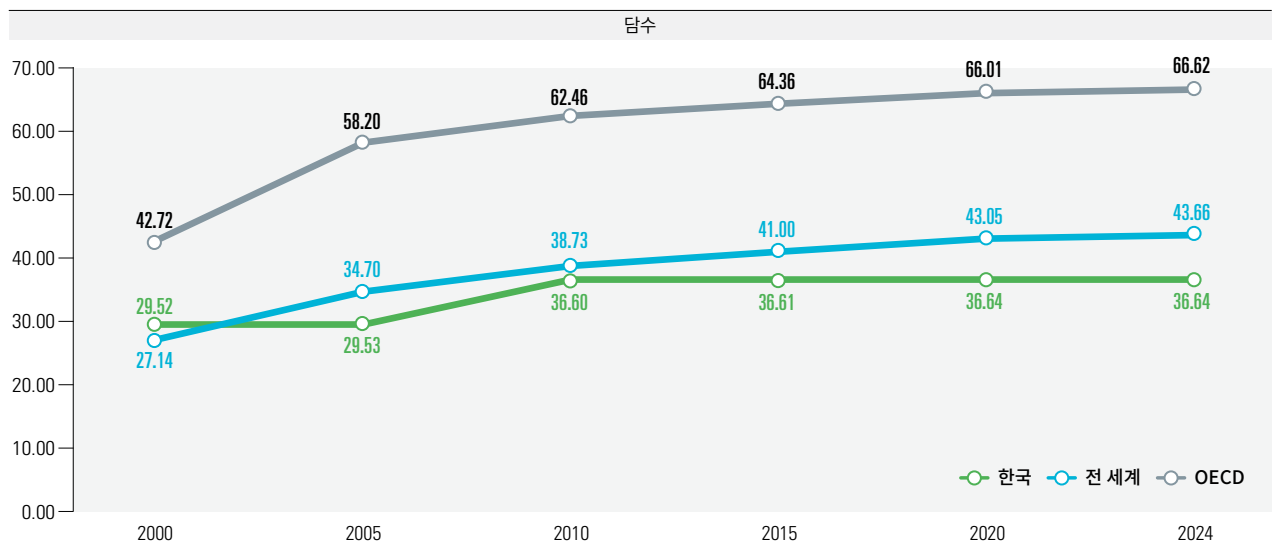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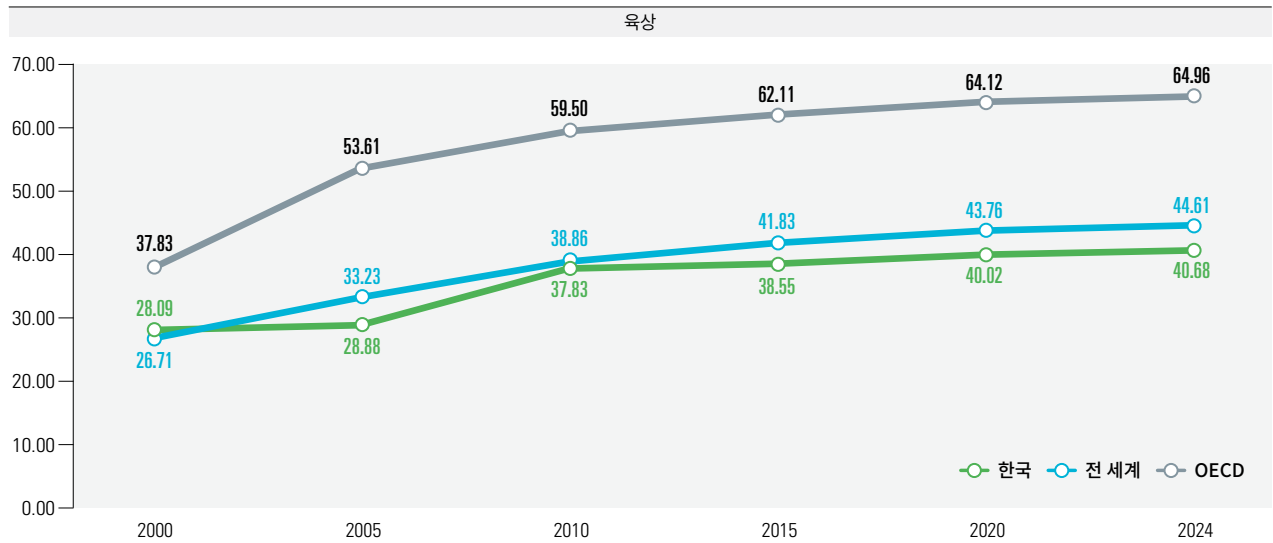
양성지역은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지역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을 지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보호지역 지정에서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육상 지역의 경우 2024년 기준 40.68%로 전 세계 평균 44.61%와 OECD 평균 64.96%보다 낮다. 담수 지역에서 그 격차는 더 크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평균과 OECD 평균이 각각 43.66%와 66.62%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36.64%에 그친다. 2000년 당시에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비율, 2000~2024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20. 인출); 국가데이터터치, SDG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sdg>, 2025.8.20. 인출)

주1 : 한국 산악 지역 2024년은 2023년 자료임

주2 : OECD 평균 산정 시 수치가 가용하지 않은 일부 국가는 누락됨. 담수의 경우 룩셈부르크 제외, 산악의 경우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제외함

는 담수와 육상 모두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1~2%p 높았으나 2005년 이후로는 전 세계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꾸준히 20%p 이상 낮은 수준에 그친다. 산악 지역에서 한국의 보호지역 비율은 2023년 20.21%로 더욱 낮다.

2030년까지 전 지구의 보호지역과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가칭) 자연공존지역)을 확대한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목표에 따라, 한국은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호지역 및 OECM 확대와 관리 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주류화 및 관련 계정 체계 구축

순조롭게 진행 중 (🟢 관련 지표 15.9.1)

SDG 세부목표 15.9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각국의 정책 및 계획과 회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목표에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지표 15.9.1(a)), 그리고 환경경제통합계정(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을 통해 국가 계정과 보고 체계에 생물다양성을 통합한 국가의 수(지표 15.9.1(b))를 지표로 삼고 있다.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한 ‘쿤밍-몬

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통합할 것을 실천 목표 중 하나(실천 목표 14번)로 설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현재 133개 당사국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국가 목표를 수립한 상황이다. 한국은 2023년에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것을 실천 목표 13번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러 관련 법정 계획에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환경경제통합계정 기반의 국가 자연자본 계정과 생태계 계정을 구축하는 세부 실천 목표를 수립하였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기존 경제 중심의 계정 통계 작성과 활용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통합하기 위해 2012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계정 체계이다. 환경경제계정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2024년 이행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20개 국가 중 94개 국가에서 환경경제통합계정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이행국이 54개국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큰 진전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환경보호지출, 대기배출, 물질흐름, 물, 토지 등의 모듈을 포함하는 중앙체계(Central Framework) 중 에너지 계정의 이행률이 72%로 가장 높다.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지출(59%)과 대기배출(56%),

국가별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이행 현황, 2024

구분	계정	국가 수(이행 국가 중 비율)	한국의 이행 현황
중앙체계 (Central Framework)	에너지 계정	68(72%)	이행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지출 계정	55(59%)	
	대기배출 계정	53(56%)	
	물질흐름 계정 및 경제 전체 물질흐름 계정	50(53%)	이행
	환경 조세 및 보조금 계정	46(49%)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계정	43(46%)	
	물 계정	37(39%)	이행 준비
	농림수산업 계정	37(39%)	
	토지 계정	36(38%)	
	폐기물 계정	20(21%)	
생태계 계정 (Ecosystem Accounting)	규모 계정	42(45%)	생태계 계정 전체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 중
	서비스흐름 계정(물리)	27(29%)	
	상태 계정	26(28%)	
	서비스흐름 계정(화폐)	17(18%)	
	자산 계정(화폐)	10(11%)	

출처: UN Statistical Commission, 2025, Results of the 2024 Global Assessment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nd Supporting Statistics(한국 현황은 저자 작성)



물질흐름(53%) 계정의 이행도 높은 편이다. 반면 폐기물 계정(21%)의 이행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생태계 계정은 생태계의 규모와 상태, 서비스흐름(물리적 단위 혹은 화폐 단위), 자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생태계 규모(extent) 계정의 이행률이 45%로 가장 높은 반면 자산 계정과 생태계 서비스 화폐 계정은 각각 11%와 18%로 비교적 낮다.

한국은행에서는 1996년부터 환경오염방지 지출에 관한 통계를 편찬하였으며, 2001년에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EPER)으로 확대 개편하여 편찬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매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 환경 산업 및 기술 정책의 종합적인 진단과 체계적 대안 분석 등을 위해 2001년부터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와 공동으로 ‘환경산업통계’를 개발하여 2006년부터 매년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계정’으로 확대 편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조세 및 세입 계정’은 2020년부터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2023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다. 물 계정과 생태계 계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실효성 높은 생물 다양성 관련 ODA 사업 발굴과 예산 활용 필요 (○ 관련 지표 15.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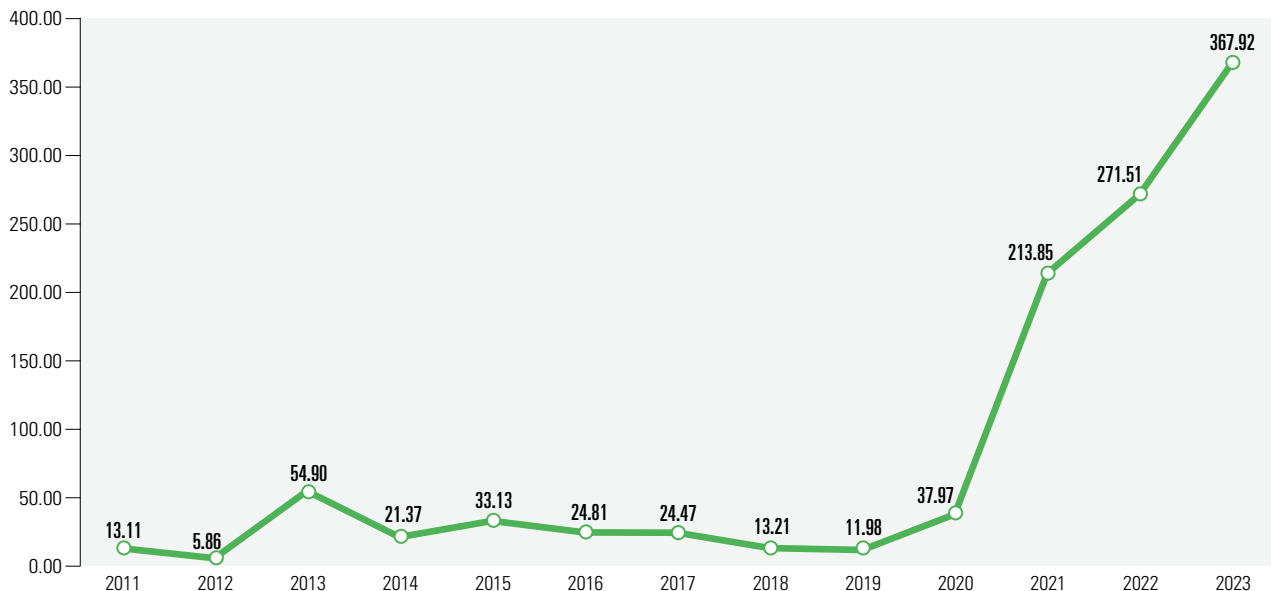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ODA는 2023년 3억 6,792만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 2020년까지 매년 5,500만 달러 미만에 그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2억 달러를 초과하며 3년 연속 크게 늘어났다. OECD에 따르면 2022~2023년에 한국의 양자 ODA 중 약 7.2%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ODA 사업에는 생물다양성 교육·훈련·연구, 수자원 관리, 농업·산림·토지 관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 제도·정책·법률 지원, 기후 및 자연 기반 해법 관련 사업, 재난 복구 및 재건, 생태관광 등 지역사회 기반 사업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한국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2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크다.

한국은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전체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에서 그린 분야를 계속해서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2011~2023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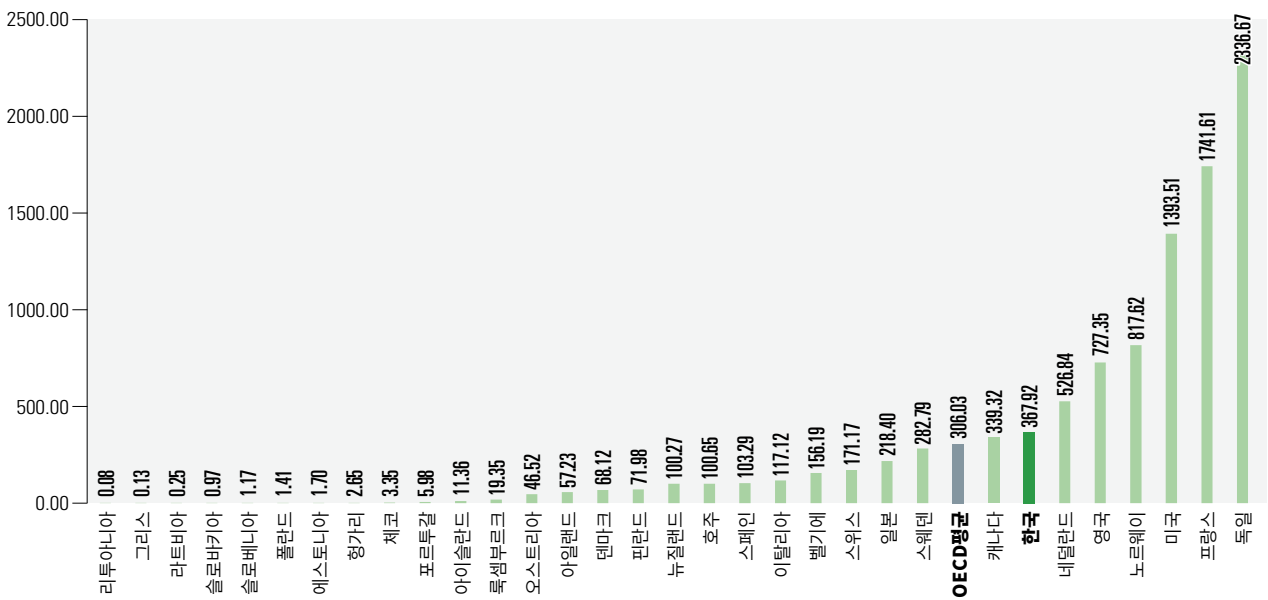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25. 인출)

주 : 2023년 불변가격

OECD 국가별 생물다양성 ODA 규모, 2023

(단위: 100만 달러)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25. 인출)

주 : 2023년 불변가격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5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 16번 목표에서는 폭력과 범죄를 근절하고, 정의와 포용성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지향한다. 지구적으로는 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강제 이주가 급증하고 아동과 여성을 겨냥한 폭력과 인신매매가 확대되는 등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의 안전, 정부 신뢰와 투명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줄고 국가기관의 국민 소통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의 정치 소외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향한 인신매매 범죄에는 관심이 요구된다.

»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25년 0.49%로 집계됨

- 광역자치단체(0.72%)와 기초자치단체(0.53%), 교육청(0.88%)의 부패 경험률이 공직유관단체(0.25%)나 중앙행정기관(0.37%)보다 높으며, 교육청의 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 경험률은 0.49%에 달함
- 사업체 종사자가 경험하는 부패 경험률도 2000년 약 25%에서 2023년 1.6%로 대폭 감소

» 국민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 수준은 2024년 5점 만점에 2.5점으로 2010년대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나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점검 필요

-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2024년 4점 만점에 2.3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중 국회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2.1점으로 낮은 수준
- 의사결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의 비율은 2023년 38.7%로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

• 차별 경험률은 2024년 14.3%로 2019년(28.2%)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2024년 8.1%)에서 증가

• 살인범죄(기수) 발생비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0.54건으로, 2011년(0.85건) 대비 37.0%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0.54건을 유지하며 감소세 정체

- 살인범죄의 2.6%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일어나 인구 대비 높은 비율

•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2020~2023년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에 이르며, 한국에서도 2016~2020년 연간 646.6건의 인신매매 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한국에서는 2021년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민들의 공무원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 관련 지표 16.5.1 / 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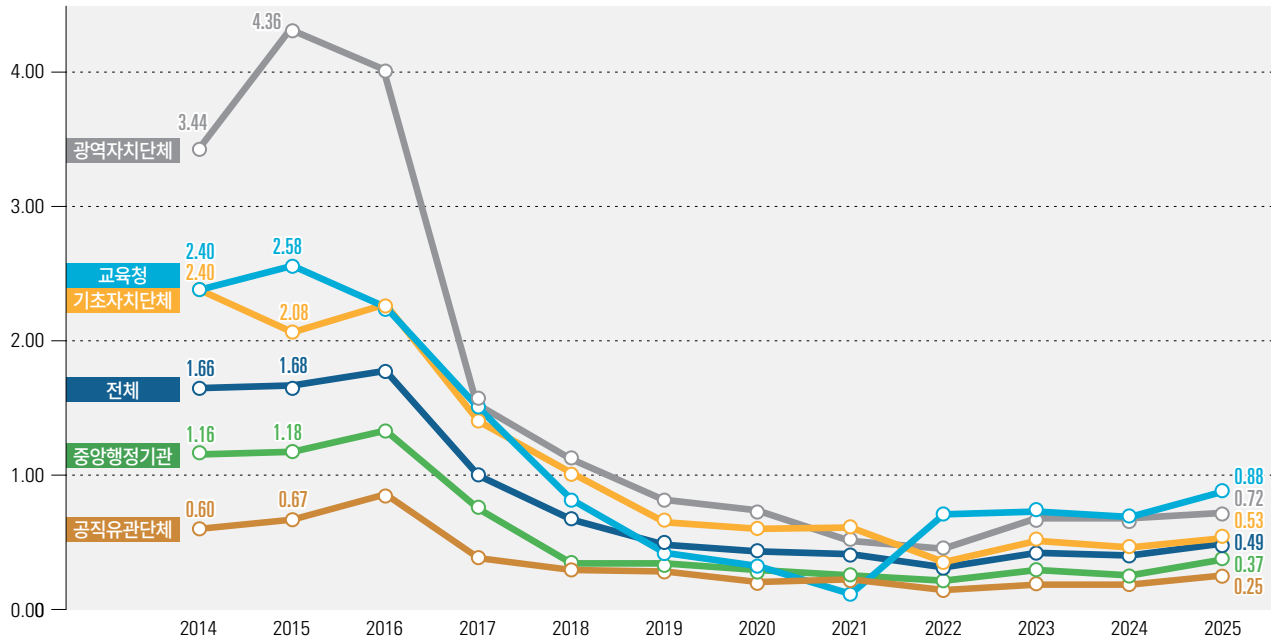
공무원 부패는 정부 기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민주적 제도의 기반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부패 행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은 2019년 이후 0.3~0.4%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과거에 최고 1.34%(2016년)를 기록한 후

2025년 0.37%까지 떨어지며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역시 과거 각각 4.36%(2015년), 2.40%(2014년), 2.58%(2015년)의 최고치에 달한 후 2025년 각각 0.72%, 0.53%, 0.88%로 크게 줄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0.5~0.9%)은 여전히 공직유관단체(0.25%)나 중앙행정기관(0.3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의 부패 행위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 2014~2024

(단위: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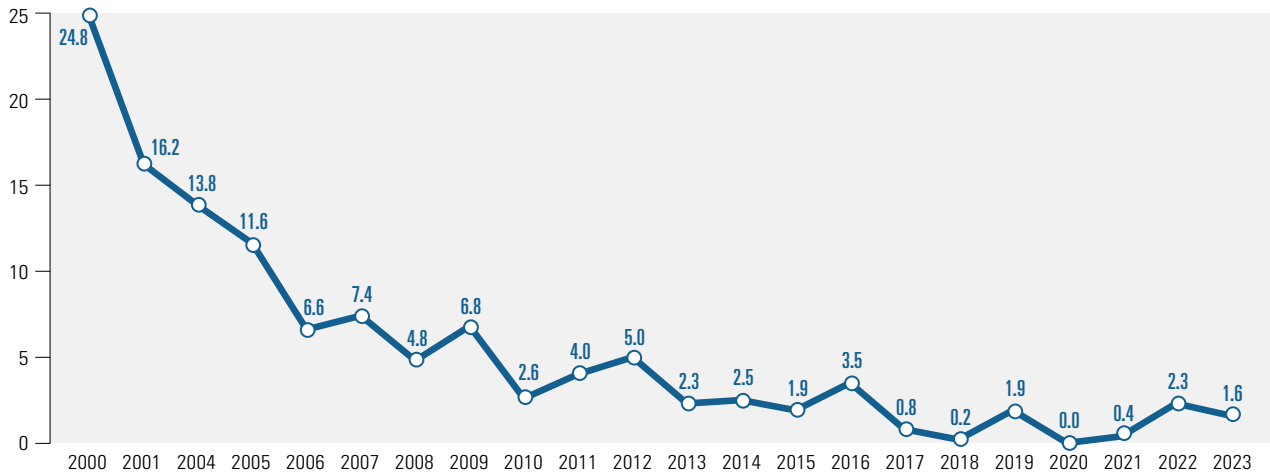
주1: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 중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

주2: 2017년까지는 본인의 제공률이고, 2018년부터는 본인 또는 동료가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임

주3: 2022년부터는 평가 방식이 변경되고 채용 등 사적 이익,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운동부 불법 찬조금 등 세부 유형이 추가됨

사업체 종사자의 공무원 부패 경험률, 2000~2023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처 부패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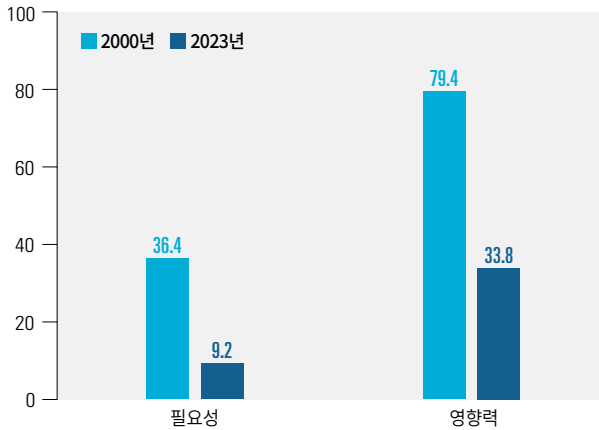
주: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시사한다. 교육청의 경우 다른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 불법 찬조금이 부패 행위의 한 유형으로 2022년부터 조사되고 있는데, 이 유형의 부패 경험률은 2025년 0.49%에 이른다.

사업체 종사자가 경험하는 부패 경험률도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 거의 25%에 달하였던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경험률은 10여 년간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이후로는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는 응답자의 1.6%만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인식(필요성, 영향력), 2000, 2023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패실태조사

주: 행정기관에서 업무 처리 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필요하다'(필요성)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영향력)는 응답률

었다. 부패 행위에 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2000년과 2023년 사이, 업무 처리 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응답(필요성, 36.4% → 9.2%)과 그러한 행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영향력, 79.4% → 33.8%) 모두 현저히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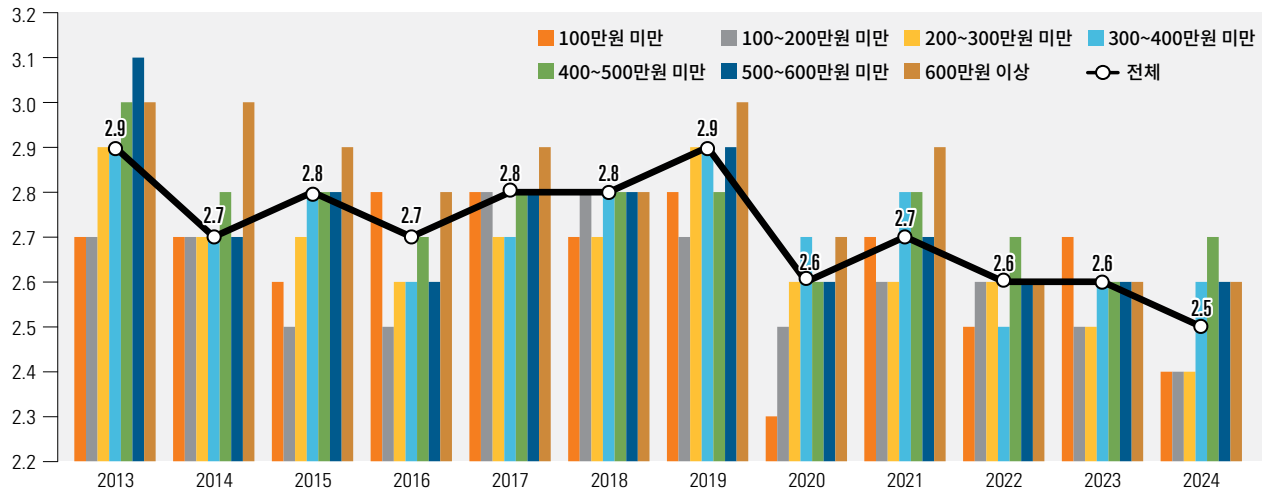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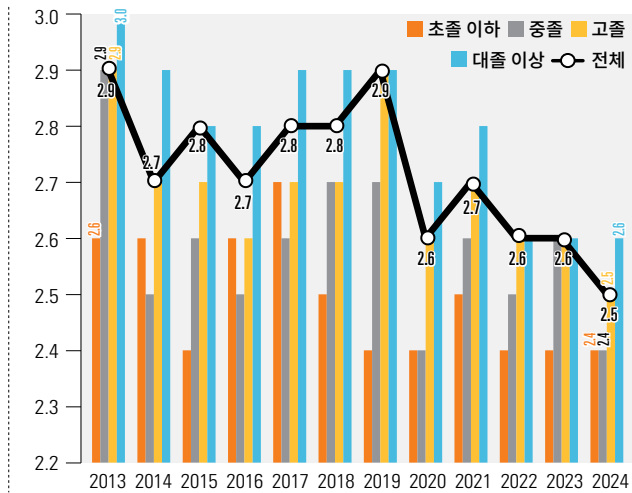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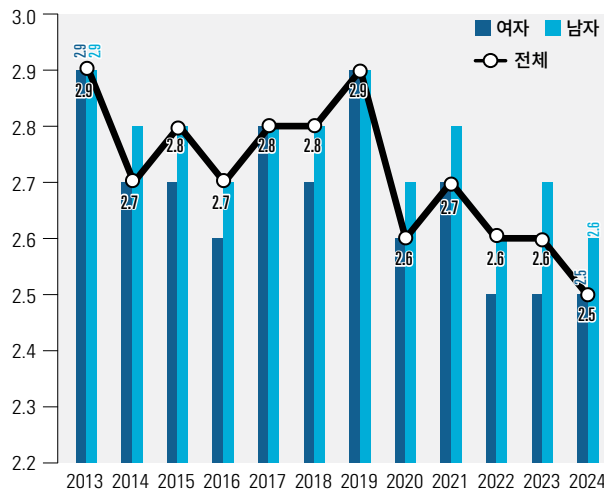
국가기관의 국민 소통이 개선되는 한편

정치 효능감은 하락 (📉 관련 지표 16.7.2)

세부목표 16.7에서는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표성을 갖추고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정치 효능감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부의 제도적 과정에 반영되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성·교육수준·소득수준별 정치 효능감, 2013~2024

(단위: 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8. 인출)

주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5점 척도(동의할수록 높은 점수) 응답을 역코딩(reversed coding) 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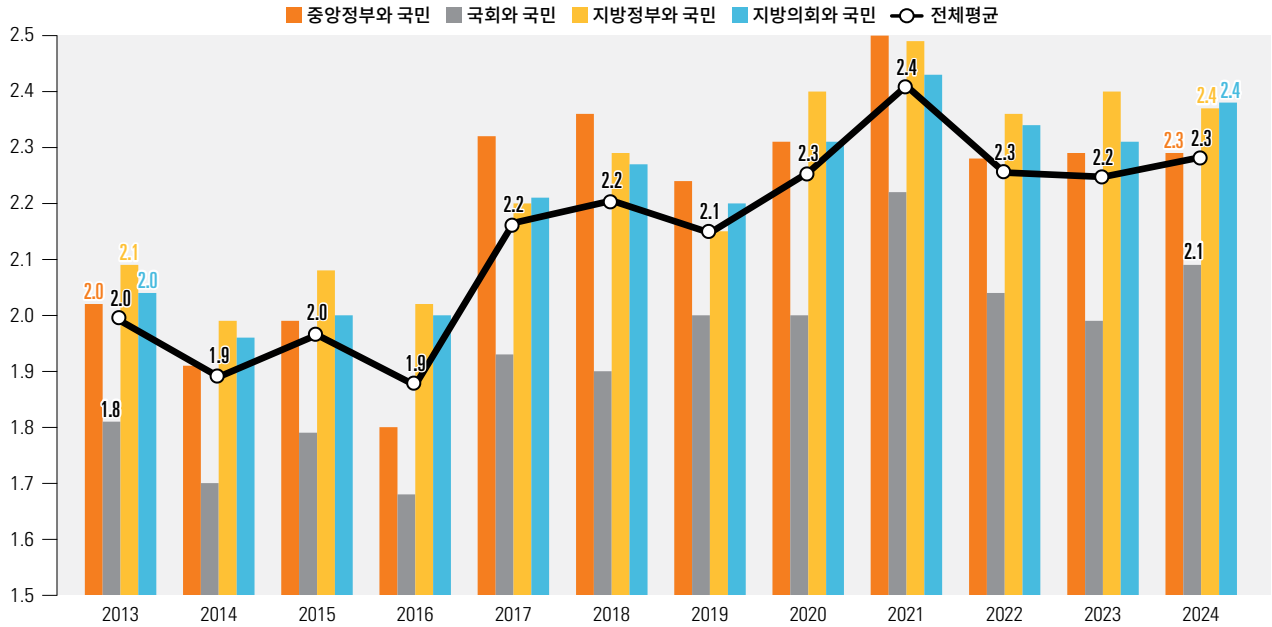
주2: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주3: 월 가구소득 기준



국가기관의 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 2013~2024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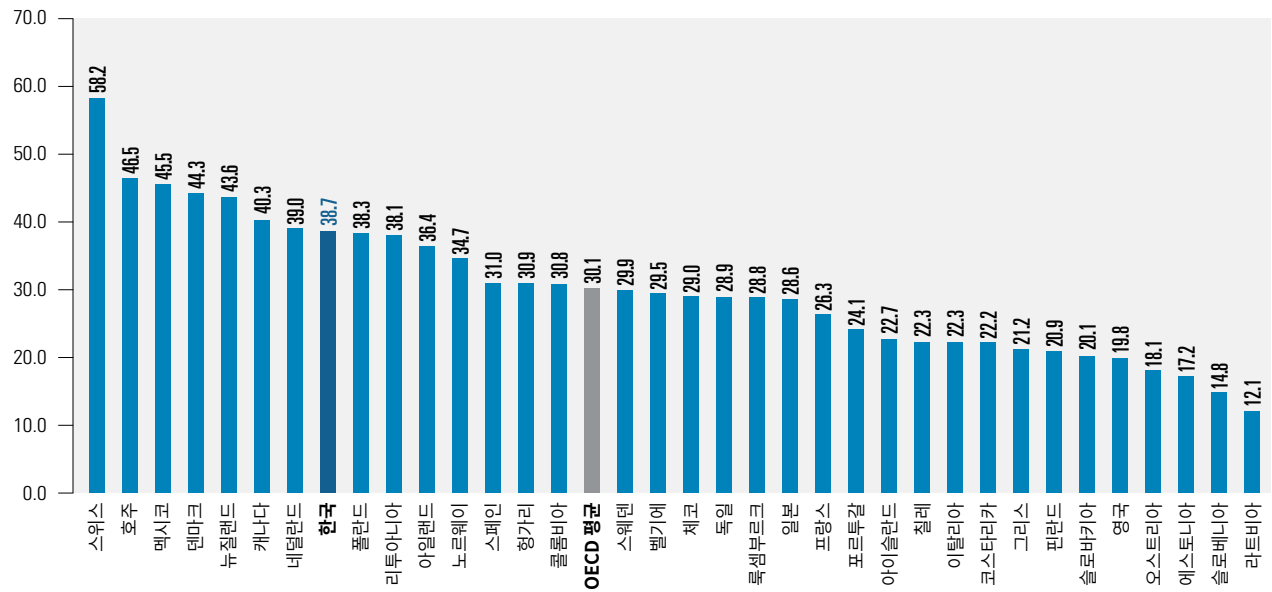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8. 인출)

주: 각 국가기관과 국민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의 평균 점수

OECD 국가별 의사결정 포용성에 대한 인식, 2023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5. 인출)

주: 노르웨이는 2024년,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2021년 자료이며, OECD 평균은 미국, 이스라엘, 튀르키예를 제외한 35개국의 평균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응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사결정의 포용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국민의 정치 효능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점 만점에 2.7~2.9점 수준을 등락하다가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2.6~2.7점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최저치인 2.5점을 기록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정치 효능감이 소폭이지만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

난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대졸 이상 학력층과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중졸 이하 학력층과 월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회복과 더불어 여성이나 저학력·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기관의 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의사결정의 대응성과 포용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은 2013년 4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2024년에 2.3점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정부(2.3점)와 지방정부(2.4점), 그리고 지방의회(2.4점)의 대국민 소통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회의 대국민 소통은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 국민 소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의 비율은 2023년 38.7%로, 이는 자료가 제공된 OECD 35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의사결정 포용성은 스위스(58.2%), 호주(46.5%) 등 최상위권 국가보다는 낮지만 라트비아(12.1%), 슬로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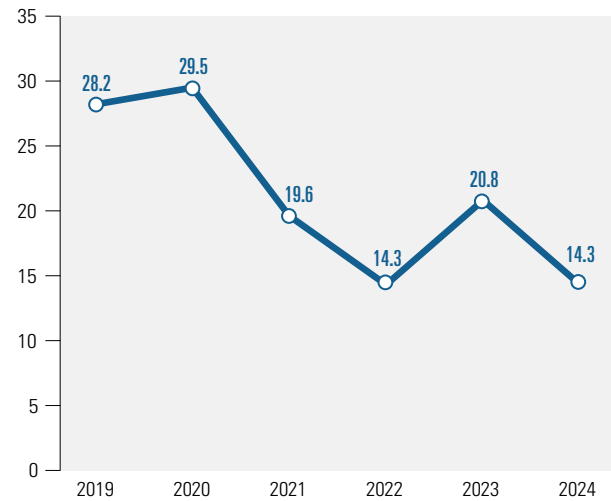
아(14.8%) 등 최하위권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19.8%), 프랑스(26.3%), 독일(28.9%) 등 서유럽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차별 경험률은 줄어들이고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의한 차별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관련 지표 16.b.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응답자의 14.3%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유로든

차별 경험률, 2019~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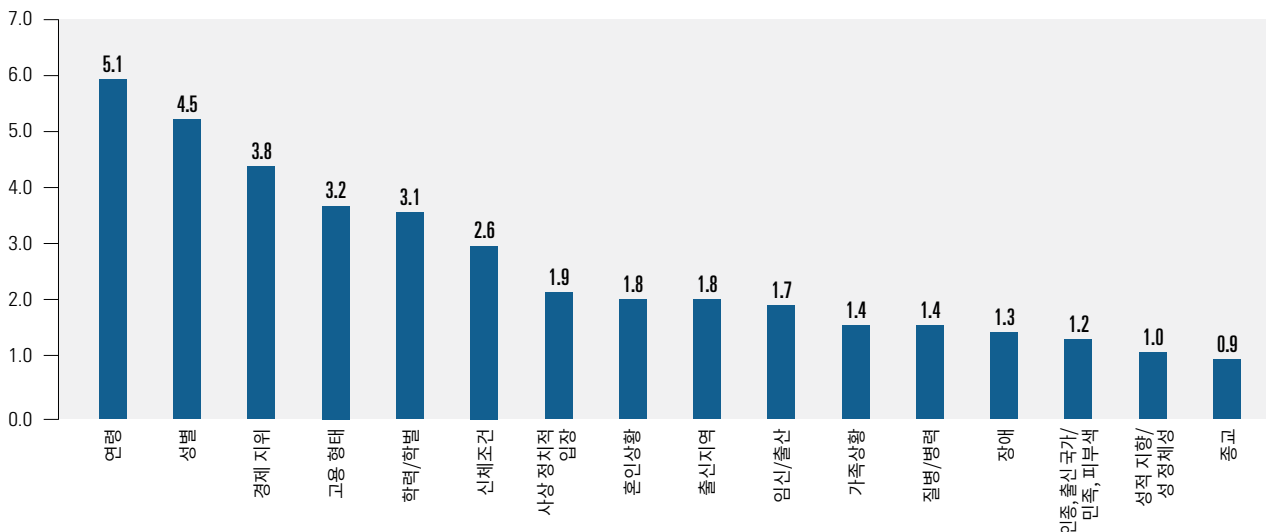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21. 인출)

주 :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차별 사유별 경험률, 2024

(단위: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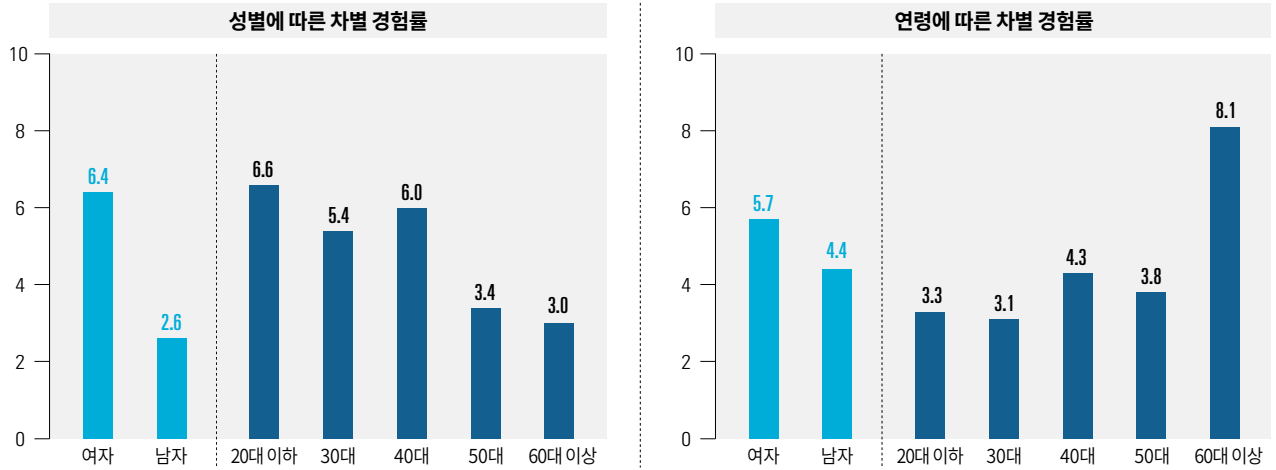
주1 : 지난 1년 동안 16개 각 사유별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주2 : '없다'는 응답에는 '해당없음'도 포함



성별 및 연령별 성 차별과 연령 차별 경험률,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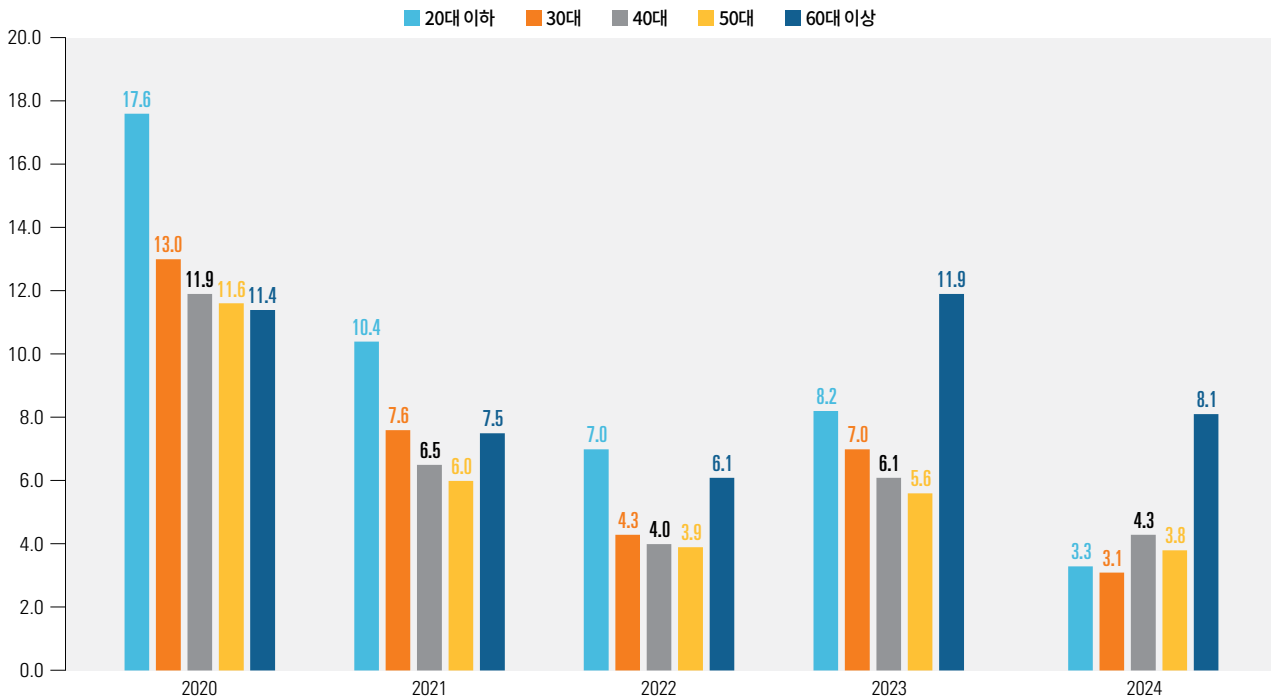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21. 인출)

주 :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연령별 연령 차별 경험률, 2020~2024

(단위: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21. 인출)

주 : 지난 1년 동안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경험률은 2019년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차별 사유별로 보면 연령(5.1%)과 성별(4.5%)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적 지위(3.8%), 고용 형태(3.2%), 학력·학벌(3.1%), 신체조건(2.6%) 등에 따라서도 차별

을 경험하였다.

성 차별과 연령 차별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여성 6.4%, 남성 2.6%)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별(여성 5.7%, 남성 4.4%)도 더 많이 경험한다. 연령별로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은

20대 이하의 청년층(6.6%), 그리고 40대(6.0%)와 30대(5.4%)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는다. 연령에 따른 차별은 2020년에는 20대 이하의 청년층(17.6%)에게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60대 이상의 고령층(2024년 8.1%)에게 집중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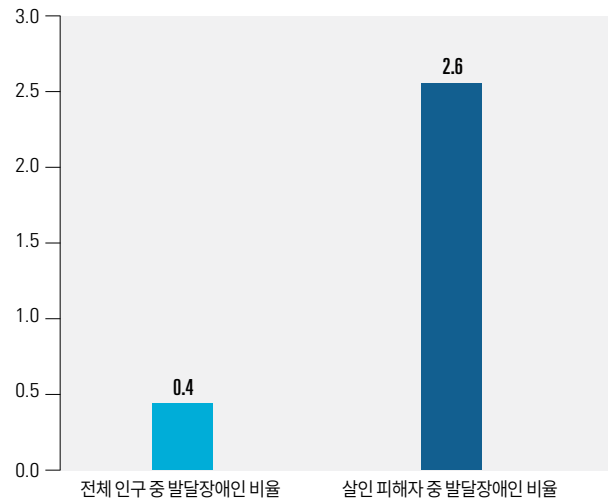
살인 발생의 감소세 정체 (🔗 관련 지표 16.1.1)

한국의 살인범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2021년부터 감소세가 멈춘 상태이다. 2024년에 총 274건의 살인범죄(기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하여 보면 0.54건이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0.85건과 비교하면 37.0% 줄어든 수치이지만 2021년 이후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부터는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기수)는 2024년 총 7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살인범죄(기수)의 2.6%에 해당한다. 한국의 발달장애인이 약 22만 명으로 인구의 0.4%인 것과 비교하면 발달장애인의 살

발달장애인 대상 살인범죄 발생 비율, 2024

(단위: %)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https://kosis.kr>, 2026.1.2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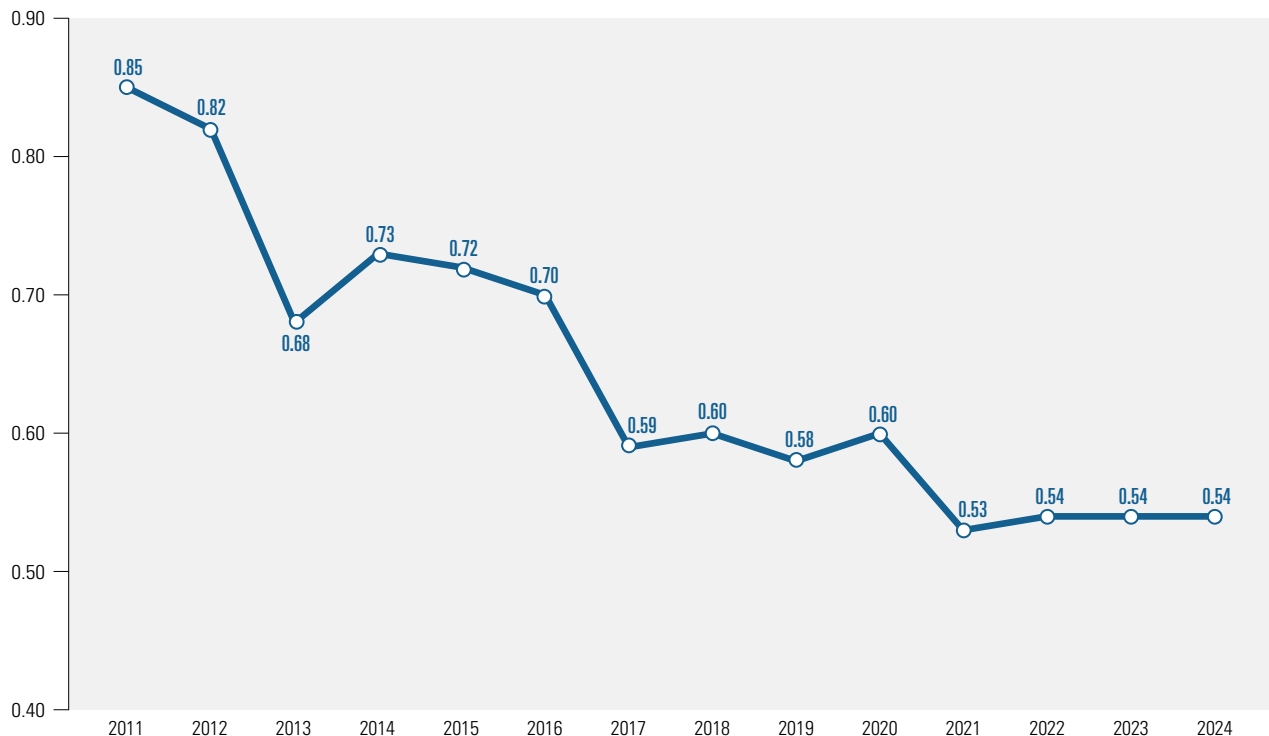
주 : 살인범죄(기수) 대표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인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을 향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의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비를 비교해 보면 콜롬비아(24.91명), 멕시코(24.86명),

살인범죄 발생비, 2011~2024

(단위: 10만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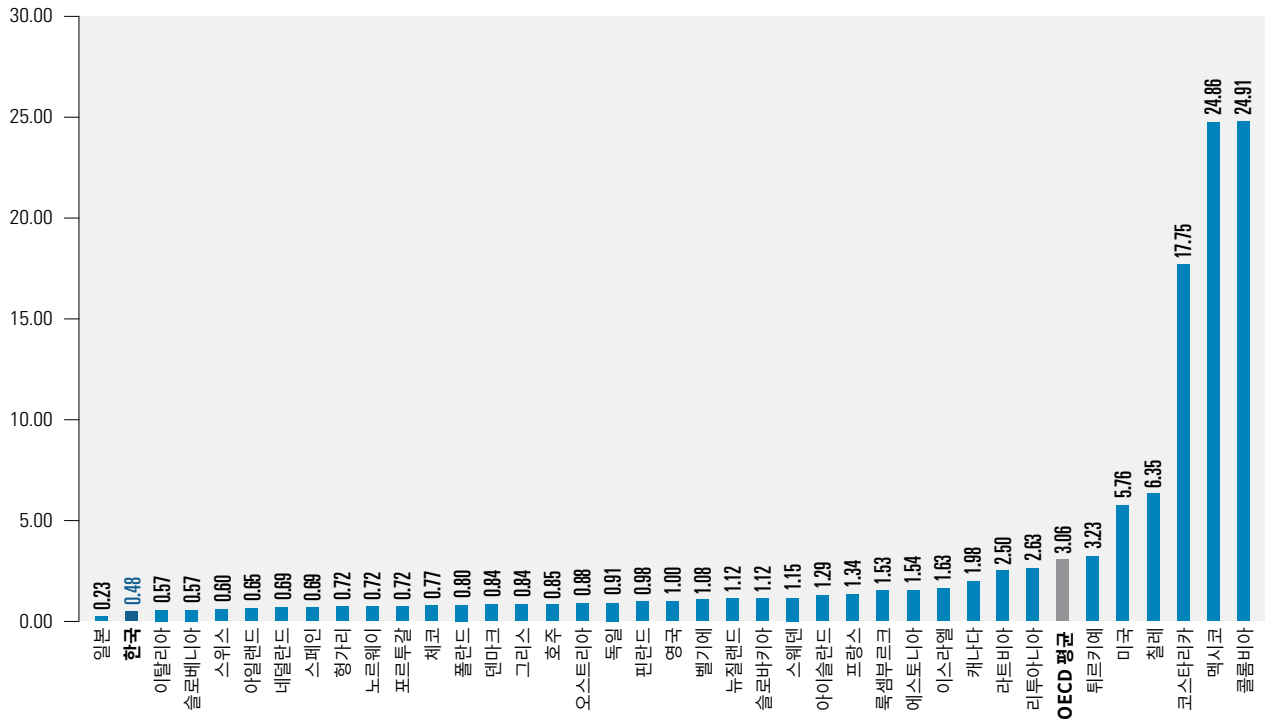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https://kosis.kr>, 2025.9.17. 인출)

주 : 살인범죄 발생비 = (살인범죄(기수) 건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 수, 2023

(단위: 10만 명당 명)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24. 인출)

주 : 영국은 2020년, 벨기에와 뉴질랜드는 2021년, 포르투갈·룩셈부르크·이스라엘은 2022년 자료임

코스타리카(17.75명) 등 중남미 국가에서 월등히 높다. 칠레(6.35명)와 미국(5.76명) 등 16개국에서는 1~7명 수준으로 나타난다. OECD 38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국에서는 1명 미만에 그친다. 한국의 살인 발생비는 0.48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다. 살인 발생비가 가장 낮은 일본의 경우 0.23명에 불과하다.

인신매매 방지 법제 도입의 성과와 한계

(☞ 관련 지표 16.2.2)

SDG 16.2.2에서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수를 지표로 삼아 집계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 성적 착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Office on Drugs and Crime, ODC)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세계적으로 약 20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아동 피해자는 38%에 이른다.

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유엔에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신매매 방지정책 종합계획(안)’에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한국에서 총 3,233건(연평균 646.6건)의 인신매매 등 범죄가 발생하였고, 이 중 46건(연평균 9.2건)이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89조에서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인신매매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형법상 인신매매죄(제289조) 외에도 형법상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제287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강요(제18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매매(제12조) 등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인신매매 등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인신매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년에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하여 예방, 조기 식별, 보호, 처벌까지 연계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지표를 고시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대응 현황을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는 2024년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이 보

고서에서는 인신매매 수사와 기소가 강화되고 피해자 식별 지표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어업 관련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 17번 목표에서는 SDG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의 강화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저·중소득국(LMICs)의 부채 상환 비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연간 4조 달러 규모의 투자 격차가 겹치며 SDG 달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ODA 규모는 한 번 더 확대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SDG 이행의 기반이 되는 정부의 재정과 세입 기반에는 명암이 공존하며, 점증하는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송금 경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 규모(2024년, 증여등가액 기준)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40.3억 달러, 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2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3위로 기록되며, 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 대비 세 계단 상승한 25위임

»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규모(총지출액 기준)는 2023년 기준, 8.4억 달러로 전체 양자원조의 31.5%를 차지하며 GNI 대비 0.06% 수준을 유지

- 취약국 지원 규모는 2023년 9.8억 달러로 전체 양자원조의 36.8%에 달하며, 이 중 개발협력 비중이 86.7%를 차지하는 반면,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각 8.5%와 4.8%에 그침

» 2023년 기준 정부 총수입 규모는 GDP의 34.8% 수준이며, 정부 예산의 55.2%를 국내 세금으로 충당

-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이 2000년 26.8%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정부 재정 기반이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OECD 평균(38.0%)보다 다소 낮은 편
-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2023년 국제 수입 감소로 인해 55.2%로 떨어졌는데, 2022년 세수 충당 비율(61.8%)은 OECD 평균(62.0%)과 유사한 수준

» GDP 대비 송금 유입 비중이 0.5%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점차 증가

- 개도국의 다변화된 개발 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SDG의 취지에서, 한국은 송금 송출국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송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또는 합법적 송금 경로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167

GNI 대비 ODA 비율 0.21%로 증가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4년 총 40.3억 달러(증여등가액 기준)로 집계된다. 2023년에 전년 대비 11.6%(3.3억 달러)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더 크게 늘어나며 27.6%(8.7억 달러)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경제 규모에 비해 ODA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ODA/GNI)은 2024년 0.21%로,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건전 재정의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하에 ODA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 2021년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2조 원)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25년 ODA 예산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6.5조 원으로 편성되면서 이 목표치를 조기에 넘어서게 되었다.

원조유형별로 보면, 양자원조가 2024년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2%(8.6억 달러) 증가하였다. 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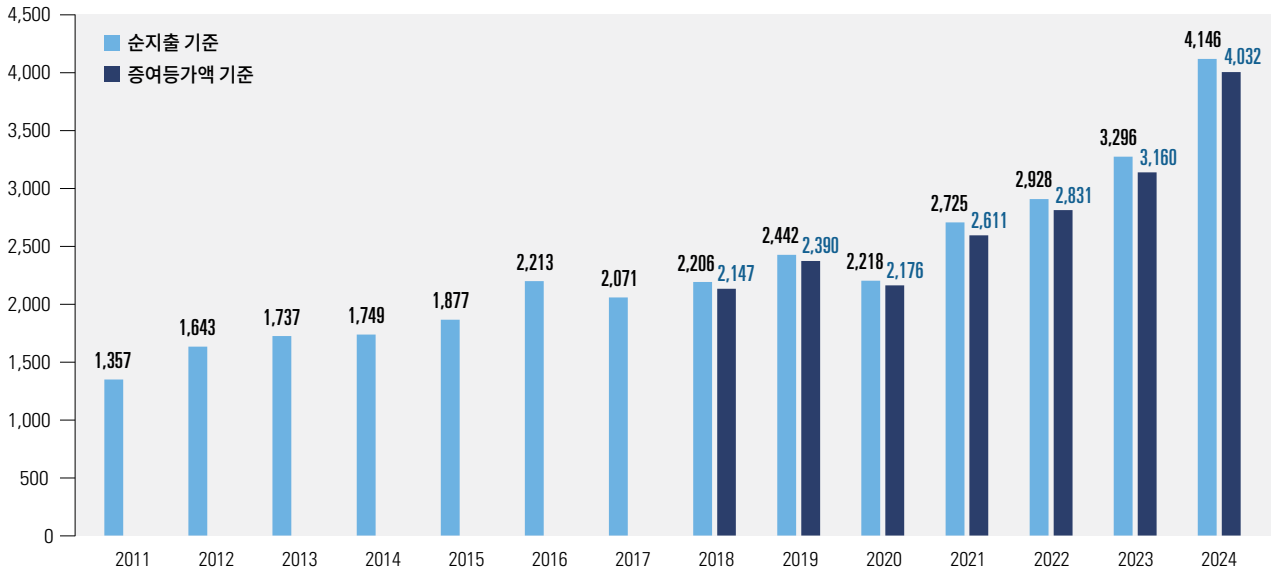
무상원조(22.3억 달러, 39.4%)와 유상원조(9.5억 달러, 30.5%) 모두 고르게 증가하였다. 양자원조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6.6억 달러, 336%), 긴급 대응 지원(6.5억 달러, 400%), 경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부문(25.5억 달러, 21.9%) 등이 크게 증

가한 편이다. 한편 다자원조는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7.6억 달러)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라트비아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DAC 정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났다. DAC 32개 회원국 중 ODA 지원 규모로 볼 때 한국의

한국의 ODA 규모, 2011-2024

(단위: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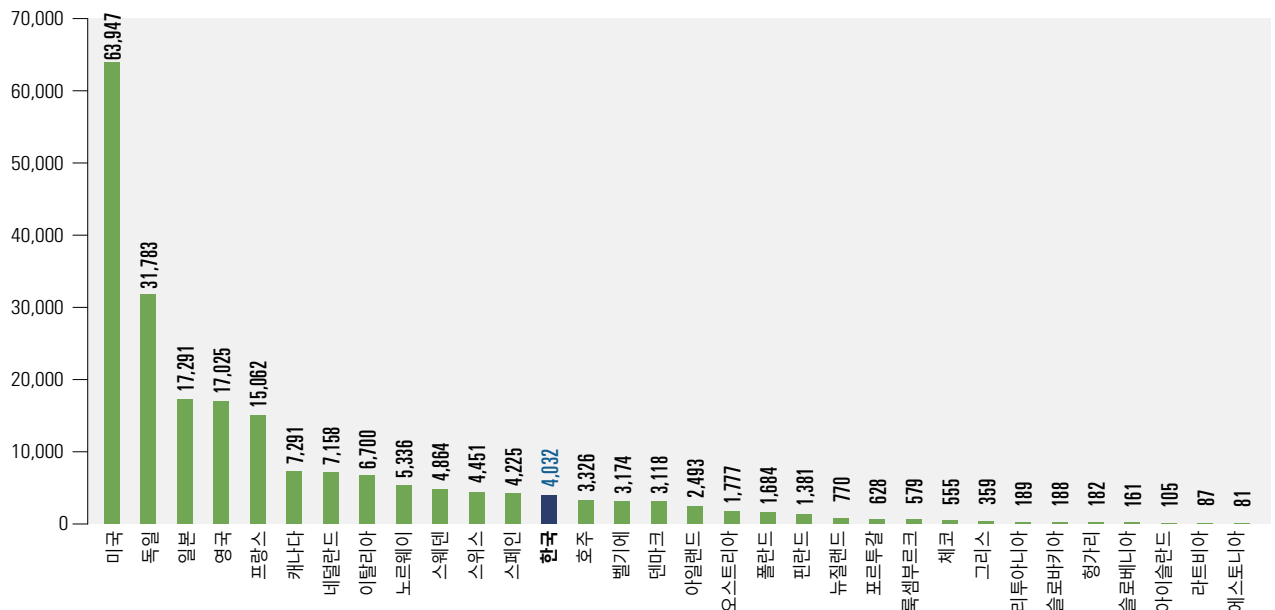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html); OECD,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2026.3.14. 인출)

주 : 2023년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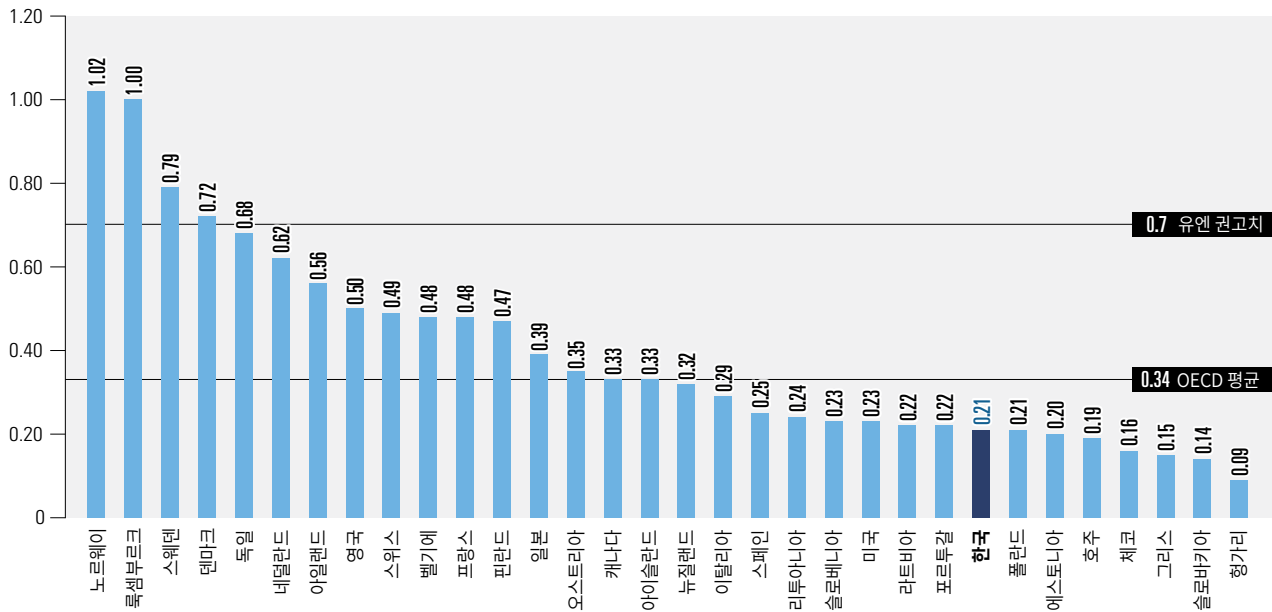
OECD DAC 회원국별 ODA 규모, 2024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OECD 2025 Flows by donor (<https://www.oecd.org/en/topics/development-co-operation.html>, 2026.3.10. 인출)

주 : 2023년 불변가격, 증여등가액 기준



출처: OECD, 2025,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4([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6/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6/en/pdf))

주 : 중여등가액 기준임

순위는 2024년 기준 13위로 나타난다. ODA 주요 공여국은 미국(639억 달러), 독일(318억 달러), 일본(173억 달러), 영국(170억 달러), 프랑스(151억 달러) 등이다. DAC 32개 회원국의 2024년 ODA 규모를 합산하면 총 2,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한 ODA 규모를 다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GNI 대비 ODA 비율로 보면, 한국은 2023년 0.17%로 DAC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0.21%로 세 계단 상승하며 25위로 올라섰다. 2024년 DAC 회원국 전체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4%이다. UN 권고치인 0.7% 이상을 지원하는 국가는 노르웨이(1.02%), 룩셈부르크(1.00%), 스웨덴(0.79%), 덴마크(0.72%)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2023년 양자원조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 (● 관련 지표 17.2.1)

한국의 양자원조 규모는 2023년 총지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2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 중 하위 중소득국(LMICs)에 대한 지원이 10.5억 달러(39.6%)이

고 최저개발국(LDC) 지원이 8.4억 달러(31.5%), 상위중소득국(UMICs) 지원이 2.7억 달러(10.1%)이다.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액은 전년(8.5억 달러) 대비 1.5% 줄어든 규모이지만, 2011년 3.6억 달러에서 1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양자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UN은 개발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는 최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GNI 대비 0.15~0.2%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개발국 지원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0.0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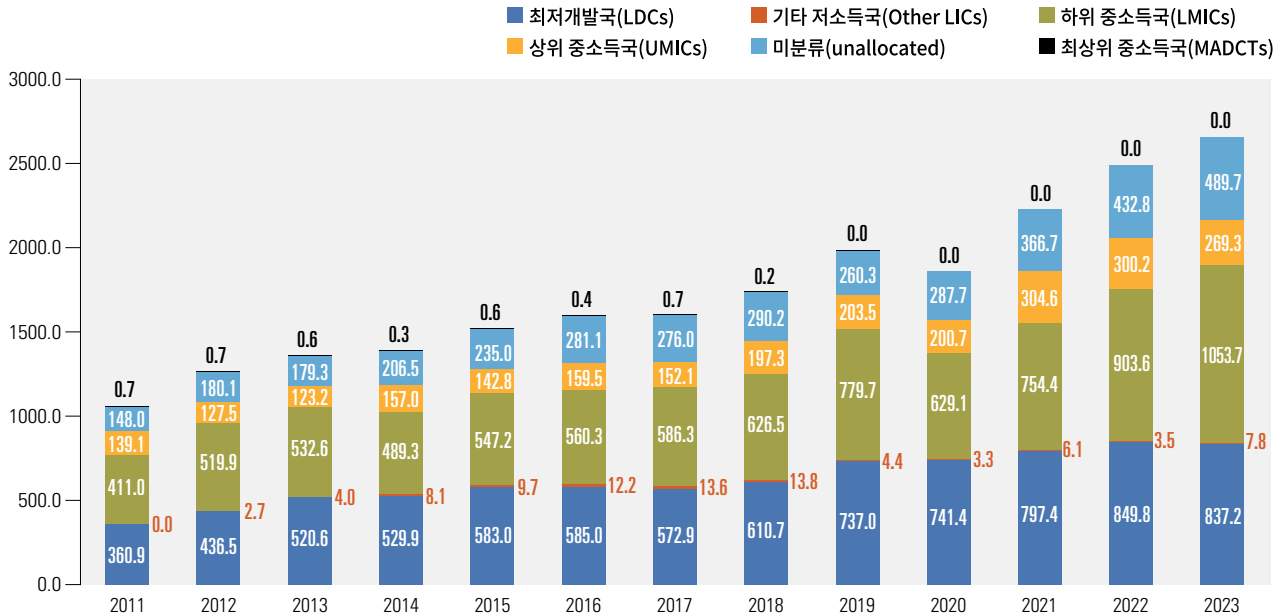
한편 내륙에 위치하여 경제개발에 제약이 큰 내륙개발도상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s)에 2023년 양자원조의 18%에 해당하는 4억 7,750만 달러를, 같은 해 군소도서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는 양자원조의 2.1%인 5,59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고도 또는 극도의 취약성(high to extreme fragility)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2023년 9억 7,877만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양자원조의 36.8%에 달하는 규모이다. OECD에서는 경제, 환경, 인간, 정치, 안보, 사회 등 6개 영역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



한국의 지원대상국 소득그룹별 ODA 규모, 201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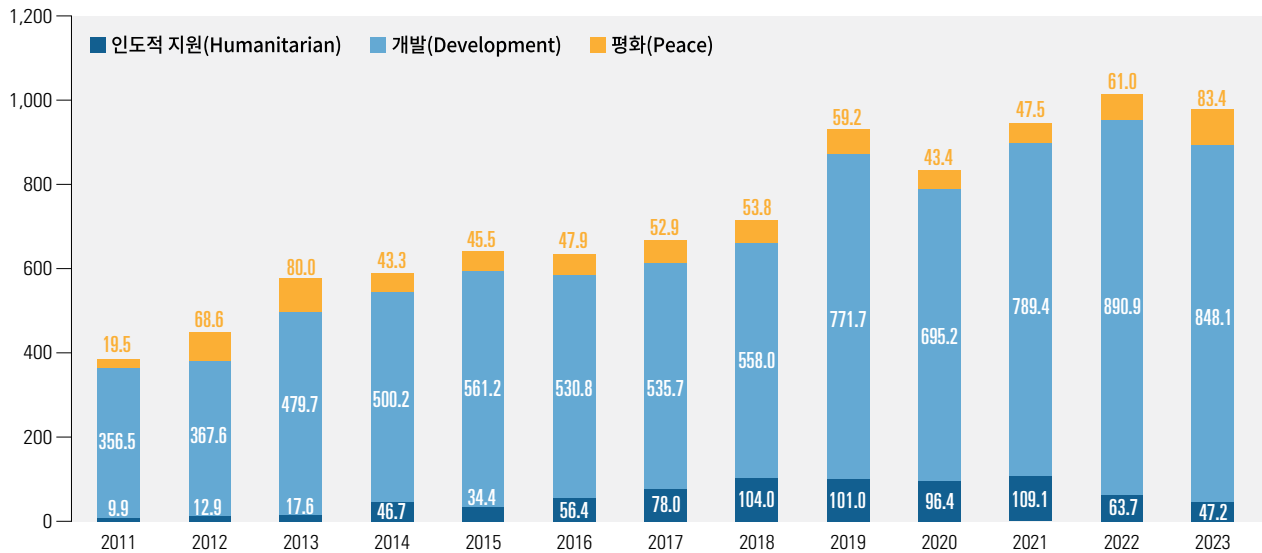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html)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2023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취약국가 지원 규모와 HDP 넥서스, 2011-2023

(단위: 100만 달러)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html)
주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이 크고 그 위험을 관리하거나 흡수하거나 완화할 국가, 시스템,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경우를 취약국으로 보고 있다. 2025년 기준 총 61개 국가 또는 지역이 고도 또는 극도의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취약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Nexus)'가 강조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취약국 지원 중 개발협력(8억 4,814만 달러) 비중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같은 해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각 8.5%와 4.8%에 그친다. 인도적 지원 비중은 2021년 11.5%에서 두 해 연속 줄어든 반면 평화 구축 비중은 2021년 5.0%에서 계속 늘어났다.

평화 구축 중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 규모도 2022년 양자 원조의 1.2%에서 2023년 2.0%로 확대되었다.

정부 총수입 규모는 상승 기조하에 소폭 하락

☉ 관련 지표 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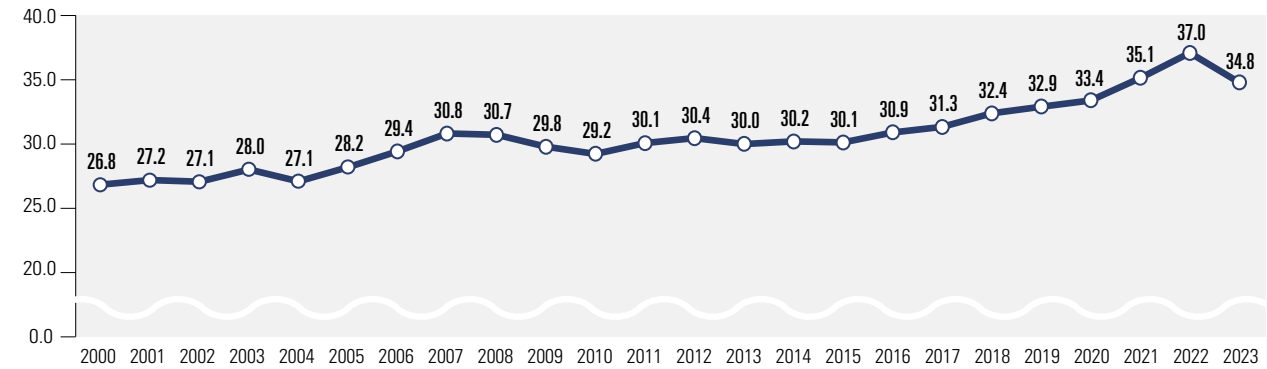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SDG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공공재정 기반이 튼튼할 때 복지, 교육, 보건 등에 대한 지출 확대가 가능해지고, 이는 곧 사

회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 조세와 재정 정책이 가져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세와 환경세 등 새로운 조세 수단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GDP 대비 정부 총수입 비율을 통해 정부의 재정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자료로 집계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비율은 2023년 기준 34.8%이다. 지난 2000년까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비율,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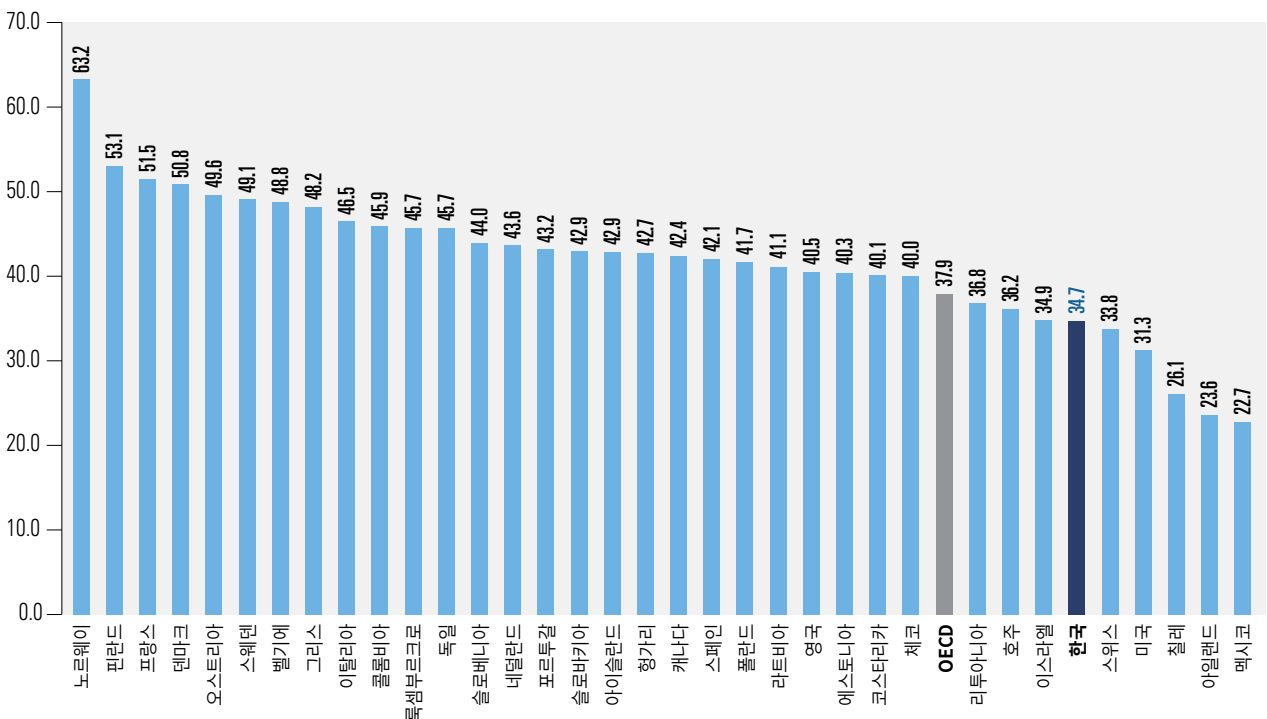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EEO023&conn_path=I2, 2026.1.18.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비율, 2023

(단위: %)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eral-government-revenue.html>, 2026.1.18. 인출)

주 :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일본, 뉴질랜드, 튀르키예는 제외함



만 해도 26.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늘어나 2011년 이후로는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37.0%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가운데는 노르웨이 63.2%로 가장 높고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3개국도 50~5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 외 21개국이 40%대를 나타내는데, 한국은 2023년 기준 자료가 제공되는 35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정부 예산 중 55.2%를 국내 세금으로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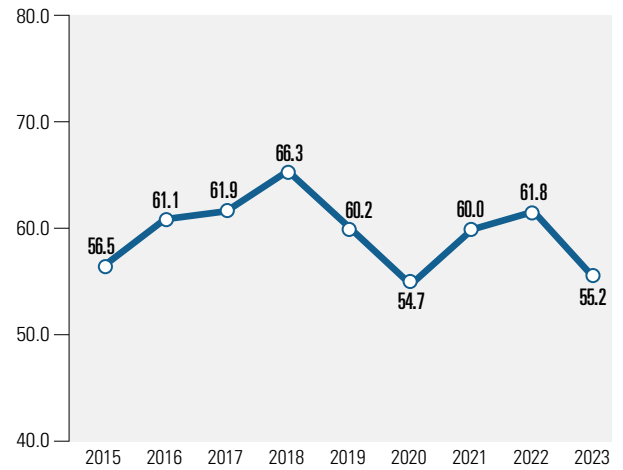
(☞ 관련 지표 17.1.2)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세 기반과 세입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 핵심 역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국가의 자체적인 재원 동원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불평등 완화, 기후 대응 재원 마련 등 SDG의 여러 목표와 관련된다.

한국의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

정부 예산 중 세수 비율, 2015-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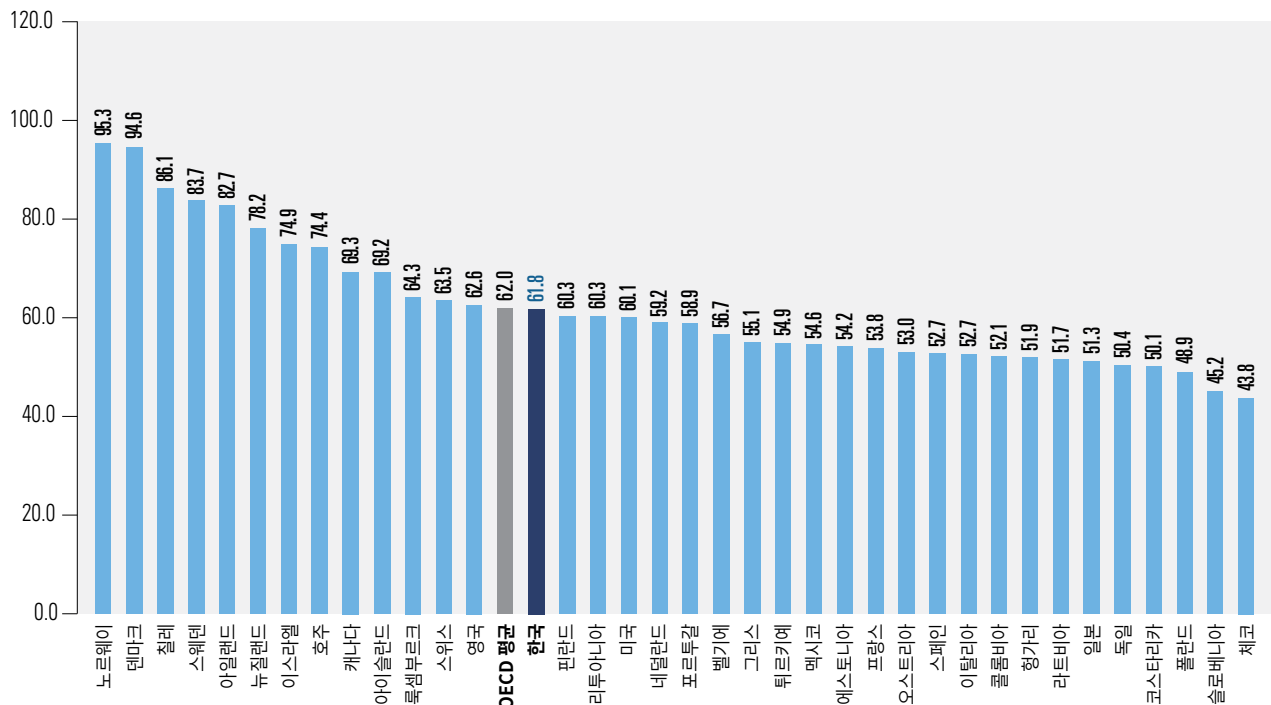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9. 인출)

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50~60%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던 2018년에는 66.3%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54.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60%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였

OECD 국가별 정부 예산 중 세수 비율, 2022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9. 인출)

으나 2023년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국
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다시 55.2%로 낮아졌다.

OECD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예산 중
세수 비율은 61.8%로 OECD 평균(62.0%) 수준이다. 노
르웨이(95.3%)와 덴마크(94.6%)의 세수 충당 비율은 무
려 90%를 넘는다. 칠레, 스웨덴,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
스라엘, 호주 등도 세수 충당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나라이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26개국)의 세수 비율은
50~60%대로 나타난다.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등 3개
국은 세수 비율이 40%대에 그친다.

총 GDP 중 송금유입액 비중은 0.5% 미만

☉ 관련 지표 1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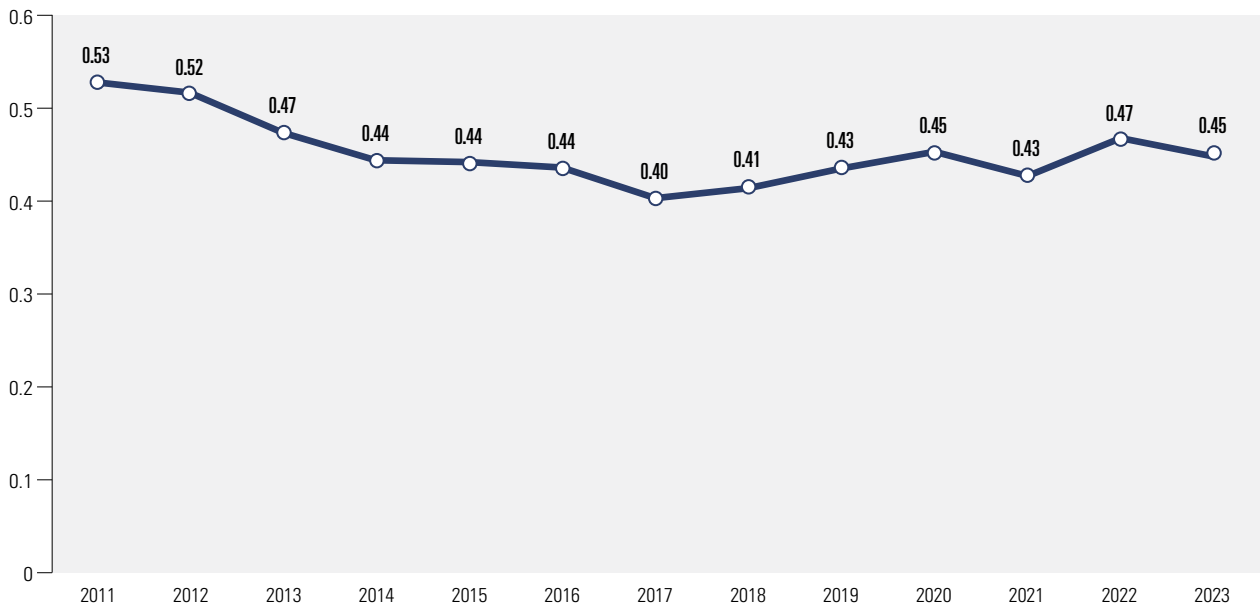
SDG 세부목표 17.3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
한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
며, 그 지표의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송금액
(remittances)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주노동자와 교포 등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며, 국가의 외
화 유입 구조에 따른 개발 재원의 동원 역량을 나타낸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송금유입액은 GDP의 5~20% 이상
을 차지한다. 타지키스탄(38.4%), 사모아(28.2%), 니카

라과(26.1%), 온두라스(26.1%), 네팔(25.4%) 등에서는
25%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2023년 기준). 이들 국
가에서는 해외 송금액이 외국인직접투자(FDI)나 공적개
발원조(ODA)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입되어 경제 회복력
(resilience)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
외 송금은 SDG 17.3에서 강조하는 개발 자원 다변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송금 유입국이 아니라 송금 유출국으
로 볼 수 있다. 1970~1980년대 중동에서 일하던 건설 근
로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던 시기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송
금액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GDP 대비 송금 유입 비
중은 2013년 이래 0.5%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낮은 편이
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
내는 송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재원 확보
에 기여하고자 하는 SDG의 취지에서 본다면, 한국은 송
금 유입국이 아닌 유출국으로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의 송금 비
율을 절감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또는 합법적 송금 경로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이
자 원조 공여국으로서, 송금 흐름이 개발 재원으로서 안
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GDP 대비 송금액 비율, 2011-2023

(단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12. 인출)



목적 및 활용

SDG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이다. SDG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가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NOB, 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한다.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완수하기 위해, 매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4년 주기로는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의 자발적 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SDG 채택문인 2030의제에서는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하고 2024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데이터처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당연직 부처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는 경우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통계와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SDG 한국 데이터 책임연락기관(data focal point)으로서, SDG 국내 데이터 수집 및 국제기구 자료제공, 한국의 SDG 이행현황 보고서 발간 사

업을 추진하여, 2019년 『글로벌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현황』이라는 기초보고서를 발간한 이래로, 2021년부터 매년 3월말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국문과 영문 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였다.

지표별 이행현황에 대한 유의미하고 풍부한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계열 분석, 국내 인구집단 또는 지역 등에 따른 세분화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현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 정보의 활용도와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일반인, 학생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되, 전문용어 등은 풀어쓰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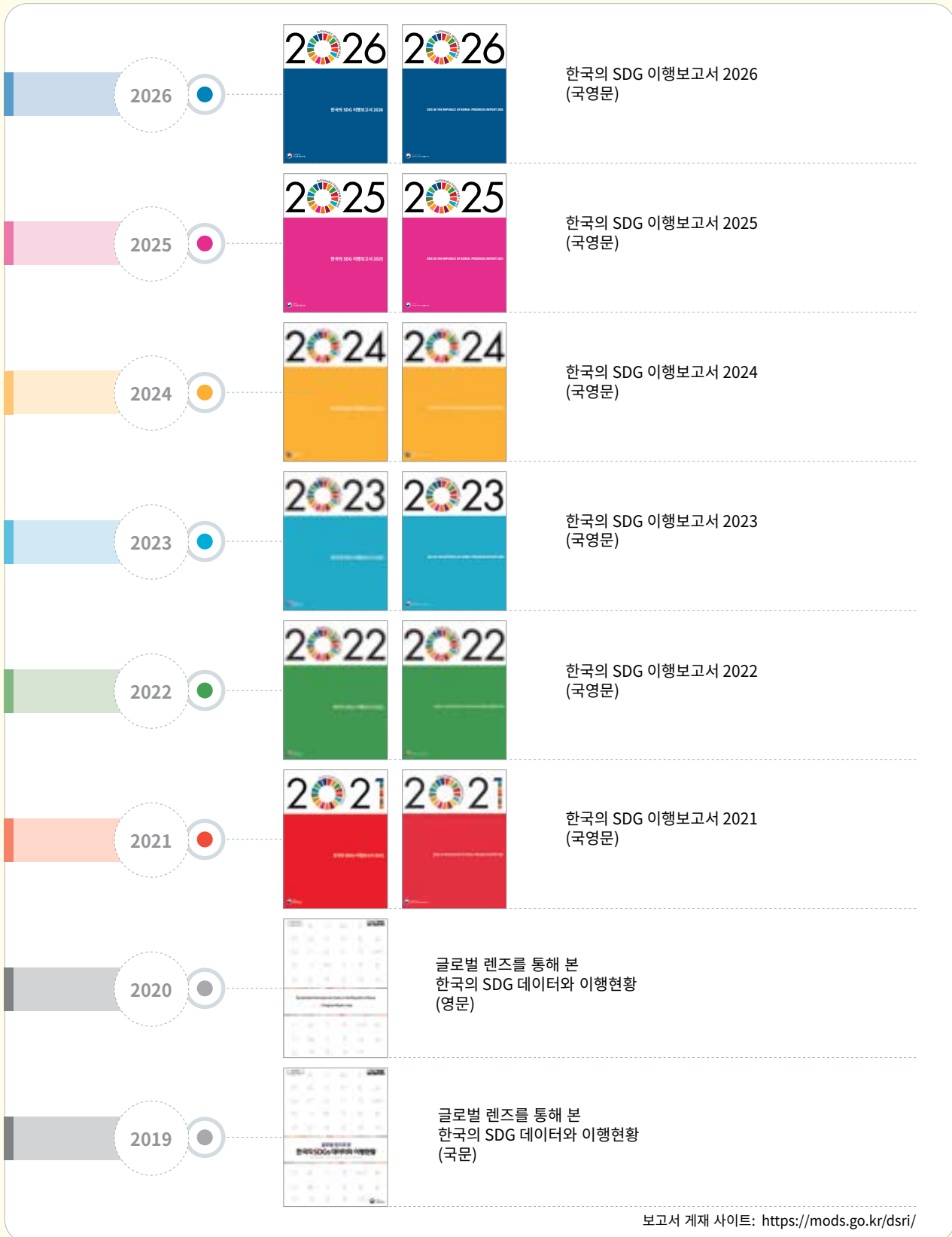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와 각 분야 연구자를 위한 정책 자료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언론·미디어, 시민사회 등 대국민 정책 홍보·교육·소통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고서의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됨으로써 해외 관련기관 및 연구자 등에게도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

지표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승인통계, 정책자료 등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국제데이터의 경우, UN SDG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신 및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각 지표를 소관하고 있는 국제기구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였다.

연혁

* 보고서 표지 색은 목표별 색상을 적용함





SDG 진전을 가속화하고 분명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 제공에서 통계데이터의 역할이 크다. 신뢰할 만하고 시의적이며 세분화된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SDG 지표 통계데이터 역량강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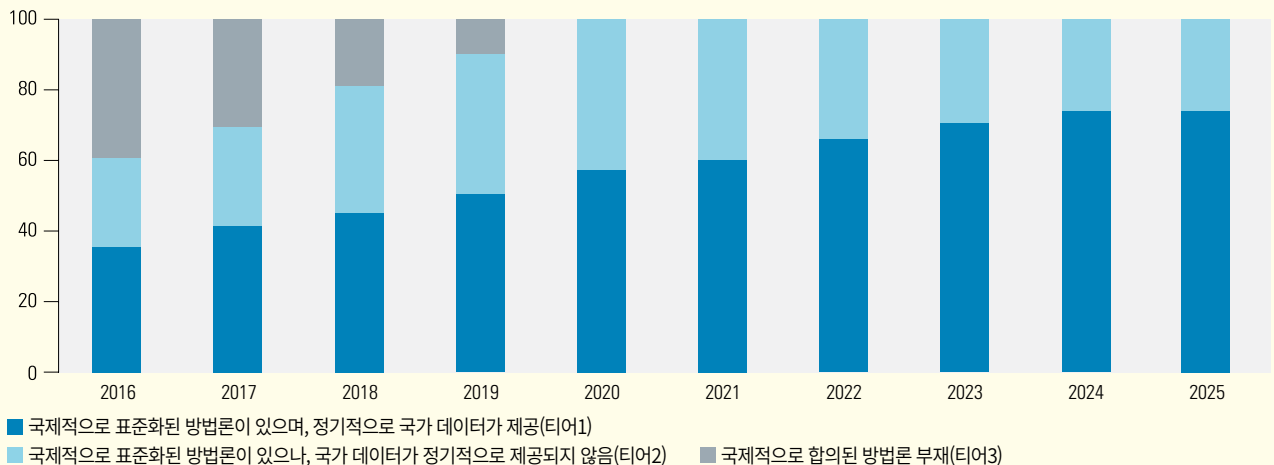
2016년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 초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39%의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하였으나(티어3), 4년 만인 2020년, 마침내 모든 지표가 표준화된 방법론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지표도 2016년 36%에서 2025년 74%로 증가하였다(티어1). 이를 통해 글로벌 SDG

지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6% 지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 제공되지 않는 상황(티어2)이어서 통계역량이 부족한 국가 대상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SDG 지표에 대응하는 한국 데이터 가용률은 2025년 기준으로 81%이다. 한국 국가데이터처는 글로벌 SDG 지표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국내의 통계를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지표누리(<https://index.go.kr/sdg>)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목표별 데이터 가용률을 보면, 전체 평균 가용률에 비해 낮은 가용률을 보이는 목표는 7개이며, 이 중에서도 성평등(목표5) 및 기후변화(목표13), 평화 및 정의(목표16)에서 데이터가 취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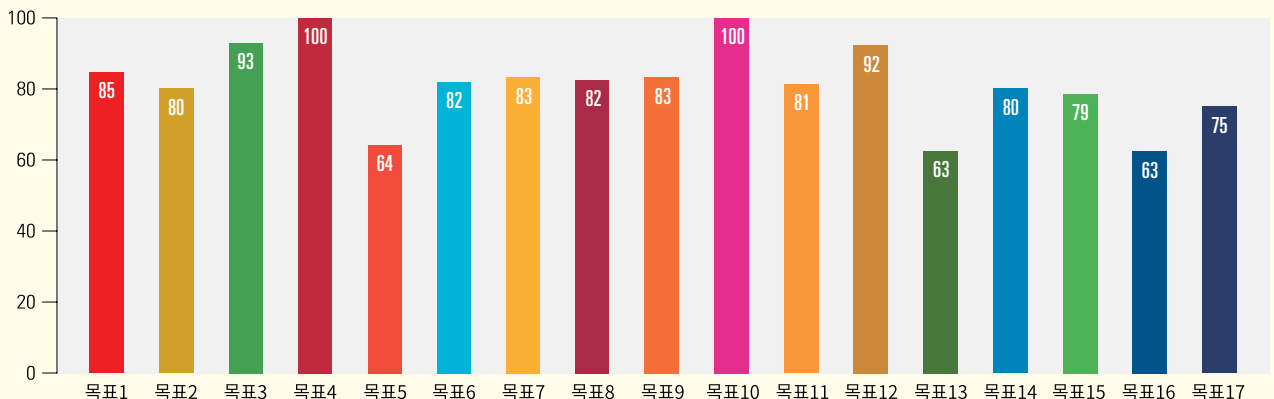
글로벌 SDG 지표 티어 현황

(단위: %)



목표별 한국 데이터 가용률(2025년 12월 기준)

(단위: %)



SDG 지표 총괄표

2023년부터 목표별 대표지표 및 순환지표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황 점검 체계를 운영. 대표지표는 매년, 순환지표는 3~5년주기로 현황 점검에 활용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	○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고 있는 비율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에 포함해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		
1.b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	●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	○	○	○	○	○	●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	○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해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 여부별)					○		●
	2.2.4 인구집단별 최소 식이 다양성 총족률(6-23개월 아동과 15-49세 비임신 여성)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	○			○		●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성 및 원주민 여부별)	○	○	○	○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현지 및 탈경계 품종의 비율		○		○	●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 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아룬드에 따른 농산품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 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		○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로 감소	3.2.1	5세 미만 사망률		○			
		3.2.2	신생아 사망률				○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	
		3.3.2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 건수				○	
		3.3.3	인구 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	
		3.3.4	인구 10만 명당 B형간염 발생 건수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	○		
		3.4.2	자살률		○		○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000명당 출산율					
3.8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
		3.8.2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예산의 40%를 초과하는 인구 비율				○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			○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3.b.3 보건의료상품 접근지수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의료 인력 밀도 및 분포	○	○	○	○	○	○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초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	○		○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수 보장	4.1.1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	○	○	○	○	○	●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중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중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			○	○	○	●
4.4 2030년까지 전문·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 유형별)			○		○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	○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4.6.1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율	○					○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	○	○	○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	●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 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축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	○	○				●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여성 국회의원 비율 (b)여성 지방의원 비율	○	○	○	○	○	○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	○	○	○	○	●
5.6 국제인구개발회의(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			
	5.a.2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축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	○	○	●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	○	●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			○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			○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	○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 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하게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	○	○	○	○	●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2배 증가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	○	○	○	○	●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	○	○	○	○	●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	○	○	○	○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적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 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6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	○	○	○	○	●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8.9.2 관광산업 종사자 수							●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세계철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	○		○		●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	○	○	○	○	●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9.3.1 (a) 국제분류와 (b) 국가분류에 의거한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의 비율				○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	○	●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	○	○	○	○	○	●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 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	●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	○		●
	10.4.2 지니지수에 대한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	○	○	○	○	○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			●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		○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		●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자원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재원 총액(ODA, FDI, 기타 자원 등)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로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	○	○	○	○	●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 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		○	○			●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
	11.5.3 재난으로 인한 중요 사회기반시설 손상 및 기초서비스 중단							
11.6 대기의 질과 지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 감소	11.6.1 지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	○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가중)	○	○			○	○	●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	○		○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샌다이프레이밍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이밍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11.c.1 도시 기반시설 또는 도시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ODA와 기타 공적 유량의 총액(부문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				○	○	●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2.4.2 (a)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	○	○	○	●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	○	○	○	○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	○	○	●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고 있는 비율						○	
13.2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의 수							●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	○	○	○	○	●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촉구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의 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4.1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	○	○	○	○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	○	○	○	○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		○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체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	○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증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면적의 비율	○		○	○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	○	○	○	○	●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	○	○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		○	○	○	○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14에 따라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목표(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보고; (b) 생물다양성을 국가회계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환경경제계정 구현으로 정의)							●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
15.b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15.c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및 연령별)	○		○	○	○	○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				○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			○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		●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 자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	○	○	○	○	●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자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	○	○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재화, 서비스 및 본원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혁신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해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에 지원하는 총 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17.9.1 개도국에 약정된 ODA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	○		○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들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만·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연도별 데이터 수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sdg>)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10.8.), “2013년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주요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2.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주요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4, 202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고용노동부, 2025, 2025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4,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19, 수산혁신 2030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관계부처 합동, 2024,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2025,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2024.6.17.),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5.7.22.),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12.4.),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국가데이터처, 어업생산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4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통계연구원, 2025,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국립수산과학원,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2025

국립환경과학원, 2025, 2024 대기환경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권익위원회, 2024,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교통부, 저상버스도입현황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권율 외, 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외, 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24, 글로벌 사우스의 지역별 현황과 협력과제, 경사연 협동연구총서 24-29-02
- 권율 외, 2025, 트럼프 2기 한국과 글로벌 사우스, Global Issue Brief 특별호 Vol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권율, 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권율, 202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미래정책 포커스 Vol. 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권율, 2023,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지식공유 브리프 2023년 특별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권율, 202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예산춘추 Vol. 74, 국회예산정책처
- 권율, 202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대응과제, 미래정책 포커스 Vol. 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상청 보도자료(2024.9.5.), “2024년 여름철 기후특성: 올여름 평균기온, 열대야일수 1위, 장맛비 평년보다 118.1mm 더 내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31.), “2023년 국제수입 실적(잠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2.8.),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 기획재정부, 2022,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
- 기획재정부, 2023,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 기획재정부, 2024,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 기획재정부, 2025,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5.),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2025 지하수조사연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환경부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통계
- 길은선, 2021,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6호(2021-15), 산업연구원
- 김광기·제갈정·송태민·최민주, 2018,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의 고위험 음주 분석과 정책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동수·권율, 2025,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 연구, 경사연 협동연구총서 25-04-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1.),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관광산업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관광산업조사: 관광진흥법기준
- 백예인 외, 2022,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법무부, 2026, 난민 종합 통계(‘94년~’25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OECD Health Statistics 2025(소책자)
- 산업통상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5, 「2025 국가자원생산성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202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2024 에너지통계연보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6, 2026/1 에너지통계월보
-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3.27.), “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4.5.16.),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22, 인신매매방지정책 종합계획(안)
 여성가족부, 2025,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왕영민, 2023,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외교부 보도자료(2025.4.17.), “24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9.4억불 지원”
 유경원, 2021,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개발원
 윤경환, 2025, Refugees in Korea: Challenges in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World Economy Brief Vol. 15(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명기 2025, “농가경제 실태와 농업 성장을 위한 시사점” KREI 이슈플러스 제41호
 이명기 외, 2024,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미정 외, 2022,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문, 2024,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1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혁신처, 2025,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
 장명희 외, 2019, 가임기 여성의 빈혈증상에 대한 건강검진 효능성과 보장률 확대를 통한 관리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2024,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질병관리청, 2025, 2024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발생보고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통계개발원, 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통계개발원, 2024,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통계청 보도자료(2025.7.28.),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25,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4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5,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수출입 현황
 해양수산부 고시(2025.4.11.),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9.7.),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9.20.),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 2024,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4.12.31. 기준)
 행정안전부, 2025, 2024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환경부 보도자료(2024.9.10.),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전년 대비 4.4% 감소, 2년 연속 감소 추세”



- 환경부 보도자료(2025.2.11.), “지난해 하늘 가장 깨끗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15.6\mu\text{g}/\text{m}^3$, 관측 이래 최저”
- 환경부 보도자료(2025.8.20.),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정배출량 6억 9,158만톤”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 202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3)
- 환경부, 202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 환경부, 2021,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
- 환경부, 2022, 국가수도기본계획(정책편)
-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0, Base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2025, Latest Asylum Trends 2024 - Annual Analysis(<https://www.euaa.europa.eu/publications/latest-asylum-trends-2024-annual-analysis>)
-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5,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5(<https://doi.org/10.4060/cd6008en>)
- GBD 2016 Alcohol Collaborators, 2018, “Alcohol use and burden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1990-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Lancet Vol. 392
- Global Burden of Disease Collaborative Network. (2026).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3 (GBD 2023) Air Pollution Exposure Estimates and Risk Curves 1990-2023. Seattle, WA: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 IEA, 2025,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 IUCN, 2016, A Global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Biodiversity Areas
- IUCN, 2022, Guidelines for using A Global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Biodiversity Areas: version 1.2 (<https://doi.org/10.2305/IUCN.CH.2022.KBA.1.2.en>)
- OECD, 2016, Health Workfor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Right Jobs, Right Skills, Right Places,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https://doi.org/10.1787/5f07c754-en>)
- OECD, 2020, Blended Finance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20: Supporting a Resilient COVID-19 Recovery
-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https://www.oecd.org/dac/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747721.html>)
-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https://doi.org/10.1787/53f23881-en>)
- OECD, 2024, Do Adults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 Changing World?: Survey of Adult Skills 2023 (<https://doi.org/10.1787/b263dc5d-en>)
- OECD, 2024, ODA Levels in 2023-preliminary data: Detailed summary note([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4)31/en/pdf))
- OECD, 202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https://doi.org/10.1787/c243e16a-en>)
- OECD, 2024, OECD Economic Surveys: Latvia 2024
- OECD, 2025,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4([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6/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6/en/pdf))
- OECD, 2025, States of Fragility 2025(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tates-of-fragility-2025_81982370-en.html)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OECD, PIAAC(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Sachs, J.,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Woelm, F., 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perkova K, Anderson P, Llopis EJ, 2022, “Alcohol policy measures are an ignored catalyst for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LoS ONE 17(5): e0267010(<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7010>)

Tariku, M. K., Belete, A. H., Worede, D. T., & Misikir, S. W., 2025, "Incidence of suspected human rabies virus exposur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Ethiopi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Infectious Diseases Vol. 25 (<https://doi.org/10.1186/s12879-024-10389-x>)

U.S. Department of State, 2024, 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https://www.state.gov/reports/2024-trafficking-in-persons-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2024, 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https://www.state.gov/reports/2024-trafficking-in-persons-report/south-korea>)

UN ODC(Office on Drugs and Crime), 2024,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4 (<https://www.unodc.org/unodc/data-and-analysis/glotip.html>)

UN Statistical Commission, 2025, Results of the 2024 Global Assessment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and Supporting Statistics

UN, 2012,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2012: Central Framework

UN, 2021,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Ecosystem Accounting

UN, 202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5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EP, 2021, Global Chemicals and Waste Indicator Review Document

UNEP, 2024, Progress on Ambient Water Quality: Mid-term status of SDG Indicator 6.3.2 and acceleration needs, with a special focus on Health(https://unepdhi.org/wp-content/uploads/sites/2/2024/09/SDG_632_2024_Progress_Report_FINAL_EN_WEB.pdf)

UNEP-WCMC,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HO and IBRD, 2023,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23 global monitoring repor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80379>)

WHO, 2021, WHO Global Air Quality Guidelines(<https://www.ccacoalition.org/resources/who-global-air-quality-guidelines>)

WHO, 2024a, Reported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 Global Health Observatory



참고 사이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쿤밍-몬트리올 GBF”(<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793&contentKey=17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s://www.waternow.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s://www.gir.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정보시스템(<https://www.hasudoinfo.or.kr>)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main.html>)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nhanes.kdca.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한국수산자원공단, 연도별 TAC 대상 업종 및 어종(https://www.fira.or.kr/newfira/web/overview/overview04_06_01.j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해양수산부(<https://www.mof.go.kr>)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CBD,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arget 14”(<https://www.cbd.int/gbf/targets/14>)

CBD, “Republic of Korea: Country Profile”(<https://www.cbd.int/countries/profile?country=kr>)

FAO, AQUASTAT(<https://data.apps.fao.org/aquastat>)

FAO,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DAD-IS)(<https://www.fao.org/dad-is>)

FAO, FAO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fao.org>)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

ILO, ILOSTAT(<https://ilostat.ilo.org>)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ilostat.ilo.org/topics/sdg>)

IMF, IMF Data(<https://data.imf.org>)

ITU, DataHub(<https://datahub.itu.in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html)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html>)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profiles_04b376d7-en/korea_d358baed-en.html)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eral-government-revenue.html>)

OECD, OECD 2025 Flows by donor(<https://www.oecd.org/en/topics/development-co-operation.html>)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OECD,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OECD, OECD.Stat. “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https://stats.oecd.org/>)

Index.aspx?DataSetCode=TABLE2A)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https://www.oecd.org/en/topic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

OECD, States of Fragility(<https://www3.compareyourcountry.org/states-of-fragility>)

PAHO, 2025, “Tobacco control”(<https://www.paho.org/en/topics/tobacco-contro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https://dashboards.sdgindex.org>)

UN, BBNJ Agreement(<https://www.un.org/bbnjagreement>)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UN,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I-10&chapter=21)

UN, Women Data Hub(<https://data.unwomen.org/data-portal>)

UNEP IRP,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UNEP-WCMC,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https://www.protectedplanet.net/en/thematic-areas/wdpa?tab=WDPA>)

WHO(<https://www.who.int>)

WHO, 2023, “Climate change”(<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limate-change-and-health>)

WHO, 2024b, “Alcohol”(<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lcohol>)

WHO, 2025a, “Neglected tropical diseases: Overview”(<https://www.who.int/health-topics/neglected-tropical-diseases>)

WHO, 2025b,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

WHO, 2025c, “Tobacco”(<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WHO, 2025d,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database”(<https://www.who.int/data/gho/data/themes/topics/health-workforce>)

WHO, 2025e, “Health workforce”(<https://www.who.int/teams/health-workforce/health-workforce-development>)

World Bank Group, Data 360(<https://data360.worldbank.org>)

World Bank Group,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World Bank, 2022, World Bank Income Groups (July 1, 2022 edition)(<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the-world-by-income-and-region.html>)

WorldBank, Gender data portal(<https://genderdata.worldbank.org>)



ADCOM Adaptation Communications(기후 적응 보고)

AQG Air Quality Guidelines(세계 대기질 가이드라인)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공해 해양생물다양성)

BOD Biological Oxygen Deman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s(격년투명성보고서)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당사국총회)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FTE Full-Time Equivalent(상근상당)

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SDG 지표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세계자연보전연맹)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KBA Key Biodiversity Area(중요생물다양성지역)

KEEP30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LDC Least Developed Country(최저개발국, 최빈개도국)

LT-LEDS Long-Term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장기저탄소발전전략)

NAP National Adaptation Plans(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가칭) 자연공존지역)

PIAAC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국제성인역량조사)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국제학업성취도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환경경제통합계정)

TAC 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

TOC Total Organic Carbon(총유기탄소)

TOE Tonne Of Oil Equivalent(원유 1톤이 갖는 열량)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유엔기후변화협약)

“우리는 2030 의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집필진

연구책임 정우현(한국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1)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표2)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3)

박근영(한국교육개발원, 목표4)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표5)

현윤정(한국환경연구원, 목표6)

최형식(한국환경연구원, 목표7)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목표8)

임소영(산업연구원, 목표9)

박주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0)

이지영(한국환경연구원, 목표11)

주문술(한국환경연구원, 목표12)

박진한(한국환경연구원, 목표13)

김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해양))

마창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수산))

이승준(한국환경연구원, 목표15)

서은주(한국환경연구원, 목표16)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표17)

편집진

김의영(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사무관)

김현정(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

구진주(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조원)

발행 2026년 3월

발행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 2765-3803

디자인 강문인쇄사

인쇄처 강문인쇄사



발간등록번호
11-1241211-100004-10



SDG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6